연구보고서 2004-13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김 승 권
양옥경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김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한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전통적 가치관의 쇠퇴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자아욕구 및 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등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변화는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 특징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되고 가족원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가족의 개념적 정의, 가족구조, 이질적 가족원과의 동화, 가족생활방식의 변화 등이 나타났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최근 한국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와 상반되게 나타난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약화, 가족의 기능 및 역할 약화, 가족갈등 및 가정폭력의 증대, 이혼·별거와 재혼의 보편화 등이 있다. 특히 산업화 초기부터 성행된 여성들의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의 목적은 종전의 가족의 생계유지에서 여성자신의 자아성취로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까지, 저소득층 여성뿐만 아니라 중산층 여성까지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은 가족변화의 핵심적 배경이라 하겠다. 또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자녀진학의 국제화를 불러일으켜 한국사회의 독특한 형태의 가족이 발생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검토하고 제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발전하고 전체 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다양한 변화에는 구조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족원 특성과 생활양식 등에서의 다양함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이들 가족의 특성과 실태, 그리고 지원체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수행은 당 원 김승권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총괄 및 기획 (김승권)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 (김승권)
제3장 다양한 가족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전체 연구진)
제4장 한국사회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 (김승권)
제5장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박세경)
제6장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김유경)
제7장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조애저)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김승권·김미희)
제9장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양옥경)
제10장 종합논의 및 결론 (김승권)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준 서울대학교 옥선화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서영숙 교수, 당 원의 김안나 부연구위원과 이현주 책임연구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 13

제1장 서 론 ····· 7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6
제3절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접근방안 ····· 80

제2장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 ····· 82
제1절 다양한 가족관련 제 개념 ····· 82
제2절 다양한 가족관련 제 이론 ····· 86
제3절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의 시사점 ····· 100

제3장 다양한 가족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 102
제1절 국내 선행연구 ····· 102
제2절 주요 외국의 선행연구 ····· 124
제3절 국내·외 선행연구의 시사점 ····· 134

제4장 한국사회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 ····· 136
제1절 가치관적 요인 ····· 138
제2절 사회적 요인 ····· 159
제3절 인구학적 요인 ····· 164
제4절 개인적 및 가족 요인 ····· 174
제5절 다양한 가족 출현배경의 시사점 ····· 181

제5장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 183
제1절 개념 및 특성 ····· 183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 190
제3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 206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219
제5절 시사점 ····· 226

제6장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 230
제1절 개념 및 특성 ····· 230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 236
제3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 248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264
제5절 시사점 ····· 269

제7장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 272
제1절 개념 및 특성 ····· 273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 279
제3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 296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307
제5절 시사점 ····· 318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 321
제1절 개념 및 특성 ····· 322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 332
제3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 343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353
제5절 시사점 ····· 353

제9장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 356
제1절 사회적 지원체계 ····· 358
제2절 사회적 지원방안 ····· 380

제10장 종합논의 및 결론 ····· 397
제1절 종합논의 ····· 397
제2절 결론 ····· 399

참고문헌 ····· 402

표 목 차

〈표 3- 1〉 재혼가족의 생활주기 ····· 117
〈표 4- 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 139
〈표 4- 2〉 결혼가치관의 변화 ····· 141
〈표 4- 3〉 15~64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43
〈표 4- 4〉 재혼에 대한 찬성비율 ····· 144
〈표 4-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 ····· 146
〈표 4- 6〉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관 ····· 147
〈표 4- 7〉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유 ····· 148
〈표 4- 8〉 15~44세 기혼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 149
〈표 4- 9〉 15~44세 기혼부인의 현존자녀수별 평균 이상자녀수 ····· 149
〈표 4-10〉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 ····· 150
〈표 4-11〉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와의 상관관계 ····· 151
〈표 4-12〉 미혼남녀의 특성별 '부부 맞벌이에 대한 태도' ····· 153
〈표 4-13〉 '결혼 후 여자본인 또는 부인의 취업희망여부' ····· 154
〈표 4-14〉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에 대한 의견 ····· 155
〈표 4-15〉 자녀의 결혼·교육비용의 부모부담에 관한 의견 ····· 156
〈표 4-16〉 미혼남녀의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 157
〈표 4-17〉 '기혼여성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 158
〈표 4-18〉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159
〈표 4-19〉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160
〈표 4-20〉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 162
〈표 4-21〉 전체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 162
〈표 4-22〉 한국의 남성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 순위 ····· 163

〈표 4-23〉 성별 평균 초혼연령 ····· 164
〈표 4-24〉 가임여성(15~49세)의 미혼율 변동 추이 ····· 165
〈표 4-25〉 혼인건수 변화추이 ····· 165
〈표 4-26〉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출산율 ····· 166
〈표 4-27〉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미치는 다변량 로짓모델 ····· 167
〈표 4-28〉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미치는 다변량 로짓모델 결과 ····· 168
〈표 4-29〉 로짓모델 분석결과에 의한 추가자녀 희망률 ····· 169
〈표 4-30〉 다변량 로짓모델에 의해 추산된 부인의 현존자녀수,
교육수준별 취업여부 및 취업·미취업 이유 분포 ····· 171
〈표 4-31〉 성·연령별 사망률 ····· 173
〈표 4-32〉 평균수명 변동추이 ····· 174
〈표 4-33〉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학력 구성비 ····· 175
〈표 4-3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176
〈표 4-35〉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 176
〈표 4-36〉 이혼현황 ····· 178
〈표 4-37〉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 ····· 179
〈표 4-38〉 연도별 평균 이혼연령 ····· 179
〈표 4-39〉 혼인의 초·재혼 구조와 성별 평균 재혼연령 ····· 180
〈표 4-40〉 외국인과의 혼인 ····· 181
〈표 5- 1〉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의 비율 ····· 191
〈표 5- 2〉 해체가구 유형별 가구해체의 발생원인 ····· 192
〈표 5- 3〉 30~40대 가구주 연령별 부부가구의 수 ····· 194
〈표 5- 4〉 양육 미혼모의 월수입 ····· 198
〈표 5- 5〉 노인가구형태별 자가소유율 ····· 200
〈표 5- 6〉 노인가구형태별 모부자복지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 201
〈표 5- 7〉 주요국가 45~49세 여성의 무자녀 비율 ····· 213
〈표 5- 8〉 미국의 불임치료 관련 의료보험 급여적용 실태 ····· 214
〈표 5- 9〉 가구원수별 모부자복지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 220

〈표 6- 1〉 재혼가족의 9가지 유형 ····· 232
〈표 6- 2〉 연도별 혼인상태 건수 및 분포 ····· 237
〈표 6- 3〉 연도별 국내외 입양실태 ····· 239
〈표 6- 4〉 초혼율, 이혼율, 재혼율의 3년 간격별 평균 ····· 249
〈표 6- 5〉 연도별 미국 가정의 형태별 자녀 수 ····· 250
〈표 6- 6〉 연도별 영국의 성별 결혼 상태 ····· 256
〈표 6- 7〉 연도별 영국의 성별 재혼율 ····· 257
〈표 6- 8〉 연도별 영국의 결혼시 혼인 형태 ····· 257
〈표 6- 9〉 영국의 국적취득 신청자수 및 비율 ····· 258
〈표 6-10〉 연도별 일본의 혼인·이혼수 및 혼인·이혼률 ····· 261
〈표 6-11〉 일본의 외국인 등록현황 ····· 262
〈표 6-12〉 일본의 외국인 주요재류자격별 등록자수 ····· 262
〈표 6-13〉 장애아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 266
〈표 7- 1〉 15~59세 기혼가구 응답자의 혼인상태별 부인, 남편 취업여부 ·· 280
〈표 7- 2〉 유배우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부인·남편 취업유형 ····· 281
〈표 7- 3〉 유배우 가구의 특성별 맞벌이 비율 ····· 282
〈표 7- 4〉 맞벌이 부부의 취업 직종별 분포 ····· 282
〈표 7- 5〉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 지위 ····· 283
〈표 7- 6〉 취업부인의 현 취업이유 ····· 283
〈표 7- 7〉 맞벌이 부인의 현재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 289
〈표 7- 8〉 부부의 현 취업유형별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 291
〈표 7- 9〉 주말부부의 심리적 비용과 보상 ····· 294
〈표 7-10〉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312
〈표 8- 1〉 가주구의 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가구 ····· 333
〈표 8- 2〉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중의 미혼 독신 ····· 344
〈표 8- 3〉 12세 이상의 성인의 범죄노출 정도 ····· 345
〈표 9- 1〉 가족구조의 변화 ····· 359
〈표 9- 2〉 위기가정에 대한 응급적 정서지원 제도 ····· 379

그 림 목 차

〔그림 1- 1〕 연구의 분석틀 ····· 78
〔그림 2- 1〕 관계에 대한 만족의 중재요인 ····· 91
〔그림 4- 1〕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 과정 ····· 137
〔그림 4- 2〕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여성의 노동참가율 '감소'의 변화 ····· 177
〔그림 5- 1〕 우리나라 노인의 가족형태 ····· 196
〔그림 8- 1〕 미혼가구의 비율 ····· 333
〔그림 9- 1〕 가족 지원제도 체계도 ····· 366
〔그림 9- 2〕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체계도 ····· 383
〔그림 9- 3〕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망 ····· 393
〔그림 9- 4〕 가족원 특성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망 ····· 394
〔그림 9- 5〕 가족생활양식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망 ····· 395
〔그림 9- 6〕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망 ····· 396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Diversity and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As we move into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there have been continuous changes on traditional values regarding families, marriage, and the child. In addition, family diversity becomes an increasingly important concept in accordance with changes on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life style related to generalized individualism as well as an environmental upheaval.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various types of Korean families which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discussion in other studies. Foremost, it was intended to suggest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helping families to maintain their stable family life and pursue healthy interactions among their members.

Based on three distinct approaches, in terms of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and life style changes, diverse families were discussed. This diversity goes beyond social classes, regional differences, and even patterns of life style. In some ways, these are families that have very little in common, but in others, they have many attributes that are similar. Many of these families are suffering from poverty, lack of care, limited social support, prejudi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Traditionally, families were expected to hold their responsibilities to take care of their members economically, psychologically, as well as socially. More over, they were charge themselves with care and education of young children. However, the current changes around the family have altered these functions and roles. As a result, it needs to be created a comprehensive system to support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se families.

The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diverse families in the present study has been identified as a series of social policies at national levels to support healthy family function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fe. Therefore, finally, the author provides a synthesis of family support policies from legal, political, and emotional point of view.

요 약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한국사회에서 최근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은 이제까지 주류로 여겨왔던 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

- 과거의 다양한 가족유형은 해체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적, 과도기적 산물이거나 객관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해야만 했던 것이었음.

— 최근의 다양한 가족은 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등과 같은 새로운 가족유형으로서 개인들의 능동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음.

- 더군다나 급속한 사회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개별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등도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다른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최근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규명함.
- 다양한 가족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함.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들 가족의 유형과 특성 검토함.
- 주요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다양한 가족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방안을 모색함.

— 결과적으로 가족안정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임.

- 가족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다양한 가족관련 제 개념 및 이론

- 전통적 및 현대적 의미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함.
- 다양한 가족의 개념과 각종 이론은 다학제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다양한 가족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 선행연구의 구체적 내용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전망함.
-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후술하는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

- 다양한 가족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함.
-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을 가치관적, 사회적, 인구학적, 그리고 개인적 및 가족 등의 네 측면에서 접근함.

—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 구조적 측면, 가족원 특성의 측면, 가족생활양식의 측면, 그리고 탈 근대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검토함.
- 이들 다양한 가족의 개념 및 특성,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 지원실태를 분석함.
- 외국의 사회적 지원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각종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및 세부 지원내용

- 다양한 가족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가족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내용을 제시함.
- 특히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지원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가족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

□ 연구방법

— 기존문헌 고찰

- 다양한 가족관련 제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함.
- 다양한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 선행연구 등을 재분석함.
- 다양한 가족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분석함.

— 다양한 가족유형 관련 기존 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 다양한 가족유형의 규모를 추정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함.

— 다양한 가족유형별 사례조사

- 다양한 가족유형형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함.

— workshop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

- 첫 번째 workshop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함.
- 두 번째 workshop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함.
- 마지막 workshop은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련 각계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함.

3.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접근방안

□ '다양한 가족'의 모호성

—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제도 자체가 갖는 가변성과 환경에 적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임.

- 그렇지만 가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간의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된 틀이 제시되지 않음.

□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분류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 그리고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 대분(大分)하여 논의함.

-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는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노인가족 등이 중심임.
- 가족원의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는 재혼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국제결혼가족 등이 중심임.
-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등이 중심임.
-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중심임.

제 2 장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

1. 다양한 가족관련 제 개념

□ 가족의 제도상 개념

— 민법 상 가족은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된 자로 규정됨.

-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함.

□ 가족에 대한 학자의 정의

—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이며,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인남녀의 출산자녀 및 입양자녀로 구성된다고 정의함.

— 결혼에 의하여 출발하고, 구성은 부부와 자녀,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 및 성적 의무와 권리, 존경 및 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감정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정의함.

— 결혼과 혈연 혹은 양자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함.

— 결혼과 자녀출산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 자녀가 결혼하고 출산하는 과정

을 통하여 직계와 방계로 확장되는 혈연적 집단이며, 동류의식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함.

—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집단이고,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으로 정의함.

□ 가족관련 유사용어

— 가정(home)

- 온정이나 사랑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을 가진 공동체로써 결혼과 공간적 성격을 의미하는 개념임.
- 사전적 의미는 '가족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또는 장소'로 정의되지만 가족원의 사회생활을 위한 긴장완화, 휴식과 안정, 재충전 등 가족원을 위한 심신의 안식처로의 의미도 가짐.
- 인간의 생활과 생존유지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실존적인 생활단위이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물질적·정서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상생활의 장(場)임.

— 가구(household)

- 혈연이나 비혈연의 사람들이 끼니를 함께 하는 주거생활단위로서 혈연관계나 심리적 관계보다 공동생활의 주거단위로서의 성격 강조함.
- 행정적 의미로 세대(世帶), 식구(食口)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함.

2. 다양한 가족관련 제 이론

□ 구조기능주의 이론

— 구조기능주의는 가족을 미혼자녀의 사회화와 가족원의 인격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의 하위체계로 보며, 또한 가족과 사회 간의 목표와 기능의 조화, 가족 내의 남성과 여성의 도구적·표현적 역할구분 등을 강조함.

- 직장생활에서의 소득에 의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는 남편,

가사노동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개별 가족구성원의 안녕과 재충전을 담당하는 부인,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상'을 가짐.

— 가족영역에 대한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초점은 시대별로 다소 상이함.
  • 1920~1930년대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구성원에게 정서적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에 있었음.
  • 1940~1950년대에는 '가족은 날로 약해져만 가는 사회를 어떻게 보존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있었음.
  • 1960년대까지 가족사회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군림해 오면서 '전산업사회=확대가족, 산업사회=핵가족'이란 명제가 보편화되었음.
  • 1970년대 이후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정치적 보수성, 성차별, 경험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론으로서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였음.

□ 갈등이론

— 가족에 대한 갈등적 관점은 일반적인 갈등이론의 기본가정, 즉, 사회갈등이 인간생활의 기본적 요소라는 것에서 시작됨.
  • 자원(resource)은 갈등이론의 중추적 개념으로 집단 간의 갈등이 불공평한 자원할당 및 경쟁적 사회구조에 기초한다고 봄.
  • 가족 내 갈등은 개인간의 자원 불공평 때문이며, 자원이 많을수록 교섭(negotiation)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교섭의 결과는 가족 내에서 최대의 자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가족구성원간의 이해관계나 권력 혹은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해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가 더욱 구조화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 내 자원과 권위 배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교환이론

— 가족학 분야의 연구는 개인주의적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본적 가정인 인간의 본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인간은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은 회피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익의 극대화-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
- 인간은 합리적 행위자로서 행동하기 전에 그들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고 대안을 고려함.
- 보상과 비용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보상의 가치는 개인의 기대가 클수록 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보상의 가치가 낮아짐.

— 동 이론은 출산시기와 이혼결정여부 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됨.

- 결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면 동거, 독신 등의 대안적 형태의 관계보다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혼'을 선택하게 될 것임.
- 출산에 의해 자녀를 갖는 것보다는 출산을 지연시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이고 보상이 크다면 무자녀가족과 한자녀가족을 선택하게 될 것임.
- 결혼생활의 대안적인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임.

— 가족학 영역에서 교환이론은 주로 배우자 선택, 의사결정과정, 결혼의 질과 안정성, 임신결정, 성역할, 이혼, 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등에 적용됨.

- 예를 들면,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는 상호간에 소유한 제반 자원에 비해 보상 정도가 평가되어 선택행위가 일어남.

□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 이 이론은 가족을 사회적 집단인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자아와 정체성의 집합으로 개념화함.

- 가족원간의 관계가 형성·유지·변화되는 양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환경요인들, 그리고 그것이 개개인의 자아인식 및 행위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대한 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함.

— 가족연구에 있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관계, 가족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됨.

- 가족의 역할구조는 가족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모든 가족원의 행동 및 외부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때문임.
- 그것은 가족구성원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안정성이나 갈등도 분석될 수 있음.

□ 가족발달 이론

— 가족의 생애과정의 단계가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는 체계적이고 유형화된 변동과정'에 초점을 둠.

- 내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요구, 외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정해진 일련의 단계들로 가족의 변화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함.

— 개체발생론적 발달과 사회적 의미의 발달로 분리되어 발전해왔는데, 전자는 아동발달론자들을 중심으로 언어와 사고를 학습하는 종의 유전적 능력에 기초를 둔 것이며, 후자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가족사건의 흐름을 중요시함.

- 가족연구에서는 후자가 선호되고 있는데, 친족 구조내 성별, 결혼, 혈연관계 및 세대관계 등으로 규정되는 지위, 집단과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규범, 그리고 친족 지위에 수반되는 모든 규범으로서 가족역할 등이 주요 개념임.

□ 생태학적 이론

— 생태 이론은 생물학적 유기체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및 가족에 초점을 둠.

- 최근 이 이론은 가정관리,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학 등을 다루는 많은 이론들의 개념적 틀로 작용하고 있음.

— 생태 이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룸.

- 가족의 생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산출을 보장하기 위해 내적으로든 혹은 그들 환경과 상호 의존하는 체계로서든 기능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다양한 방식의 문제임.
-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가족 요구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이 사용하는 자원의 할당과 관리방식 및 그 효과에 관한 문제임.
-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환경과 환경적 변화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임.
-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을 창조하고 관리하며, 고양시키기 위한 문제와 생명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실천 및 그를 위한 가족의 역할에 관한 문제임.
- 인간자체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변화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가족과 가족전문가의 기여방식에 관한 문제 등임.

□ 여권주의 이론

— 이 이론에서는 가족을 단일한 이해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행위체가 아니라 가족원간에도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場)으로 봄.

-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가부장제적·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함.
- 즉, 가족은 성별분업의 역할분리 개념 하에 남성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보장하고, 자녀들을 성에 따른 역할로 사회화시켜 가부장제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제도로 봄.

— 여권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구조와 역할구성에 있어 전통적 성별분업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는 것임.

- 나아가 그것이 함축하는 사회적 권력질서, 즉, 기존의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함.

□ 포스트모더니즘

— 이 이론은 가족을 총체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며,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의 인정을 주장함.

•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그 자체가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들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의 요구이며, 안정되지만 획일적인 가족문화 대신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한 보다 유동적인, 그래서 더 큰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가족문화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함.

• 그것은 가족영역에서의 민주주의 함양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질적인 가족가치관들이 혼재되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현실을 생각할 때 큰 의의가 있음.

3.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의 시사점

□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문제

—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존재함.

• 법적 혼인관계 및 혈연, 공동의 생활과 주거, 또는 지속적인 유대와 정서적 애착 등 많은 것들이 가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됨.

—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변의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가족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관점에 기반하거나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함.

□ 가족개념의 함의 및 활용

— 가족위기를 둘러싼 많은 정치적 또는 학문적 논쟁의 격렬함은 실제 가족에 대한 개념규정이 내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치적·이념적 함의에 의해

촉발되는 것임.

—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은 가족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배려와 상호의존 및 친밀성을 증대하고 동시에 개별 가족원의 자율성과 발달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함.

제 3 장 다양한 가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 전반적 연구동향

— 1960년대부터 초기 가족연구가 가족의 구성형태를 포함한 그 문화적 배경으로서의 가족가치, 가족제도 등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었음.

— 1970~80년대 본격화되어 1970년대 가족형태 등 가족의 외형적 모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1980년대는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

— 1990년대 무엇보다도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이며, 각 학문분과나 주제 간의 연결하여 통합적 시각의 연구가 증가하였음.

□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한부모가족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직·간접적 원인을 분석하거나 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미혼모 연구는 발생요인 및 예방책 제안, 미혼모 복지 개선방안을 개괄하는 연구, 미혼모시설의 프로그램 개발과 자존감 및 스트레스 관련 변인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무자녀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비자발적 불임 관련 무자녀가족의 출

현 중심이었으며, 무자녀가족의 구조적, 관계적, 그리고 기능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었음.

— 노인부부 연구는 주로 부부관계 및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등과 생활실태, 노인부양 및 자녀관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노인복지제도, 노인정책 등도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재혼가족의 실태와 자녀와의 관계, 구성원들의 욕구, 재혼가족 준비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의 입양에 대한 연구는 입양 절차나 입양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최근에는 입양아나 입양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루어졌음.

— 국제결혼은 노동력을 팔기 위한 이민결혼, 외국 군인과의 결혼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으며, 최근은 동남아에서의 이민결혼이 등장하고 있으며 아직 선행연구가 활발하지 않음.

□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맞벌이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녀양육, 부부관계 및 결혼안정성, 가사분담,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주말부부가족의 행정, 교육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자여교육 및 직장지의 이동으로 인해 생기며, 주말부부의 실태 가족 욕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

— 기러기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문제와 아버지의 문제 등이 지적됨.

□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미혼독신 유형과 생활실태, 만족과 불만족,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심층적 연구를 하고 있음.

2. 주요 외국의 선행연구

□ 전반적 연구동향

— 가족사회학의 연구는 19세기말~20세기 초의 고전사회학, 20세기 초~중반의 사회심리학적 가족연구, 2차 세계대전 후~1960년대까지의 구조기능론 및 근대화론적 가족론의 시기, 마지막으로 제2의 페미니즘 물결과 함께 등장한 페미니스트 및 최근의 포스트모던 가족론의 시기로 나뉨.

— 다양한 가족유형에 접근은 탈근대론을 기반으로 기존의 구조기능론적·근대화론적 가족관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도전을 그 출발점이라 하겠음.

□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미혼모가족 관련 외국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관점 및 관련 정책의 내용을 비교하고, 미혼모가족의 경제상황과 독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음.

— 무자녀가족의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부모와 자녀관계의 의미가 약화되고 부부각자의 개인적 삶이 강조되면서 합의한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발적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노인가족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지지,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 노인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연구 등을 다루었음.

□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가족생활주기와 적응, 가족응집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

— 입양가족과 국제결혼가족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가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로서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 맞벌이 부부 초기연구는 여성취업이 부부간에 긴장이 형성하여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각 가족 구성원의 적응과 욕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

— 주말부부는 부부 각각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고, 아내의 직업욕구에 대한 남편의 지지, 높은 수입, 심리적 근접성,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이 최소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3. 국내・외 선행연구의 시사점

□ 특정사회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

—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많은 접근은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접근방법 또한 다양함.

— 산업사회·근대사회의 핵가족에 대한 관심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내적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가족이 양산되며 학자들의 관심은 증대됨.

□ 국내·외 선행연구의 공통점

—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단순한 관심보다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개인주의화의 만연에 따른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구조적 및 가치관 변화는 가족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함.

제 4 장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

1. 가치관적 요인

□ 가치관의 개념

—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임.

-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 또는 이념 내지 신념임.
- 또한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사회의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함.

—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이며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임.

□ 혼인가치관의 변화

— 결혼가치관은 1992년 부인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가 30.6%, '하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좋다'는 45.2%이었던 것이 2000년 조사 55.6%, 2003년 54.4%로 변화하였음.

- 따라서 과거 우리 사회는 보편혼이었으나 이제는 일종의 '선택(option)'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혼가치관은 우리사회 가족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기혼부인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2000년 52.8%, 2003년 50.4%이었고, 이혼을 수용하는 비율은 2000년 45.7%, 2003년 48.9%이었음.

-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

고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음.

— 전통적으로 재혼에 대해 부정적이던 인식이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음.

- 즉, 1998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재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2.5%, '하는 것이 좋다'가 17.4%로 약 20%가 재혼에 찬성하였음.
- 2000년도 기혼부인의 재혼가치관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16.8%, 부정적인 태도의 비율은 30.3%이었으며, 소극적인 태도는 46.5%로 나타나 부정적인 태도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03년 기혼부인의 재혼가치관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20.75, 부정적 태도를 보인 비율은 27.4%,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는 47.2% 이었음.

□ 자녀가치관의 변화

— 1990년대 이후에 수행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한다'는 태도를 보인 부인은 1991년 90.3%에서 1997년에는 73.7%로, 2000년에는 58.1%, 2003년 54.5%로 감소를 보였음.

- 반대로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에서, 1997년에는 26.0%, 2000년 41.5%, 2003년 44.9%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2003년 12.6%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로 판단됨.

—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8.5%가 결혼 후 자녀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며, 남자 42.0%, 여자 31.4%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였음.

-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여자의 28.4%(남자의 경우 9.0%)가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해 여자의 경우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짐작케 함.

— 1990년대 우리나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2.1명 수준에서 0.1명 내외로 증감을 보였으며, 기혼부인의 현존자녀수는 이상자녀수의 평균에 접근하고 있었음.

- 이상자녀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음.
- 최근 이상자녀수는 연령계층별로 0.1명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부관계 가치관의 변화

— 경제활동, 자녀양육, 가사분담 등의 성역할과 부부의사결정에서는 평등주의적 사고로 변해가지만, 성별과 세대에 따라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의 혼재되어 있음.

-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에 80.9%, '맞벌이 부부라도 가정의 일은 주로 아내가 해야 한다'에는 78.3%가, '가정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에는 73.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대학생들의 부부간 의사결정관이 점차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부 맞벌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응답자의 71.5%가 '찬성' 또는 '매우 찬성'에 응답하였고, '반대' 또는 '매우 반대'는 3.6%에 불과하여 남녀 모두 맞벌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특히 여자(74.4%)가 남자(69.3%)에 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에 대해 찬성의 경향이 강하였음.

— 여성취업의 성격(직업, 승진기회, 임금 등)이나 직업가치관 등 개인의 성향과 일에 대한 만족도, 일과 출산에 대한 사회 혹은 주위사람들의 기대와 지원 등의 요인들이 출산율을 결정하는 복합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일과 출산의 관계는 교육, 가족 등의 거시적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가족부양 가치관의 변화

— 장남의 부모부양책임에 대해 3개국을 조사한 결과,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의 필요성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장남의 부모공양 책임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강력한 태도(71.6%)를 보였는데 반해, 일본인 41.9%, 한국인 46.1%로 나타났음.

—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영향을 줌.

• 자녀의 교육, 정서적 발달,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2.7%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22.8%,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6.9%를 보였음.

□ 여성의 자아욕구 변화

— 1996년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이 자기 일을 갖는데 남성 6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74.7%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특히 적극적 찬성이 많았음.

• 부인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겠음.

2. 사회적 요인

□ 산업화 및 도시화

—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킴.

— 산업화 과정에서는 직업 및 교육 등에서 농촌지역의 배출요인(push factor)과 도시지역의 유인요인(pull factor)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이농향도(rural-to-urban)」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됨.

- 이와 같이 급진전된 젊은 연령층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촌지역에 남겨져 있는 가족에게는 사회적 긴장을, 도시생활에서의 과다한 경쟁과 함께 도시가족에게는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됨.

□ 양성평등화

—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여성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

-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1960년 5대 국회에서는 233명 중 여성은 단 1명으로 0.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6대 국회에서는 273명의 중 여성이 16명(5.9%),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299명 중 15명(5.0%)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90년 24.2%이었으며, 이는 1995년 27.3%, 2000년 31.5%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여성권한척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권리신장은 시급한 과제임.

- 그 해결의 일환으로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인 보육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인구학적 요인

□ 초혼연령 상승

—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만혼의 경향이 뚜렷하였음.

• 초혼연령의 상승에 더해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한 여성에게서 매우 현저함.

□ 혼인감소

—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감소추세로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을 최고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7.0까지 낮아졌고, 2003년에는 6.3에 머무르고 있음.

□ 소자녀 선호

— 1960~1999년의 유배우부인의 출산율은 1960~1980년 기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1990년 이후에는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1990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결혼연령 상승 현상으로 출산율은 작은 폭의 감소를 보였음.

• 그런데 2000년도에는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층에서 유배우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였음.

•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부인의 95%,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57%,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5%의 추가자녀희망률을 보였음.

—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남편의 높은 소득에 힘입어 가사를 지원하는 파출부, 자녀교육을 위한 가정교사 등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저학력의 여성은 추가자녀 희망률과 자신의 선택에 의한 취업률이 모두 낮아서 많은 부인들이 한 자녀 이상을 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년세대의 조기사망

— 인구의 평균수명은 현저하게 연장되고 있으나 중장년층의 사망률은 어느 사회의 경우보다 높아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2002년 현재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인구 천명당 40~44세 3.1명, 45~49세 5.0명, 50~54세 7.3명, 55~59세 11.0명으로 나타났음.

□ 평균수명 연장

— 평균수명은 영양상태의 개선, 보건수준의 향상, 국민의 생활습관 변화, 환경개선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음.

- 즉, 평균수명은 1970년 63.15세에서 2000년 75.87세로 30년간 12.72세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0.7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성별로는 동 기간 중 남자가 59.77세에서 72.06세로 12.29세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77.54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여자는 66.70세에서 79.50세로 12.80세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4.08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4. 개인적 및 가족 요인

□ 여성교육수준 향상

—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5.2%, 여성 5.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41.2%, 여성 34.1%로 남성은 2.7배, 여성은 6.1배가 증가하였음.

-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8.5%, 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25.7%, 여성 12.8%로 남성은 3.0배, 여성은 8.0배가 증가하였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 2004년 1/4분기 현재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8%로 과거 약 40년간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49.6%로 산업화 초기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음.

• 1980~2001년 중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미혼여성의 비율은 5.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만큼 증가하여, 결국 전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2001년 현재 77.8%에 이름.

— 결혼에 따른 노동시장이탈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 중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경우 취업률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 20대 여성의 경우, 1990년도에 비해 결혼전이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정도는 줄어든 반면, 출산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정도는 늘어났음.

□ 이혼가족의 증대

—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혼 건수는 1975년 16,453건에서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재혼가족의 증대

—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증가함으로써 재혼이 동반 상승하여 최근 재혼가정은 1년에 약 6만 4천 가구가 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 전체 부부가족 중 부부 일방이 재혼인 경우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19.0%, 2002년 21.0%로 나타났음.

□ 국제결혼의 증대

— 외국인과의 혼인은 1996년 15,946건에서 1999년에는 10,570건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5,913건에 이름.

- 2002년도에 발생한 외국인과의 결혼은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5.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의 시사점

— 다양한 가족은 개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됨
- 사회발전에 따라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이행이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임.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자녀양육을 포함한 전체 가족원의 부양과 직결되므로 여성취업의 증대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당연함.

—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
- 양질의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더욱 강조되고 외국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임.

제 5 장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 본 장에서는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그리고 노인가족을 주요 논의대상으로 함.
- 이러한 가족유형이 새롭게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보다 빈번하게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1. 개념 및 특성

— 전통적 가족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족이고, 미혼모가족은 자녀로서는 부가 부재한 상황임.
-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일방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으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였음.

- 미혼모를 혼인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로 한정하여, 미혼의 여성이 자신이 출산한 자녀와 가구를 이루고 사는 형태를 미혼모가족으로 정의하였음.

— 무자녀가족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없는 가족이고, 노인가족 특히 노인단독가족이나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평생 자녀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음.

- 무자녀 부부중심의 가족은 자녀의 출산을 혼인과 함께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
- 비자발적 무자녀가족(involuntary childless family)은 신체적 혹은 생리적 이유로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2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의 부부가족임.

— 노인단독가족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으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함.

- 또한 노인부부가족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 및 다른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부부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한부모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이 된 형성원인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배우자의 가출 또는 유기, 장기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는 1990년

25.5%에서 2000년에는 22.5%로 감소하였고,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도 같은 기간에 56.0%에서 44.7%로 감소하였음.

— 미혼모가족의 규모 및 발생추이를 요보호아동 발생 수, 미혼모시설이나 모자시설의 미혼모 입소자료 및 국내외 입양아동수를 가치고 추정하고 있음.
  • 미혼모가족에 대한 현황자료 만큼이나 무자녀가족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실정임.

—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딩크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도 신세대 전문직 종사자 부부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딩크족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혼모가족이나 무자녀가족에 비하면 노인가족, 특히 노인부부가족과 노인단독가족의 현황은 명백하게 파악되고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2000)에 따르면, 전체 노인가구 중 노인부부가족은 29.1%, 노인단독가족은 13.8%로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노인가족이 전체의 42.9%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자원의 문제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빈곤문제임.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남성 한부모가족보다는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가족의 가족자원상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자녀양육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등으로 나타났음.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하여 만성적 질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이 건강상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의 악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는 노인가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과정에 대한 분석의 단위는 매우 다양한데, 가족규칙을 통한 역할분담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음.

- 한부모가족에서는 부 또는 모의 부재에 따르는 가족원 전체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 가족기능 수행에 있어서 자신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미혼모가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 비자발적 무자녀가족 중에서 불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불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부부관계,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인단독가족이나 노인부부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의 결핍 등으로 가족관계 및 가족과정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앞서 살펴본 가족자원의 한계와 가족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 기대와 현실의 편차 등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은 변화된 가족생활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절망감, 상실감, 소외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나타냄.
- 미혼모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은 대체로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소외와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과거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증가함.

3. 외국의 사회적 지원

— 가족자원의 결핍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가족문제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외국의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이혼과 미혼모가족이 보편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들이 가족 구조적으로 자원획득의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서구국가에서는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고, 미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계층이라는 인식은 드문 실정임.
- 무자녀가족 중 비자발적무자녀가족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노인가족에게는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가족과정(family process) 상의 문제와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사회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그리고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가족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비제도적 차원의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노인가족의 가족부양 및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른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음.

- 주로 재가보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정서적 만족까지

도모하고 있음.

4.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또한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득보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름.

- 한부모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의 체계 내에서 제공됨.
-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요보호 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짐.
-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료보험을 통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노인가족을 위하여 소득지원과 경로우대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의료지원, 그리고 주거보장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됨.

5. 시사점

□ 향후전망

— 가족이 생활해 나가야 할 환경적 변화는 빠르고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어 보다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의 출현을 예측할 수 있음.

- 이혼율의 증가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방적 성문화의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로 미혼모가족 또한 꾸준하게 늘어날 것임.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가구형태가 자녀동거에서 노인부부가족과 노인단독가족의 형태로 증가할 것임.

□ 사회적 지원

— 구조적으로 다양한 가족 모두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자원의 부족과 역할부담 및 역할갈등, 그리고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음.
- 특히 이들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제적 지원 이외에 이들 가족의 가족생활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각종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정책은 다양한 가족의 복잡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개인,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가족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제 6 장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1. 개념 및 특성

□ 재혼가족

—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을 무자녀 이혼·사별자의 재혼 및 재혼 및 미혼자·이

혼자의 결합의 경우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함.

— 재혼가족의 발생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별거, 사망, 이혼 및 유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주의적 성윤리와 여성지위 향상 및 재정적인 이유 등이 지적됨.

□ 입양가족

— 본 연구에서는 입양가족을 출산이 아닌 입양이라는 법률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자 함.

— 입양가족의 발생원인은 불임으로 인해 무자녀 가족인 경우와 사랑과 인류애 등의 인도주의적 동기로 유자녀 가족의 경우도 입양가족에 유입하고 있음.

□ 국제결혼가족

—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족을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 최근 국제결혼의 양상은 한국인 하층 남성과 외국인 여상사이의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재혼가족

— 우리나라의 재혼가족의 규모는 이혼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이혼가족의 3분의 1 정도는 다시 재혼하고 있는 추세임.
- 남녀의 재혼구성비율은 여자가 남자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임.

— 재혼시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재혼자 중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입양가족

— 2001년까지 입양된 아동수는 18만명이 넘으며 이중 국내입양은 28%정도로 국내입양가족수는 최소한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국내입양은 수적으로나 전체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35.7%에서 2002년에는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국제결혼가족

— 국제결혼가족은 증가경향을 보이며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결혼건수는 2003년에는 25,658건으로 1991년에 비해 무려 5.1배의 증가폭을 보임.

— 국제결혼유형은 점차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에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로 변화되고 있음.

□ 문제점

— 가족의 정서적 측면

• 재혼 및 입양가족의 경우 기존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실감, 친부모와의 애정 유지와 계부모와의 애정 사이에서의 갈등은 가족의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남.

• 국제결혼가족은 언어 및 문화 등 생활습관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부부 및 가족간의 공동생활에 혼란과 어려움 및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적·제도적 측면

•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의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성에 관한 문제로 현재의 호주제도 하에서 자녀의 성문제는 가족 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커

다란 요소로 작용함.

-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취득 문제로 한국인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여 불법체류라는 악순환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사회적 측면

-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적 낙인은 가족형성 및 가족적응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외국의 사회적 지원

□ 미국

— 미국의 재혼비율은 상당히 높아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혼한 부부의 75%가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결혼한 부부 중에 43%는 남녀 둘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재혼한 경우이었음.

— 미국가정의 입양아동수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미국 가정에서 입양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전체의 2.5%에 달하며 가장 높은 연령층은 12~14세와 15~17세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재혼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으로 LIP(In Loco Parentis)는 계부모의 법적지위, 재정적 지원 의무, 입양, 유산상속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이외에 6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 재혼을 하면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한 여자의 경우 전남편의 재혼여부에 따라 수급권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private counselling program)이 있음.

— 미국의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입양이 곤란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보조금액을 제공함.

- 입양후 복지 서비스는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에게 개인상담, 위기특별상담(Crisis-oriented intensive counseling)서비스를 제공하며, 친부모에게도 개인상담, 특별상담 및 지지집단활동이 제공됨.

— 미국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음.

- 그러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한적인 혜택을 받고 있음.

□ 영국

— 영국은 1980년대~2001년까지의 재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1981년 25.7%, 2001년 29.4%).

— 1996년 현재 수양부모가 보호하는 아동은 33,000명으로 정식수속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50,000명에 이름.

— 국적취득 신청자 중 결혼에 의한 경우는 1988년 20.1%에서 1997년 27.0%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주요 국적은 미국, 아시아계, 유럽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재혼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은 The Children Act(1989)에 근거하여 계부모에게 친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주권한(Residence Order)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법적 근거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수양부모가정에 수용하고 있음.

- 정부는 수양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수양부모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의 재혼비율은 1992년에 남자 12.8%, 여자 11.2%로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연간 입양아수는 600명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입양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입양의 주요 동기는 혈연과 금전으로 상당수의 성인남자들이 입양되고 있음.

— 일본의 14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79,557명 중 결혼으로 재류하는 비율은 27.5%로 나타나서 국제결혼가족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은 재혼가족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입양가족을 위하여 1988년 제정된 법에는 호적에서 입양가족의 성만을 기록하도록 허용하여 혈족 이외의 입양을 장려하고 있음.

—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에는 생활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됨.
  • 국적취득을 한 자녀에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4.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가족의 정서적 측면

—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결혼서비스가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재혼 전 부부상담서비스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

—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양부모 예비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입양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음.
  • 또한 사후적 상담프로그램이 있으나 내용이나 실시횟수가 미비하고, 입양가족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무함.

□ 법적·제도적 측면

— 최근 양자제도가 거론되어 7세 이하 아동은 재혼한 가족의 호적에 편입되나, 그 외의 경우는 법적으로 배제되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으로는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 입양아동의 수업료·입학금 및 면제보육시설 우선 입소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입양가족에게 소득 및 교육비를 공제해주고 있음.

— 국제결혼가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사회보장 혜택, 취업 등이 가능하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거주인정, 출생자녀의 호적,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이 배제되어서 가족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음.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임.

□ 사회적 측면

— 최근 호주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정책적 노력이 미비한 실정임.

5. 시사점

□ 정서적 지원

— 재혼, 입양 및 국제결혼가족의 가족간의 적응 및 관계갈등의 완화를 위하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법적·제도적 지원

—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의 학교 및 사회에서의 경험하는 스티그마는 성씨에서 오는 것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입양가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결혼가족의 결혼권리 및 가정 또는 가족보호를 위하여 불법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혼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 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제 7 장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1. 개념 및 특성

□ 개념

— 맞벌이가족은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취업동기에 따라 생계유지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 맞벌이 가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맞벌이 주말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직업과 거주지를 두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로 정의됨.

— 기러기가족이란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부모 중에 한사람과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다른 부모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가족을 지칭하는 것임.

□ 특성

— 맞벌이 부인은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도록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 많은 가정 내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간 갈등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역할간 갈등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맞벌이주말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기는 하나 부부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가 일반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임.

- 맞벌이 주말부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이 많으며, 이러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퍼스낼리티 특성은 자율과 절제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내면화 되어 있는 사람들임.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었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낮아졌음.
-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세대별로는 3세대 이상에서, 그리고 영유아 유무별로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 (51.1%) 맞벌이 부부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기러기 가족수에 대한 추정에 의하면, 기러기 아빠는 현재 2만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 한해만도 7천명이 증가하였다고 함.

□ 부모-자녀관계

— 맞벌이 부부는 다른 역할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높은 갈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전문직 취업부인들의 경우 부모역할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자녀양육의 문제는 기혼여성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임.

□ 가사노동 문제

— 맞벌이가족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가사노동 문제이며, 주말부부의 남편에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임.

• 주말부부 남편들의 25%가 가사노동기술이 전혀 없어서 임지에서 하숙을 하거나 파출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음.

— 또한 기러기가족 중 혼자 생활하는 남편들도 평소하지 않았던 가사 일을 모두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라고 지적하였음.

□ 역할기대,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

—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역할기대와 역할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말부부의 문제점으로는 역할긴장과 스트레스를 들 수 있으며, 기러기부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편견 및 기타

— 일반인들의 주말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주말부부가 사회적인 접촉을 줄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도록 만들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그들 부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기러기가족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부부사이를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시비, 또는 조롱하는 경우라고 함.

• 또한 기러기가족의 문제 중에 하나는 외국 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들과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자녀와의 단절문제가 나타남.

3. 외국의 사회적 지원

가. 스웨덴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됨.

- 육아휴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이전 고용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과거 2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가능함.

□ 부모보험제도

— 부모보험제도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부모현금급여와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 받는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음.

□ 보육서비스

— 맞벌이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특성 하에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함.

- 대부분의 공립보육시설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모·부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나. 영국

□ 법정출산수당

— 영국의 맞벌이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

으로 국민보험체계에서 지급되는 법정출산수당이 있음.

- 수급자격은 여성이 피용자이고 지난 20주간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기에 통보해야 함.

– 법정출산수당은 최소한의 법정금액으로써 약 18주간 지급되고 처음 6주는 주당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며 그 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

□ 출산휴가 및 부모휴직제도

— 영국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18주 동안의 출산휴가(Maternal leave)를 부여하며 입양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여함.

— 부모휴직제도(parental leave)의 경우, 자녀가 5세 될 때까지 13주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보육서비스

— 교육노동부 및 지방교육당국 관할 하에 5세부터 전원 무상교육의 프리스쿨(pre-school)과정이 시작되며,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형태는 사회보장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서 실시되는 이원화체제를 갖추고 있음.

—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적은 수의 공립유아원에서 보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 프랑스

□ 육아휴직수당

— 프랑스의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됨.

□ 개별가정 보육지원수당 및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 지급되는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과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양립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이 있음.

□ 보육서비스

— 프랑스 보육의 기본방침은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 영·유아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라. 미국

□ 육아휴직제도

— 맞벌이가족을 위한 미국의 지원체계로는 모성보호관련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로 여성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이를 다른 일시적인 장애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경미한 업무로 직무를 조정하거나 대체근무를 허용하고 있음.

— 임신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가 인정할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취할 수 있음.

□ 보육서비스

— 미국의 유아 교육 및 보육에 관한 국가의 정책체계는 없으나 각 주에서 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헤드 스타트, 시장 중심의 서비스 매입제도, 취학 전 아동 및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제도의 세 가지를 통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말부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음.

— 주말부부들은 가사, 아동양육 등에 대해서 일반적 사회적 서비스인 세탁소,

인스턴트 음식, 보육 시설 등이 있으며, 떨어져 살던 부부 및 가족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음.

마. 일본

□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제도

— 일본은 육아·가족간호휴직법에 따라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가 1세에 이를 때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동 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 및 손자, 배우자의 부모 등 대상 가족이 부상이나 질병, 신체상 혹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2주간 이상의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업제도

— 공공부문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면 직종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업을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 정부는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도 5일간의 휴가를 주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원의 1일 잔업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음.

□ 보육서비스

— 일본의 보육정책은 일본 여성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동정책과 어머니에 의한 아동양육을 강조하는 두가지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높은 비율의 국가부담에 의한 공공보육이 갖추어져 있음.

• 보육소는 2002년 현재 22,243개소로 이 중 정부에 의해 설치된 공공시설이 약 57%(12,587개소)임.

4.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가. 모성보호정책

□ 산전·산후 휴가

— 근로기준법 제 72조 제1항 및 제11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전체 기간 중 산후에 45일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고 있음.

—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총 90일 중 최초 60일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

• 수급자격은 해당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산전·후 휴가 개시일 기준)을 기준으로 지급함.

□ 육아휴직 제도

— 동 제도는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수급자격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임.

□ 가족간호휴직 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1년 이내로 하고 있음.

□ 생리휴가 및 수유시간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나. 보육서비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보육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원 우선순위는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등임.

□ 만 5세아 무상보육

— 지난 1997년말 법적 근거를 마련, 1999년 하반기부터 취학 직전 만 5세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아동에 한정하던 것을 2002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함.

□ 장애아 무상보육

— 지원대상은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함.

• 예외적으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으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은 무상보육대상에 포함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기타 사회적 지원서비스

— 미국의 경우 주말부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으나 일부 사회적 서비스 및 사적 서비스 등이 있음.

• 가사, 아동양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서비스인 세탁소, 인스턴트 음식, 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사적인 서비스로 상담 프로그램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주말부부 및 기러기가족에 대한 공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는 거의 없음.

□ 주말부부가족

— 주말부부가족은 사적인 영역인 부모, 친지, 친구들에게서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받거나 시장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러기가족

— 기러기가족의 경우에도 개인적 또는 가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가 대부분임.

5. 시사점

□ 문제점

— 이들 가족들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역할갈등으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사노동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주말부부가족이나 기러기 가족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도 이들 가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률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며, 제도의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여 법 자체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회적 지원

— 선진국과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가제도 실시 등에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서적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인지적 요소를 발달시키고, 어린 시절부터 가사노동수행을 위한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함.

— 가족과 부부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통해 의사소통 향상과 문제해결방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이외 보육에 있어서도 보육료 지원의 확대, 특수보육의 활성화, 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양성 평등적인 양육책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 8 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1. 개념 및 특성

□ 미혼독신가족

- 미혼독신자를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개념화하며, 영어로는 “never married”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별·이혼으로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을 의미함.
- 독신자의 유형분류는 첫째, 법적인 혼인상태의 원인에 따른 분류, 둘째, 사실적인 혼인상태에 따른 분류, 셋째로 성관계를 맺는 기준에 따른 분류, 그리고 독신에 대한 자신의 의사반영 여부와 기간 분류 등이 있음.

□ 동거가족

- 동거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하여 살고 있는 형태 중 사실혼과는 달리 혼인의사가 없거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결합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말함.
- 최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통해 결혼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결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것과 결혼으로 발생되는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동거의 방식을 택하기도 함.

□ 공동체가족

- 공동체가족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가족의 틀을 벗어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핵가족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개인 및 가족들의 복합체임.
- 공동체가족의 형성원인은 세대간 문제, 가족문제, 여성문제, 놀이와 일의 가치문제, 정체감 문제, 인간혁명 문제 등의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동성애가족

— '동성애자'란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에게 감정적·정서적·성적·신체적으로 끌리는 성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을 말함.

— 동성애 또는 동성애가족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부부의 지속기간은 일반부부보다 짧고, 독점적·배타적 성격이 덜함.

2. 현황 및 문제점

□ 미혼독신가족

— 독신가구는 전체가구 구성 비율에서 1965년 2.32%, 1975년 4.23%. 1980년 4.80%, 1985년에는 6.91%,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음.

—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시선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이 부모님의 결혼하라는 압력, 고독감과 외로움, 미래 불안, 곤경에 처했을 때, 성적인 편견, 경제적인 곤란, 성욕 해소의 순임.

□ 공동체가족

— 종교단체가 주요하며 1975년 시작된 의정부의 풀무원의 등장으로 가족모임, 한지붕 아래의 합동가족,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 있음.

—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새로운 가족생활, 특히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의 수단이자 방식으로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동성애가족

— 동성애가족의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강한 유교적 전통을 이유로 한 부정적 입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성비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독특한 인구학적 특징은 세계적인 사회 문화적 변동의 압력과 함께 동성애가족의 증가를 가져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재판부에서 20여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애부부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 내렸던 경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3. 외국의 사회적 지원

□ 미혼독신가족

— 미혼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 독신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음.
  • 미혼독신가족의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입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미혼독신자는 건강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위험이 배가 될 수 있음.
  • 또한 미혼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인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을 노리거나,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임.
  • 미혼의 경우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

□ 동거가족

— 동거가족은 교육수준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거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여 1년 이하인 경우가 36%, 1~2년인 경우가 18%로 나타났음.
  • 그러나 동거자의 40%가 자녀를 두고 있어서 이들의 동거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생활에 더 가까움을 보여줌.

— 또한 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 동거관계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혼인관계에서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알콜중독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행동과 연

루될 가능성 또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동거관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부모를 가진 아동들은 교우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집중력 장애 등 정서발달 및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동거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혼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가족단위로 인정하여, 일반적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공동체가족

— 도시공동체는 젊은 전문직업인, 편부모, 일부 중산층 가족으로 구성된 8~10명 정도의 소규모 협동적 가구로 이루어졌음.

- 도시공동체는 친밀성 외에 어떠한 특수한 가치관도 부재상태이며, 핵가족의 위기는 공동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농촌에 정착한 전형적인 공동체의 예로 Twin oaks commune이 있음.

- 농촌 공동체는 여러 핵가족이 모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여 온정적인 관계를 누리며 핵가족 속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였음.

— 공동체가족의 경우 그 목적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특별히 언급하기 어려움.

- 또한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나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임.

□ 동성애가족

—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는 성인의 4%정도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동성애부부를 합법화하는 등 동성결혼이 갖는 '탈가정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임.

- 동성혼인에 대해서 1989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덴마크가 '동성커플 등록에 관한 법률(Law on Registered Partnership;Act 372 of 1989)'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덴마크의 이러한 입법의 영향으로 1993년에는 노르웨이, 1995년에는 스웨덴, 1996년에는 아이슬란드, 1998년에는 네덜란드, 1999년 프랑스 등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음.

— 유럽연합(EU) 의회는 동성커플에게도 이성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동성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음.

4.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우리나라에서 미혼독신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음.

— 다만, 동거가족은 사실혼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가족과 같은 지원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에서 동등한 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을 뿐임.

5. 시사점

□ 문제점

— 정책적으로 요보호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원은 일반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미혼독신가족 중 여성독신자의 경우 제도적 불이익이 많으며, 남성독신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적 지원

—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입양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호주제로 인해서 여성독신자들은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지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

— 법적인 측면에서 '신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사실혼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남녀관계가 의외로 많고 동거당사자들과 그들 간에 출생한 자녀의 삶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동거가족의 실체를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공동체가족의 경우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자발적·자율적 성향이 짙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동성애가족의 경우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함.

제 9 장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1. 사회적 지원체계

□ 가족구조

— 1975년도에 2세대 가구는 거의 70%였으나 2000년도는 60% 대로 감소함.

—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75년 51.7%에서 2000년 4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부부가족은 1980년 6.3%에 비해 2000년에는 2배인 12.3%로, 1인 단독가구는 1980년 4.8%에서 2000년에는 15.5%로, 3세대, 4세대 가족은 1980년 20.1%에서 2000년에는 8.4%로 감소함.

— 부부와 편부모로 구성된 2세대가족의 증가는 아주 미약한 숫자이나 20년

사이에 0.4%에서 0.8%로 2배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임.

□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

— 2세대 가족 중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나 기능상의 변화를 경험한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지원이 필요하며, 미혼모나 미혼부도 자녀양육·직업 재활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빈곤한 가족은 경제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기능상의 문제와 정서상의 문제는 전체 가족에게 보편성 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위탁가족은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일반가족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하며, 다양한 사회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함.

□ 사회적 지원체계

— 민법상의 가족에 관한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혈족을 우선함.

• 혼인에 관한 효력 조항에서 첫 번째 부부간의 의무를(제826조) 동거와 상호부양과 협조로 명시하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제827조), 재산에 관한 책임(제829조), 생활비용에 관한 의무(제833조) 등을 명시함.

• 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친생자'(제844조~제865조)와 '입양의 요건'(제866조~제908조)에서 대체로 관계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호 역할과 의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음.

— 호적법은 법적으로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여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 형성과 복지 제도로부터 제외시키는 오류를 초래하여 복지와 안녕의 기반을 취약하게 함.

—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

• 2004년 현재 전국 3곳(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면서 다양한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개입, 건강가정의 형성 및 유지 지원,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를 위한 서비스 등을 실시함.

□ 정책적 지원체계

— 사회보험

- 국민연금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보호기능을 일부 제공한다 할지라도 연금 가입자 개인의 자격기준에 따라 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개인종속적인, 혹은 가족부가적인 지급형태를 띄고 있음.
-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노인인구의 의료비부담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노인들에게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노인요양 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고용보험은 보험대상을 개인 단위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은 동거가족의 수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을 존중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음.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수급권의 선정과 급여가 세대단위로 이루어지고 가족 내 부양의무자의 가족원 부양책임을 강조하며 가족을 기본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이루어져 있음.

— 출산과 육아 정책

- 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용률은 단지 12.2%에 그치고 있으며, 영아를 입양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영·유아보육제도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육시설 우선입소와 교육비용 지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교육의 불형평성을 극복하며 직장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키는 조항을 두어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함.

— 경로우대제도

- 노인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경로연금제도, 노령수당제도, 경로우대제도, 노부모봉양수당, 그리고 주택자금할증지원제도 등이 있음.

— 재가보호지원제도

- 가족이 직접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간호휴직제도, 가정봉사원파견제도, 주간보호, 그리고 단기보호 등이 있음.

— 시설보호지원제도

- 가족내에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아동의 보육시설서비스, 노인의 양로시설서비스, 미혼모의 미혼모시설 등이 있음.

□ 정서적 지원체계

— 가족관계 및 기능 지원을 위한 보편적 정서지원체계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5에 있어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결정뿐 아니라 전문가가 보호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서는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을 제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명시함.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기본사업으로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권장하고 있음.

— 가족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적 정서지원체계

-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위기가정에 대해 '상시신고 및 구호요청체계 구축',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건강한 가정형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위기유형별 예방과 조기개입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사회적 지원방안

□ 개선방향

— 상황적 맥락 속에서 가족을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 지원은 가족 내의 양성평등, 세대간 평등을 전제로 하여 보육, 돌봄 기능, 가사분담 등에 대한 평등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함.
- 신가족주의적 사회 지원망을 구축하여 어떤 가족형태든지 다양한 위기상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체계구축방안

— 관련법안 개정

- 민법 개정 및 호적법 폐지가 필요함.
-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요구됨.

— 가족정책의 제도화

- 가족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지원정책 개발

- 가족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아동수당, 노인수당, 보호자수당 등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일반 가정을 유지와 인력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육아나 부양 등과 관련된 휴가 및 휴직제도가 정착되어야 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봉사원파견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준전문가인 홈메이커의 투입이 필요함.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일반아동에게 보육시설에서의 교육비용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함.
- 경로연금과 노령수당의 지급액을 증액하여 소득보장 및 빈곤층으로 하락방지하고, 시설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가족의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회적 편견 타파

-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자녀 핵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틀지우는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교육, 사회홍보, 사회옹호 등의 가치관과 의식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함.

— 가족에 대한 사회지원 지출 규모 확대

- 1993년 OECD 국가의 GDP대비 가족현금 급여는 캐나다 0.9%, 프랑스 2.12%에 비해 우리나라는 0.003%이며, 가족복지서비스 지출도 덴마크 2.05%, 프랑스 0.41%에 비해 우리나라는 0.05%로의 확대가 필요함.

□ 세부방안

— 구조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곤한 가족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경제적 상태와 가족 내 보호기능이 취약함.
-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정서적 지원과 자활, 취업을 지원하는 경제활동지원, 그리고 가족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원 특성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 법적·제도적 제약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가족 밖 환경체계에서의 지원망을 형성하고, 가족 내부적으로 새로운

가족간 애정관계 형성과제나 적응의 문제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가족생활양식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 가족구성원간 관계, 여성 취업으로 인한 모성역할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양성 평등적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족 내 인식 변화와 여성이 모성역할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 법적 가족을 단위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제10장 종합논의 및 결론

1. 종합논의

—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은 종전의 보편적인 가족과는 현저하게 상이한 유형을 가지며, 이와 같은 가족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지혜를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개인적인 삶으로 인식되기도 할 것임.

- 현대 산업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지속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함께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는 다양하고 독특한 유형의 가족유형을 출현시키고 있음.
- 특히 정보사회가 사회 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또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정보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가족형태로서 독신이나 동거, 무자녀가족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노출을 꺼리는 동성애자들이나 특정한 취미, 문제, 목적, 이해, 관심 등을 공유하

는 동호자들 간의 소통과 결속을 지지함으로써 동성애가족 및 공동체 가족의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 및 가족의 특성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강조하지 않고 폭넓은 가족형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가치판단을 가지는 것임.

- 이에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동거가족, 미혼독신가족, 젊은 부부만의 가족, 무자녀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들 다양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2. 결론

— 한국사회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쇠퇴, 미혼율의 증대, 이혼율의 증가, 재혼의 증가, 출산율 감소,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자살의 증가, 가정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조기유학에 의한 기러기가족의 증대와 부모의 일탈, 그리고 사이버문화의 영향 등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격동의 세월이었음.

- 즉,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은 한국 사회의 미래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가치관 혼돈과 사회 무질서에 의하여 방황·일탈하는 한국 가족의 어두운 현재를 더욱 확신시켜줄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로서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현실 및 가족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현실적 인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며, 인식전환에 대한 요구이기도 함.

—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통합적 차원의 가족정책이 필요함.
  • 즉, '개인-가족-사회 및 국가'가 상호 지원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만이 개인발전, 가족안정,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복지국가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의 사회현실과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한국적' 가족모형에 적합한 가족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음.

— 결론적으로 가족이 법이나 종교,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발전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종류의 헌신과 역할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건강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임.
  • 또한 개인들이 '가족'으로서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규범·재화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함.
  • 이러한 점이 바로 다양한 가족을 진정 '가족들'(the families)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사회적 기본요건이며,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서 읽어내야 할 사회적 의미라 할 것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산업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지속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함께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형태, 가족원 특성, 가족생활양식 등의 많은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이 출현되고 있다. 특히,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 또는 탈현대사회로 지칭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즉, 구성된 가족원의 특성, 결합원리 및 역할배분 등이 독특한 모형을 가지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대인들이 가족영역에서 보여주는 적응양상임과 동시에 새로운 개인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가족의 한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주목된다(김승권 외, 2000a).

종전까지 '다양한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형태와는 현저하게 상이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족 불안정 또는 가족위기를 나타내는 한 징표로 받아들여져 왔음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족유형의 확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결국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가족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최근 대량 발생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통적·보수적 입장에서는 가족해체의 증가를 공동체 붕괴 및 도덕적 무질서화의 전조로 인식하여 해결노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반면,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근대적·진보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수'와 '약자'에 대한 억압의 해체 및 자발적 선택이라는 권리구현의 측면에서 자유의 신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통적 개념의 '가족 틀'을 타파하고 주관적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가족'으로 보는 다양한 가족(families)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다.[주1)]

한국사회에서 최근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은 이제까지 주류로 여겨왔던 가족유형인 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과거의 사회적 조건과는 다른 양상에서 생성되고 있다. 과거의 다양한 가족유형은 해체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적, 과도기적 산물이거나 객관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해야만 했던 것이었다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은 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등과 같은 새로운 가족유형으로서 개인들의 능동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으로는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급속한 사회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개별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형태, 가족원의 재구조화, 다양한 생활양식 등에 의하여 출현한 최근의 다양한 가족들 중에는 전통가족 또는 핵가족이 배태한 성차별적, 가부장적, 상품소비적 가족생활의 모순을 지양하는 한편,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강제하는 경쟁 및 소외에 대한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시도한 '대안가족'도 존재하고 있음은 가족의 개념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유형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제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 가족이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지하며 다른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즉,

---

주1) 서구 선진사회에서의 대표적인 다양한 가족유형은 독신자가족,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그리고 동성애가족 등이라 하겠음.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유형은 부부와 미혼자녀, 또는 그들과 양(편친)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보편적인 가족유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하겠음.

최근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며, 그리고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족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안정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궁극적인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들 가족의 유형과 특성을 검토한다.

둘째, 주요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다양한 가족관련 제 개념 및 이론

'다양한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통적 및 현대적 의미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개념과 각종 이론은 다학제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나. 다양한 가족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다양한 가족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선행연구의 구체적 내용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아울러 이들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후술하는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토록 한다.

다.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이들 가족의 향후 변화를 전망한다. 다양한 가족의 발생원인은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이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가족의 성격을 적절히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을 가치관적, 사회적, 인구학적, 그리고 개인적 및 가족 등의 네 측면에서 접근한다.

라.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다양한 가족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이들 가족의 특성을 논의한다. 특히 구조적 측면, 가족원 특성의 측면, 가족생활양식의 측면, 그리고 탈 근대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검토한다. 이어서 이들 다양한 가족의 개념 및 특성,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 지원실태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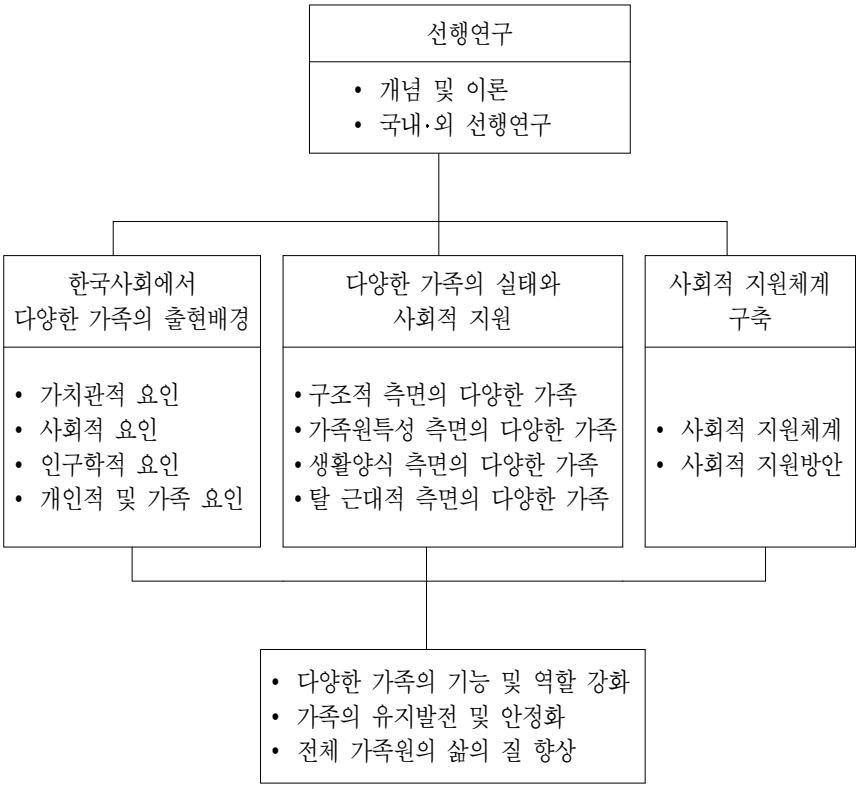
아울러 외국의 사회적 지원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에게 지원될 필요가 있는 각종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마.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및 세부 지원내용

이는 본 연구의 핵심적 결과라 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다양한 가족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가족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특히 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지원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가족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상에서 설명된 연구의 내용에 기초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요약·제시된다.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방법

가. 기존문헌 고찰

다양한 가족관련 제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 선행연구 등을 재분석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가족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각종 제도 및 통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민법 중 친족상속법
-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안), 2004년 업무지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 업무지침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 업무지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 업무지침
- 입양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 업무지침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 업무지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 업무지침
- '인구 및 주택센서스' 연도별 자료 (통계청)
- '인구동태신고' 연도별 자료 (통계청)

나. 다양한 가족유형 관련 기존 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다양한 가족유형의 규모를 추정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분석하는 기존 실태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1990년 및 200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 (통계청)
-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 가족복지욕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다양한 가족유형별 사례조사

다양한 가족유형별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인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주말부부 및 기러기가족

등의 생활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 workshop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독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workshop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workshop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workshop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workshop은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련 각계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한 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형태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제 3 절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접근방안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제도 자체가 갖는 가변성과 환경에 적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그런데 가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간의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된 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가족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가족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그리고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 대분(大分)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가족관계로서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가 변화하여 나타나는 다

양한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그리고 노인가족 등이 중심이다. 가족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으로는 전형적인 동질적 특성을 가진 가족원의 특성을 벗어나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유형에는 재혼이나, 입양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거나 이질적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재혼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국제결혼가족 등이 중심이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은 기혼여성의 취업, 주요 가족원이 멀리(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외국) 떨어져 삶으로서 나타나는 가족유형이며,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등이 중심이다. 마지막으로 탈 근대적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원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권위적인 사회질서의 거부 및 평등적 관계를 지향하는 방식의 하나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으로는 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중심이다. 그렇지만 동거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으로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은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형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유형도 있다. 즉, 서구사회에서도 한창 논란이 있는 가족유형, 우리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가족유형,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족유형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족은 현 시대의 한국사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시대를 달리하거나 다른 사회를 살펴본다면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장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

제 1 절 다양한 가족관련 제 개념

1. 가족의 제도상 개념

가족은 민법 제4편(친족편) 제77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의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된 자이다. 즉,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2. 가족에 대한 학자의 정의

미국의 인류학자 Murdock(1949)은 가족을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이며,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인남녀의 출산자녀 및 입양자녀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그는 자녀출산, 사회화, 경제적 협조, 성적 욕구충족을 강조하면서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을 둔 일차적 공동체 집단이며, 자녀출산과 양육, 의식주 및 성적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이라고 한다.

Levy-Strauss(1969)는 “가족은 결혼에 의하여 출발하고,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 및 성적 의무와 권리, 존경 및 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감정으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역동적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의 유대, 관계, 결합을 중요 요소로 보았다.

가족을 “사회 전체적 체계와 유기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그 형태와 기능을 서로 연결한다. 즉,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면서 그 속에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시켜주는 인간형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하며(유영주, 1997), 또

는 가족은 결혼과 혈연 혹은 양자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집단이라고도 한다(조소연, 2001).

가족은 사회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회제도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가족 내에 존재하며, 가족은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가족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한 사회변화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등 항상 변화하는 '가변적 제도'이다. 즉, 가족은 사회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외적 및 내적 요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김승권 외, 2000a).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이경희 외(1995)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 자녀가 결혼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직계와 방계로 확장되는 혈연적 집단이며, 동시에 동류의식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흥식(1998)은 가족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혈연중심의 형태적 측면을 강조한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는 협의의 가족 개념이라 하겠다.

조추용(2001)는 가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속하고 있는 가족의 보편성과 그 속에서 개별가족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협력관계 등을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접촉관계를 바탕으로 가족을 정의하였다. 즉,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으로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라면 가족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가족학자 Schulz에 의하면 가족은 혈연관계라는 획일적인 가족개념보다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족을 정의함으로써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였다(유영주 외, 2000). 이와 같은 가족의 개념적 정의는 광의의 가족개념이라 하겠다.

한편 가족의 가변성에 초점을 두게 되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에 의한 다양한 가족 개념이 될 수 있다. 현대 한국가족의 개념을 질적으로 연구한 양옥경(2000)은 가족의 개념적 변화를 알아보는 주요지표로서 가족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즉, 가족법,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가족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데올로기상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보호하려는 원칙 하에 마련된 것이며, 여러 차례 이루어진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가족의 개념에 있어서 양성평등중심의 사회적 변화가 가족관련 제도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3b; 2000a).

급속하게 진전된 사회변동과 이에 수반된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질서에도 적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파슨즈(Parsons)는 개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동기를 조성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가족이 담당하는데 의의를 둠으로써 가족의 존속을 주장하였다(이효재, 1977 재인용). 실제로 가족의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기초제도로서 질서 유지의 기능과 문화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건전한 소비주체로서의 가족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가족제도는 다른 사회제도와 독립해서 이해될 수 없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또한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특정방식으로 '가족'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경험상으로도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개념적으로 '가족(the family)'이라는 전통적 접근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가족들(families)'이라는 현대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승권 외, 2003b; 2000a).

이와 같은 가족의 학문적 정의에서 최근 논의주제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가족형성의 기본요건으로서 결혼, 혈연, 입양에만 의할 것인지의 여부와 가족원의 수가 2인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물론 다양한 가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에 대해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어떤 유형의 가족이든 그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둔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 가족관련 유사용어

가족관련 유사개념에는 가정, 가구, 세대, 가문 등이 있다. 이들 유사용어의 공통점은 의식주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족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가정과 가구만을 살펴본다.

가. 가정

가정(home)은 온정이나 사랑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을 가진 공동체로써 결혼과 공간적 성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가족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또는 장소'로 정의되지만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사회생활을 위한 긴장완화, 휴식과 안정, 재충전 등 가족원을 위한 심신의 안식처의 의미도 갖고 있다(조추용, 2001). 특히 가정이 가족과 구별되는 것은 생활공동체로서의 인간환경으로 가정은 인간의 생활과 생존유지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실존적인 생활단위이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물질적·정서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상생활의 장(場)이다(서병숙 외, 1986).

일반적으로 가족과 가정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족집단 또는 가족집단의 생활장소로서 '가정'이라는 구분된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가족은 인류의 번식형태에 기초한 집단으로서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개념인데 반해 가정은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생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업의 발전과 근대사회의 제도가 정비되고, 산업화 및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근로자와 그들 가족이 증가하는 시기에 구미의 영향으로 인해 'home'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면서 'home'의 번역어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가구

가구(household)는 혈연이나 비혈연의 사람들이 끼니를 함께 하는 주거생활단위로서 혈연관계나 심리적 관계보다 공동생활의 주거단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

는 것이다. 이는 행정적 의미로 세대(世帶), 식구(食口)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가문(clan)이라는 용어는 혈연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집단적인 의미가 강한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제 2 절 다양한 가족관련 제 이론

가족연구에 적용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가족 자체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 등 내부적 다양성과 함께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외부세계와 맺는 다양한 상호연관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3b; 2000a).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사회학, 심리학, 가정학 등의 다학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학에서 차용된 구조기능주의 이론, 갈등이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가족발달 이론, 생태학적 이론, 여권주의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의하여 이론의 기본 개념 특성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구조기능주의 이론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사회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거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사회체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특정한 구조 및 제도 등 사회의 일부분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즉, 그들은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들 자체와 이들이 전체 사회체계의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다(Abrahamson, 1978; Davis, 1959). 동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들로는 꽁뜨(August Comte), 스펜서(H. Spencer), 뒤르껨(E, Durkheim) 등이 있다.[주2)]

주2) 꽁뜨는 사회와 생물유기체간의 관계를 유추해서 보는 '유기체론'이란 관념을 활용하여 사회유기체란 개념을 생성하였음. 물론 스펜서도 유기체론을 채택하였지만 꽁뜨와는 달리 그의 개념은 공리주의 철학과 병존하였음. 또한 뒤르껨은 사회적 원인(social cause)과 사회적 기

파슨즈는 사회체계를 포함한 모든 행위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도식(scheme)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네 가지의 기능적 요건이다. 체계는 그 직면한 상황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적응(adaptation), 체계는 스스로의 주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달성(goal attainment), 체계는 다른 세 기능적 요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체계는 동기와 문화의 여러 유형 모두를 공급, 유지, 갱신하여야 한다는 잠재성 혹은 유형유지(latency or pattern maintenance) 등이다.주3)

구조기능주의는 가족을 미혼자녀의 사회화와 가족원의 인격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의 하위체계로 본다. 또한 가족과 사회 간의 목표와 기능의 조화, 가족 내의 남성과 여성의 도구적·표현적 역할구분 등을 강조하였다(Boss et al., 1993; 유계숙 외 편역, 1999 재인용). 일반적으로 '가족상'은 직장생활에서의 소득에 의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는 남편, 가사노동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개별 가족구성원의 안녕과 재충전을 담당하는 부인,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해 가는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역시 이와 같은 가족상을 토대로 한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기존의 가족연구는 근대화 및 산업화와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 따라서 근대 가족이론은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과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내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다"이라는 명제의 파슨스(Parsons)적 구조기능론으로 대표된다.주4)

가족영역에 대한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초점은 시대별로 다소 상이하였는데, 1920~1930년대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구성원에게 정서적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에, 1940~1950년대에는 '가족은 날로 약해져만 가는 사회를 어떻게 보존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있었다. 이는 구조기능주의가 '가족-사회'의 연계 및 가족강화를 통한 사회체계 안정에 주관심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능(social function)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업적을 남겼음.

주3) 이러한 기능적 요건을 'AGIL'이라고 간략히 표현함.

주4) 그 외에도 진화론적 가족 이론, 전산업사회 직계확대가족설, 그리고 산업사회와 핵가족의 기능적 적합성(good-fit) 가설 등이 모두 이에 속함(조은, 1995).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구조기능주의적 가족 이론은 1960년대까지 가족사회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군림해 오면서 '전산업사회=확대가족, 산업사회=핵가족'이란 명제가 보편화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는 구조기능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수행됨으로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이동원·함인희, 199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사회학 이론으로서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여 "현대 이론사회학의 한 장애가 되어 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Moore, 1978). 구조기능주의 이론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보수성, 성차별, 경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은 좌익과 우익 모든 입장에서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즉, 좌익으로부터의 공격은 사회체계 구성요소로서 경쟁과 투쟁을 강조하는 사회갈등이론에 의하여, 우익으로부터의 공격은 2인 관계(dyad) 또는 소집단의 교환과정 분석을 중요시하는 교환이론에 의하여 진행되었다(Boss et al., 1993).

2. 갈등이론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모순으로서 계급갈등을 강조한 K. Marx와는 달리 Simmel은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사회구조를 지배와 복종보다는 인간의 본능에 의존한 다양한 연합과 해체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해체나 붕괴보다는 사회 지속성에 갈등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적대충동을 사회유지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고전적 연구는 권력, 권위 등 희소자원들이 갈등과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집단 간의 이해관계 차이는 불가피하게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본 Dahrandorf와 갈등이 사회체계 내에서 통합성과 적응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Coser 등에 의해 변증법적 갈등이론과 갈등기능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가족에 대한 갈등적 관점은 일반적인 갈등이론의 기본가정, 즉, 사회갈등이 인간생활의 기본적 요소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회에서 갈등이 편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은 기존의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바대로 '당연히' 행동하도

록 동기 되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려는 동기를 가지나 각 개인과 집단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며, 비록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요구되는 물건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평등이며, 편재하는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생성하고 그에 따른 사회체계의 재조직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변동을 계속하여 경험하게 된다(김승권 외, 2003b 재인용).

자원(resource)은 갈등이론의 중추적 개념으로 집단 간의 갈등이 불공평한 자원할당 및 경쟁적 사회구조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또한 집단 내 갈등 즉, 가족 내 갈등은 개인간의 자원 불공평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원이 많을수록 교섭(negotiation)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교섭의 결과는 가족 내에서 최대의 자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Klein & White, 1996).

가족에 대한 갈등이론적 관점은 가족구성원간의 이해관계나 권력 혹은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해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가 더욱 구조화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즉, 갈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이 결정되며,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그 처리와 대응의 단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 내 자원과 권위 배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확대된 '시장'으로 본다. 교환이론은 실용주의 경제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및 사회심리학의 개인주의적 교환이론 등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Levi-Strauss를 중심으로 한 문화인류학영역의 집단주의적 교환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Homans를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적 교

환이론이다. 전자는 사회규범이 사회적 관계에서 관철되는 행동들을 조절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모든 행동은 개인의 욕구차원에서 설명되며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개인의 욕구충족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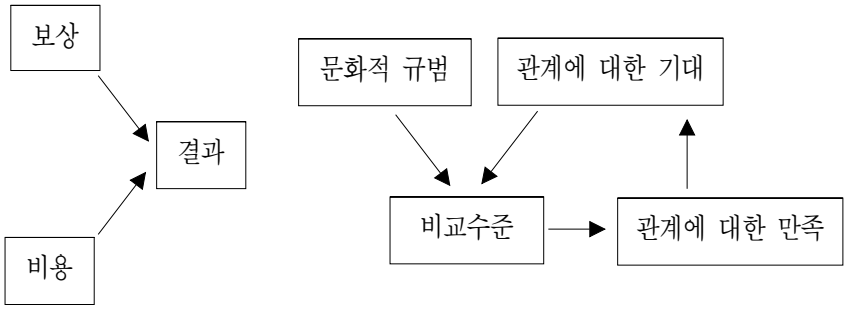
가족학 분야의 연구는 미국사회학계에서 주로 발전된 개인주의적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이론의 기본적 가정인 인간의 본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은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은 회피하고, 둘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은 '이익의 극대화－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며, 셋째, 인간은 합리적 행위자로서 행동하기 전에 그들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고 대안을 고려하고, 넷째, 인간이 보상과 비용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다섯째, 보상의 가치는 개인의 기대가 클수록 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보상의 가치는 낮아진다.

가족연구에서 최초로 교환이론을 주창한 사람은 Nye(1978, 1979, 1980)이다. Nye(1979)는 공동체의 관심과 이타심이 개인들의 이기심에 의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시공리주의 교환이론가들은 개인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과 관계(relationship), 즉 이기심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Thibaut & Kelly(1959)와 Nye(1979)는 선택의 평가에 있어서 비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출산시기와 이혼결정여부 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결혼을 늦추는 지,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늦추는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상이 없거나 더 큰 손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지연시킬 것이다. 즉,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이며, 결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면 동거, 독신 등의 대안적 형태의 관계보다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이 관계에서 경험은 비교수준으로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한다.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시간흐름에 따라 만족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1〕 관계에 대한 만족의 중재요인



자료: Boss et al.,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1993.

또한 한 개인은 출산에 의해 자녀를 갖는 것보다는 출산을 지연시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이고 보상이 크다면 무자녀가족과 한자녀가족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한 개인이 결혼생활의 대안적인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즉, 남편과 부인이 공정한 교환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상태가 불공정하게 되거나 불균형을 이룰 때 이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Klein & White, 1996).

또한 가족학 영역에서 교환이론은 주로 배우자 선택, 의사결정과정, 결혼의 질과 안정성, 임신결정, 성역할, 이혼, 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는 상호간에 소유한 제반 자원에 비해 보상 정도가 평가되어 선택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때 각자가 지닌 자원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4.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는 1937년 대표적 학자인 Herbert Blumer에 의

해 처음 사용되었다. 동 이론은 상징, 즉, 공유된 의미와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과 의사소통 간의 연결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가족연구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을 사회적 집단인 동시에 상호작용 하는 자아와 정체성의 집합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가족원간의 관계가 형성·유지·변화되는 양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요인들, 그리고 그것이 개개인의 자아인식 및 행위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대한 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주5)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크게 정체성,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identities)은 역할에 대한 자기의미 또는 자신의 가치부여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더욱 강조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양육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이는 부부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머니들은 주로 부모 됨을 '자신이 누구인가'(who they are)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아버지들은 부모 됨에 대해 주로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something you do)'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 이론에 근거한 가족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아개념의 측면은 '자존감' 또는 '자아존중감'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아에 대한 평가정도를 뜻한다. 긍정적 자아 존중감의 소유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는 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며, 역으로 행동 역시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역할'은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유된 규범으로서 그 역할에 요구되는 지식, 능력, 동기뿐만 아니라 행위의 적절한 방향, 그

주5)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기초는 7 가지 유형의 가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① 비환원주의적 인간관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부여하는 사물의 의미에 근거하여 행동함; ②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행동의 이해는 그 행위의 동기 및 의미를 통해 파악됨; ③ 개인이 사물을 다루면서 사용하는 해석적 과정을 통해 조직되고 수정됨; ④ 개인들은 자아개념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시킴; ⑤ 일단 발달된 자아개념은 행동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함; ⑥ 개인과 소집단은 문화적 및 사회적 과정의 영향을 받음; ⑦ 개인들은 일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조의 미세한 부분들을 이루어감.

리고 느낌과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가능케 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미래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역할은 항상 관계 속에서 규정되므로 이를테면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역할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하며, 한 개인에게 있어 역할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또한 다음 단계에서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역할수용과 역할창조는 사회화과정의 주요 요소로서 적응과 순응을 강조하는 구조기능주의에서의 그것과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사회화'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역할을 배우고 소화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시켜 나가는 복합적 과정을 중시한다.

셋째,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널리 공유되는 상징을 적용하고 자신과 타인 및 상황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정체성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따르도록 기대되며, 타인들은 또 그러한 정체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도덕적 특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 반응, 그리고 주관적 의미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의 또 다른 특징이며, 자신과 타인이 부여하는 의미 외에도 상황에 귀속되는 의미들도 있다.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집단이나 사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수단이며, 이는 가족연구학자들이 특히 가족 내 의사소통과정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가족연구에 있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관계, 가족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가족의 역할구조는 가족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모든 가족원의 행동 및 외부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가족구성원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안정성이나 갈등도 분석될 수 있다.[주6)]

주6) 이 외에도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 내 의사소통 연구 및 가족치료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음. 즉, 역할의 기대와 인지, 수행 등의 과정에서 준거집단과 개인이 상호영향을 주므로 가족 내에서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부각됨. 이는 특정 가족원의 일탈행동을 설명하고 그 예방 또는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줌.

5. 가족발달 이론

가족발달 이론(family development theory)은 가족의 생애과정(family life course)의 단계가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는 체계적이고 유형화된 변동과정'에 초점을 둔다. 즉, 내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요구, 외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정해진 일련의 단계들로 가족의 변화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족발달 이론은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이는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개인적 시간(individual time)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족시간(family time)이 있음을 말한다(정창수 외, 1997).

가족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발달(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체발생론적 발달과 사회적 의미의 발달로 분리되어 발전해왔는데, 전자는 아동발달론자들을 중심으로 언어와 사고를 학습하는 종의 유전적 능력에 기초를 둔 것이며, 후자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가족사건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연구에서는 후자가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친족구조내 성별, 결혼, 혈연관계 및 세대관계 등으로 규정되는 지위(position), 집단과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규범(norms), 그리고 친족 지위에 수반되는 모든 규범으로서 가족역할(family roles) 등이 주요 개념이라 하겠다.

그 외에도 가족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가족이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환(transition), 가족경로상의 특별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범의 집합으로서 발달과업(development tasks), 초기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을 대체하여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간의 시간간격과 사건 모두를 합쳐 비목적론적으로 기술하고자 한 가족경로(family career), 그리고 일정한 출생집단과 역사적인 시기내에 규범의 강도를 나타내는 변형(variations) 및 일탈(deviations) 등이 있다(Klein & White, 1996). 특히 변환(transition)의 개념에 의하면 결혼을 하고, 일정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자녀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거나 못 둘 수 있으며, 또한 이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발생 가능한 사건들(events)에 의하여

많은 가족들은 일련의 새로운 대안적 변환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발달 이론은 최근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다양한 가족과 관련한 것으로는 이론적 개념이 엄격한 논리적 준거에 들어맞을 필요는 없다는 기본가정 때문이다. 이는 가족발달 이론의 개념이 논리적 적합성보다는 경험적 기술로 편향되어 가족발달의 단계구분이 모호하고 특정한 가족유형 즉, 핵가족형에만 적합하다는 한계 때문이다.주7)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족발달 이론이 가족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춘 이론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용한 기술적 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족학자들간에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발달 이론은 다소 정체되어 있으며, 보다 비목적론적이고 역동적이며 확률적인 가족현상의 설명을 위해 이론에 대한 수정과 재개념화의 작업이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6. 생태학적 이론

생태 이론은 생물학적 유기체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및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1960년대 인간행동과 환경의 질 사이에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전체주의적(holistic), 체계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부흥하게 되었다. 최근 생태 이론은 가정관리,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학 등을 다루는 많은 이론들의 개념적 틀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생태학은 가족들과 여러 수준 및 종류의 외적 체계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들의 관계와 연관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으로 어떤 특정한 가족유형이나 형상에 기초하지는 않는다.주8)

주7) 이 외에도 가족발달 이론의 기본가정에 대한 최근의 비판에는 ① 목적론적 가정으로서 가족발달과정이 어떠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아동발달 심리학의 영향에 의한 바가 큼, ② 결정론적 가정으로서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이 인과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올바르고 성공적 방식의 발달이 존재함, ③ 가족발달 이론을 통해 언급되고 관련성이 밝혀져야 할 궁극적 실체가 개인이지만 개인의 발달과 집단의 발달은 다르며 둘은 혼동되어서는 안됨(김승권 외, 2003b 재인용).

주8) 따라서 다른 생활단계나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나 국가, 민족 혹은 인종의 가족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생태학적 이론의 주요한 기본전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가족이 생태계를 구성한다.

둘째, 가족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 자체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구성원들에 대해서 물리생물학적 유지, 경제적 유지, 심리 사회적 기능과 양육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세상 모든 사람들과 지구자원과의 상호의존성으로 세계의 생태학적 건강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이 취하는 결정이나 행동에 달려 있다.

생태 이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룬다.

첫째, 가족의 생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산출을 보장하기 위해 내적으로든 혹은 그들 환경과 상호 의존하는 체계로서든 기능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다룬다.

둘째,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가족 요구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이 사용하는 자원의 할당과 관리방식 및 그 효과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셋째,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환경과 환경적 변화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넷째,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을 창조하고 관리하며, 고양시키기 위한 문제와 생명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실천 및 그를 위한 가족의 역할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룬다.

다섯째, 인간 자체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변화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가족과 가족전문가의 기여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 이론은 일반체계 개념, 인간생태학적 개념,[주9] 가족생태학적 개념 등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가족생태학적 개념으로 가족, 욕구, 가치, 목표, 자원, 관리, 의사결정, 유지활동, 의사소통, 인간발달, 인간생활의 질 및 환경의 질 등이다.

생태 이론에 기반한 가족관련 연구의 대표적 주제를 살펴보면 가족의 특징을

주9) 일반체계개념은 물질, 에너지, 정보, 공간, 시간 등이고, 인간생태학적 개념은 인간생태계, 유기체, 인구, 환경,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지각, 조직, 테크놀러지 및 적응 등임.

찾기 위한 가치유형론, 가치와 구축된 환경, 특히 가정설비 이용간의 관계, 환경으로부터 정보가 지각되는 방식의 차이에 기반한 의사결정 양식의 유형, 가족의 에너지 소비와 보존, 가족-지역자원 연계와 가족 재산간의 관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외부·거시체계와 가족체계의 연관성, 일정한 경계와 규모 내 특정가족의 전반적인 생활방식 및 적응행동 등이다(Boss et al.,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물리체계에 기반한 일반체계 이론의 가정이 가족생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둘째, 이론의 일반성의 수준 및 영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기술적·질적 설명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셋째, 추상성이 높음으로 인해 개념화와 용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생태 이론은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아직까지 성숙과정에 있는 일반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7. 여권주의 이론

구조기능 이론에 대한 반대 이론으로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등의 비판 이론이 있다. 구조기능론이 사회체계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기능단위로서 가족을 제시하며 조화와 합의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판 이론은 기존의 사회질서가 배태한 모순과 억압이 그대로 재현·강화되는 구조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가족을 강조한다(강이수, 1996). 이에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본질적 모순인 계급적 대립과 갈등의 재생산 기제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차별적 성(gender)간의 갈등과 착취를 구조화하는 기제로 규정하여(Elliot, 1986), 그 모순의 지양을 위해 끊임없이 비판되고 혁신되어야 할 사회적 실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여권주의 이론에서는 가족이 단일한 이해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행위체가 아니라 가족원간에도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場)으로 보았다(Hartmann, 1981). 따라서 여성운동의 이념적 근거이자 실천적 전략으로서 여성의 의식변화 및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노인봉양 등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가족과 사회(생산관계)에서 남성권력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족은 성별분업의 역할분리 개념 하에 남성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보장하고, 자녀들을 성에 따른 역할로 사회화시켜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억압 및 차별은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은 여성이 제공하는 무급 또는 저임의 노동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성차별적 사회질서는 국가 및 기업 등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조장·유지되는 측면도 있다(Daly, 1997). 여권주의적 시각은 특히 가족의 전통적 부양체계에 사회보장의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반복지국가적 성격(성경륭, 1998; 이미경, 1999)을 규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권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구조와 역할구성에 있어 전통적 성별분업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함축하는 사회적 권력질서, 즉,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8. 포스트모더니즘

가장 최근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가족론은 한편으로는 구조기능론적 가족에 대한 반대 입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비판 이론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가족을 개념화하고 있다. 불확실성, 불연속성, 비결정성, 다원주의 등을 사상적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은 가족을 총체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며(조은, 1995),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의 인정을 핵심적 주장으로 한다. 이는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 작업이 감퇴하면서 핵가족 형태가 약화되었고,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가족변화가 정상적 가족생활에 대한 현재의 문화적

정의에 의해 결코 설명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파괴적이거나 혁명적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공식문화 또는 지배문화의 규범에 저항함으로써 가족문화 영역을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구자순, 1994).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은 그 자체가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Stacey, 1990).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은 그 자체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즉, 한 사회의 필연적 구성물로서 특정한 형태의 가족형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편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소위 (핵가족의)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가족형태들에 대한 비의도적 억압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특정한 가족'은 그 역사가 비교적 짧고, 또 그러한 가족이 뚜렷한 사회형식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힘드는 데도, 윤리적·규범적 처방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여러 측면에서 '특정한 가족'의 담론에 동조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약도 강조하게 된다. 그 말의 사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what actually exits)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what ought to be)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기도 한다(Gubrium & Holstein, 1990).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이 일반적인 핵가족이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비정상적' 가족으로 규정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에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은 가족개념에 대한 해체작업을 그들의 주과제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실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본질화된 가족(the family)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들(families)임(Barrett & McIntosh, 1980)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의 요구이며, 안정되지만 획일적인 가족문화 대신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한, 보다 유동적인, 그래서 더 큰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가족문화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다양한 가족형태들 간의 위계나 일방적 독백을 지양하고 대화와 담론을 통한 상호인정과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가족영역에서의 민주주의 함양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 가족론의 관점에 내재된 이러한 민주적 성격은 실제 이질적인 가족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현실을 생각할 때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다양한 가족관련 개념 및 이론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가족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어 있지는 않으며, 가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많은 가족 이론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이론이 다양한 가족을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된 이상의 논의들은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압축된다.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주10] 실제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많은 논쟁이 이러한 가족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법적 혼인관계 및 혈연, 공동의 생활과 주거, 또는 지속적인 유대와 정서적 애착 등 많은 것들이 가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되며 또 일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가족은 여타의 인간집단 또는 사회체계와 구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변의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가족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관점에 기반하거나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핵가족이 근대사회의 정상적·표준적 가족으로 제시됨으로써, 핵가족이 그와 다른 가족형태들에 대한 분석도구 또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역할

주10) 실증적 조사를 토대로 가족의 범위와 가치관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해당 개인이 차지한 가족내 지위에 따라 또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짐.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겪는 생애사적 과정에 따라서도 달라짐(김규원, 1995; 박부진, 1996).

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위기를 둘러싼 많은 정치적 또는 학문적 논쟁의 격렬함은 실제 가족에 대한 개념규정이 내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치적·이념적 함의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rrett & McIntosh, 1980).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가족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은 가족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배려와 상호의존 및 친밀성을 증대하고 동시에 개별 가족원의 자율성과 발달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 3 장 다양한 가족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제 1 절 국내 선행연구

1. 전반적 연구동향

1960년대부터 간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한국가족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초기 가족연구가 가족의 구성형태를 포함한 그 문화적 배경으로서의 가족가치, 가족제도 등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가족연구는 1970～8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가족형태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1970년대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는 가족형태 등 가족의 외형적 모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맞벌이가족의 결혼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역할 이론에 기반하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족연구에 있어 198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양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때부터 가족이 고유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산업화, 근대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 및 가족의 변화 양상이 1980년대 이후 보다 구체화되면서 그 원인과 과정,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또 실제 연구 활동에서도 그 관심을 구현할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초반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분거 장남가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 가족변화에서 '핵가족화' 현상의 보편화에 대한 학문적 반응으로 판단된다. 후반기에는 산업화와 가족형태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지속된다. 특히 이 시기 연구는 핵가족유형에 대비, 노인부양 문제 등의 3세대 동거가족의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특징은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연구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각 학문분과나 주제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보다 통합적 시각의 연구가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론 및 방법론을 단일 주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한 것에도 잘 나타난다. 이 시기의 가족형태에 관한 연구는 구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가족관계 등 다른 연구영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형태가 가족의 응집성이나 아동의 인성 및 자아정체감, 또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는데 다루는 주제가 더욱 특정화·전문화되어 교육문제나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여성의 지위변화 및 노인 삶의 질에 가족유형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였다.

2.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여성과 이들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직·간접적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분석과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방안과 자립의지 고취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비하여 남성 한부모가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들의 가족기능 수행이나 복지욕구는 여성 한부모가족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필

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주요문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빈곤 또는 경제적 문제이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는 특히 심각한데, 여성가구주 가정이 저소득 빈곤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은 가부장적 특성이 잔재되어 있는 가족생활을 유지하다가 남성 소득원, 즉 배우자의 상실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여성은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주로 단순노무나 서비스직 등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안정적인 가계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주거 및 자녀 양육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김미숙 외, 2000; 김영희, 1996; 장혜경 외, 2001a; 전재일 외, 1997).

유조안(2000)의 여성한부모가족의 여성가구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일차 부양자의 역할을 하던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 혹은 부정기적 소득의 발생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소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의 경우 전문지식이나 기술도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 등의 저임금 직종이나 비공식적이면서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빈곤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가속화 또는 세습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사회적 측면은 물론 이들의 가족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에서는 부모역할의 일부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앞서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한 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경험하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녀의 학습부진, 비행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높은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학비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설영숙, 1997).

김미숙 외(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는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죄의식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이거나 일관된 태도를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애정이 결핍되어 학교생활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및 일탈의 경향을 보일 수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상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육비 부족이 5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습지도(15.5%), 절대적 시간부족(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교육비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으나, 부와 자녀간의 대화단절의 문제(10.5%)가 여성 한부모가족에 비하여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역할갈등, 성 역할 모델 부재에서 오는 성정체성 혼돈, 낮은 성취도,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부 또는 모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의 부족 및 대화시간의 부족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자녀가 어린 경우에 부 또는 모의 취업에 따른 보육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양인순, 2003).

뿐만 아니라 김기환(1995)의 연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 내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부 또는 모에게 과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부 또는 모의 스트레스와 물리적 체력 및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상황에 노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성자(2001)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

이 감소하고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감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또한 약화되고, 학교에서는 성적부진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출이나 비행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을 형성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으로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 외로움, 허탈감, 분노의 감정들과 생활에서 부딪히는 절망감, 부담감 등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1a). 이러한 심리·정서적 불안정성과 함께 한부모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이미 과도한 역할갈등이나 역할긴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모의 경우에 부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이를 분담해야하는 역할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 즉, 이들 대부분이 가정경제의 부양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부자가정에서 부의 경우에는 그동안 배우자에 의해 대부분 관리되던 가사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할에 대한 당혹감과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는 우울이나 불안, 소외감 등으로 나타나기 쉽다.

한편 사별은 인생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생활스트레스로 이미 밝혀진바 있으며, 이혼, 별거, 유기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상실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부모가족의 여성가구주는 무기력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에 대하여 의존적이었던 여성의 경우는 의존대상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현상과 더불어 일상적인 사회적 기능이 황폐화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고 심리적 부담감이나 우울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고, 상담기관이나 상담원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의 고민상담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부모 또

는 친척이 20.8%, 형제자매가 22.5%인 반면, 사회복지전문인력은 2.3%에 그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의 모자가정에 대한 상담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족과 친지가 53.5%, 친구나 이웃이 30.2%인데 반하여 상담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최인석, 1998).

한편 한부모가족의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이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부모가족으로의 변환기를 거치면서 가족관계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가족 내 권력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 또는 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나치게 평등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여 갈등이 표면화되기 쉽다는 견해이다. 또한 기존의 가족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milansky, 2002; 김보경, 2001 재인용).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변환기에 자신의 가족체계가 위협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이전의 가족 내 갈등관계가 해소되며, 부모-자녀관계가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리적·정서적 거리감이 한층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 미혼모가족

국내에서는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대부분이 미혼모와 관련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미혼모 연구는 대체로 미혼모의 발생요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연구, 미혼모시설을 중심으로 미혼모 복지 개선방안을 개괄하는 연구, 그리고 미혼모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미혼모의 자존감이나 스트레스 관련 변인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미혼모가족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아동양육을 결정하는 요인, 생활실태 및 욕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1980년대 중후반에 실시된 연구는 전반적으로 결손 가정이나 불안정한 가족관계 요인을 미혼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안순덕, 1985; 김부자, 1986; 허남순, 1986).

1990년대 이후에는 특정한 가족형태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미혼모의 발생과 함께 그들의 발생요인에 대해서 개인 및 가족의 특성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적되었다(박홍주 외 1993; 손홍숙, 1995; 한영주, 1998; 윤미현, 2000; 강영실, 2002). 특히 박홍주 외(1993)는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을 통해 기존의 미혼모 연구가 미혼모를 '문제 있는 개인', '요보호의 대상자'로 접근하는 것에 비판을 제기하고, 미혼모 내부의 다양성을 지적하면서 미혼모를 능동적인 주체로 접근하는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미혼모의 발생요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미혼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미혼모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미혼모 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선욱, 2001; 김현진, 2001; 노현조, 2000; 이원순, 1999; 조성훈, 1999; 이금주, 1994; 이성형, 1990; 김혜수, 2002). 이들은 미혼모를 다루는 단일법령의 부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미혼모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효과성, 미혼모 예방 대책의 부재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상담시설의 부족 및 기능제한 등을 기존 미혼모 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귀 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미혼모시설 내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영숙, 2003; 김만지, 2000; 이지연, 1998). 미혼모시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이지연(1998)은 미혼모시설 내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혼모들의 임신 중에는 상담을 중점으로 실시하면서 직업훈련의 동기부여를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퇴소 후에 직업훈련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양육 미혼모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박숙희(2001)는 미혼모 보호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동양육결정요인은 아동에 대한 애정, 사회복지수혜 경험과 출산 전의 직장생활의 가능성, 가족법의 개정 그리고 미혼부와의 결합 가능과 아동입양시 발생할 상실감과 죄책감에 대한 우려가 아동양육을 결정하였다. 이는 미혼모의 의식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설입소 및 재가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및 서비스욕구의 연구결과(이시백 외, 2002; 강영실, 2002)를 모든 양육미혼모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혼모가족은 독립하여 지역사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여 주택안정문제가 심각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자녀의 양육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활동을 하는 미혼모가족의 자녀양육은 주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져서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공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혼모가족의 사회적 관계는 양육 결정 후 악화되어 사회적 지지망이 빈약하였으며, 또한 미혼모가족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보육문제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았다.

다. 무자녀가족

우리나라에서 무자녀가족의 출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난 20~30여 년간 이루어진 무자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주로 비자발적 무자녀가족 중에서도 불임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무자녀가족의 출현과 이를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의가 대부분이었다. 즉, 무자녀가족

의 가족 구조적, 관계적, 그리고 기능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무자녀가족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자녀양육의 보람대신 주말과 휴일에 부부간의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보내거나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택하는 것이 자발적 무자녀가족이라면, 한국의 딩크족은 자발적 선택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출산 후에 원직으로의 복직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적 보육체계의 미흡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사정의 지속이 젊은 부부들에게 실리를 위한 출산의 연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출산연기 또는 기피 등으로 인한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은 상당수의 가정에서 가족의 생계와 노후를 위한 현실적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0b).

한편 김태현(1993)는 자발적 무자녀가족은 자녀 출산을 연기하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4단계의 변화를 거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혼인과 함께 설정한 생활의 목표(예를 들어 주택구입 등)를 달성하기 전까지 자녀출산을 연기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출산연기가 한정된 기간에서 무한정한 기간으로 옮겨간다. 3단계에서는 자녀가 없음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이익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면서 항구적으로 무자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영구적으로 무자녀 상태를 결심하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김한곤(1991)은 1966～1985년까지 5년 간격으로 우리나라의 무자녀 경향에 대한 변동추이와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5～29세 이하 연령군의 자발적 무자녀율은 1966～1985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 반면, 40대 연령군의 비자발적 무자녀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사회경제발전과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의해 자발적인 무자녀율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40대 연령층의 경우는 자녀를 낳고 싶으나 비자발적

인 요인에 의해 자녀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비자발적인 무자녀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혼여성 무자녀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20대 젊은 연령층의 일시적이며 자발적인 무자녀율이 증가하였으나 거의 같은 기간 동안에 40대 연령층의 비자발적 무자녀율이 감소하면서 상쇄효과를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즉, 이전까지 비자발적 무자녀에 속하던 기혼여성들의 일부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비자발적 무자녀율이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김혜경의 연구(2001)에서 무자녀가족의 부부들은 현재의 무자녀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가족관의 변화, 특히 자녀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 부부들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자녀가 노후의 외로움이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녀관의 변화가 무자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역의 작용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무자녀 부부(특히 여성)들은 부모의 양육역할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어 부모 역할이란 철저히 계획·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임신을 하려면 아이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적으로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임신 노력을 하지 않거나, 임신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방식은 결혼하면 의례적으로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도 혼인 내의 임신이 바로 출산과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출산양태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출산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불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관계하는 가족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임의 책임은 여성에게 미뤄지는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해 불임여성은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

고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임관련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 신체적 질환이 나타나거나 정서적으로 심약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황준식, 1993).

불임여성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지지를 받기보다는 가족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를 희망하는 남편이나 시댁식구와의 마찰은 불임여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임여성의 상당수가 불안감, 불확신감, 슬픔, 자기비하, 좌절감, 소외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경진, 1992).

그러나 불임의 원인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조차 문제의 발단을 여성 불임으로 귀착하는 것은 향후 불임과 관련된 무자녀가족의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의 역할이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생식에 관한 부분도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간의 불임부부의 불임원인을 규명한 서주태(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노인가족

우리나라의 노인연구 중 노인부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부부관계 및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등이다. 또한 생활실태, 노인부양 및 자녀관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노인복지제도, 노인정책 등도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인단독가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지원망과 삶의 질과의 관계, 부양 및 자녀관계, 생활실태, 노인부양, 복지욕구, 스트레스와 우울감, 가사노동 수행, 지원망,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노인복지제도 및 노인정책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부부 연구는 초기에는 노인특성과 부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다가 점차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노인부부갈등 주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단독가족에 대한 연구 역시 노인생활실태 및 서비스실태 등의 주제에서 농촌노인, 남자노인 등 다양한 노인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현(1982)은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의 특성과 부양형태 즉,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노인은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서 노인에게 경제적 안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서적 부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시 및 여자노인의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장남부부 및 다른 아들 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부양」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서 가족간의 긴장이나 갈등관계가 심한 경우 오히려 자녀와 별거하면서 경제적, 정서적 부양을 받는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맹희재(1985)는 재가 노인의 고독감은 연령이 높고, 배우자가 없으며, 소득이 없고, 학력이 낮으며 또한 자녀들에 불만족하고, 정기적인 모임에 불참하거나 친한 친구나 친척이 없으며, 비종교적일수록 증가한다고 밝혔다. 주성수·윤숙례(1993)는 신체질환에 있어서 독신집단이 부부집단에 비해 더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독신집단이 부부집단에 비해 더 빈번한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지며, 더욱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백옥현(1990)은 노인 대부분이 노후생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노후계획으로 저축, 노후보험, 퇴직금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외에 노후생활대책은 현재보다 앞으로 하려는 반응이 높았으며, 정부에 바라는 대책은 노후 연금제, 시설학교, 빈곤층 노인을 돕는 일 등으로 나타났다.

송영미(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인의 성, 종교, 은퇴여부, 직업유무, 경제상태 등이었고, 의사소통은 연령에, 생활만족도는 연령, 교육수준, 은퇴여부, 건강상태 및 동거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여가활동은 교육수준, 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애정 및 성생활은 종교,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노인 부부갈등, 애정 및 성생활, 의사소통,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송점호(1994)는 혼자 사는 노인의 3분의 2 이상이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앓고 있는 질병은 남녀모두 류마치스 신경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혼자 살게 된 이유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살림이 어렵기 때문이며, 혼자 사

는 노인의 생활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오복희(1996)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부양은 아직도 사회나 국가보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영두(1997)는 혼자 사는 저소득층 노인은 정부의 생계보호에 의존해 있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극히 낮은 상태이며, 건강상태도 나쁜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달 의료비는 질환의 종류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는 열악한 경제상태 때문이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는 비교적 좋은 상태이나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동사무소와 종교단체 정도 등으로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황진수(1999)는 독거남성노인의 생활실태나 삶의 질은 무척 낮은 것으로 규명하였다. 즉, 독거남성노인은 저학력으로 생업의 대부분이 비전문적이며, 이외에도 자녀양육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고, 현재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이웃 또는 친구와의 유대관계 등도 나쁘며,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남(1999)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은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적 지원도 어려우며 생활비 지출에서도 주거비 외에는 극히 절약하고 있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서적 상태는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 고독감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밖에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거노인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크다는 점과 가사·간병 등의 수발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가. 재혼가족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가족을 형성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혼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족생활주기별, 가족 구성원별로 살펴보고,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증가하고 노인의 경우 재혼 욕구나 재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자녀의 가족 적응도, 재혼가족의 부모 역할 등이 연구의 주요한 초점이 되어왔다. 핵가족의 자녀는 가족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결핍되어 있는 재혼가족은 서로 간에 낯선 상대의 생활패턴을 이해해야 할 뿐만 나이라 가족이라는 공동의식 즉, 공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한다.주11)

또한 친부모가 실제 생활이나 기억 속에 존재함으로서 비록 두 가정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친부모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접촉을 하지 않은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는 친부모와 계부모를 비교하게 됨으로서 가족 경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계부모는 자녀의 훈육이 계자녀에게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가족관습과 전통이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없이 마술처럼 잘 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권복순, 2002; Kaplan & Hennon, 1992). 이처럼 계부모의 어려움이 자녀양육과 가사 전담인 점을 볼 때 재혼은 여성에게 더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권복순(2002)은 자녀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재혼전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제안하고 있다.

재혼 후 무엇이 가장 힘든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혼 결심단계에는 재혼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부족, 재혼가족임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며, 재혼

주11) McGoldrick(1989)는 발달적 단계모델을 제시하면서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을 '새로운 관계형성'→'새로운 가족에 대한 계획'→'재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형성'이라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이 모델에서 강조하는 목표는 융통성이 있으면서 기능적인 경계를 지닌 개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우선은 이전의 결혼이나 이혼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임.

준비단계에는 경제적인 문제, 재혼가족임을 사람들이 아는 것, 배우자와의 재혼생활에 대한 확신 부족, 친자녀의 적응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재혼한지 5년 이내의 재혼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친자녀 성문제, 재혼가족임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재혼 후 6년 이상의 재혼 중기단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새엄마에 대한 편견, 배우자와의 관계, 처가 및 시가 식구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장혜경, 2001b).

개인생활주기와 가족생활주기를 바탕으로 재혼가족의 주기를 고려해보면 재혼가족은 스스로의 주기와 함께 앞선 결혼으로부터 지속되는 생활주기가 있다. 전 결혼생활에서 출산한 자녀는 자신의 생부모나 그 외의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양육 받으며, 이혼한 경우 생부모와 만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지를 받아야한다. 또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재혼 부부와 전 배우자와의 부부주기가 계속되기도 한다.

한편 전배우자와 형성된 애정이 남아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충분한 정서적 이혼이 이루어지기 않을 경우 계속되는 옛 주기로 인해 재혼 부부 주기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재혼가족은 개인생활주기가 무너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상처받기 쉬운 감정과 더 큰 상실을 가지고 올지도 모를 새로운 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대에는 개인적 요구, 부부로서의 요구, 양육의 요구, 자녀의 발달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재혼가족은 개인, 가족, 재혼의 주기가 한꺼번에 겹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중궤도를 그린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 부부 가족원과 그들의 하위체계가 다중궤도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생활주기와 가족생활주기의 요구가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는가에 따라 각 재혼가족의 가족생활주기의 특징이 달라진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박은주, 2002).

〈표 3-1〉 재혼가족의 생활주기

단계	전제되는 태도	발전적 문제들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	• 첫 결혼의 상실로부터 회복	• 결혼을 다시 행하고 복잡서와 모호성을 다룰 준비를 가지고 가족을 재형성한다.
새결혼과 가족을 개념화 하고 계획하기	• 새 배우자와 그 자녀를 받아들이고 재혼가족형성 • 복잡성과 모호성을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 • 다중적인 새역할 • 경계: 공간, 시간, 가족원, 권위 • 정서적인 문제: 죄책감, 충성에 대한 갈등, 상호성에 대한 욕구, 풀리지 않는 과거의 상처	• 허위상호관계를 피하기위해서 새 관계에서 개방작업 • 전배우자와의 협조적인 부모관계 유지를 위한 계획 • 두려움, 충성심 갈등, 두체계의 가족원 문제에 처한 자녀를 돕는 계획 • 자녀와 잔배우자의 확대가족과 계속되는 관계 유지 계획
재혼과 가족의 형성	• 전배우자에 대한 정소멸과 완전한 가족에 대한 이상의 마지막 해결: 침투할 수 있는 경계의 가족모델 받아들임	• 새로운 배우자-재혼 부모를 받아들이는 가족경계 재구조화 • 여러 개의 체계로 짜여진 하위 체계를 통한 관계의 재편성 • 친부모, 친조부모, 기타 친확대 가족과 모든 자녀의 관계를 위한 여지 만들기 • 재혼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억과 역사의 공유

나. 입양가족

국내의 입양에 대한 연구는 입양 절차나 입양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최근에는 입양아나 입양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른다. 양부모의 입양절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입양 절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입양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입적문제(양부모 법적 문제), 부모·친척에게 입양을 알리는 것, 양부모 신체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박미향, 2001).[주12)]

주12) 박미향(2001)의 <국내입양 양부모 입양 후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입양절차에 대해서 꼭 필요하며 적당하다가 97.6%이며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음. 양부모들이 입양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입적문제 35.8%, 부모·친척에게 입양을 알리는 것 14.3%, 양부모의 신체검사 9.5% 등이었음.

또한 입양 후 사후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7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에 비해서 실제 양부모의 욕구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서 주변의 이목을 꺼려 비밀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윤현선, 2001).

입양아는 현재의 부모와 과거의 부모에 대한 충성 간에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이 옛 부모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입양아동과 예전 가족과의 접촉이 사라지고 중도에 끊기는 경우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나 자원이 부족게 되어 아동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윤현선, 2001). 또한 김유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입양아동의 발달문제는 아동의 연령과 이전의 발달과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의 분리는 아동발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로의 이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국제결혼가족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여 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노동력을 팔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이민결혼, 외국 군인과의 결혼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으며, 아픈 상처로 우리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변화순·조은희(2003)는 국제결혼은 언어와 종교, 관습이 다른 남녀간의 결합으로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환영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혈연 중심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혈통에 대한 집착과 현대사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하였다.

국제결혼의 동기와 관련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경제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송성자, 1975), 최근에는 국적취득이나 취업, 현실탈출로서 동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임경혜, 2004).

4.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가. 맞벌이가족

맞벌이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녀양육, 부부관계 및 결혼안정성, 가사분담,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는 부모역할에 대해 갈등이 많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취업부인의 부모역할 갈등을 다룬 연구에서도 전문직 취업부인들은 다른 역할 보다 부모역할에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자, 1992).

부인의 취업은 부부간 가사역할 분담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젊은 부부의 경우 부인의 취업은 남편이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어 부인의 취업 이전보다 자녀양육에 참여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재경, 1994).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어 이중역할 부담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유가효 외, 1992). 또한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양육문제로 직장생활의 중단여부를 고려해 보았으며, 상당수는 직장생활을 위하여 자녀출산 횟수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연 외, 2003).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특히 부모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혜신 외(2003)[주13]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인의 부모역할갈등이 남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직업변인에서는 직업만족도와 직무적응도가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차이를 가져오며, 업무중요도와 직무능력도는 부모역할갈등에서는 남편에게만, 심리적 복지에서는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양육 관련변인에서는 보육

주13)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거주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 종일반 아동의 부모 중 맞벌이인 부모 120쌍과 각 직장의 맞벌이 부부 중 임의 표집한 180쌍 등 총 300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분석 대상은 이 중 224쌍(448명)에 대해 최종 분석이 이루어짐.

방법 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 모 취업영향 인지가 맞벌이 부부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이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직업만족도, 부정적 측면에서는 부모역할갈등이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가족역할에 대한 정의와 분담은 가족구성원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의 연구는 취업여부보다는 취업조건, 취업동기,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 가사역할 분담 및 공평성 인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인의 취업동기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보다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취업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박미령, 1988; 최규련, 1988). 또한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 경우, 남편의 가사역할 분담정도가 많을수록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양희 외, 1992; 한경미, 1995).

역할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만족도가 자신의 역할갈등이나 역할정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배우자간에 역할형평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부부간 형평성의 개념이 확산되어 형평성이 만족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이여봉, 1999).

이기숙 외(2000)는 맞벌이주말가족[주14]의 사회적 지지망의 유형과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맞벌이가족과 맞벌이 주말가족의 가족구조상의 차이, 즉 부부의 비동거가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과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이들 맞벌이주말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14) 맞벌이주말가족의 정의는 거스텔과 그로쓰(Gerstel and Gross, 1984, 1987)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근무지에 각각의 주거를 두고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은 떨어져서 지내는 부부이면서 비동거 생활을 1년 이상 한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 부부(130쌍)와 맞벌이가족(130쌍)을 대상으로 자기기재식으로 응답토록 함.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는 맞벌이 주말부부 93쌍과 맞벌이 부부 104쌍이었음.

나. 주말부부가족

우리나라에서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과 유사한 주말부부가족의 등장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행정, 교육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자녀교육을 위해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대도시에 머무르고 남편의 새로운 근무지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해(김경은, 정옥분, 1998), 남편이나 부인 중 한사람은 대도시에 근거를 두게 됨으로써 주말부부가족이나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부부 각자의 직장지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

1960년대에는 이농현상이나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 인한 일시적 비동거가족이 발생하였다. 이때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으며, 대부분이 남편 외유형이였다.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의 건설 붐과 독일 탄광으로의 취업과 같은 해외인력수출정책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동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역시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행정관청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남편은 지방에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남는 주말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역시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이들의 특징은 비자발적인 분거 결정이었으며 대개 남편의 직업에 의해 결정되었다(곽인숙, 2003; 김태현·박숙자, 1992).

한편 1980년대 이후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적 목적보다는 부인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가운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은 부인의 취업이 요인이 되어 맞벌이 부부가족의 새로운 적응양식으로 등장하였다(채옥희, 1998). 따라서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은 저소득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중산층에 속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구미사회에서 이루어진 주말부부 연구에서도 정확한 통계치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말가족 형태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한 양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기러기가족

기러기가족의 배경에는 대개 자녀의 교육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기러기가족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내와 자녀의 생활 및 교육비를 조달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기러기가족은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돈만 벌어 공급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와 동일한 문화·사회적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역할 수행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엄명용, 2002).[주15)]

기러기가족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남편 혹은 아버지와 별거하면서 오직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영어권 국가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다.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는 '기러기가족'은 가족이 '세계화'라는 거시적 구조에 기민하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과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여성신문, 2004). 영어가 중요한 문화적 자본이 되고 세계 경제화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한 30~40대 부부들이 자녀의 사회적 신분상승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2004).[주16)]

엄명용(2002)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들에 관한 연구가 희박한 가운데,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기러기 아빠'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 분거가족이 어떤 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유지 또는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들 분거가족의 가족관계와 남편 및 아내의 문제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동원 외(2001)가 떨어져 사는 부부 몇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해 본 탐색적 연구가 존재한다.

기러기가족에서 발생한 조기유학생들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체험을 기반으

주15) 아버지가 보내준 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과 함께, 아버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함.

주16) 동국대 사회학과 조은교수의 인터뷰 내용관련임.

로 한 높은 역량의 발휘를 기대 할 수 있지만, 서구의 가치관과 한국문화 간의 갈등과 한국사회 부적응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5.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가. 미혼독신가족

김정옥(1996)과 김애순(1994)은 독신자의 유형을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 이혼한 사람 그리고 별거자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미혼독신자는 유인 요인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독신을 선택한 경우이고, 이혼과 사별은 결혼 후 압력 요인에 의해서 독신을 선택한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옥귀주(1999)의 연구에서는 자발적·장기적 독신은 처음부터 독신을 선택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과 종교적인 서약을 한 독신자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하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졌거나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해 독신생활을 하는 경우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옥귀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독신자의 불만족은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시선, 부모님의 결혼압력, 고독감과 외로움, 미래 불안, 곤경에 처했을 때, 성적인 편견, 경제적인 곤란, 성욕구 해소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불만족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 미혼독신자의 경우는 주위의 압력, 일상생활에의 곤란, 성적인 욕구의 해결 문제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여성 미혼독신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 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나. 기타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본 연구에서는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 전술한 미혼독신가족 외에도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본 고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가족을 논의하는 장(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2 절 주요 외국의 선행연구

1. 전반적 연구동향

서구 가족사회학의 이론화 및 연구들은 4가지 시대적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고전사회학의 시기, 20세기 초~중반의 사회심리학적 가족연구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 2차 세계대전 후~1960년대까지의 구조기능론 및 근대화론적 가족론의 시기, 마지막으로 제2의 페미니즘 물결과 함께 등장한 페미니스트 및 최근의 포스트모던 가족론의 시기 등이다. 각 단계는 가족연구의 관심사, 연구방법, 이론적 관점 등에서 상당한 차별을 보여 시기별로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분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가족유형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제 4시기의 연구인데,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지배 패러다임이었던 구조기능론적·근대화론적 가족관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도전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조은, 1995).

전술한 구조기능론적 이론에 대해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중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선 가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접근인 '가족사 연구'에서 도전이 시도되었다. 영국의 사회경제사가 라슬렛(Laslett)을 비롯한 캠브리지 학파의 가족사가들은 인구통계학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1972년까지 산업화 이전 거의 모든 문명세계에서 확대가족이 지배적이었던 곳은 없었음을 보여주었다(Anderson, 1994).[주17]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업사회·근대사회와 핵가족형태의 필연적 연관성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확산시

주17) 이들의 연구는 실제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필연적이고 유일한 가족형태로서 핵가족만 상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므로 근대사회와 전통사회의 질적 차이, 또는 각 사회와 특수한 가족유형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즉, 광의의 의미에서 근대화론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마찬가지 입장에서 구조기능론적 가족연구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가족사가들로 Shoter, Stone, Aries 등의 심성사가들이 있음. 이들은 근대적 가족과 핵가족의 동일시를 반대하면서 근대적 가족의 성격을 가족이나 가구구성 유형보다는 가족의 내적 특성이나 심성, 태도 등의 변화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새로운 방법론, 특히 문화적 총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접근방식은 이후 가족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상세한 설명은 Anderson(1994) 참조.

켰으며, 실제로 이들의 연구가 있은 후 지역별, 시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한 가족의 형태 및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족영역의 주요 주제로 새로이 부각되었다.[주18] 또한 이들의 연구는 특정 사회와 그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 특정 가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가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2.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가족구조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 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무수히 많으므로, 별도로 선행연구를 소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은 한국사회와는 달리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 미혼모가족

미혼모가족과 관련한 외국의 연구는 개별 국가들이 미혼모가족에 대해 취하는 관점 및 관련 정책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것이 미혼모가족의 경제상황이나

주18) 서구 가족사 연구 성과는 한국가족연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해방 이후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규모 및 세대구성 등 구조 및 형태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화론의 일부로서 산업화, 근대화가 가족에 미친 영향, 특히 핵가족화 경향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 대부분이었음(이동원·함인희, 1995).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의 전형적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시작된 '핵가족 논쟁'은 한국의 전형적 또는 대표적인 가족형태가 현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상의 '핵가족'인지 아니면 비록 외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가족 내적인 유대관계 및 가족범위에 비추어 보아 '직계가족'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것임(박부진, 1996). 이러한 핵가족 논쟁은 그 논점이 실제 지배적 가족형태의 기준이라는 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지 한국의 핵가족화에 대한 진위여부의 판별을 떠나 한국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이동원·함인희, 1995).

독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이론적이고 양적인 연구와 미혼모가족이 인지하는 복지수혜나 사회적 지지의 정도, 미혼모가족으로서 느끼는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

바바라 홉슨(1994)은 복지국가 체제에 젠더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틀의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미혼모가족을 새로운 복지체제 유형의 구성을 위한 하나의 분석적 범주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미혼모가족은 이들을 합법적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인정하는 복지틀 속에서 가장 불이익을 덜 받았다고 한다. 또한 젠더중심의 복지정책이 양육을 위한 보상정책에서의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예로는 공공양육시설, 양육휴가수당, 아동간호수당, 아동양육수당 등을 제시하고 있다.

Pauline Stoltz(1997)은 대표적인 복지 국가인 덴마크의 보편적 사회 정책내에서 독신모들이 갖는 딜레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덴마크의 사회정책은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남성역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정책에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도덕적 규제와 남성부양자 모델을 제거해주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여성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모델은 경제적 빈곤의 측면에서 모자가족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주장하는 독립과 자율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의존/독립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유지되는 독립성으로서의 '상호의존' 개념에 바탕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Karen Christopher(2002)는 미국과 다른 경제선진국들 간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미혼모가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욱 빈곤한 이유를 관찰하였다. 미국 여성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은 미혼모가족에게 주어지는 저임금과 함께, 빈곤감소에 덜 효과적인 사회보조 프로그램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족의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정한 복지정책이 모자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복지 지원의 감소가 모자가족, 특히 미혼모의 결혼과 남성과의 동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Pierre Lefebvere & P. Merrigan, 1998), 무료 보육보조는 백인 미혼모가족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흑

인 미혼모가족은 무료 보육보조의 효과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Jean Kimmel, 1995)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흑인 여성들이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복지정책의 함의와 개선점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 미혼모가족은 스스로 독립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직업유무 및 고용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Marion H. Wijnberg & Susan Weingner, 1998). 또한 장기적인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높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직업획득이 미혼모가족의 자기 존중감 및 신뢰감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Kathryn Edin & Laura Lein, 1996; The Dieringer Research Group, 2001).

나. 무자녀가족

가족 내에서 갖는 부모와 자녀관계의 의미가 약화되고 부부 중심적 또는 부부 각자의 개인적 삶이 강조되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발적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akim, 2003). 즉 피임법의 보급,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등은 자발적 무자녀가족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Houseknecht(1987)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주요 이유는 첫째, 자녀양육 부담에서 해방되고 자기 발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째,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서, 셋째, 아내의 직업 때문에, 넷째, 자녀출산에 따르는 금전적인 비용이 우려되어, 다섯째, 인구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섯째, 어린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곱째, 자신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즉,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을 것이란 점 때문에, 여덟째, 자녀출산 행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Hird & Abshoff(2000)의 연구에서도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상당수가 부부만의 시간과 자유를 즐기기 위하여 무자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이미 DINK(Dual Income No Kids)족이라 하여 혼인을 한 부부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사회계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자아성취를 위하여 무자녀를 선택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무자녀를 합의하기도 한다(Qu, Weston & Kilmartin, 2000; 박미향, 2001 재인용).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당연시 되던 자녀출산과 부모됨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식이 생겨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구조의 변화로서, 농경사회에서는 자녀의 노동력이 가정경제의 생산 활동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이르러 교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자녀양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고, 그 결과 자녀출산이 생산적이기 보다는 소비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어 자녀를 원치 않는 부부가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 가족기능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는데, 가족이 가족원의 보호와 부양의 기능을 전담하던 사회에서는 요보호 가족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부분 가족집단에 의존하였고, 특히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다. 또한 가족의 영속을 위해, 즉 가계를 잇기 위해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이런 의미와 기능 등이 쇠퇴하면서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발적 무자녀가족을 수용하는 가치관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자녀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태도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까지는 무자녀 부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무자녀 부부에 대한 동정론보다는 부정론이 우세하다(Houseknecht, 1987).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성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며, 성숙의 표시라고 보기 때문이다. 에릭슨의 인간발달 8단계 이론에 의

하면, 성인이 되면 생식력을 발달시켜야 하고, 동시에 타인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보살펴야 하고, 이는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된 성인만이 이러한 양육욕구 및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숙된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무자녀가족을 다룬 대부분의 조사연구는 이들의 무자녀 현상이 비자발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비자발적 무자녀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에 기인된다고 보고 있다(Trent, 1982). 일례로 여성의 가임력과 영양섭취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Frish(1975)는 영양섭취의 결핍이 여성의 불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Mcfall(1979)은 질병과 영양부족상태가 개발도상국 여성의 불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Romainiuk(1980)도 자이레가 근대화과정에 들어서는 1955년경에서부터 1975년경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경험한 영양섭취의 개선과 건강상태의 증진이 비자발적 무자녀율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출현은 영양부족, 질병, 그리고 의료혜택의 부재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로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무자녀율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65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무자녀율 측정방법을 고안, 논의한 바 있는 Poston & Trent(1982)는 비자발적 불임에 기인되는 개발도상국 기혼여성의 무자녀율은 사회경제 발전과 더불어 감소하게 되며 선진국 기혼여성의 무자녀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무자녀현상은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여성의 영양섭취 결핍이 출산력과 가임력을 낮추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Menken, 1981; Bongaarts, 1980).

다. 노인가족

국외의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 노인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은 노인의 안녕과

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ley & Forner(1968)는 노령기에 많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경제상태가 좋고, 이웃에 노인이 많고, 한곳에 오래 거주하며, 대도시보다 소읍에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Booth & Hess(1974)도 노년기의 친구관계는 성별과 사회적 계층, 결혼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과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들과 별거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얼마나 자주 접촉을 가지는가는 일반적으로 별거하는 거리와 관계가 있으며, 거리가 멀수록 방문이나 전화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1971). 노인과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구사회 특히 미국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생활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dams, 1971; Larson, 1978).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난 후에 오히려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Glenn & McLanahan, 1981; Larson, 1978). 또한 노인과 자녀간의 원조의 연구에서 원조형태는 상호적이거나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원조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조내용은 정서적 원조, 서비스 원조, 경제적 원조 등이 주류로 파악되었다(Bromberg, 1983). 한편, 원조형태는 노인과 자녀세대의 성별, 배우자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생활주기상의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Giordano & Bedeham, 1985).

노인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년기 이전의 결혼생활, 부부간의 평등성과 역할분담의 융통성, 퇴직으로 인한 역할변화, 퇴직자의 자아상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정도, 배우자의 부부 개인의 생활주기상의 전이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나타났다(Atchley, 1980; Ade Ridder & Brubaker, 1983; Giordano & Bedeham, 1985). 노년기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에서 보면 부부의 만족도는 신혼기에 가장 높다가 중년기, 노년기를 통해 계속 낮아지고 자녀들이 집을 떠난 시기에 높아진다는 U자형의 결과를 보이며, Lee(1977)도 조기

에 결혼한 부부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sberg와 그의 동료(1987)는 노인의 연령에 따라 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Kercher와 그의 동료(1988)는 노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삶의 질과 만족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삶의 만족은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만족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Quinn(1983)은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은 건강상태, 가족관계의 질, 가족으로서 도리에 대한 기대, 결혼상태(배우자 유무), 주거환경, 가족원 외의 사람과의 접촉, 경제적 사정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중에 건강상태의 영향과 가족관계의 질이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3.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가. 재혼가족

재혼가족은 남녀초혼 핵가족만큼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며, 계부모-자녀 관계는 친부모-자녀 관계처럼 친밀하지 않다. 이러한 가족응집성의 문제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자녀들은 정서적 유대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혹은 계부모에게 반항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복잡한 가족 구성이라는 점이 재혼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복잡한 구조내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는 현재의 재혼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가족, 두 가족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가 두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재혼가족만이 갖는 특성으로, 그로인해 자녀는 각 가정의 서로 다른 규칙과 기대에 적응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Visher & Visher, 1982; 윤주애, 2002 재인용).

터켈슨은 가족주기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서 개인의 발달과정과 가족구조를 결합시켰다. 개인발달의 주요동기로서의 성취요구와 그 요구에 대해 가족

구조는 어느 정도까지 그 특별한 요소를 결합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개인발달주기에서의 에릭슨을 포함하고 있었던 단계적인 측면과 세대적 연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내의 변화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한 가족원의 긴급성과 가족체계가 그 요구를 대면하고 수용함으로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터켈슨은 가족의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1순위 발달은 개인적인 발달요구이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족체계내로의 습득, 적응, 통합이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요구이다. 2순위 발달은 가족지위, 목적의 변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려고 하는 요구이다. 2순위 발달에는 또 다시 2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 출생, 입학과 같은 정상적인 행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터켈슨이 비정상적인이라고 말했던 가족 체계를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는 일들이다. 여기에는 부부의 별거, 이혼, 죽음, 재혼 등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나. 기타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는 전술한 재혼가족 외에도 입양가족과 국제결혼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가족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가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연구로서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논의하지 않으며, 후술하는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가. 맞벌이가족

여성취업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의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대한 일종의 위협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에 긴장이 형성될 수 있고 따라서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

기 위한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essler & McRae, 1982; 최규련 외, 1995), 이는 남편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자신감 상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 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부인이 취업을 하게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Nye, 1978; 이현송 외, 1996 재인용).

또한 맞벌이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 전반적인 가족만족도가 높아지고(Voydanoff, P., 1990),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Ulbrich, 1988; Pleck, 1985; Mirowsky, 1985). 또한 가족의 일에 대한 역할분담의 불평등성은 부인들의 형평성 인식, 우울, 결혼불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집안일에 남편의 참여정도가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집안일과 경제적 일을 병행함으로써 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할갈등이 정신건강이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직업을 가진 부인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결과(Gove & Greeken, 1977; Reitzes & Mutran, 1994; 김현주, 2003 재인용)를 보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항상 갈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이나 만족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역할정체성 이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역할 중에서 어떤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갈등이나 긴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혼관계는 한 개인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두 사람의 성역할 정체성과 관련된다. 두 사람간의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수행이 일치하면 상호 갈등이 감소하여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지만 두 배우자간의 성역할 정체성의 불일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 개인의 수준에서 성역할 일치도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에 더하여 자신의 일치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 일치도가 만족도와 관련지어짐을 주장하기도 한다(Ross, Mirowsky & Huber, 1983).

나. 주말부부가족

맞벌이 주말부부는 부부 각각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고, 아내의 직업욕구에 대한 남편의 지지, 높은 수입, 심리적 근접성,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이 최소일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erstel & Gross, 1984). 전문직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동료들이 남성이므로 직장 동료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고, 또한 주말에 배우자를 방문하는 이동자의 경우에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주말에 배우자가 있는 도시로 떠나기 때문에 사회관계망은 더욱 축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erstel & Gross, 1984). 또한 맞벌이 주말부부와 동거 맞벌이 부부를 비교한 Bunker, Zubek, Vanderslice & Rice(1992)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맞벌이 주말부부들이 동거 맞벌이 부부에 비해 역할갈등을 훨씬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5.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는 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본 장(章)에서 논의하지 않으며, 후술하는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 3 절 국내·외 선행연구의 시사점

다양한 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먼저 외국의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많은 접근은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특정사회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하다. 이는 개별사회마다 특성이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특성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이 잉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가족에 대한 연구영역을 다변화시키고 접근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구사회와 동일한 선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가족유형이 발생되기도 하므로 선행연구의 관심영역도 시대흐름에 따라 달리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즉, 산업사회·근대사회의 핵가족에 대한 관심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내적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가족이 양산되고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증대되는 것이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단순한 관심보다는 이들 가족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개인주의화의 만연에 따른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구조적 및 가치관 변화는 가족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화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다. 다만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가족유형이 한국사회에 발생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서구의 가족유형과 한국사회의 특수한 가족유형을 모두 망라한다면 다양한 가족과 그 가족원에 대한 연구영역의 확대와 정책대안의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들 다양한 가족이 모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착안하고 정책방안의 강구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유형의 가족일지라도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가족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개별가족을 논의함에 있어서 준거틀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열린 자세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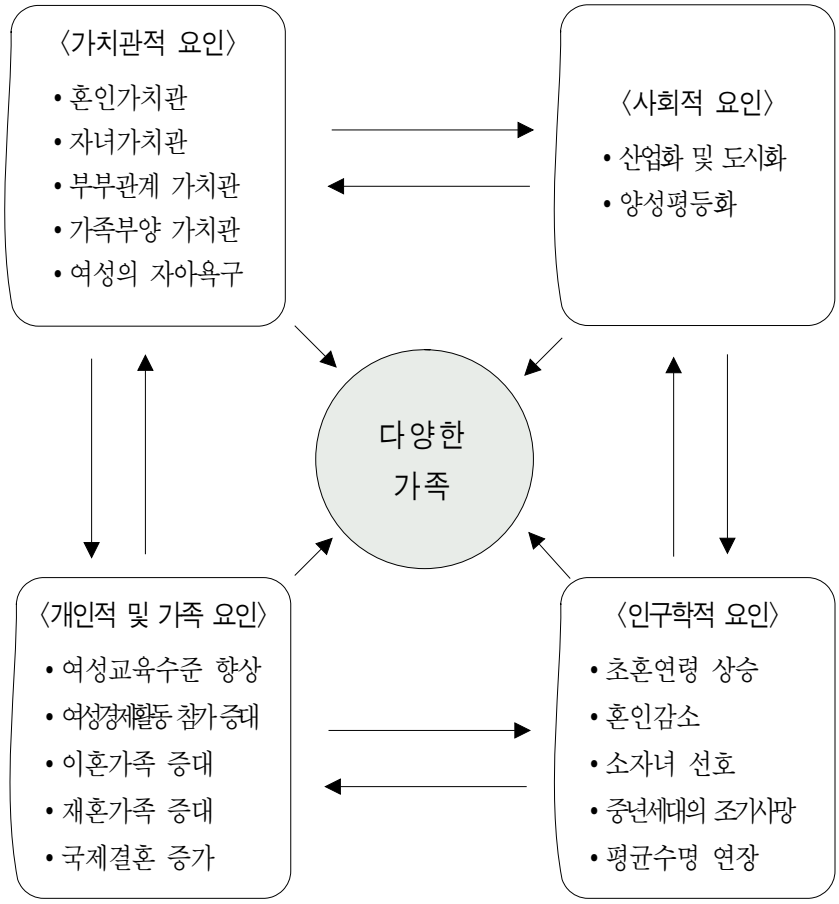
제 4 장 한국사회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

단기간에 이룩된 산업화, 도시화 및 서구화의 영향으로 한국가족은 크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가족구조의 축소 및 분화, 성역할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은 가족변화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에게서 그 기본적 기능인 경제적·정서적 기능 약화와 가정폭력의 발생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음은 '가족위기'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김승권, 2003b).

가족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 고에서는 크게 가치관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및 가족 요인 등 네 개 군(群)으로 구분한다. 각 군에는 다시 세부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특정요인은 다른 요인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은 변화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지만 또 다른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된 변수는 어느 다른 지표보다도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에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과 저출산 현상도 가족형성과 가족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겠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젊은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는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이와 같이 서구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이 한국사회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이 서구 사회와는 달리 대학 졸업시까지 또는 취업시까지, 심지어는 자녀결혼 후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가치관은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그리고 무자녀가족 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한국사회의 특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한국사회 다양한 가족의 출현 과정



제 1 절 가치관적 요인

가치관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신념, 가치, 규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기존에 선정된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지속적인 재평가와 재선별의 과정이 필요하다.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고(유영주 외, 2000),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 또는 이념 내지 신념이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2002).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갖는 바람직성에 대한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신념이라 정의된다(조소연, 2001). 이는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가족가치관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이나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해준다(강숙경·고정자, 1996).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이며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결혼가치관이나 자녀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본 자녀의 가치로, 부모는 자녀를 통해 가족결속, 사랑, 안정감 등의 사회·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심리적 부담, 활동의 제약, 자유시간의 제한 등으로 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연구자	연도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홍승직	1969	결혼관, 가문관, 자부관, 궁합관, 자녀교육관, 도관, 제사관, 형제관
옥선화	1984	배우자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박진숙	1984	가(家)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김순옥· 류점숙	1984	결혼관, 역할관, 부모부양관, 가족중요도
이동원	1987	가(家)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 부부역할분담
김일명	1988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 친족의식
박혜인	1990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정영숙 외	1997	가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및 행사에 관한 의식과 태도
김경신	1998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조미숙 외	1999	결혼관, 성역할관, 부모관, 자녀관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1. 혼인가치관의 변화

결혼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한 부분으로 결혼 또는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가치기준을 의미하며, 결혼 및 그 과정에서의 배우자 선택, 결혼 후의 가정설계 등에 관련된 가치관을 의미한다(서정아, 1994). 결혼은 성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성적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자손의 번식을 도모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높은 이혼율, 동거와 독신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로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가족해체라는 위기 앞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고 다양한 결혼문화가 발생되며, 결혼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남녀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 오면

서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하여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금기시하였던 이혼이나 재혼에 관한 부정적 가치관도 변화하여 필요하다면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결혼, 이혼, 재혼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결혼가치관의 변화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어 유용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을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한 199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30.6%,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 45.2%이었다(공세권 외, 1992), 1996년 만 20세 이상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보처(1996)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반드시 해야 한다: 36.7%,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30.9%). 통계청(1998) 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해 67.5%가 찬성(반드시 해야 한다: 33.6%, 하는 것이 좋다: 33.9%) 하였으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경우는 23.8%, 그리고 '결혼에 반대'하는 경우는 1.3%로 상당수가 결혼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보다 최근의 자료인 김승권 외(2000a, 2003c)에 의하여 2000년도와 2003년도의 기혼부인의 결혼가치관을 보면 적극적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각각 55.6%와 54.4%로 지난 10년 간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태도도 각각 5.4%와 5.9%로 감소하였으나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8.2%와 37.1%로 나타나 주목된다. 또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가치관을 조사한 최근자료(김승권 외 2003a)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8%가 '하는 편이 좋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과거 우리 사회는 보편혼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일종의 '선택(option)'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라고 하겠다.주19)

〈표 4-2〉 결혼가치관의 변화

(단위: %)

구분	결혼에 찬성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결혼에 반대	모르겠다	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15~64세 기혼부인 (2000년)	26.2	29.4	38.2	5.4	0.8	100.0(10,601)
15~59세 기혼가구 (2003년)	25.7	28.7	37.1	7.9	0.7	100.0(11,145)
18~34세 미혼남녀 (2003년)	21.0	47.8	25.7	3.4	2.1	100.0(4,042)

자료: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c.

주19) 결혼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결혼행위와 출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결혼관은 결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혼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전망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음(김승권 외, 2003c). 결혼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함. 하나는 두 요인이 무관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이 있다는 것임. Buissink(1971)는 네덜란드의 연구에서 결혼과 출산력의 무관성을 주장하였으며, Davis & Blake(1956)는 결혼 또는 미혼 자체가 재생산 여부를 결정하고 재생산기간도 결혼연령, 이혼, 별거, 사별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관성을 주장하였음. 공세권(1992)은 출산양상이 사회적·문화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출산속도 및 혼외출산 등을 감안하면 결혼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시 할 수 없다 하였고, 김승권(2003b)은 결혼가치관의 감소를 출산율 저하의 간접적 요인으로 규명하고 결혼과 출산간의 관련성을 도출하였음.

나. 이혼가치관의 변화

가족해체를 의미하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은 우리사회 가족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부인들의 이혼에 관한 생각은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2000년 52.8%, 2003년 50.4%이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인이 2000년 30.2%, 2003년 30.3%이었으며,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각각 2000년 3.3%와 12.2%로, 2003년 각각 3.3%와 15.3%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어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 2003년 48.9%이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도 높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4-3〉 15~64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연령							
15~19세	15.4	15.4	30.8	38.5	-	-	100.0(13)
20~29세	4.7	19.4	39.6	28.3	6.5	1.5	100.0(1,425)
30~39세	3.4	13.1	34.6	38.3	9.3	1.2	100.0(3,468)
40~49세	2.9	11.9	30.4	40.0	13.6	1.2	100.0(2,991)
50~59세	3.0	8.9	20.7	40.5	25.2	1.7	100.0(1,886)
60~64세	2.1	4.9	16.9	40.9	32.9	2.3	100.0(817)
교육수준							
초교 이하	2.3	7.0	20.7	39.9	27.9	2.1	100.0(2,426)
중학교	3.1	10.2	29.1	40.1	15.6	1.9	100.0(1,779)
고등학교	3.4	13.6	34.2	37.5	10.2	1.2	100.0(4,327)
대학 이상	4.2	17.4	34.2	35.2	8.2	0.8	100.0(2,060)
2003년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연령							
15~24세	4.7	21.3	33.9	27.6	-	1.6	100.0(127)
25~29세	3.1	19.3	38.9	30.0	11.0	0.9	100.0(846)
30~34세	3.3	17.2	37.5	31.7	7.8	0.9	100.0(1,738)
35~39세	3.6	16.9	35.4	34.5	9.4	0.5	100.0(2,070)
40~44세	2.9	15.4	30.7	39.8	9.2	0.9	100.0(2,138)
45~49세	3.3	14.2	27.2	38.1	16.7	0.6	100.0(1625)
50세 이상	2.9	11.2	19.7	38.6	27.4	0.2	100.0(2208)
교육수준							
초교 이하	3.0	11.4	19.4	37.8	28.3	0.2	100.0(1,682)
중학교	3.0	14.1	24.7	39.2	18.3	0.7	100.0(1,736)
고등학교	3.4	16.5	23.7	35.3	10.3	0.7	100.0(4,801)
대학 이상	3.1	16.4	36.2	34.4	9.4	0.6	100.0(2,522)

자료: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c.

다. 재혼가치관의 변화

전통적으로 재혼에 대해 부정적이던 인식이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1998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재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2.5%, '하는 것이 좋다'가 17.4%로 약 20%가 재혼에 찬성하고 있었다. 2000년 기혼부인의 재혼가치관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16.8%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30.3%이었으며, 소극적인 태도는 46.5%로 나타나 부정적인 태도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3년 기혼부인의 재혼가치관은 적극적인 경우가 20.7%이었고, 부정적인 경우가 27.4%이었으며, 소극적인 태도는 47.2%로 나타났다.

〈표 4-4〉 재혼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구분	재혼에 찬성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됨	재혼에 반대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해야 함	하는 것이 좋음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하지 말아야 함		
성인남녀(1998년)	2.5	17.4	52.2	14.8	4.4	8.7	100.0
15~64세 기혼부인 (2000년)	0.7	16.1	46.5	23.7	6.6	6.3	100.0 (10,590)
15~29세 기혼가구 (2000년)	0.8	19.9	47.2	21.5	5.9	4.6	100.0 (11,127)

자료: 통계청, 『1999 한국의 사회지표』, 1999. 재구성.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c.

2.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의 가치는 사회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자녀는 가계계승, 노동력의 창출, 노후부양기대 등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부중심 가족생활의 강조 등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형성되고 자녀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승권 외, 2000b). 노후에 의존하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적어지고 있으나 자녀가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견해와 자녀를 통한 가계계승의 중요

성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의견도 있다(한남제, 1997).

가. 자녀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는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변하기 시작하여 자녀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대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연령, 취업여부, 현존자녀수 등이었다(공세권 외, 1992; 홍문식 외, 1994;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b, 2003c).

김승권 외(2000b, 2003c)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자녀가치관이 자녀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아들의 필요성, 아들 최소 한 명의 필요성, 자녀의 부모대리성취 등의 변수는 자녀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의 경제적 효용[주20]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출산규범에 영향을 주어서 자녀관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이는 경제발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대되면 소자녀관이 형성되며, 생존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영양상태, 의료기술의 발달은 다자녀관을 약화시키고 자녀에게 얻을 수 있는 생산재 효용 및 노후소득보장효용을 증대시켜 출산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0b).

1990년대 이후에 수행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부인은 1991년 90.3%[주21]에서 1997년

주20) 효용에는 소비효용과 생산재효용 및 노후보장효용이 있음. 여기서 소비효용은 자녀를 소비재로 간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체가 부모에게 효용가치를 준다는 개념임. 생산재 효용은 자녀를 생산재로 여겨 가내노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은 자녀의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효용가치를 말함. 노후보장효용은 자녀를 노후의 생활수단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함으로 기대되는 효용가치를 의미함(김승권 외, 2001 재인용).

주21)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15~44세 유배우부인을

에는 73.7%로, 2000년에는 58.1%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반대로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에서 1997년에는 26.0%, 2000년 41.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로 판단된다.

〈표 4-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1)]	90.3	8.5	-	-	1.2	100.0(7,448)
1997[2)]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3)]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0[4)]	54.5	44.9	32.3	12.6	0.6	100.0(6,593)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c.

따라서 전통적인 자녀가치관에서 자녀선호도에 따라 자녀를 선택하는 부부중심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인의 자녀필요태도의 변화는 향후 무자녀의 부부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8.5%가 결혼 후 자녀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며, 남자의 42.0%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분석대상으로 한 본 조사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하겠음.

반면, 31.4%의 여자 응답자만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4-6〉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관

(단위: %, 명)

특성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꼭 있어야 함	생각해 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19.3	41.1	37.4	2.2	100.0(4,043)	
남자	17.4	38.3	42.0	2.3	100.0(2,284)	50.0***
여자	21.7	44.8	31.4	2.1	100.0(1,759)	(3)

주: *** p<.001

자료: 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한편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 21.7%, 남자 17.4%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결혼 후 가족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28.4%(남자의 경우 9.0%)가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사회적 성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사회적 성취욕구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7〉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부부 중심의 생활영위를 위해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사회적 성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51.5	18.4	6.7	8.2	0.5	14.7	100.0(761)	
성								
남자	62.1	9.0	6.4	7.2	-	15.3	100.0(391)	62.2***
여자	40.3	28.4	7.0	9.2	1.1	14.1	100.0(370)	(5)
연령								
18~19세	41.9	16.2	7.6	13.3	1.0	20.0	100.0(105)	
20~24세	44.4	20.2	5.6	11.9	0.7	17.2	100.0(268)	43.3**
25~29세	56.9	18.0	7.7	4.1	1.0	12.3	100.0(195)	(20)
30~34세	59.7	14.4	9.3	6.5	-	10.1	100.0(139)	
35~39세	63.1	24.6	-	-	-	12.3	100.0(57)	

주: ** p<.005 *** p<.001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나. 이상자녀수

이상자녀수의 개념은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주관적인 자녀규모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보다 사회 전반적인 집합적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상자녀 가치관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2.1명 수준에서 0.1명 내외로 증감을 보였다. 따라서 기혼부인의 현존자녀수는 이상자녀수의 평균에 접근하고 있어서 이상자녀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또한 부인의 연령층별로 평균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는 것은 세대간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가임층 부인의 출산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이상자녀수는 부인의 연령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서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자녀수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15~24세, 25~29세, 30~34세 연

령층의 이상자녀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 각각 2.3명, 2.2명, 2.2명이었으며, 35~39세 연령층은 1999년 이후, 40~44세 연령층은 1991년 이후 2.3명이었다.

〈표 4-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1)]

(단위: 명)

연령	1991	1994	1997	2000	2003
15~24세	1.8	2.0	2.1	2.1	2.3
25~29세	1.9	2.1	2.1	2.1	2.2
30~34세	2.1	2.2	2.2	2.2	2.3
35~39세	2.2	2.3	2.3	2.3	2.3
40~44세	2.3	2.3	2.3	2.3	2.3
평균 이상자녀수	2.1	2.2	2.3	2.2	2.3

주: 1)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부인, 1994~2000년 자료는 15~44세 기혼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2)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3)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5)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c.

이상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현존자녀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부인의 현존자녀수별 평균 이상자녀수의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부인의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평균 이상자녀수가 높았다.

〈표 4-9〉 15~44세 기혼부인의 현존자녀수별 평균 이상자녀수

(단위: 명)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 이상자녀수	2.0	2.1	2.3	2.6	2.7
(응답수)	(534)	(1,475)	(3,661)	(611)	(82)

주: 15~44세 기혼부인 6,36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를 재분석함.

미혼남녀의 71.1%가 2명의 자녀를 이상자녀수라 하였으며, 평균 이상자녀수

는 2.16명으로 나타났다.주22) 또한 실제 희망자녀수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자 의 54.8%만이 2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1자녀를 희망하는 경우도 12.0%를 차지하여 평균 희망자녀수는 2.08명이었다(김승권 외, 2003a).

〈표 4-10〉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

(단위: %, 명)

특성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부부 결정	계(수)	χ^2 (d.f.)	평균 희망자녀수2) (S.D.)
이상자녀수	0.1	8.2	71.1	17.5	3.1	-	100.0(3,482)		2.16(.66)
남자	0.1	9.1	70.3	17.5	3.0	-	100.0(1,987)	5.8	2.15(.66)
여자	0.1	6.9	72.2	17.5	3.3	-	100.0(1,495)	(4)	2.18(.65)
희망자녀수	1.0	12.0	54.8	13.6	3.0	15.6	100.0(3,485)		2.08(.75)
남자	0.8	11.7	56.2	12.9	2.9	15.4	100.0(2,015)	7.1	2.07(.72)
여자	1.4	12.3	52.9	14.6	3.1	15.8	100.0(1,470)	(5)	2.08(.78)

자료: 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재구성.

이상자녀수와 실제 희망자녀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관계의 강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상관계수가 0~0.30이면 두 변수는 약한 관계를 가지고, 0.30~0.70이면 보통의 관계이며, 0.70 이상이면 강한 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계수는 0.514이므로 두 변수는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들 변수는 99%의 신뢰도 수준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는 정적 관계에 있어 이상자녀수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도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22) 일본 후생성의 최근 연구(Annual Reports on Health and Welfare 1998~1999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Life)에 따르면 일본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자녀수는 2.58명으로 우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일본 후생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english/wp/wp-hw/index.html).

〈표 4-11〉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와의 상관관계

구분		희망자녀수	이상자녀수
이상자녀수	Pearson Correlation	1	.514**
	Sig. (2-tailed)	-	.000
	(N)	(4,037)	(3,492)
희망자녀수	Pearson Correlation	.514**	1
	Sig. (2-tailed)	.000	-
	(N)	(3,492)	(3,499)

주: ** p<.005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3. 부부관계 가치관의 변화

가. 부부의 성역할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명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여전히 남녀간에는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조미숙 외(1999)는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인 남성집단에 비해 여성이 보다 종속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서 열등감을 경험하는데 반해, 남성은 지금 그대로의 구조, 즉 전통적인 성별차이를 유지하려는데 집착하여 더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경제활동, 자녀양육, 가사분담 등에 관한 성역할관이나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가치관이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별과 세대에 따라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양명숙, 199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부간 의사결정관에 관하여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에 대하여 응답자의 80.9%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라도 가정의 일은 주로 아내가 해야 한다'에는 78.3%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고, '가정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에 73.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들의 부부간 의사결정관이 점차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희, 1998).

나. 미혼남녀의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부부 맞벌이'에 대한 태도에서 응답자의 71.5%가 '찬성' 또는 '매우 찬성'에 응답하였고, '반대' 또는 '매우 반대'는 3.6%에 불과하여 남녀 모두 맞벌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여자(74.4%)가 남자(69.3%)에 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맞벌이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에 대해 찬성의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술한 서정아(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여자의 86.0%와 남자의 57.8%가 결혼 후 여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취업을 원하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결혼 후 취업의사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할 의사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기개발을 위해 여자 스스로가 교육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으므로 취업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기의 이상 및 만족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자에 비해 낮았지만, 남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표 4-12〉 미혼남녀의 특성별 '부부 맞벌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0.9	2.7	23.7	54.3	17.2	1.2	100.0(4,038)	
성								
남자	1.3	3.0	25.0	53.8	15.5	1.4	100.0(2,280)	26.3*** (5)
여자	0.4	2.3	22.0	55.1	19.3	0.9	100.0(1,758)	
연령								
18~19세	1.6	3.6	23.9	49.3	20.6	1.0	100.0(501)	
20~24세	0.8	2.8	22.2	52.7	20.4	1.1	100.0(1,546)	57.4*** (20)
25~29세	0.9	2.6	24.0	55.2	15.8	1.5	100.0(1,181)	
30~34세	0.8	2.4	26.5	57.6	11.9	0.8	100.0(616)	
35~39세	-	2.0	25.0	63.8	7.2	2.0	100.0(19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2	2.9	35.0	48.8	9.2	2.9	100.0(346)	
전문대학	1.2	3.5	24.7	56.3	13.3	1.0	100.0(1,024)	83.9*** (15)
대학	0.6	2.5	22.4	53.7	19.6	1.2	100.0(2,433)	
대학원 이상	0.9	0.9	15.4	61.7	21.1	-	100.0(227)	

주: 1) *** p<.001

2) '생각해 보지 않았음' 또는 '모르겠음'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출산과의 관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과의 상관관계는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결혼 또는 출산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은 그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가정과 일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승권 외, 2003a).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970~1980년대에 미국에서 활발히 이

루어졌던 대부분의 미시적 연구에서는 출산력이 여성의 고용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나, 여성의 고용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Smith-Lovin & Tickamyer, 1980; Cramer, 1980).

〈표 4-13〉 '결혼 후 여자본인 또는 부인의 취업희망여부'

(단위: %, 명)

특성	취업함	취업 안함	모르겠음	계(수)	χ^2 (d.f.)
	여성응답자				
전체	86.0	4.6	9.4	100.0(1,756)	
연령					
18~19세	87.6	3.9	8.5	100.0(283)	
20~24세	86.7	5.1	8.2	100.0(801)	11.4
25~29세	82.4	4.9	12.7	100.0(386)	(8)
30~34세	86.0	4.8	9.2	100.0(207)	
35~39세	91.1	-	8.9	100.0(79)	
	남성응답자				
전체	57.8	17.9	24.3	100.0(2,281)	
연령					
18~19세	50.7	21.5	27.8	100.0(219)	
20~24세	59.1	17.5	23.4	100.0(743)	21.6**
25~29세	59.3	15.7	25.0	100.0(792)	(8)
30~34세	58.3	17.3	24.4	100.0(410)	
35~39세	51.3	30.8	18.0	100.0(117)	

주: 1) * p<.05 ** p<.005 *** p<.001

2) '생각해 보지 않았음' 또는 '모르겠음'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출산에 따른 여러 형태의 보상과 비용에 따라 출산율이 결정될 것으로 볼 때, 여성의 취업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의 성격(직업, 승진기회, 임금 등)이나 직업가치관 등 개인의 성향과 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전체 혹은 주위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의 지원 등 여러 요인들이 여성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복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일과 출산의 관계는 교육, 가족 등의 거시적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

가. 노부모 부양 가치관

가족부양의 대표적인 형태는 노부모에 대한 것이다.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핵심인 장남의 부모부양책임에 대해 3개국을 조사한 결과이다.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의 필요성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장남의 부모공양 책임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강력한 태도(71.6%)를 보였는데 반해, 일본인은 41.9%, 한국인은 46.1%로 나타났다.

〈표 4-14〉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매우 당연	당연한 편	당연하지 않은 편	전혀 당연하지 않음	계 (명)
한국전체	11.5	34.6	45.7	8.2	100.0(1,000)
20대	6.1	30.9	51.9	11.1	100.0(314)
30대	9.9	29.8	49.6	10.6	100.0(282)
40대	14.1	37.5	42.7	5.7	100.0(192)
50대	18.7	41.0	36.7	3.6	100.0(139)
60대	19.0	46.6	32.8	1.7	100.0(58)
70대 이상	26.7	60.0	13.3	0.0	100.0(15)
일본전체	10.0	31.9	28.9	26.8	100.0(620)
20대	8.3	28.7	32.4	27.8	100.0(108)
30대	10.2	37.0	25.0	25.0	100.0(108)
40대	8.2	31.3	28.4	29.9	100.0(134)
50대	6.5	25.0	33.9	32.3	100.0(124)
60대	8.3	45.2	22.6	22.6	100.0(84)
70대 이상	25.8	25.8	29.0	16.1	100.0(62)
중국전체	25.2	46.4	26.4	2.0	100.0(1,000)
20대	30.5	49.0	18.5	1.9	100.0(259)
30대	26.1	44.7	26.8	2.4	100.0(291)
40대	18.6	47.4	32.0	2.0	100.0(253)
50대	27.2	44.9	25.7	2.2	100.0(136)
60대	22.0	42.4	35.6	0.0	100.0(59)
70대 이상	0.0	50.0	50.0	0.0	100.0(2)

자료: 한국방송공사·연세대학교, 『1996 한·중·일 3국 국민의식조사』, 1996.

나. 자녀부양 가치관

자녀의 교육과 결혼은 한국가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그 비용부담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고등학교 교육비의 경우 응답자의 98.7%가 부모의 전적인 부담을 주장하여 절대적인 부모책임임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대학교육비는 78.1%가 부모의 전적인 부담을, 20.4%가 부모의 일부 부담을 주장하였으며,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의견은 부모의 전적인 부담 40.7%, 부모의 일부 부담이 4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학비를 스스로 책임지는 미국 등 선진국 사회와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특히 대학원 교육비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0.7%나 되었다는 것은 고등연구과정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교육 및 장래가 모두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표 4-15〉 자녀의 결혼·교육비용의 부모부담에 관한 의견

(단위: %)

내용	필요한 모든 비용	일부 부담	전혀 불필요	모름/무응답	계(수)
결혼	23.6	69.2	6.6	0.5	100.0(1,500)
대학원교육	40.7	48.1	10.6	0.6	100.0(1,500)
대학교육	78.1	20.4	1.3	0.2	100.0(1,500)
중/고등학교 교육	98.7	1.0	0.3	-	100.0(1,500)

자료: 공보처,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996.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영향을 준다. 자녀의 교육, 정서적 발달,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성장정도에 따라 '부모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2.7%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22.8%,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6.9%를 보였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자녀의 성인기 이후까지로 인지하고 있을 경우 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김승권 외, 2003a).

〈표 4-16〉 미혼남녀의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특성	고졸까지	대졸까지	취업까지	결혼까지	언제나	기타	계(수)	χ^2 (d.f.)
전체	22.8	42.7	14.1	12.3	6.9	1.2	100.0(3,855)	
성								
남자	21.3	43.7	15.4	11.7	6.5	1.4	100.0(2,194)	17.4***
여자	24.6	41.4	12.5	13.1	7.6	0.8	100.0(1,661)	(5)
연령								
18~19세	20.4	46.5	11.7	11.2	9.1	1.1	100.0(471)	
20~24세	22.6	41.7	13.2	12.3	8.8	1.4	100.0(1,471)	45.4***
25~29세	23.3	43.0	14.9	12.5	5.2	1.1	100.0(1,129)	(20)
30~34세	25.6	39.2	15.6	14.1	4.3	1.2	100.0(589)	
35~39세	18.0	49.2	18.0	9.2	5.6	-	100.0(19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2.2	31.6	15.8	13.6	5.6	1.2	100.0(323)	
전문대학	24.9	40.8	13.4	12.4	7.9	0.6	100.0(986)	44.7***
대학	21.1	44.5	14.3	11.9	6.9	1.3	100.0(2,323)	(15)
대학원 이상	16.0	47.7	13.8	15.6	6.0	0.9	100.0(218)	

주: *** p<.001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5. 여성의 자아욕구 변화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남녀간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6년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이 자기 일을 갖는데 남성의 6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74.7%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특히 적극적 찬성이 많았다.

결혼한 여성도 자기 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여성도 가계소득을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반영되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결혼생활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자아실현과 병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며, 특히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주23] 이는 여성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부인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표 4-17〉 '기혼여성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렇다	찬성	매우 찬성	무응답	계(수)	평균[1]
전체	2.7	5.8	23.4	29.9	38.0	0.2	100.0(1,768)	3.95
성								
남자	3.7	8.9	26.1	33.5	27.6	0.2	100.0(890)	3.73
여자	1.7	2.6	20.7	26.3	48.4	0.2	100.0(878)	4.17
연령								
20~30	2.4	3.8	18.5	32.5	42.4	0.5	100.0(661)	4.09
30~40	2.1	5.7	23.2	28.0	41.0	0.0	100.0(525)	4.00
40~50	2.4	6.5	27.1	26.8	37.1	0.3	100.0(340)	3.90
50 이상	5.4	10.5	32.2	31.4	20.5	0.0	100.0(239)	3.51
교육수준								
중졸 이하	5.7	7.3	33.1	26.4	27.1	0.3	100.0(314)	3.62
고졸	2.8	5.3	22.3	28.2	41.4	0.0	100.0(713)	4.00
대재 이상	1.4	5.5	20.4	33.2	39.1	0.4	100.0(739)	4.04

주: 1) 평균은 '매우 반대' 1, '반대' 2, '그저 그렇다' 3, '찬성' 4, '매우 찬성' 5에 의하여 산출됨.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환기 한국 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조사연구』, 1996.

주23) 이와 같은 요구나 노력은 전통적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성역할 분리에 의해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해 오던 한국 여성에게는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사회적 요인

1. 산업화 및 도시화

산업화의 진행정도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즉,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구성비 변화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개인이 산업별 및 직업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산업별 취업자는, 1960~1970년대 후반까지는 농림어업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등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24] 1차 산업의 취업자는 1963년 63.2%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99년에는 11.6%에 불과하였으며, 반면 2차 및 3차 산업의 종사자는 1963년 36.8%에서 1999년 88.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4-18〉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천명)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계(취업자수)
1963	63.2	8.7(7.9)	28.1	100.0(7,947)
1970	50.4	1.44(13.2)	35.2	100.0(9,574)
1980	34.0	22.5(21.6)	43.5	100.0(13,683)
1990	17.9	27.6(27.2)	54.5	100.0(18,085)
1999	11.6	19.9(19.8)	68.6	100.0(20,2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도별 자료.

이는 1970년대는 건설경기 붐(boom)에 의해, 최근에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급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1999년 현재 572만 4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도 471만

주24) 광공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며, 사회간접자본 등 기타 서비스업에는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창고·금융 등이 포함됨.

9천명이나 되어 이들 두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만 전체 취업자(2028만 1천명)의 51.5%나 된다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에서도 잘 나타난다.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림수산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1963년 62.9%나 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80년 34.0%, 1990년 17.8%, 그리고 1999년에는 10.9%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기능원, 기계장치 조작원, 단순노무직,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의 종사자는 증가하였으며, 서비스판매직의 종사자도 높은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킨다. 다시 말해 서구 국가가 먼저 경험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9〉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천명)

연도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수산직	생산·운수장비 운전사·단순노무직	계(취업자수)
1963	3.3	3.5	10.1	5.3	62.9	14.9	100.0(7,947)
1970	4.7	5.8	12.3	6.5	50.3	20.4	100.0(9,574)
1980	5.3	9.3	14.5	7.9	34.0	29.0	100.0(13,683)
1990	8.7	13.0	14.5	11.2	17.8	34.8	100.0(18,085)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직	기능원·장치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직	
2000[1)]	2.4	16.7	10.9	23.8	10.9	23.2	12.1	100.0(21,061)

주: 1) 2000년부터의 직업은 1993년 이후의 '신직업 분류'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도별 자료.

산업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시화가 수반된다.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1차 산업은 축소되어 불필요해진 젊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량 이동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화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의 많은 인구는 학교 진학을 위하여 도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는 직업 및 교육 등에서 농촌지역의 배출요인(push factor)과 도시지역의 유인요인(pull factor)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농향도(rural-to-urban)」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급진전된 젊은 연령층 인구, 특히 젊은 남자들의 도시로의 이동은,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남겨져 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긴장을 야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와 근무 장소간 원거리에 의한 분거가족의 증가를 가져와 도시생활에서의 과다한 경쟁과 함께 가족구성원간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주말부부가족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2. 양성평등화

타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여성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과 5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1960년 5대 국회에서는 233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은 단 1명으로 0.4%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0년 16대 국회에서는 273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이 16명으로 5.9%를 차지하였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299명 중 15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표 4-20 참조). 물론 인구의 약 절반이 여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나 그 수준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확인된다.

〈표 4-20〉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여성	여성비율
1960 (5대)	233	1	0.4
1971 (8대)	204	5	2.5
1981 (11대)	268	8	3.0
1988 (13대)	224	6	2.7
1996 (15대)	299	9	3.0
2000 (16대)	273	16	5.9
2004 (17대)	299	15	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연도별 자료.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90년 24.2%이었으며, 이는 1995년 27.3%, 2000년 31.5%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매우 낮았는데 1990년 1.5%에 불과하였으며, 1995년 1.3%, 그리고 2000년 2.3%로 최근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21〉 전체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1990	801,870	24.2	5,959	1.5
1995	903,823	27.3	7,683	1.3
2000	849,152	31.5	8,363	2.3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은 UN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의 수준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먼저 UN이 각 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인간개발성취의 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살펴보면, 1997년 우리나라는 전세계 143개 국가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소득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NDP가 개발한 남녀평등지수(GDI)는 35위였다. 인간개발지수보다 남녀평등지수가 더 낮은 이유는 남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인 문자해독률과 취학률의 교육관련지표가 아닌, 남녀간 소득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GEM)는 7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인간개발지수(HDI)가 전체 174개국 중 27위, 남녀평등지수(GDI)는 29위, 여성권한척도는 61위로 나타났다.[주25] 이러한 결과는 1997년도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권한척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권리신장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 해결의 일환으로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인 보육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여성의 권리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족의 약화된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4-22〉 한국의 남성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 순위

지표	인간개발지수(HDI)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점수 및 순위	0.890 32위	0.854 31위	0.875 27위	0.850 35위	0.847 30위	0.868 29위	0.302 73위	0.323 63위	0.358 61위

주: 1) HDI: Human Development Index

2)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3)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자료: UN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 연도별 자료.

주25) UNDP(2001)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이들 지표의 상위 순위는 HDI가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등이며; GDI는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이고; GEM은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이었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HDI 9위, GDI 11위, GEM 31위; 홍콩은 HDI 24위, GDI 23위; 싱가포르는 HDI 26위, GDI 26위, GEM 35위 등이었음.

제 3 절 인구학적 요인

1. 초혼연령 상승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만혼의 경향이 뚜렷하였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b).

〈표 4-23〉 성별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성	1960[1)]	1970[1)]	1987	1990	2000	2003
남자	25.4	27.1	27.3	27.8	29.3	30.1
여자	21.6	23.3	24.5	24.8	26.5	27.3

주: 1) 평균 혼인연령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초혼연령의 상승에 더해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한 여성에게서 매우 현저하다. 1975년과 1995년의 30대 미혼율을 보면 30세 여성의 경우 1975년 미혼율은 4.2%이었으나 1995년에는 9.7%로 높아졌으며, 35세는 1975년 1.0%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3.9%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최근 30~34세 여성의 19.7%가 미혼[주2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이러한 결혼가치관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26) 최근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2.1)의 약 65% 수준인 1.3까지 저하되었는데, Atoh(1998)는 이러한 현상을 독신여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표 4-24〉 가임여성(15~49세)의 미혼율 변동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31.5	97.4	57.2	9.7	1.4	0.4	0.1	0.1
1975	36.0	97.4	62.5	11.8	2.1	0.7	0.3	0.2
1980	36.5	98.2	66.1	14.3	2.7	1.0	0.5	0.3
1985	36.3	99.1	72.1	18.4	4.2	1.6	0.7	0.4
1990	36.4	99.5	80.5	22.1	5.3	2.4	1.1	0.4
1995	34.6	99.2	83.3	29.6	6.7	3.3	1.9	1.0
2000	34.9	99.3	89.1	40.1	10.7	4.3	2.6	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2. 혼인감소

혼인감소는 초혼연령 상승 등 미혼율 증대에 기인된다.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혼인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은 우리 가족의 주요 환경변화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감소추세로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을 최고로 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7.0까지 낮아졌고, 2003년에는 6.3에 머무르고 있다.

〈표 4-25〉 혼인건수 변화추이

(단위: 건,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혼인건수	295,137	283,226	403,031	376,847	399,312	398,484	334,030	304,932
조혼인율	9.2	8.0	10.6	9.2	9.3	8.7	7.0	6.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3. 소자녀 선호

가. 부인의 출산율

1960~2002년의 유배우부인의 출산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960~1980년 기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1990년 이후에는 다소 상승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결혼연령 상승 현상으로 출산율은 작은 폭의 감소를 보였다.

최근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출산율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수준 상승이라 하겠다.

〈표 4-26〉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부인 1,000명당 명)

연령	1960	1970	1980	1990	1993	1996	1999	2002
20~24세	447	450	458	306	320	377	386	313
25~29세	351	356	292	234	237	264	224	250
30~34세	298	223	103	53	65	88	86	106
35~39세	232	122	28	7	15	11	14	16
40~44세	117	53	7	1	1	4	4	2
45~49세	22	8	1	0	0	0	0	0

자료: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추가자녀 희망률은 매우 낮았다. 자녀가 없는 부인의 95%가 추가자녀를 희망하였지만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추가자녀 희망률이 57%에 그쳤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자녀추가 희망률이 5%에 불과하였다(김승권 외, 2000b). 이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추가자녀 희망률은 동부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높고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높았다(김승권 외, 2000b). 그러나 부인의 특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결혼연령과 현존자녀수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부인의 특성과 추가자녀 희망여부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임 확률이 높은 40세 이하 유배우부인들의 추가자녀 희망률이 현존자녀수, 생존아들 여부, 거주지(동·읍·면부), 부인의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다변량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표 4-27>에 제시된다.

〈표 4-27〉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미치는 다변량 로짓모델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추가자녀 희망여부	0: 아니다 1: 그렇다
독립변수	생존아들 있음	0: 아니다 1: 그렇다
	부인의 거주지	0: 동 1: 읍면
	부인의 연령	실제연령: 세
	부인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reference category
	고등학교	0: 아니다 1: 그렇다
	초급대학	0: 아니다 1: 그렇다
	대학 이상	0: 아니다 1: 그렇다
	현존자녀수[1)]	
	0명	reference category
	1명	0: 아니다 1: 그렇다
	2명	0: 아니다 1: 그렇다
	3명	0: 아니다 1: 그렇다

주: 1) 현재 임신중인 아이 포함

다변량 로짓모델에 의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존자녀수와 생존아들의 유무가 추가자녀 희망률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추가자녀를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희망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연령층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짧아 자녀를 더 많이 원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28〉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미치는 다변량 로짓모델 결과[1)]

변수	추정계수
생존아들 있음	-.7528***
거주지: 읍·면	-.2725
부인의 연령	-.2147***
부인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2)]	.0000
고등학교	.6692*
초급대학	.6779*
대학 이상	.9874***
현존자녀수[3)]	
0명[2)]	.0000
1명	-1.9458***
2명	-4.5991***
3명	-5.2689***

주: 1) 40세 이하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reference category

3) 현재 임신중인 아이까지 포함

4) * p<.05, ** p<.01, *** p<.001

자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함.

로짓모델에 의하여 현존 자녀수별, 생존 아들유무별, 교육수준별 추가자녀 희망률을 추산해보면 <표 4-28>과 같다.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추가자녀 희망률이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추가자녀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즉 현존 자녀가 1명인 부인 중에서, 중학교 이하 학력자와 대학 이상 학력자의 추가자녀 희망률의 차이는 20%인 것이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우리나라 부인들의 이상자녀수가 부인의 특성과 거의 관계없이 2자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승권 외, 2000b),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일수록 이상자녀수를 갖기 전에 추가출산 희망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부인들이 이상자녀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는 이유가 자녀교육비, 육체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보고되는 것을 고려할 때(전광희, 2002) 저학력층 부인이 자녀의 출산, 양육과 관계되는 가정생활과 이에 요

구되는 경제활동을 함께 유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9〉 로짓 모델 분석결과에 의한 추가자녀 희망률

(단위: %)

부인의 교육수준	현존자녀 없음	현존자녀 1명		현존자녀 2명	
		아들 없음	아들 있음	아들 없음	아들 있음
중학교 이하	82	46	32	8	4
고등학교	89	60	44	14	8
초급대학	89	60	45	14	8
대학 이상	92	66	51	18	10

주: 부인의 현존자녀수, 아들 유무,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동·읍·면)를 포함한 로짓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추산한 것임.

자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함.

나. 저출산과 여성의 역할변화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현상은 산업화 과정을 일찍 경험한 서구의 선진국들 중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Van de Kaa, 1987; Lesthaeghe, 1983). 그러나 저출산력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역할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수준의 차이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이 잘 보여준다. 즉, 여성의 취업조건이 출산휴가, 근무시간의 유연성, 질 높은 보육시설의 보장 등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이 취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률이 함께 높은 경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출산율과 취업률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Brewster & Rindfuss, 2000; Gauthier, 1996). 이러한 이론에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조건, 보육시설 환경 등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원만하게 해 나가기에는 적절한 상태에 미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인 경우 인접한 국가 일본과 비슷하게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하여 서구의 선진국과는 색다른 조건이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 높은 사교육비, 이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희망 자녀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정영숙 외, 1997; Chung & Choe, 2000; Tshuya & Choe, 2003). 이러한 사교육의 의존은 사회의 학벌주의와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취업, 결혼, 승진 등의 기회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학위 또는 학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부인의 선택적 또는 필요에 의한 취업 및 미취업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인의 취업·미취업 형태를 (1) 선택에 의한 취업, (2) 필요에 의한 취업, (3) 가족, 사회적 이유에 의한 미취업, (4) 기타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다변량 로짓분석(multinomial logit)을 하였다(Retherford and Choe, 1993). 종속변수는 4가지 형태의 취업 및 미취업 이유를 표시하는 범주형 변수(categorial variable)이며, 독립변수는 <표 4-30>과 같이 생존 아들의 유무, 부인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현존자녀수(0명, 1명, 2명, 3명 이상)를 사용하였다. 다변량 로짓모델에 의하여 부인의 현존 자녀수 및 교육수준별 부인의 취업여부, 취업 및 미취업 이유의 분포를 추산한 결과는 <표 4-30>에서 제시하였다.[주27)]

주27) 추산방법은 Retherford & Choe(1993)를 참고.

〈표 4-30〉 다변량 로짓모델에 의해 추산된 부인[1]의 현존자녀수, 교육수준별 취업여부 및 취업·미취업 이유 분포

(단위: %)

자녀수 및 교육수준	취업		미취업	
	본인선택[2]	필요에 의해[3]	가족 및 사회적 이유[4]	기타 이유[5]
현존자녀 0명				
중학교 이하	4	60	10	26
고등학교	13	50	17	20
초급·전문대	28	38	14	20
대학 이상	37	30	16	17
현존자녀 1명				
중학교 이하	2	40	39	19
고등학교	6	27	55	12
초급·전문대	15	23	49	13
대학 이상	18	17	53	11
현존자녀 2명				
중학교 이하	2	36	50	12
고등학교	4	23	67	6
초급·전문대	10	20	62	8
대학 이상	13	15	66	6
현존자녀 3명 이상				
중학교 이하	1	34	58	7
고등학교	3	20	73	4
초급·전문대	7	18	70	5
대학 이상	9	14	74	4

주: 1) 40세 이하 유배우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선택은 시간이용, 사회적 성취, 자기발전 등임.
3) '필요에 의해'는 생활에 보탬, 자녀교육비 충당, 노후대책 마련 등임.
4) 가족 및 사회적 이유는 자녀양육 문제로, 가사전념, 일자리가 없어서 등임.
5) 기타 이유는 기타 미취업 등임.

자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함.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취업률은 자녀출산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며 '자녀양육을 위해', '가사 전담을 위해', '일자리가 없어서' 등과 같은 가족 및 사회적 이유에 의하여 미취업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취업률이 부인의 교육수준과 깊은 관

계를 보여,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요에 의한 취업'은 저학력층 일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다.

가족 및 사회적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의 60%가 자녀양육문제로 인하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저학력층 일수록 '일자리가 없어서'를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의 57%(김승권 외, 2000b)가 이에 해당하고 있음은 저학력의 기혼부인이 출산 이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남편의 높은 소득에 힘입어 가사를 지원하는 파출부, 자녀교육을 위한 가정교사 등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즉, 가사, 보육, 양육 등의 도움을 가족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저학력층의 여성은 추가자녀 희망률과 자신의 선택에 의한 취업률이 모두 낮아서 많은 부인들이 한 자녀 이상을 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승권 외, 2003a).

4. 중년세대의 조기사망

인구의 평균수명은 현저하게 연장되고 있으나 중장년층의 사망률은 어느 사회의 경우보다 높아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물론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사망률이 30대 이후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2년 현재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인구 천명당 40~44세 3.1명, 45~49세 5.0명, 50~54세 7.3명, 55~59세 1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의 수준에 비하면 큰 폭으로 저하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회의 동 연령층 사망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연령층은 대부분 미혼자녀를 둔 한 가족의 가장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망은 한부모가족을 발생시켜 다

양한 가족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4-31〉 성·연령별 사망률

(단위: 성별 인구 1,000명당/명)

연도	성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1990	남자	1.9	2.5	3.6	5.4	9.0	12.3	17.0	26.6
	여자	0.8	1.0	1.4	2.0	3.4	4.7	6.8	11.0
1995	남자	1.6	1.9	2.9	4.6	6.7	10.2	15.1	22.5
	여자	0.7	0.7	1.0	1.6	2.3	3.6	5.5	8.9
2000	남자	1.0	1.3	2.1	3.5	5.6	8.1	12.3	18.8
	여자	0.5	0.6	0.9	1.3	1.8	2.7	4.3	7.0
2002	남자	0.8	1.1	1.9	3.1	5.0	7.3	11.0	16.9
	여자	0.4	0.5	0.8	1.1	1.7	2.5	3.9	6.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5. 평균수명 연장

평균수명은 영양상태의 개선, 보건수준의 향상, 국민의 생활습관 변화, 환경개선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1970년 63.15세이던 평균수명은 2000년 75.87세로 30년간 12.72세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0.7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로는 동 기간 중 남자가 59.77세에서 72.06세로 12.29세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77.54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여자는 66.70세에서 79.50세로 12.80세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4.08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는 1970년 6.93세에서 2000년 7.44세로 그 격차가 더욱 커졌고, 2020년에는 6.54세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가족원이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가족화를 감안한다면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약 6~7세 높다는 것은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 약 3세를 감안할 경우 남편이 사망하고 여자노인 혼자서 사는 기

간이 약 9~10년이나 될 것임을 말해준다.

〈표 4-32〉 평균수명 변동추이

(단위: 세)

연도	1970	1985	1995	2000	2010	2020
전체	63.15	69.00	73.45	75.87	78.78	80.73
남자	59.77	64.92	69.49	72.06	72.50	77.54
여자	66.70	73.33	77.36	79.50	82.22	84.08
차이(여-남)	6.93	8.41	7.87	7.44	6.72	6.5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001.

제 4 절 개인적 및 가족 요인

1. 여성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에서 잘 나타난다. 즉,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5.2%, 여성 5.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41.2%, 여성 34.1%로 남성은 2.7배, 여성은 6.1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8.5%, 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25.7%, 여성 12.8%로 남성은 3.0배, 여성은 8.0배가 증가하였다(표 4-33 참조). 따라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그 상승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33〉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학력 구성비

(단위: %)

연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1970	61.1	15.2	15.2	8.5	84.6	8.2	5.6	1.6
1980	42.8	19.8	25.4	12.0	67.0	16.5	12.9	3.6
1990	23.3	17.6	38.9	20.1	43.0	20.3	28.4	8.3
2000	15.1	12.3	41.6	31.0	30.4	14.3	37.3	18.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이 산업화 초기에는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에 기인된 것이라면,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자녀교육비의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여성 자신의 개발 및 경력추구 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변화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고,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아울러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인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겠다(김승권 외, 2003b).

2004년 1/4분기 현재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8%로 과거 약 40년간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49.6%로 산업화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3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1963[1)]	1970[1)]	1980[1)]	1990	2000	2001	2002	2004. 1/4.
남자	76.4	77.9	76.4	74.0	74.2	74.2	74.8	74.8
여자	36.3	39.3	42.8	47.0	48.6	49.2	49.7	49.6

주: 1) 1987년 이전 경제활동인구수는 만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도별 자료.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2001년 기간 중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현재 77.8%에 이른다. 특히 유배우 여성은 65.4%로 가구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별 및 이혼가정의 기혼여성 취업자가 12.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자아성취욕구 증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무관리직, 전문직에의 부인취업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측면의 성역할 모형이 되고 있어 경제적, 정서적, 자녀양육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5〉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단위: %, 천명)

연도	미혼	기혼				계(수)
		소계	유배우	사별	이혼	
1980	28.0	72.0	59.0	11.6	1.4	100.0(5,222)
1990	24.5	75.5	62.8	11.0	1.7	100.0(7,376)
2000	22.2	77.8	65.5	9.3	3.0	100.0(8,707)
2001	22.2	77.8	65.4	12.4		100.0(8,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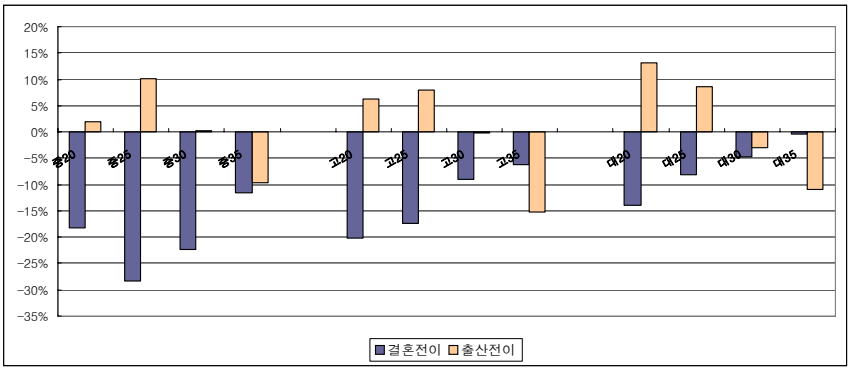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도별 자료.

나. 결혼 및 출산상태별 여성의 노동참가율

1990년도와 비교하여 2000년도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대학교육 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들은 약 75%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혼에 따른 노동시장이탈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이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경우 취업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20대의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이고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률도 증가하였고, 20대의 고졸학력 여성의 경우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결혼전이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남아있던 여성들은 출산과정에서 상당수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여성의 경우, 1990년도에 비해 결혼전이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정도는 줄어든 반면, 출산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정도는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성은 결혼에 따른 취업률 감소도 줄었지만, 동시에 출산에 따른 취업률 감소도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4-2］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여성의 노동참가율 '감소'의 변화



주: '중20'은 중졸학력, 20~24세; '중25'는 중졸학력, 25~29세; '중30'은 중졸학력, 30~34세; '중35'는 중졸학력, 35~39세를 의미함.

3. 이혼가족의 증대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만 보더라도 1975년 16,453건에서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집계하는 조이혼율[주28]을 살펴보면 1970년 0.4이던 것이 1985년 1.0을 상회하여 2000년에 2.5, 그리고 2003년에는 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혼인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혼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의 혼인행태가 안정적인 가족을 견지하기보다는 과거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6〉 이혼현황

(단위: 건,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이혼건수	11,615	16,453	23,662	38,838	45,694	68,279	119,982	167,096
조이혼율	0.4	0.5	0.6	1.0	1.1	1.5	2.5	3.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동거기간 별 이혼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이 0~4년인 경우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5~9년 23.1%, 10~14년 19.6%, 15~19년 14.9%, 20년 이상 10.9%순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 비율은 1992년 15.7%에서 2003년 32.7%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경우 1992년 6.2%에서 2003년 17.8%로 2.9배 증가하여 중년이혼·황혼이혼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주28)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이혼빈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로서 통상적으로 지난 1년가 발생된 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총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내는 이혼발생건수임. 단일 지표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나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함.

〈표 4-37〉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

(단위 : %)

연 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2	36.3	27.2	20.6	9.5	6.2
1993	34.7	26.1	21.3	10.7	6.7
1994	33.7	25.4	21.3	11.6	7.2
1995	32.6	25.1	20.6	13.1	8.2
1996	32.1	24.6	19.6	13.8	8.9
1997	31.0	24.3	19.5	14.6	9.8
1998	29.4	23.3	19.2	15.5	12.4
1999	29.2	22.8	18.9	15.6	13.5
2000	29.3	22.3	18.7	15.3	14.3
2001	28.2	23.0	19.0	14.8	14.9
2002	26.9	23.2	19.4	14.7	15.7
2003	24.6	23.1	19.6	14.9	17.8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2003년도 이혼통계에서 연령별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이혼당시 41.3세, 여성은 37.9세로 나타나 1993년 남성 평균 이혼연령 37.9세, 여성 평균 이혼연령 33.9세과 비교하여 남자의 경우 3.4세, 여자는 4.0세 증가하였다. 남녀의 평균 이혼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8〉 연도별 평균 이혼연령

(단위 : 세)

구분	1993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남자	37.9	39.8	40.0	40.1	40.2	40.6	41.3
여자	33.9	36.1	36.4	36.6	36.7	37.1	37.9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4. 재혼가족의 증대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증가함으로써 재혼이 동반 상승하여 최근 재혼가정은 1년에 약 6만 4천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부가족 중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1990년 89.3%, 2000년 82.0%, 2002년 79.0%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 반면, 부부 일방이 재혼인 경우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19.0%, 2002년 21.0%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당시의 부부연령은 상승하고 있는데, 1990년~2002년 간의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3.3세, 여자 3.9세가 상승하였다. 이는 10년 미만 함께 산 젊은 연령층 부부의 이혼이 많지만 점차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9〉 혼인의 초·재혼 구조와 성별 평균 재혼연령

구분	1990	2000	2001	2002
혼인의 초·재혼 구조(%)				
부부 모두 초혼	89.3	82.0	79.7	79.0
부부 일방이 재혼	10.7	18.0	20.3	21.0
(남 재혼-여 초혼)	(3.6)	(3.5)	(3.8)	(3.8)
(남 초혼-여 재혼)	(2.3)	(4.9)	(5.6)	(5.6)
(부부 모두 재혼)	(4.7)	(9.6)	(10.9)	(11.6)
계(수)	100.0 (399.3천)	100.0 (334.0천)	100.0 (320.1천)	100.0 (306.6천)
평균 재혼연령(세)				
남자의 평균 재혼연령	38.9	42.1	42.1	42.2
여자의 평균 재혼연령	34.0	37.5	37.6	37.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5.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과의 혼인은 1996년 15,946건에서 1999년에는 10,570건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5,913건에 이른다. 2002년도에 발생한 외국인과의 결혼은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와의 결혼은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상대자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

운 일부 한국 남성들이 중국교포,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혼인을 하고 있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국가족들은 외국출신의 가족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0〉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연도	한국남자+외국여자	한국여자+외국남자	계
1996	12,647	3,299	15,946
1997	9,266	3,182	12,448
1998	8,054	4,134	12,188
1999	5,775	4,795	10,570
2000	7,304	5,015	12,319
2001	10,006	5,228	15,234
2002	11,017	4,896	15,91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제 5 절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론 일부 가족유형은 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가족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와 관련되어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회발전에 따라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이행이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자녀양육을 포함한 전체 가족원의 부양과 직결되고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여성취업의 증대와 이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당연할 것이다.

또한 자녀수에 대한 관심은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행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외국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한 마디로 다양한 가족은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사회의 교육의 질, 경제적 어려움, 세계화 시대, 취업난, 환경문제 등 많은 요인들이 다양한 가족을 출현시키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배경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이들 가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가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제도 자체가 갖는 가변성과 환경에 적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사실 가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간의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된 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가족구조적 측면, 가족구성원의 특성, 그리고 가족생활양식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가족관계로서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가 변화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그리고 노인가족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가족유형이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보다 빈번하게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1 절 개념 및 특성

가족을 논의하는데 있어 구조기능론은 가족을 바라보는 보수적 성향과 성차별적 접근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도식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구조기능론적 접근은 가족이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functional) 역할뿐만 아니라 역기능적(dysfunctional) 측면과 무기능적(nonfunctional) 측면이 존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사실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가족구조가 가족에게 기대되는 많은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상적인 준거의 틀을 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이해하는데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인류사회에서 가족을 조망하는 도식적 기준을 제시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전통적·전형적 가족구조에서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기능론에서 바라 본 가족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서 자녀의 사회화 및 가족원의 안녕을 위하여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적 역할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이러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거나 또는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를 촉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기능론의 성차별적 관점은 본 장에서 논의하고 자는 가족들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구조적 측면의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구조적 특성으로 갖게 되는 가정생활 상의 특성이 반드시 가족원 개개인이나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문제적 시각은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가족구조의 다양성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의 다양성에 대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가족이 역기능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을 논의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구조기능론이 갖는 한계는 교환이론에 의하여 상당부분 희석되는데, Ney & McDonald(1979)는 교환이론이 특정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과 대가의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소개하였다. 즉, 구조나 행위의 변동이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증가시키고 대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보상을 감소시키고 대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호배타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족구조적 측면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구조적 변화라는 상황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하는 가족에게 가족원들간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적응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가족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새롭

게 주어진 역할이 부담이 되고 대가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이혼한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겪는 이중역할의 부담에 적응하기 위하여 장남에게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역할부담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는 보상을 받게 되지만, 장남은 생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가족부양의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가족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은 가족원 일부에게는 보상이 되고, 반대로 또 다른 가족원에게는 대가가 되는 갈등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통적 가족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족이고, 미혼모가족은 자녀로서는 부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무자녀가족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없는 가족이며, 노인가족 특히 노인단독가족이나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평생 자녀가 없었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가족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들 가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개념 및 특성,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지원방안을 파악하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고 반드시 가족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으며, 개별가족 고유의 보상과 대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면서 이들 가족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및 가족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및 가족기능 수행에 대한 불만족 등의 다양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해체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가족해체의 과정을 경험하고 형성된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족이

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은 편모·편부 가정 또는 모자·부자가정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내포한 결손과 결핍의 부정적 이미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일방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으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는데, 자녀에 대하여 모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남성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자녀에게는 부 또는 모가 부재한 상태라면, 미혼모가족은 자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가족생활 전반에서 아버지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족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부모가족이 가족해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면, 미혼모가족은 해체보다는 형성자체에서부터 전통적 가족구조와 다르다. 특히,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다.

유유박(1980)은 인간성장의 발달단계에서 사춘기에 있는 소녀가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인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임신은 했으나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됨으로써 이들 여성을 '미혼모'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미혼모를 사회병리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 자발적 미혼모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1987)은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 또는 임신중절한 경우의 여성과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라고 하여 임신중절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나, 유배우 상태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 한부모가족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또한 사회사업의 대상으로서 미혼모를 정의할 때는 미혼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여자와 기혼녀가 별거 또는 이혼 중에 있으면서 아기를 가진 경우, 그리고 사별여성으로서 혼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박홍주 외, 1993). 한편, 전재일(1996)의 연구에서는 미혼모란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이혼, 별거 과

부의 상태에서 법적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와 미혼녀가 임신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여성의 혼인경력과는 상관없이 그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 상대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임신이 된 경우를 모두 미혼모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상학(1999)은 미혼모를 지금까지 한번도 결혼해본 경험이 없는 처녀의 출산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혼전 상태의 여성의 임신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이러한 개념 정의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결혼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로 한정하여 미혼의 여성이 자신이 출산한 자녀와 가구를 이루고 사는 형태로 정의한다.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을 논의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자녀가족을 제외할 수 없다.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에게 기대되어지는 전통적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자녀양육기능의 약화에 따르는 무자녀가족의 증가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가족집단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집단이라는 의식이 강하였으며, 이에 자녀는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하여 즉, 가족집단의 영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이러한 의미 외에도 가족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우리 문화는 자녀를 기르는 즐거움이나 보람, 또는 부부 사이의 애정을 확인하게 해주는 부분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제도로서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녀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및 서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 내에서 자녀가 갖는 이러한 의미는 상당부분 희석되었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뚜렷해지면서 혼인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녀출산을 통한 가족의 형성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애정적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생리적인 이유로 자녀를 갖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무자녀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는 논외로 할 경우, 가족 내에서 자녀의 필요성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무자녀 부부중심의 가족은 자녀의 출산을 혼인과 함께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무자녀가족은 그 형성동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발적 무자녀가족(voluntary childless family)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한 가족이다.

조정문 외(2001)는 무자녀가족의 유형을 형성동기에 따라 자발적 무자녀가족과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으로 구분하고, 다시 무자녀 상태의 기간에 따라 일시적 무자녀가족과 항구적 무자녀가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한 경우와 무자녀를 고려중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한편, Perkinson(1983)은 무자녀가족을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심한 가족과 자녀를 갖는 것이 부부 고유의 삶의 양식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개인적 자유와 부부간의 친밀감을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비자발적 무자녀가족(involuntary childless family)은 신체적 혹은 생리적 이유로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2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의 부부가족으로 정의한다.

본 장에서는 불임상태가 아니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또는 출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부가족을 자발적 무자녀가족으로, 그리고 자연적 불임 상태이거나 의학적 요인에 의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 경제활동 참여, 직업, 준거단체 등의 지지 등이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무자녀로 인한 보상은 매우 크다. 교환이론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보상에는 첫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의 회피, 둘째, 직업 참여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보수의 증가, 셋째, 직업 활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인정 및 여가활동의 기회 증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김태현, 1993). 자녀양육 및 교육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보상은 여성들에게 더 큰 유인이 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파악되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에 대한 희망여부는 세대간 격차보다 성별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자녀가족의 증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자녀양육의 보람대신 주말과 휴일에 부부간의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보내거나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택하는 것이 자발적 무자녀가족이라면, 한국의 딩크족은 자발적 선택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근로조건 상, 여성이 출산 후에 원직으로의 복직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적 보육체계의 미흡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하면서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사정의 지속이 젊은 부부들에게 실리를 위한 출산의 연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중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할 대상은 노인가족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가족은 가족원 중에 노인이 포함된 형태로서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과거 3세대 직계가족 구조의 형태에서 핵가족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변화를 거치면서 노인독신 및 노인부부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가족은 무자녀가족과 마찬가지로 노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재한 가족형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치관, 가족부양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이들 가족형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노인단독가족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으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는데(김태현, 1999), 특히 배우자 및 친척, 비친척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이혜원, 1998). 한편, 노인부부가족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 및 다른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부부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기도 하고(최경석 외, 2003), 친척이나 비친척 중 누구와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를 의미하기도 한다(이혜원, 1998). 본 장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독가족과 노인부부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한부모가족의 현황에서 주목할 것은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한부모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이 된 형성원인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에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1995년도 7.4%, 그리고 2000년도에는 7.9%였다. 그러나 이들이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된 원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가출 또는 유기나 장기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는 1990년 25.5%에서 2000년에는 22.5%로 감소하였고,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도 같은 기간에 56.0%에서 44.7%로 감소하였으나, 이혼에 의한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8.9%에서 21.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 전체 한부모가구 중에서 남성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172,398가구)이었며, 2000년도에는 19.6%(219,997가구)로 증가하였다.

〈표 5-1〉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의 비율

(단위: 가구)

연도	총가구수	유배우[1]	사별	이혼	미혼	계	한부모가구 비율[2]
1990	11,354,540	226,731 (25.5)	497,867 (56.0)	78,861 (8.9)	85,394 (9.6)	888,853 (100.0)	7.8
1995	12,958,181	216,067 (22.5)	526,320 (54.8)	123,969 (12.9)	93,616 (9.8)	959,972 (100.0)	7.4
2000	14,311,807	252,917 (22.5)	502,284 (44.7)	245,987 (21.9)	122,666 (10.9)	1,123,854 (100.0)	7.9

주: 1) 한부모가구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는 배우자가 가출, 유기, 장기복역 등의 상태를 의미함.
2) 총가구수 대비 한부모가구수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지난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해체가족의 가족복지 욕구조사에서 나타난 한부모가족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체가족의 60.0%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40.0%는 이혼 및 별거, 가출 등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특히, 해체가족의 유형에 따라 발생원인은 상이한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족해체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가 67.5%로 가장 높았고,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24.4%였다. 한편, 이혼이나 별거, 가출에 의한 가족해체는 남성 한부모가족이 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 해체가족 50.0%, 1인 단독가구 35.9%, 여성 한부모가족 32.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한부모가족은 부인과의 이혼 또는 별거(가출)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반면, 여성 한부모가족은 남편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2〉 해체가족유형별 가족해체의 발생원인

(단위: %)

해체원인	남성 한부모 가족	여성 한부모 가족	1인 단독가구	기타	전체
사망	24.4	67.5	64.1	50.0	60.0
이혼·별거	75.6	32.5	35.9	50.0	40.0
계 (수)	100.0 (78)	100.0 (292)	100.0 (195)	100.0 (18)	100.0 (583)

자료: 김승권 외,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전술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혼인건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혼 건수만 보더라도 1975년 16,453건에서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집계한 조이혼율[주29]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0.4이던 것이 1985년 1.0을 상회하여 2000년에 2.5, 그리고 2003년에는 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곧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혼 시 주 양육자를 누구로 결정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여성 한부모가족에 편입되거나 남성 한부모가족에 편입되게 된다. 2003년 전체 이혼건수 167,096건 중에서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없었던 경우는 49,441건으로 전체 이혼건수의 29.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19만여 명의 아동이 한부모가족의 생활을 일정기간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하게 되는 실정이다.

한편, 미혼모가족의 발생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기인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혼모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이들의 낮은 교육수준 및 부적절한 성(性)지식, 낮은 자아정체감, 성(性)에 대한

주29)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이혼빈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로서 통상적으로 지난 1년간 발생된 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총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내는 이혼발생건수임. 단일 지표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나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함.

개방적인 태도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족 요인으로서 구조적 결손이나 가구의 낮은 소득수준, 그리고 성(性)에 대한 부모의 폐쇄적인 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향락산업의 팽창 및 산업화 요인,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 등에 의한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발생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족의 현황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는 미혼모가족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규모 및 발생추이를 요보호아동의 발생 건수, 미혼모 시설이나 모자시설의 미혼모 입소자료 및 국내·외 입양아동의 규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수는 199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0년 5,721명에서 2000년에 7,760명, 그리고 2001년에는 12,08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3). 요보호아동 중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이후 대체로 4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혼모 관련시설의 총 입소자 수는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3), 미혼모 관련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의 수는 1995년 2,402명에서 2000년에 3,620명, 그리고 2003년에는 6,081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입양아는 1990년대 이후 4천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990년: 4,609명, 2000년: 4,046명, 2003년: 4,059명).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미혼모가족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유교문화의 영향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미혼모가 발생하더라도 은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 자체가 미흡한 수준이며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하여 정확한 통계치를 알 수 없다.

미혼모가족에 대한 현황자료 만큼이나 무자녀가족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딩크족[주30]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30) 자발적 무자녀가족을 일컫는 일명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부부를 가리킴(네이버 뉴스, 2004).

동양권에서도 신세대 전문직 종사자 부부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딩크족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딩크족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딩크족의 가능성이 높은 부부만 사는 1세대 가족은 확실히 증가추세에 있다.주3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부부 1세대로만 구성된 부부가구는 1970년의 5.4%에서 1980년 6.4%, 1990년 9.3%, 2000년에는 14.8%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03). 가구주 연령을 30～40대로 한정하여 부부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은데, 가구주 연령을 30～40대로 한정하는 것은 이 시기가 일반적으로 미성년 또는 출가 전 자녀를 두고 있는 시기로써 맞벌이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분리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무자녀부부가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그 정확한 수치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선택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무자녀부부가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5-3〉 30～40대 가구주 연령별 부부가구의 수

(단위: 가구)

연령	1985	1990	1995	2000
30～34세	72,249	119,076	155,552	180,144
35～39세	26,347	36,297	66,224	75,132
40～44세	16,266	21,973	39,772	62,460
45～49세	24,537	29,105	52.,696	83,69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또한,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만 관련 조사자료 등을 통해 유추해 보면 전체 부부 7쌍 중 1쌍은 불임으로

주31)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이후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딩크족을 강요하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여성의 약 82%, 남성의 약 70%가 딩크족이 되기를 희망함. 이는 1997년 이전보다 남성은 3배 이상, 여성은 20% 정도 증가한 수치임. 이들 대부분이 주택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자녀를 갖겠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변화가 경제난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음(http://kin.naver.com).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나미 외, 2003). 2000년 전국 표본조사 자료에서 추출된 15~44세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미피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불임경험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3.2%가 불임의 원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배우자와 첫 동거를 시작한 후 미피임기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임신하지 않은 불임발생률은 13.5%였고, 미피임기간이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는 11.3%, 그리고 임신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유산된 경우는 3.3%였다. 따라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나 임신 가능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불임여성은 약 14.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가족이나 무자녀가족에 비하면 노인가족의 현황은 명백하게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3.3%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0년 5.0%,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4). 이들 노인인구의 가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2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가구 중 노인부부가족은 29.1%, 노인단독가족은 13.8%로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노인가족이 전체의 42.9%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2001).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주의 비율은 1990년 44.5%에서 2000년에는 51.8%로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의 부모인 경우는 같은 기간에 38.4%에서 27.3%로 감소하였다(박경숙, 2002).

［그림 5-1］ 우리나라 노인의 가족형태

(단위: %)

전체노인 100.0%	노인부부 가족 29.1%	노인단독 가족 13.8%	자녀동거 노인가족(45.1%)				기타 가족(12.0%)					
			노인+자녀(기혼·미혼)	노인+자녀+양친(한부모)	노인+자녀+부부형 형제 자매	기타 가족	노인+양친(편부모)	노인+형제 자매	노인+친척	조부모+손자녀	노인+비혈연	기타
			18.9%	18.0%	0.02%	8.2%	4.0%	0.05%	0.3%	1.4%	0.4%	5.8%

주: 전체노인수는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3,346,821명을 말하는 것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고령자편』, 2000.

2. 문제점

다양한 가족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는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도 발견되는데, Hook과 Paolucci(1970)의 고전적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로서 가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한편, 삶의 질과 의미를 추구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사회환경에 의존하는 생명지원체계로 정의하였다(김명자 외, 2002 재인용).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을 접근하게 되면 가족이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자원의 변형과 가족의 목표 및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과정전반이 가족생활의 질에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태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가족자원, 가족과정(family process),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환경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적 만족상태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족자원의 문제

가족자원은 물질적,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욕구충족과 환경변화 및 각종 생활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방식 전체를 의미하고, 가족과정은 이러한 자원의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활동과정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그 결과로서 삶의 질은 가족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가치관의 실현을 통해 개인적 수준에서 느끼는 행복감 또는 불행감, 안정 또는 불안정, 만족 또는 불만족 등의 주관적 상태이다. 정리하자면 가족을 둘러싼 외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중에 모든 가족은 부적절한 자원과 가족과정 상의 오류, 이로인한 만족 또는 불만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자원의 문제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빈곤의 문제이다.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불충분상태가 아니라 가족역동성 측면에서 복잡한 가족문제를 야기한다. 즉,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해 가족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생업과 가사, 가족원의 보호와 같은 역할과중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도피하기 위하여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의 경우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교육여건으로 교육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차단되면서 결국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구인회, 2003).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남성 한부모가족보다는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7.1%를 차지하며, 그 중 81.6%가 여성 한부모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도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강기정 외, 2002). 빈곤이 특정 성(性)이나 인구집단과 연결이 고착화되어 나타나면서, 여성 가구주 가정의 빈곤화가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부장적 전통에 기반한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가구의 주소득원인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모의 취업에 따르는 가족보호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은 부의 상실에 따르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로 하여금 소득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전문적 기술습득이 없이 가정생활을 하던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저임금, 서비스 영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녀가 어린경우 모의 취업이 이루어지면서 자녀양육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혼모가족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혼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미혼모의 인적자원 및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모가족의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등으로 나타났다(이시백 외, 2002). 실제로 미혼모가족 중에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33.3%에 불과하였으며, 상당수는 정부지원금과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들의 지원수준은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실(2002)의 연구에서도 미혼모가족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비율이 73.6%이었고, 특히 50만원 이하인 비율도 41.2%나 되어 많은 미혼모가족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5-4〉 양육 미혼모의 월수입

(단위: 명, %)

수입	수	비율
50만원 이하	14	41.2
50~100만원 이하	11	32.4
100~150만원 이하	8	23.5
150만원 이상	1	2.9
계	34	100.0

자료: 강영실, 『미혼양육모의 현황-시설 입소 미혼양육모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중심으로』, 2002.

한편, 미혼모의 55.8%가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취업중인 경우가 44.2%나 되어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취업중인 미혼모가 취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자녀의 보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기술교육 또는 학업중이어서, 그리고 자녀양육부담 등이었다. 한편, 양육 미혼모의 직업유형 또한 재활센터 공동작업장에서 수공업을 하는 경우, 텔레마케터, 미싱사, 신문배달, 간호조무사, 미용사, 생활설계사, 식당서빙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불안정한 직업으로 나타나서 안정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강영실, 2002).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하여 만성적 질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창엽, 2000), 이는 빈곤이 건강상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생활관리 등이 이환율을 높이고, 이들의 만성질병은 현실적으로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여 결국 가족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빈곤가족은 가구성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자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의료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원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다(최경석 외, 2003). 미혼모가족 또한 미혼자로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지지망이 확보되지 못하여 출산 후 적절한 회복기를 거치지 못하고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는 노인가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노인가족의 생활상의 주요 문제는 대체로 경제적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이다(이가옥 외, 1994; 정경희 외, 1998; 변화순 외, 2000). 노인가족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주거소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생활비 충당방법 등을 중심

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부부가족의 자가소유율은 84.4%로 전체 노인가족의 76.8%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주택소유율이 낮아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부부가족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노인독신가족의 자가소유율은 61.5%로 전체 노인가족 뿐 아니라, 노인부부가족에 비해 훨씬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였다. 특히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족은 가장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여 주거상의 불안정과 경제상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표 5-5〉 노인가구 형태별 자가소유율

(단위: %)

지역	전체	노인 부부	노인단독	자녀동거 및 기타
전국	76.8	84.4	61.5	80.8
동부	69.6	75.6	46.3	76.0
읍·면부	89.5	94.5	82.3	90.9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87 재구성.

노인부부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60만원 미만인 비율이 71.0%이었고, 그중 20만원 미만인 비율은 10.3%로, 전체 노인가족 중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45.4%와 20만원 미만인 경우 13.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노인단독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60만원 미만인 비율이 89.9%, 그 중 20만원 미만은 44.4%의 비율을 보여서, 전체 노인가족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노인부부가족보다도 낮아서 심각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가족의 상당수가 낮은 가구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요요인은 이들이 뚜렷한 수입원이 없이 자녀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대부분이 자녀 등에 의존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생활정도는 전체 노인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노인단독가족의 경우에도 주요 생활비 충당방법은 가족원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가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단독가족이 주관적

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전체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부부가족보다 훨씬 낮았다.

〈표 5-6〉 노인가구 형태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지역	전체	노인 부부	노인단독	자녀동거 및 기타
소득 없음	0.3	-	0.8	0.3
20만원 미만	45.1	71.0	89.1	16.9
60만원 미만	13.0	10.3	44.4	2.7
100만원 미만	16.8	15.7	6.3	20.7
200만원 미만	26.1	10.7	3.0	41.6
300만원 미만	7.9	2.2	0.1	13.8
300만원 이상	3.9	0.3	0.7	6.7
계(수)	100.0(1,933)	10000(423)	100.0(388)	100.0(1,122)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재구성.

그러나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정경희 외(1998)의 연구결과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불편과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에 갈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있어 동반서비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단독가족의 건강생활은 여러 선행연구(황진수, 1999; 전성남, 1999; 변화순 외, 2001)에서 나타났듯이 노인부부가족에 비해 홀로 사는 노인단독가족의 신체질환비율이 높으며,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 상태로 인한 빈번한 우울이나 외로움 등으로 노인단독가족의 정신건강은 노인부부가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순 외(2001)의 연구에서는 50% 이상의 노인단독가족이 2~3개 이상의 중복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65%의 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파악되

었는데 건강여건과 삶의 질 문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는 노인의 고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서의 문제

가족과정은 가족체계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는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과정에 대한 분석의 단위는 매우 다양한데, 본 고에서는 주로 가족규칙을 통한 역할분담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원 전체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부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가족원 모두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던 종전과는 달리 부 또는 모의 부재에 따르는 역할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방치하게 되어,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소홀해지고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약화되면서 가출이나 비행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성연, 2004).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부 또는 모의 부재에 따라 동일시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겪는 발달장애 또는 학습결핍 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특히, 맏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자녀로서의 역할 외에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받으면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송성자, 2001).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구주는 기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중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모에 의해서 대부분 관리되었던 가사노동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을 경우에는 역할의 혼선으로 인한 당혹

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족기능 수행에 있어서 자신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미혼모가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족을 포함한 미혼부 및 친구 등도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경우 관계가 악화되거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모가 자녀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미혼모의 주변인들은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데 소극적 자세를 보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의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미혼모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강영실, 2002).

그러나 송현애 외(2002)의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던 미혼모의 상당수가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미혼부와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퇴소 후에도 원가족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어, 미혼모가족과 원가족간의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자녀가족에게서도 발견된다. 특히, 비자발적 무자녀가족 중에서 불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불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부부관계,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소희 외, 1998). 이는 불임여성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지지를 받기보다는 가족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를 희망하는 남편이나 시댁식구와의 마찰은 불임여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부부갈등 및 고부갈등과 같은 가족관계상의 갈등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이연호, 1995).

한편, 노인단독가족이나 노인부부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의 결핍 등으로 가족관계 및 가족과정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의 부양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기때문에 자녀의 부양의식과 본인의 부양기대간의 편차가 클 때 더 큰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김태현 외, 1997).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노인가족에게 사회적 지지

망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이를 통하여 교제와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체로 노인부부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은 전체 노인가족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노인부부가족의 자녀 및 형제자매와의 연락빈도는 높은 편이며,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는 보통인 편이었다. 이에 비하여 노인단독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및 형제자매와의 연락빈도는 낮았고, 친구나 이웃 등과의 접촉빈도는 보통이었다. 즉, 이들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역시 주로 자녀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집중되어 있고, 친구나 이웃등과의 접촉은 노인부부가족에 비하여 높았다. 그럼에도 실제로 노인이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없다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접촉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경희, 1998).

다. 정서적 문제와 삶의 질

삶의 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가치관의 실현정도에 대한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인 안녕의 상태로서 가족이 순기능을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역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적응상태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원만하게 수행되었을 때, 정서적 만족감이 높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것이다.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앞서 살펴본 가족자원의 한계와 가족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 기대와 현실의 편차 등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변화된 가족생활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절망감, 상실감, 소외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나타낸다(김경신, 2002). 특히 배우자와의 별거 또는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을 형성한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높고 걱정이 많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삶의 질 자체를 낮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용·조병은, 1996). 또한 사별에 의한 경우,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기 어렵게 하고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세권·조애저·허미영, 1995).

한편, 미혼모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가정, 동료,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과 부정적 인식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죄책감, 두려움, 배반 등의 정서적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낮은 자아정체감을 갖기도 한다. 절망적이고 열등의식에 빠진 미혼모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나아가 왜곡된 남성상을 갖기도 한다(유계숙 외, 2002).

노인은 대체로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소외와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과거에 대한 회한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불면증, 체중감소, 감정적 무감각, 강박관념, 증오심 등의 구체적인 증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장인협 외, 1996).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자살규모를 보면, 60~69세의 경우 2001년 992명에서 2003년에는 1,73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70~79세의 경우에도 2001년 673명에서 2003년에는 1,202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3).

가족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이가옥 외, 2000), 일부 노인단독가족은 성인자녀와 일정한 기간과 거리를 두고 상호접촉을 함으로써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금룡, 2001).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가족은 성인자녀에 대한 서운함, 소외감,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고 주요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아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노인단독가족이나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주변의 관심이나 원조자가 없는 경우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제 3 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부모가족과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및 노인가족에 대한 주요 외국의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자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족자원의 결핍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가족문제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외국의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구국가에서는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고, 미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계층이라는 인식은 드물다. 다만, 가족구조적으로 자원획득의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자녀가족 중 비자발적무자녀가족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가족에게는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가. 한부모가족

미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는 혼외출산에 따른 자녀양육과 이혼, 별거, 사별 또는 투옥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원인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이다. 빈곤 한부모가족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학업부진 및 부적응은 빈곤의 세습으로 연결되어 연방정부의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동의 연령이 16세에 이르러 생물학적 부모 모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1970년대에는 약 25%의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50% 수준을 육박하였다. 또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전체 아동의 5% 정도만이 부 또는 모의 사망에 의한 가족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39%의 아동은 이혼이나 혼외출산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특징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서 이혼을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인식하여 이혼 후 형성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일반적인 빈곤문제에 편입하여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고 가족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아동부양가족지원제도(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였으나, 1996년 사회복지개혁(Welfare Reform) 이후 일생에서 사회복지 수혜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한시적가족지원제도(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바뀌었다. 동 제도를 통해 생애 전 기간 중에 TANF를 통한 지원금 수급이 5년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자녀부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노동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한 가족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수준이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부양 아동의 수에 기초하여 세금을 환불해 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가족규모와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따라 소득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빈곤가정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권(Food Stamp)을 발행하고, 무주택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월세지원과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부담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빈곤으로 인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에게 의료 및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한부모가족의 규모는 1976년 75만에서 1996년에는 160만으로 2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들 가족이 부양하는 아동 수는 같은 기간에 130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의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주요요인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혼율의 증가영향을 많이 받았다. 1971년 이혼, 별거, 사별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이 각각 전체 가족의 30%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도에는 사별로 인한 경우는 5%에 불과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3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공적지원을 축소하고 사적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법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부가 자녀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노동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부모 스스로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소득보장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도 소득보장급여 중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모급여(single mother benefits) 수급인구는 89만 5천명에 달하였으며 사별여성 수급인구는 34만명 수준이었다. 한편 영국의 소득보장 체계를 갹출부문, 비갹출부문, 그리고 자산조사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때, 갹출부분은 국민연금 중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에 사별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별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부모급여 이외에 근로가족세금보전급여(Working Family Tax Credit), 질병급여, 장애인급여, 가족수당보충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통해서 소득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가족세금보전급여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즉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세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가구소득을 보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자산조사 급여에는 주택급여가 있는데, 한부모가족에게는 가산금이 지급되며, 지역사회부담급여의 경우 개인의 지역사회부담청구서를 한

부모가족에게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2년 한부모가족 발생원인은 배우자의 사망이 85%를 차지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발생이 1994년에는 73.2%로 급증하였다(일본후생성, 2000).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자금 대부제도 및 모자상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내에 편익시설 우선설치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모자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을 위한 아동부양수당제도와 자립지원을 위한 대부제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사유가 이혼이던 사별이던 관계없이 한부모가정 중에서 남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다양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모자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남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경우 남성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가사와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현숙, 2002).

1996년부터 실시된 남성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은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남성 한부모가정에 파견하여 자녀교육과 생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교환 및 정서적 상담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는 양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녀가 아픈 경우에는 야간양호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육성수당이라하여 남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세 및 주민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 미혼모가족

미국에서는 개방사회 특유의 성개방풍조의 영향으로 십대 청소년들이 잦은 혼전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10대 미혼모의 증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미국 모자가족의 비율은 14%로 비교적 모자가족 비율이 높은 프랑스(13%), 스웨덴과 영국(10%) 보다도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혼모 1,000명 중 97명이 15~19세까지 청소년 미혼모이며, 매년 100만 명의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혜택은 노동참여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때문에 기본적인 수혜자격이 기여도의 개념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 내에 있는 여성과 사별한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 대신에, 미혼모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다. 1996년 복지개혁(Welfare Reform)을 통하여 미혼모가족에게 복지수혜 기간을 제한하는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빈곤가족 한시부조정책은 한부모가정의 지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지수혜자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7년 등록된 10대 출산여성 41,500명 중에서 미혼모 수는 37,000명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출산여성의 90%가 미혼 상태였다. 그 중 12,000명은 파트너와 동거상태인 반면 25,000명은 파트너 없이 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시백 외, 2002 재인용). 영국의 미혼모가족은 전업 양육자로 집에 있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및 다른 유럽국가의 미혼모가족에 비해 임금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모자가족이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영란 외, 2001).

영국의 미혼모가족은 전업 양육자로 집에 있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및 다른 유럽국가의 미혼모가족에 비해 임금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모자가족이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영란 외, 2001). 미혼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여는 16세 미만(학생인 경우 19세 미만, 직업교육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급된다. 그리고 미혼부가 아동부양자로서 소득보조나 구직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아동부양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수준은 이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구직수당의 형태로 미혼모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전일제 노동 참여 후 소득보조나 수입에 기반하여 구직수당을 2주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26주 이상 소득보조나 수입기반 구직수당을 수급 받고, 5주 이상의 전일제 직업을 구한 미혼모가족이다. 아울러, 확실한 출발(SureStart Plus) 모성보조금을 지원하며, 그 대상은 19세 미만의 임신부나 출산여성으로서 본인이나 파트너가 소득보조나 수입기반의 구직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장애인 세금면제 및 일하는 가족 세금면제를 받은 자로 출산이나 입양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최근에는 국가적인 보육전략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을 실시하여 미혼모가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통상 혼인여부에 따라 가족을 구분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있다. 즉 동거, 기혼 독신모, 미혼모 등이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미혼모가족에 대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별도의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 또는 모의 자격에 기초하여 양육보조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하고, 미혼모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근거로 소득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취업중인 미혼모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대부분 보육비도 감면받는다.

캐나다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특징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7세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면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8세 이후에도 취학 중인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미혼모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그들만을 위한 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하여 미혼모의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미혼모가 자녀의 성을 친부를 따를 경

우에 미혼부는 자녀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나 여권이 취소되거나 벌금, 혹은 구속의 형벌이 따른다. 하지만 미혼부가 양육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혼모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 무자녀가족

정책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파악이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 통계청(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자발적 무자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일반기혼여성의 무자녀율(General Marital Childlessness Rate)은 13%이며 호주의 무자녀율은 약 24%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 정도이고, 미국의 경우 이보다 좀더 높은 22%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무자녀여성일 경우라도 가임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자녀율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무자녀가족에 대한 국가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비교가 어려운데, 이는 개별 국가에서 무자녀가족 또는 무자녀여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임여성의 연령의 15~44세로 보았을 때, 45~49세 연령의 여성 중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여성인구 규모를 파악한 인구센서스 자료는 현재의 무자녀가족의 출현현상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하지 못하지만 국가별로 전반적인 무자녀율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국가의 45~49세 여성의 무자녀율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무자녀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7〉 주요국가 45~49세 여성의 무자녀 비율

(단위: %)

국가	무자녀 비율	국가	무자녀 비율
그리스	3.7	벨기에	11.0
이태리	5.7	뉴질랜드	13.4
네덜란드	8.8	베트남	15.4
인도	9.9	말레이시아	17.8
호주	10.6	필리핀	22.4
영국	10.9	미국	24.1

자료: http://www.abs.gov.au/Ausstats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의 대표적인 이유로서 신체적, 생리적인 이유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불임에 기인하고 있는데, 불임가족 중에서 불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임진단을 받거나 불임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였다(U.S. Census, 2000). 불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여성이나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이 불임치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 부담주32)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임의 원인에 따라 진단 및 치료비용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불임치료가 일회 시술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시간과 경제력을 요구하며, 의료보험의 혜택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불임치료에 대하여 보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주는 15개 주에 불과하며, 보험의 적용범위는 주(州)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임진단 검사, 불임치료를 위한 약물치료, 그리고 수술 등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하고 있고, 코네티컷 주에서도 불임관련 포괄적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규정하고 있어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시험관 아기시술

주32) 대표적인 불임치료로서 호르몬치료(hormone therapy)의 경우 미국에서는 약 $200~$3,000까지 소요되며, 수정관수술(tubal surgery)의 경우 최소 $10,000~$18,000정도 필요함. 또한 시험관 아기나 체외수정과 같은 재생산지원시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을 이용할 경우 1회 비용이 $10,000~$18,000 정도임.

까지 급여하도록 하고 있다(표 5-8 참조).

한편, 일본에서는 불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이 전국적으로 1만쌍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해 일본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불임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카구치 자카라(坂口力) 후생노동성은 나가노(長野)현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자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불임치료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보육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일본 출산율 제고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시술을 하는데 수 만엔에서 수 십만엔의 비용이 드는 등 불임 부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5-8〉 미국의 불임치료 관련 의료보험 급여적용 실태

(단위: %)

주(州)	불임지원 법제화	보험지급 의무규정 유무	인공수정 보험급여 유무	불임치료, 인공수정 제외	인공수정만 지급
알칸사	1987년	유			지급
캘리포니아	1989년	무		지급	
코네티컷	1989년	무	지급		
하와이	1987년	유			지급
일리노이	1991년	유	지급		
루이지에나	2001년	무		지급	
메사츄세츠	1985년	유			지급
메릴랜드	1987년	유	지급		
몬타나	1987년	유			
뉴저지	2001년	유	지급		
뉴욕	2002년	무	지급		
오하이오	1991년	무			
로드아일랜드	1989년	유	지급		
텍사스	1987년	유			지급
서 버지니아	2001년	무			

자료: http://resolve.org/main/national/advocacy/insurance/facts/history.html

라. 노인가족

미국의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은 Medicare라는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험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동 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65세의 생일을 보내기 전에 가입에 관한 연락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하여야만 한다. Medicare에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인 2종류의 보험급여가 있다. 병원의료 보험은 입원치료비, 퇴원후의 계속 치료비, 퇴원 후의 가정 요양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로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시켜 납입하였으므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어진다.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 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Medicaid라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부조 프로그램은 공적부조의 대상자만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는 등 지급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보충 보장소득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의 수급권자가 된다. Medicaid에 의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요양원에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령보험, 의료보험,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사회적 서비스 등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을 '민간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에 대한 역할을 강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또한 일고 있다.[주33)]

독일에서 노인가족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이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갹출금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독일 연금제도는 고령노인을 위한 보호기간의 신용제도(care credit)가 있는데, 노인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주33) 미국 역시 그간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자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여성은 더 이상 노인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족에 대해 비공식적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연금갹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호제공자에게 노인들을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시민의무(civilldienst)라는 제도가 있는데, 동 제도를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가족과정에서의 문제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 상의 문제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는 교육제도권 안에서 미혼모 여성들에 대한 특수 교과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을 위한 개별학습(individual studies)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다. 동 개별학습 과정에선 학생들은 미혼모가족으로서 필요한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은 물론 양육, 건강문제, 요리, 상담, 미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그리고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가족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비제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정부차원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종교 및 기타 민간기관들이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 또는 불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에게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요보호 십대 미혼모들을 위해서는 주거 및 의료시설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예상치 않은 임신으로 불안정한 미혼모들에게 숙식과 의료서비스,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입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십대 임산부를 위해서는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가족의 가족부양 및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른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그리고 무자녀가족의 가족과정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

원이 비제도권 하에서 민간서비스 차원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과 대비되는 현실이다. 노인가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특징은 주로 재가보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정서적 만족까지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노인상위국가로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인구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면서 '노후는 자기집에서'라는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을 위한 재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서비스(Social Work Service)와 가정원조 서비스(Home Help Service)가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들은 건강하고 완전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에 입소해야하는 노인과의 중간상태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모두가 대상이 된다.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정도, 친인척 등의 원조상태, 주거상황 등을 검토하여 봉사내용과 봉사의 회수 등이 결정된다. 한편, 가정원조사[주34]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사(청소, 식사준비, 난방 및 연료 준비, 침상정돈, 쇼핑 등), 대인적 원조(세탁 및 목욕 원조, 의복을 입고 벗는 데에 대한 원조, 위생유지 등), 사회적 원조(연금의 수령, 처방약의 수령 등), 훈련적 역할(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 또한 가정원조 서비스는 가정간호, 순회보건 서비스, 가사보조 서비스, 야간간병, 세탁서비스, 환자의 보호와 사후보호 등과 같이 노인들이 수용시설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신의 집에서 독립하여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가 많으며, 이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시설보호에 드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밖에도 식사서비스, 주간보호 센터(Day Care Centre), 의료방문 서비스, 전화기 및 경보장치 설치, 대중교통수단 제공,

---

주34) 가정원조서비스의 종사자는 지방당국의 사회서비스부에 고용되고, 그 고용상태는 파트타임이 많으며, 대부분이 중년의 기혼여성임.

휴식보호 서비스, 간호인 보호그룹, 가족채용제도 등이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제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부모 동거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노부모 부양수당 지급, 가족 간호휴가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부양을 하는 가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요양시설의 입소를 예방하거나 입소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한 가족부양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 친인척부양자 현금급여라는 것이 있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부터 친인척까지 최고 30일에 대한 유급휴직을 질병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한편, 가정봉사원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정착되었는데, 가정봉사는 간호보조사에 의해서 가정 내 원조 및 사회적 원조와 의료봉사활동이 제공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가정일에서 쇼핑, 청소, 요리, 식탁, 위생유지활동 등이 포함되고, 의료봉사활동에는 의약품제공, 간단한 상처치료 등이 제공된다. 이런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다양한 주거시설과 합병되어 있거나 독립된 단위로 있는 주간센터에서 1980년대 말부터 80세 이상 주거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 의료적 진료를 위해서 가정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Home Health Care) 제도가 있다.

일본의 재가노인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과 치매성 노인 및 허약한 노인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는 가사원조서비스로 가정봉사원, 급식, 목욕, 세탁, 모포의 건조, 물건구입, 보행원조, 잡일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적 서비스로서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과 식생활 및 주생활의 개선 등 예방적 활동을 들 수 있으며, 복지증진 서비스에는 노인클럽활동, 고령자학급 외에 고령자의 능력이나 취미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여가, 여행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거나, 교양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가보호서비스는 시정촌이 실시주체가 되어 노쇠와 심신의 장애 및 상병 등을 위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신체의 수발, 상담, 조언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 4 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1. 가족자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또한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득보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이 갖는 복합적인 욕구, 특히 가족자원의 결핍 또는 자원획득 과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 내에서의 사별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에 한하여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피보험자와 그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다른 한쪽이 소득이 있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남편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부인도 60세 이전이라면 맞벌이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유족연금을 받는다. 또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 의

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인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김미숙 외, 2000).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대책의 일환으로 급작스러운 위기상태에 처한 가족에게 즉각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제공하는 한시적 정책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뉴스, 2004).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구호대책은 지원대상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부의 위기개입을 표방하고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모두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중에서 모부자복지법[주35]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표 5-9>와 같다. 특히 지난 2002년 종전의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남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가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9〉 가구원수별 모부자복지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건,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소득인정액	84만원 이하	111만원 이하	138만원 이하	156만원 이하	176만원 이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0만원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도 모부자복지사업 안내』, 2004.

주35)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내용은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우대조치,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모·부자상담 등의 현물급여와 대민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음. 또한 거처가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의 일시적 보호를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우대조치,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모·부자상담 등의 현물급여와 대민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거처가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의 일시적 보호를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지원이 기초보장생계급여에 대한 부가급여가 아니다.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가 기초보장의 생계급여와 병행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지원수준이 낮고 극히 잔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곧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나. 미혼모가족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함께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사업 등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 언급되었던 모부자복지법만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족은 각종 복지급여 및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고, 직업훈련실시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거가 불안정한 미혼모가족은 여성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설보호서비스는 이미 미혼모가 된 여성

이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다. 시설유형에는 미혼모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중간의 집 및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등이 포함된다.

미혼모보호시설은 미혼모의 안전한 분만 및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로 전국에 10개 시설이 설치·운영중이며, 2003년에는 1,940명이 입소하였다. 입소대상자는 임산부 및 출산후(6월 미만)일지라도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를 위하여 중간의 집을 설치하여 미혼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국에는 5개소의 중간의 집이 운영 중이며, 현재 50여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중간의 집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인 때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무료 숙식제공, 직업교육, 양육교육 등이다.

다. 무자녀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은 최근에 출현한 현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불임으로 인한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6월부터 건강보험에서 불임치료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용범위는 불임진단이 내려진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와 무배란성 여성불임증 치료에 이용되는 퍼고날(pergonal)을 1주기당 최고 18 앰플까지 인정하여 총 3주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임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테면 자궁내막증의 확인 및 치료를 위한 진단적 복강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며,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 또한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난관인자를 제외하고 무배란만을 급

여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나, 일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구용 배란유도제를 제외하고 이차로 사용하는 퍼고날(pergonal) 주사제만 보험급여를 하는 등, 불임치료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나미 외, 2003).

라. 노인가족

노인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노인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소득지원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의료지원, 그리고 주거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소득지원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경로우대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생활이 빈곤한 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약 35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7%에 불과하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31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8%에 불과하다. 즉, 65세 이상 노인가족 중에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의 수급자를 합쳐도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주36]는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약 67만 가구로 수급자수는 약 130만 명에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4.1%로(남자노인은 6.1%,

---

주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단순 보호차원의 시혜적인 생활보호제도를 벗어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동시에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

여자노인은 17.9%) 나타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일부 노인만이 소득보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로연금제도는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요보호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에 노령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령계층에 대한 보완적인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혼합하여 1998년 7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인구는 2002년 현재 약 62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6.3% 수준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는 58%, 저소득층 노인은 42%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경로연금제도의 성격이 분명치 않아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즉, 연금과 수당 또는 보충적 급여 중 어느 것의 성격인지 분명치 않고, 급여액 역시 너무 적어서 이를 받는 수혜자가 경로연금 자체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급여수준이 획일적이어서 연령차만으로 차등급여를 하고 있어 노인 개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액도 3~5만원정도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기초보장에 대한 보완적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간접적 소득지원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부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보호 대책으로 노인들의 용돈지출을 다소나마 줄임으로써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65세 노인에 대해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노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식당, 미용실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며, 이외에 보건소 이용혜택, 주택자금의 할증지원, 노부모봉양수당 등이 있다.

직·간접적인 소득보장 이외에도 노인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주37]이 이용될 수 있는데, 노인인구의 만성질환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빈약하다. 즉, 건강보험급여는 총진

주37)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1979년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1988년 농어촌 지역 및 자영자, 1989년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도입 후 12년 만에 실시하게 됨.

료비의 약 51% 수준만을 지급하여 본인부담률이 높고, 노인질환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만성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액의 진료에 대해 상한성과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서 경제적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진료비 부담 완화방안으로 본인부담금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비급여부분을 포함하지 않아 고액진료비가 발생하여도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보장을 통하여 병·의원의 개인부담은 완화되고 있으나, 안과나 치과계통의 노인보호에 필요한 안경, 의치 등의 보장구는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질환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인데 비하여 의료보장에서는 동일상병에 대한 장기급여를 금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제도는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로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여 노인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노인복지를 도모하고자 1983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이 노인무료 건강진단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통보 및 후속치료 등 사후관리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무료 건강진단제도의 활성화와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후 진료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2. 가족과정에서의 문제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외국의 사례에서도 검토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과정 상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서비스 및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다양하지 못하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상담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가족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모·부자복지시설 및 미혼모 시설의 이용안내 및 연계, 그리고 이들 가정의 요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과 미혼모가족복지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는 전국 83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37개소의 간이여성복지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복지상담소에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시설입소, 직업교육, 귀가, 법률·의료보호,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여성회관이나 시·군·구청 등 구내건물 등에 위치하고 있어 미혼모들의 접근이 어렵고, 여성복지상담원들이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에 대한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모가족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른 가족유형에 비하여 노인가족에 대한 가족과정 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되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선진국에 비해 건강관리 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는 거의 기능을 못하고 말벗, 취사, 세탁 등이 주된 서비스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토록 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신체적 기능훈련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다.

제 5 절 시사점

지금까지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가운데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그리고 노인가족의 개념 및 특성,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의 사회

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가족이 현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보다 다양한 구조를 가진 가족의 출현이 예측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혼율의 증가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개방적 성문화의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로 미혼모가족 또한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관, 자녀관 등의 변화에 따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대적 가치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대적 가치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녀의 필요성 또한 점차 약화되어 결혼 후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질 때 까지 또는 특정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출산을 연기하기도 한다. 또한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무자녀가족으로 남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에서 보다 두드러져 향후 무자녀가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가구형태가 자녀동거에서 노인부부가족과 노인단독가족의 형태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2010년에는 33.6%까지, 그리고 2020년에는 40.5%까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가족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가족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적응하고 생활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다양한 가족 모두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자원의 부족과 역할부담 및 역할갈등, 그리고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구조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낮다. 특히,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은 지난 수년간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외에 이들 가족의 가족생활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각종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정책은 다양한 가족의 복잡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하여 남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한부모가족이 갖지 않는 특수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에서 분명히 논의되어야 할 점이다.

한편, 민법 내 호적법은 법으로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가족들은 비정상가족이 되어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미혼모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에서 탈피하여 발생 배경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책임과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경우에도 본인의 삶에 대한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자녀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무자녀가족에게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자발적인 무자녀가족을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개인,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가족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를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노인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통 받을 위험이 있는 모든 구조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위하여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복지를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제 6 장 가족원 특성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제 1 절 개념 및 특성

1. 가족원 특성과 다양한 가족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중요한 변화현상으로는 가족구조의 다양성,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과 가치관의 변화 등과 관련이 깊다. 특히 산업화·도시화 및 서구화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 및 가족중심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적, 다양한 가족생활을 선택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남녀평등 사상의 변화, 가족 중심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세대간 연대의 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가치관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는 근대적 의미의 가족이 중요시하는 친밀성 및 개인성 존중에 입각한 가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핵가족의 역기능적인 현상에 의해 수동적인 방식으로 모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특성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점차 기존의 혈연중심, 동일 민족중심의 협의적 의미[주38)][주39)]에서 점차 입양이나 기타인 비혈연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주40)]. 이

러한 광의의 가족개념은 가족을 전통적인 혼인, 혈연 및 입양 외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기타 관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혈연이나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롯하여 동일 언어 및 문화 등을 벗어나서 다른 혈연이나 성씨, 다른 국적 등을 가진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과 새롭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형태와는 전혀 다른 가족형태로서 구성된 가족원의 특성 및 결합원리 등이 독특한 모형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족구성원의 특성상 전형적인 동일 혈연중심, 동일 성씨 중심, 동일 국적 중심, 출산중심의 개념을 벗어나 비전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원의 특성에 의한 가족범위의 확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의 범주로 수용될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개인적 삶 또는 가족생활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2. 개념 및 특성

전형적인 동질적 특성을 가진 가족원의 특성을 벗어나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유형에는 재혼이나, 입양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거나 이질적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재혼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국제결혼가족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가족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혼가족의 개념은 한 명 이상이 초혼이 아닌 성인남녀의 재결합을 의미한

주38) 가족은 친애의 정으로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의 집단으로 한집에 거주하며 의식 기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을 말함(김두헌, 1986).

주39) 가족은 주거를 공히 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집단임(Murdock, 1949).

주40)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영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으로서 반드시 동거하는데 한정되는 것은 아님(이효재, 1993).

다. 이와 동의어로 의붓가족 및 계부모가족주41)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부모가 아닌 부모와 아동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 재혼은 이혼자의 재혼이 많고 유자녀 이혼이 압도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재혼가족의 대부분은 의붓가족이다(장혜경·민가영, 2001).

또한 재혼가족이란 부부 중 한사람 혹은 둘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그로인한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재혼 후에 형성된, 함께 살거나 방문하는 전혼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혼 한 경우와 함께 자녀의 문제를 가족 구조에 포함시킨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주42)

재혼가족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Clingempeel, Brand와 Segal(1987)은 재혼한 부부 각각의 전혼 자녀의 유무와 양육권 유무를 기준으로 재혼가족을 분류하였는데 <표 6-1>과 같다.

〈표 6-1〉 재혼가족의 9가지 유형

부인의전혼자녀유무 / 남편의전혼자녀유무			부인의 전혼자녀 유무		
			전혼자녀없음	전혼자녀 있음	
				양육권없음	양육권 있음
남편의 전혼 자녀 유무	전혼자녀없음		무자녀재혼가족	비동거계부모가족	동거계부가족
	전혼자녀 있음	양육권없음	비동거계모가족	비동거계부모가족	혼합계부형 계부모가족
		양육권있음	동거계모가족	혼합계부모형 계부모가족	동거계부모가족

자료: Clingempeel, Brand & Segal, A multilevel-multivariable developmental perspective for future research on stepfamilies, In Pasley, K.&Ihinger-allman, M(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1987.

주41) 인위적인 가족의 해체가 전제되지 않았던 재혼가족은 오늘날 그 의미가 최소한 부부 중 한명이 계(繼)부모인 가족으로 확대됨.

주42) 오늘날 가장 복잡한 가족체계 가운데 하나인 재혼가족을 다른 말로는 '재구성가족(reconstituted family, reconstructed family)', '혼합가족(blended family)', '두개의 핵가족(binuclear family)'으로 부르기도 함. 일반적으로 이는 재혼가족의 하위영역인 계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을 혼용 혹은 동일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박은주, 2004).

심상권(1994)은 재혼여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재혼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즉 두 부부 중 한 사람이 재혼인 경우, 두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재혼 부부 중에 한쪽 혹은 양쪽이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재혼 부부 양쪽이 전혼 자녀가 있고 재혼 후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였다. 인구통계조사(통계청, 2001)에서는 재혼가족의 범주를 남자 재혼-여자 초혼, 남녀 재혼, 남자 초혼-여자 재혼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을 무자녀 이혼·사별자의 재혼 및 미혼자·이혼자의 결합의 경우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재혼가족의 발생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이혼[주43], 별거, 사망 및 유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의 정절이데올로기의 붕괴, 개인주의적 성윤리와 다양한 가족관의 전환, 여성지위 향상 및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재혼가족이 형성되고 있다.

재혼가족은 형성에서부터 초혼가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배우자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결혼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초혼의 잔재가 재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초혼과 재혼은 개인의 생애에서 상이한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적 성숙, 기대 수명,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혼 상황은 초혼과는 명백히 구분된다(권복순, 2002; Spanier & Fustenberg, 1987).[주44][주45] 그리고 무자녀 재혼과 유자녀 재혼의 경우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무자녀 재혼은 초혼과 가족 구조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유자녀 재

주43) 이혼증가원인은 가족가치 변화로 인한 부부갈등, 여성취업 증가, 이혼의 법제적 요인, 이혼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음(김미숙 외, 2002).

주44) 재혼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에서 Mills(1984)는 계부모와 자녀관계의 적합한 발달단계에 초점을 두는 단계적 모델을 제안하였음. 재혼가족의 장기목표를 결정하는 단계,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한계설정단계, 계부모와 의붓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맺는 단계, 재혼가족의 규칙과 의례를 발달시키는 단계로 구분하였음.

주45) Mills의 재혼가족발달모델은 재혼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가 목표를 정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재혼가족에서의 역할과 규칙은 가족원등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해야하며, 가정의 규칙은 재혼가족을 위한 의례와 전통을 수립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혼에 비해 가정내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 반대로, 유자녀재혼은 새로운 결혼의 적응 과정을 복잡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즉 가족생활주기상의 요구와 과업이 가족원 개인의 욕구나 과업과 양립할 수 없는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배우자와 전노부모가 재혼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족 경계가 취약해지며, 과거 가족경험의 결과, 재혼 부모와 자녀간에 충성과 죄의식이라는 혼란된 감정을 발생시킨다(Ihinger-allman & Pasley, 1987;윤주애, 2002 재인용).

입양가족의 개념은 출산의 의한 관계가 아닌 입양이라는 사회적 법적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이동원 외, 2001).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입양가족을 출산이 아닌 입양이라는 법률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입양가족의 이해는 입양이라는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입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주46][주47][주48]이란 친생부모가 입양을 할 수 없거나 부모이기를 포기한 경우 법적 부모인 입양부모를 성립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윤현선, 2001). 또한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장인협, 1993). 따라서 총체적인 의미에서 입양이란 친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주46) 입양이라는 것은 가정위탁서비스(Family Foster Care Service)와 함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의 한 방편으로 가정위탁서비스가 일시적인 가정 보호 서비스임에 반하여 입양은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주는 영구 가정보호 서비스를 말함.

주47) 입양유형에는 양자제도 및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는 입양을 포함하는 단독입양과 기관입양이 있음. 또한 입양의 공개정도에 따라서 완전공개 입양, 반공개 입양, 비밀 입양으로 구분됨.

주48) 입양의 공개여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은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한 유전적 결함과 같은 건강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양부모에게 안정을 주며, 친생부모에게는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를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죄책감을 덜어주게 됨. 그리고 입양인 당사자에게는 과거의 기록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줌으로써 입양과 관련된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됨.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입양부모와 친생부모에게 긴장(tension)을 주며, 입양가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입양아동은 두 부모 집단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할 수 있음(윤현선, 2001).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아동에게 양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이동원 외, 200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가족을 구성하는 입양아는 입양을 통해서 자신을 받아들인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며 자녀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입양가족은 입양아를 받아들임으로써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고 복합적인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양제도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고, 입양아와 양부모사이에 가족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입양가족의 발생원인은 주로 불임으로 인해 무자녀가족인 경우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연대적 가치관 측면에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사랑과 인류애라는 인도주의적 동기로 유자녀가족의 경우도 입양가족의 대열에 끼고 있다. 입양가족은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및 적응과정에서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는 입양부모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발생과 가족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이동원 외, 2001).

국제결혼가족의 개념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변화순·조은희, 2003).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족을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국제결혼은 언어, 종교와 관습이 다른 남녀간의 결합으로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환영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혈연중심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혈통에 대한 집착과 현대사의 어두운 측면주49)으로 지적된다(변화순·조은희, 2003). 그러

주49) 중국-동남아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의 모습은 1960~70년대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미국 등으로 시집갔던 우리 여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 또한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을 터부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변화순·조은희, 2003).

나 최근에 오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가 사라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포함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인터넷 통신의 발전,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왕래,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등과 관련이 깊다(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2002).

국제결혼의 동기는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경제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송성자, 1975). 또한 종교적 차원의 사랑인 경우도 있으나, 점차 순수성을 상실하면서 국적취득이나 취업, 현실탈출로서 동기가 변화되고 있다(임경혜, 2004). 최근 국제결혼의 양상은 한국인 하층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의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몽골,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도 눈에 띠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결혼가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한국인 배우자 중심의 생활양식을 취하는 등 문화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부모나 친척들의 태도는 냉담하거나 거부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어서 가족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배우자 및 혼혈아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가족안정성을 저해하고 인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제 2 절 현황 및 문제점

1. 규모 및 현황

재혼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가족은 사실혼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가족의 경우 역시 개별 독립적으로 비밀입양이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 규모는 공식적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 가족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재혼가족의 규모는 이혼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총 혼인건수에서 이혼과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5년 이혼은 17.1%, 재혼은 6.4%에서 2000년 이혼과 재혼이 각각 35.9%, 13.1%로 1995년에 비해 2배의 증가폭을 보였고 2003년에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이혼이 54.8%, 재혼이 16.5%의 비율로 나타났다. 재혼가족의 연도별 발생규모를 보면 1995년 39,838건, 1997년 41,347건, 2000년 43,617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의 재혼가족의 발생규모는 50,237건으로 이혼가족의 3분의 1 정도는 다시 재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2 참조). 또한 연도별로 이혼가족과 재혼가족의 발생비율 간격이 상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재혼에 비해 이혼의 발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6-2〉 연도별 혼인상태 건수 및 분포

(단위:건, %)

구분	1995		1997		2000		2003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 혼인수	398,484	100.0	388,591	100.0	334,030	100.0	304,932	100.0
총 이혼수	68,279	17.1	91,159	23.5	119,982	35.9	167,096	54.8
총 재혼수	39,838	6.4	41,347	7.2	43,617	13.1	50,237	16.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해당연도

전체 혼인 중 남녀의 재혼구성비율을 보면 1990년 남자 8.4%, 여자 7.1%에서 1995년 남녀 모두 10.0%로 동일하였고, 2000년에는 남자 13.1%, 여자 14.5%로 여자가 남자를 상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통계청, 2003).주50)주51)

주50) 성별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재혼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증가속도가 빠르고 특히 사별보다 이혼 후 재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통계청, 2003).

연도별로 재혼시 평균연령을 보면 1992년 남자 39.4세, 여자 34.6세에서 1995년 남녀 각각 40.4세, 35.6세, 2000년에는 남녀 각각 42.1세, 37.5세 그리고 2003년에는 남자 42.8세, 여자 38.3세로 점차 재혼시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03). 또한 재혼자 중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1995년 남자노인 4.9%, 여자노인 1.2%에서 2000년 남녀 각각 5.1%, 1.4%, 2003년에는 남자노인이 5.7%, 여자노인이 1.4%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3).

지금까지 살펴본 재혼의 실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는 재혼의 여성화 및 여성의 재혼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과거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 재혼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용적 통념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양성 평등적 가치관과 관련이 깊으며, 여기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으로 인한 여성지위 향상 및 개인적인 성윤리와 다양한 가족관으로 전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평균 수명의 증가, 재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범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재혼도 증가하고 있다.[주52)][주53)][주54)]

우리나라 입양가족의 규모는 국내입양아수를 기초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입양은 개별적 독립입양이나 비밀입양이 많기 때문에 입양아수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며, 입양기관에 근거한 자료를 참고로 추정할 정도이다. 2001년까지 입양된 아동수는 18만명이 넘으며 이중 13만명에 해당되는 72%정도는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입양아동수는 1950

주51) 재혼유형을 보면 남녀 모두 재혼인 유형과 남자가 초혼이고 여자가 재혼인 유형이 많은 반면,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유형은 적었음(통계청, 2003).

주52) 남자에 비해 여자는 평균 수명이 9년 정도 길기 때문에 노년기에 배우자를 만나 재혼할 기회나 가능성이 남자보다 희박한 실질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여성 노인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기대치에 의한 스스로의 인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짐(한현철, 2002).

주53) 노인재혼의 주요 원인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윤명희, 2001; 나임순, 2002), 사별한 경우보다는 이혼한 경우에 재혼에 대한 의사가 높았음(윤춘일, 2001).

주54) 노인재혼의 방해요인으로 자녀의 반대, 사회적 눈초리 등으로 나타나서(윤춘일, 2001; 나임순, 2002) 재혼결정이 아직도 노인에게는 개인의 의견보다 주변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년대 후반에 2,700명 정도에서 그 이후 20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까지 하향화 추세를 보이며(이동원 외, 2001 재인용), 2000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국내입양은 199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1995년 1,025명에서 2000년 1,686명, 2001년 1,770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02년에 1,69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표 6-3 참조). 또한 전체입양건수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35.7%에서 2002년에는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국내입양이 수적으로나 전체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내입양은 개인적인 비밀입양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양가족수는 최소한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이동원 외, 2001),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2년 사이에 매년 1,000~1,700정도 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수는 1995년 4,576명, 2000년 7,760명, 2002년 10,057명으로 이들 요보호아동의 17~22% 만이 국내가정에 입양되는 실정이다.

〈표 6-3〉 연도별 국내외 입양실태

(단위: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국내	1,647	1,025	1,686	1,770	1,694
국외	2,962	2,180	2,360	2,436	2,365
전체	4,609	3,205	4,046	4,206	4,059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3.

이와 같이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전문종사자 부족, 입양알선기관의 해외입양선호 및 입양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입양 성사의지 결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동원 외, 2001).

다른 한편 입양은 아동 부모의 사망, 미혼모의 양육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친부모의 양육이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입양아 중에서 미혼모 아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서 국내입양아 중에 미혼모 아동의 비율은 1995년에 66%, 2002년에는 79%에 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04). 또한 전체 입양아 중에서 장애아의 비율을 보면 국내입양은 2002년 0.9%에 불과하였으나, 해외입양은 35%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4). 이러한 추세는 국내입양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기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의 총 규모는 파악되지 않으며, 매년 신고되는 국제결혼건수로 그 수준을 추정할 뿐이다. 국제결혼건수는 1991년 5,012건에서 1995년 13,494건으로 2.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12,319건으로 다소 감소하다, 2003년에는 25,658건으로 1991년에 비해 무려 5.1배의 증가폭을 보였다(통계청, 1998, 2000, 2003). 그러나 이상의 통계는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면 국제결혼의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증가와 30만에 이르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의 규모를 고려하면[주55] 사실혼 관계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국가족들은 외국출신의 가족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의 유형을 보면 전체 국제결혼건수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한 비율은 1991년 13.2%에서 1995년 76.8%로 5.8배로 증가하였고, 200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여자와 외국남자가 결혼한 비율은 1991년 86.8%에서 1995년 23.2%로 3.7배가 감소하여, 2003년까지 23~40%까지의 비율을 보였다(제4장의 표 4-40 참조). 국제결혼의 대상국가도 결혼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한 경우는 주요 대상국가로 중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이 많았으며, 이외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몽고 등도 포함되었다. 반면 한국여자와 외국남자가 결혼한 경우는 일본과 미국이 많았고, 이외에 중국 등도 높았다(통계청, 1998, 2000, 2003).

주55)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국내체류 외국인수는 181개국 692,006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289,239명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46%를 차지하고 있음(2003년 1월 9일).

국제결혼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결혼상대자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일부 한국남성들이 중국교포,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혼인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는 외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력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변화순·조은희, 2003).

2. 문제점

가. 가족의 정서적 측면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구성된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정서적 문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초혼·혈연중심의 핵가족과 부계중심의 가족구조 그리고 동일한 언어, 문화 및 관습을 지향하고자 하는 속성에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역할 갈등과 적응과정 등에서 발생한다(장혜경·민가영, 2001; 이동원 외, 2001; 김미숙 외, 2002).

재혼 또는 입양을 통하여, 새로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에를 들면 친부모와 계부모가 공동부모로서 파트너십을 갖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 자녀들이 새로운 친척과의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의 역동성은 기존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실감, 친부모와의 애정유지와 계부모와의 애정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자녀에게는 친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부모에게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의 균열은 계부모 가족안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Paseley & Ihinger-allman, 1987).

재혼가족의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혜경·민가영, 2002). 부부관계에서는 전혼 배우자와 현재의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 재혼당사자와 배우자의 자녀간의 갈등 등이 포함된다. 재혼은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재혼 상대방의 이전 배우자는 무의식적인 경쟁상대자가 되면서 부부갈등의 소지로 작용한다. 특히 재혼사유가 이혼일 때 두 사람 모두 재혼일 경우는 갈등의 소지가 적으나, 한 사람은 재혼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재혼한 새 배우자에 대한 괴롭히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질적 조사에 의하면(장혜경·민가영, 2002), 이전 배우자에게 경제적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가족내에는 전처, 전혼자녀, 전혼 친척관계 등 다양한 가족내 가족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관계의 조절은 재혼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대방의 이전 배우자와 본인의 역할과 위치를 정립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재혼당사자와 배우자의 자녀사이의 갈등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계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계자녀의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과 이전 부모의 흔적 등으로 계부모로서의 역할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계부모가 친부모의 자리를 완전하게 대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부부중심, 혈연중심의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또한 재혼당사자와 계자녀간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서로간의 선입견과 콤플렉스 때문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선입견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계자녀와 비동거하는 경우는 동거하는 자녀와는 달리 재혼대상자와 밀착될 가능성이 낮은 한편, 이전 부모와의 관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재혼자와 혼전자녀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

친족관계는 다른 측면의 갈등을 유발한다. 시댁 및 처가식구의 지나친 관여는 계자녀와 재혼대상자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서 새로운 가족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입양가정 역시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이미 독립되고 안정된 가족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특히 양부모는 아동의 특수한 욕구, 아동기 내력, 의료적 정보, 이전의 보호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로 인해 양부모는 아동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이 가정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되거나 자신들이 아동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는 아동을 입양한 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다(김유미, 2001).

어느 가족이나 입양아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면 혼란스러운 불균형 상태를 지나 다시 체계를 잡게 된다. 친자나 이미 입양된 아동이 있을 경우, 그 아동은 보통 새 아동에 대해 화를 내는데, 이는 양부모를 더욱 힘들게 한다. 또한 부부 관계 자체에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입양아동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으면 다른 쪽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부부간에 다를 때에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친척들이 반대한다면 가족이 입양아동을 키우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입양아동 역시 새로운 가족을 만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분리와 상실은 모든 입양아동이 겪는 것으로 아동은 분리의 경험을 자신의 실패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가정과 부모에 대한 일반화된 상 뿐만 아니라 자기 기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양가족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입양아는 현재의 부모와 과거의 부모에 대한 충성 간에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이 옛 부모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 아동에게는 예전의 가족과의 접촉은 사라지고 중도에 끊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나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이는 아동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윤현선, 2001).[주56]

국제결혼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 및 부모관계, 친족관계 등에서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현인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의 고민 등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언어의 단절은 가족간의 정서적 단절로까지 연결되기 쉽다. 또한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은 생활습관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부부 및 가족간의 공동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을 발생한

주56) 2001년 김유미의 연구에 의하면 입양아동의 발달 문제는 아동의 연령과 이전의 발달 과업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의 분리는 아동의 발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특히나, 청소년기에로의 이전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다. 그리고 자녀양육은 일반가족에 비해 부부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 가족배경으로 인하여 자녀양육방법, 교육방법, 징계 및 훈련방법, 기대에 이르기까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어서 자녀양육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전수현, 2003; 안현정, 2003).

나. 법적·제도적 측면

새로운 가족원으로 구성된 재혼 및 입양가족 그리고 국제결혼가족은 이들 가족을 위한 법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적 및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재혼가족과 입양가족의 법적 배제는 혈연중심 및 가부장적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호적과 성씨 등의 문제로 상속상의 어려움 및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1; 이동원 외, 2001; 김미숙 외, 2002).

호적법은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의 호주제도 하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이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므로 자녀는 학교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늘 재혼가족이나 입양가족이라는 스티그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특히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문제는 가족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재혼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재혼관계인 경우 자신의 친자녀와 동거인 상태로 올라가므로 심리적 불편함,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가부장적 호주제는 주민등록상에서 뿐 아니라 의료보험증상에서도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임을 드러나게 한다. 최근 친양자법의 도입이 거론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으나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증가하고 있는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대두된다.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적취득 문제이다. 국제결혼을 법에서는 섭외혼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때 두 배우자 중 한쪽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인이다. 현행 국적법주57)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은 간이귀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주58) 이와 같은 국적취득제도는 정상적인 섭외혼인의 경우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으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국인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이다. 이때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국적취득의 전제인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여전히 불법체류자로서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호적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여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사실혼의 관계는 법적으로 어떠한 배려도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도 체류연장을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은 외국인을 생부 또는 생모라는 이유로 초청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제도에 있어서 국제결혼이라는 법률혼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는 가족보호 및 인

주57)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국적법 제6조 ②항 섭외혼인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문제에 대하여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1) 그 베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베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주58) 간이귀화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도를 폐지하여 섭외혼인을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 동안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귀화절차를 거치게 하여 국제결혼부부가 원만하게 가정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특히 간이귀화제도는 위장결혼이나 한국국적 취득 후 가출 등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음.

권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회정책연구회, 2002; 변화순·조은희, 2003).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제결혼가족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요건을 갖추고 귀화신청을 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배우자가 속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을 받는 가구여도 외국인은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회적 측면

재혼 및 입양가족은 가족내의 적응과정 측면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조사결과, 재혼하는데 있어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새엄마와 새아빠에 대한 편견', '재혼가족에 대한 주의의 인식'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재혼 및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편견은 재혼과 입양의 결정단계 및 가족적응단계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혼가족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는 학령기의 자녀가 학교나 또래들 사이에서 부당한 처우나 놀림의 대상이 될 때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이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켜 질문하가나 어떤 식으로든 문제시하는 것은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1; 이동원 외, 200). 우리사회에는 국가 및 사회가 아동의 권익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아동복지 인식이 부족하여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부모위주의 입양관은 사회뿐 아니라 입앙을 시도하는 입양부모에게도 팽배하여 입양아동이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다(박정렬, 1994; 이진수, 2003).

사회적 편견이 가족 내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결혼가족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족중심,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사회적 가치관 또는 문화적 편견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를 발생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사회의 문화, 습관 등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선진국과 후진국에 따라 사회적 시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나, 후진국은 우월의식을 갖고 차별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이웃과 직장 등 지역사회 등에서 따돌림 당하여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고독과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간다(임경혜, 2004).

사회적 차별은 국제결혼가족의 2세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집단과 교육제도 등에서 상처 받을 가능성 때문에 국제결혼가족은 2세의 육아와 교육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임경혜, 2004).

이와 같은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전통적 부계중심·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형태를 정상적 가족으로 수용하고 그 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보려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은 가족이기주의나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도 기인되고 있다(박정렬, 1994; 이동원 외, 2000; 장혜경·민가영, 2001; 이진수, 2003; 임경혜, 2004). 따라서 혈연, 성 및 문화, 습관 등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가족원으로 구성된 재혼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국제결혼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적 낙인은 가족형성 및 가족적응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 3 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1. 미국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초혼 후 이혼한 부부는 전체부부의 52~62%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에 75%가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은 전체 결혼한 부부 중에 43%는 남녀 둘 중에 한사람은 최소한 재혼한 경우이었다(U.S. Census Bureau, 2000).[주59]

미국 성인 남녀의[주60] 결혼, 이혼, 재혼수 및 비율을 1951년~1989년까지 3년 간씩의 평균을 보면 <표 6-4>와 같다. 인구 천명당 초혼, 이혼, 재혼 건수를 보면, 1950년대 초반 이후 약 40년간 이혼율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재혼율은 그 변화의 폭이 심하였다. 1951~1953년의 인구 1000명당 초혼율은 122, 이혼율 16, 재혼율은 136으로 재혼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는 재혼율이 점차 감소하여 1960~1962년에는 초혼율과 재혼율의 간격이 좁혀져 초혼율 112, 재혼율 119, 이혼율은 16이었고, 그 이후 초혼율은 점차 감소하고 재혼율은 다시 증가하여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이후 초혼율과 재혼율은 계속 감소하였고, 이혼율은 증가하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여 1987~1989년에는 초혼율 76, 이혼율 37, 재혼율 109로 40년간 이혼율은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해 초혼율과 재혼율은 감소하였으나 그 간격은 여전히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주59) 미국의 재혼 비율은 매우 높으며, 재혼한 부부들의 65%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60%가량은 법적인 이혼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남((The U.S. Census Bureau)

주60) 1998년의 Vital Statics Report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전체의 68.1%가 친부모와 양부모를 두고 있으며(1990년에는 72.5%), 23.3%(1990년에는 24.2%)는 친어머니(biological mother)와만 살고, 4.4%(1990년에는 3.9%)가 친아버지(biological father)와만 살고 있음. 또한 친척과 살고 있는 경우는 3.0%(1990년에는 2.2%), 친척이 아닌 사람과의 사는 경우는 1.2%(1990년에 0.5%)이었음.

〈표 6-4〉 연도별 미국의 초혼율, 이혼율, 재혼율의 3년 간격 평균

(단위 : %)

기간	초혼		이혼		재혼	
	천명	초혼율[1]	천명	이혼율[2]	천명	재혼율[3]
1951-1953	1,190	122	388	16	370	136
1954-1956	1,182	120	379	15	353	129
1957-1959	1,128	112	381	15	359	129
1960-1962	1,205	112	407	16	345	119
1963-1965	1,311	109	452	17	415	143
1966-1968	1,440	107	535	20	511	166
1969-1971	1,649	109	702	26	515	152
1972-1974	1,662	103	907	32	601	151
1975-1977	1,508	85	1,070	37	646	134
1978-1980	1,580	83	1,167	40	754	134
1981-1983	1,632	84	1,191	39	822	125
1984-1986	1,595	80	1,179	38	838	115
1987-1989[4]	1,564	76	1,165	37	837	109

주: 1) 15세 이상 44세까지의 인구 1000명당 초혼율
2) 15세 이상 44세까지의 인구 1000명당 이혼율
3) 15세 이상 44세까지의 인구 1000명당 재혼율
4) 1988년도와 같은 비율로 1989년에 적용

자료: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pecial tabulation*, 2000.

미국의 입양 아동수는 1944년 50,000명에서 1970년에는 175,000명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입양된 아동수는 1970년 89,200명에서 1975년에는 27,700명으로 상당수 감소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매년 약 120,000명의 아동들이 입양되어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였다(U.S. Census Bureau, 2003).주61) 한편, 친척이나 계부에 의한 입양은 1992년에 53,525명으로 42%주62)에 이르며, 친척 입양은 1944년부터 197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입양의 60%를 차지하였다(Maza, 1984).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

주61) Statistics on Adoption: Numbers and Trends에 의하면 1986년에는 104,000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그중 53,000명이 친척에게 입양되고 나머지 51,000명은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입양되었음. 그 중 10,000명이 해외 입양아동이였으며, 친척이 아닌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동 전체는 61,000명임.

주62) 미국의 1992년의 입양 아동수는 127,441명에 이르고 있음(U.S. Census Bureau, 2003).

지 공공기관에 의해 아동들이 친척 집에 배치되었다가 결국 친척이 입양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입양아동이 미국 가정 세대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도에 전체자녀의 2.5%에 해당되며,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층은 12~14세와 15~17세로 나타났다.

〈표 6-5〉 미국 가정의 형태별 자녀 수

(단위: 명, %)

연령	입양자녀		재혼자녀		생물학적자녀		전체자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6세 이하	389,296	1.9	328,378	1.6	19,402,432	92.5	20,120,106	100
6~11세 이하	598,326	2.6	1,271,122	5.6	2,0934,537	91.8	22,803,985	100
12~14세 이하	316,636	2.8	847,130	7.6	10,036,471	89.6	11,200,237	100
15~17세 이하	281,746	2.7	845,671	8.0	9,400,214	89.3	10,527,631	100
18~24세 이하	273,957	2.4	1,092,280	7.0	10,133,536	90.6	11,185,934	100
25세 이상	198,954	2.5	313,839	4.0	7,363,421	93.5	7,876,214	100
계	2,058,915	2.5	4,384,581	5.2	77,270,611	92.3	83,714,107	100

자료: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pecial tabulation,* 2000.

해외 입양은 미국 가족이 외국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즉, 1992년에 6,536명에서 1997년에는 13,620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05,904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10.3%에 이르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3). 그 중 한국 태생의 입양아는 56,82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공공 기관에 의해 알선된 아동 입양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기관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 배치된다. 1992년에 전체 입양아의 15.5%인 19,753명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양되었다(Flango, 1994). 공공 기관에서 알선한 아동 비율은 1951년에 18%에서 1975년에는 38%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전체 입양의 15~20%로 감소하였다(Maza, 1984).

한편, 민간기관은 주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또는 영리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의한 입양은 친척이 아닌 집에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independent) 입양이나 기관을 거치지 않은(non-agency) 입양은 출생지에서 곧바로 친척이 아닌 가족으로 입양이 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 의사, 목사, 대리인에 의해서 입양이 알선 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전체 입양의 37.5%인 47,627명이 이러한 형태의 입양을 했다(Flango, 1994).주63)

미국의 경우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은 부부단위의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혼과 재혼은 초혼만큼 미국 가족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로서 재혼가족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이 논의되어 왔다(장혜경·민가영, 2001).

미국의 재혼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은 계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ILP(IN LOCO PARENTIS)는 계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으로 계부모의 법적 지위, 재정적 지원 의무, 입양, 유산상속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ILP는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이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모에게 특정상황에서 법적부모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법적 지위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계자녀와 ILP 관계에 있는 계부모는 계자녀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나 계부모 스스로가 ILP가 끝났다고 선언함으로써 간단하게 재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계부모가 계자녀에 대한 합법적인 부모의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입양이 있다.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는 1994년 계부모에 입양된 자녀들에게 친부모의 방문권한(visitation order)을 허용하여 지속적인 법적 연계를 갖는 The Uniform Adoption Act를 제정했다. 그러나 입양과 입양 후 친부모의 방문권한은 딜레마를 갖는다. 입양 후 친부모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open-adoption)은 친부모로부터 자신의 부모권리에 대한 포기를 쉽게 만들어 계부모의 계자녀 입양을 수월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양 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부모와 관계를 갖는 것은 친부모 쪽에서 입양 이후 소송 가능성

주63) 1984년 Maza의 연구에 의하면 민간 기관에 의한 입양은 1951년에는 53%에서 1970년 45%, 1975년에는 23%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과 다른 식의 개입으로 인해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법안에서 계자녀에 대한 계부모 재산의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입양과 유언이 있다. 유언 부재시 상속법에서 계자녀는 제외된다.

그리고 재혼가족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계자녀에 대한 학교 정책으로 주로 자녀들과 거주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정책은 부부의 혼인지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미국의 재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수당(Social Security Benefit)과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는 보조 수당(Auxiliary Benefit)를 받는다. 근로자가 최소한 10년 이상 근속하고 은퇴했을 때 그들의 이전 평균 임금에 따라 PIA(Primary Insurance Amount)이 정해지며 배우자 혹 이전의 배우자(ex-spouse)도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때 이전 배우자들은 최소 10년 동안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배우자수당(Spousal Benefit)은 남편이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남편 PIA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그 이전에는 더 적은 액수를 받는다. 또한 미망인이거나 이혼시에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상태에 있을 때에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혼할 때에는 수급권이 없어진다. 그러나 미망인의 경우 6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 재혼을 하면 베우자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한 여자의 경우 전남편이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급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Stacy, 2004).

공적인 지원체계는 아닐지라도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private counselling program)이 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재혼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재혼 후 상대의 친자 혹은 본인의 친자와의 가족관계, 부부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을 보면 입양이 곤란한 아동주64)을 입양한 가정

주64) 입양이 곤란한 아동은 육체적·정신적 장애자, 감정적 혼란자, 육체적 또는 정신 질병의 위험이 높은 자, 고연령자 등이 해당됨.

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이들 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고 양육에 관해 보조를 원하는 경우 입양가정조사에 의해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보조한다. 입양가정조사는 법원이 지정한 자 또는 입양기관이 실시한다. 입양보조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양육보조기간은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육보조금액은 매년 관련 부처가 평가하여 보조 기간과 금액을 결정한다(황미영, 2001).

입양 후 복지 서비스주65)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크게 나뉜다.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친부모로부터 분리와 관련된 문제, 새로운 입양가정과 사회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인 상담이 있고, 청소년기에 입양아동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위기 특별 상담(Crisis-oriented intensive counseling)이 있다. 그리고 입양아동으로서 고통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통의 다른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지지 집단 활동(support group)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양부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입양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입양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인 상담과 위기 특별 상담이 있다. 입양 부모들 또한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조직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친부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아동을 입양시킨 후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개인 상담,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부모들과 함께하는 지지집단 활동 등이 제공된다. 그리고 입양한 자녀의 친부모 찾기(searching for birth families)에 직면한 친부모들에 대한 특별 상담(intensive counseling)이 제공되고 있다(Pecora, Whittaker & Maluccio, 1992; 김후모, 2001 재인용).

이외에도 미국의 입양정책은 네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나는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입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입양 절차에 있어서 입양될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혼부의 아동 양육을 유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가 불참한 입

주65)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1984년 북미 입양회(North America Post-Legal Adoption Committee)가 입양 후 복지 서비스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 후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됨(Pecora, Whittaker & Maluccio, 1992; 김후모, 2001 재인용).

양에서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미혼모와 결합할 때 미혼모의 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입양법에 의붓 어버이 입양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해외 입양에 대한 법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입양은 줄어들면서 해외 입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윤현선, 2002).

미국에서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주정부 소속 기관과 주정부에게서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정부 소속 입양기관에서는 국내의 입양대상 아동들 중에서 장애, 질병, 고연령 등을 이유로 쉽게 입양되지 않는 아동들에게 입양가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동 입양을 위한 주간 협의체(Interstate Compact on the Adoption of Children)'를 채택하여 각 주의 입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주66] 일부 주에서는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정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제도[주67]를 적용하고 있으며, 입양절차 또한 상당히 엄격하고, 입양부모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사회복지사와 수차례 상담을 통해 성, 국내외 입양여부, 정상아 또는 장애아 등을 논의하고 해외입양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만~1만 8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6개월간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양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은 미국가정의 지원이 모자 중심이므로 아동의 모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모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식품교환권, 요보호빈곤가정 일시보호, 보충보장소득, SSI, EITC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모가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모자 중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주66) 미국의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입양 관련법도 일부 주에서는 입양에 관한 모든 법 절차가 실행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법원이 입양을 인정 할 수 있는 '공정한 입양의 원리(Doctrines of Equitable Adoption)'를 채택하고 있음.

주67) 미네소타주에서는 영유아기뿐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아동의 모국어를 가르쳐 주도록 양부모에게 조언하고 아동을 다양한 입양아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 아동이 입양인으로 갈등을 겪는지를 점검함(국민일보 기사, 2000).

요보호빈곤가정 일시부조(TANF) 등은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적인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식품교환권, 보충보장소득 등 공식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지원 받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았느냐에 따라 부를 중심으로 수급 받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약 20년간 전반적으로 초혼 및 재혼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6-6 참조). 남자의 경우 초혼자수는 1981년 263,368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1년에 177,506명에 이르며, 재혼자수도 1981년에 276,826명에서 2001년에 183,107명으로 감소하였다. 여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초혼자수는 1981년에 259,106명에서 2001년에는 175,721명으로 줄어들었고, 재혼자수 역시 1981년에 92,867명에서 2001년에는 73,506명으로 감소하였다.

재혼율은 그 폭은 미미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녀를 합친 전체 재혼율은 1981년 25.7%에서 다소 증가하여 2001년에는 29.4%이었다. 남자는 1981년 25.1%에서 2001년 29.4%로 증가하였고, 여자도 1981년 26.3%에서 2001년 29.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6-7 참조). 결혼시 혼인 형태를 살펴보면 <표 6-8>과 같다. 초혼과 초혼의 결합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초혼과 재혼이나, 재혼과 재혼의 결합비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아동을 방치 또는 소홀히 대할 경우, 또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아동이 자라는데 적절치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방정부가 양육권을 획득하여 수양부모 가정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영국은 한해 약 7,000명의 아동이 국내입양 되며, 국외입양은 총 입양의 15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국내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국내입양아중 과반수가 한명의 친부모와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되는데 주로 재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양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연간 입양아 8,000천명 가운데 2천명은 이전에 대리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며주68) 입양아 가운데 심신장애아의 입양이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표 6-6〉 연도별 영국의 성별 결혼 상태

(단위: 명)

연도	남자			여자		
	전체	초혼	재혼	전체	초혼	재혼
1981	351,973	263,368	276,826	351,973	259,106	92,867
1982	342,166	255,171	267,748	342,166	250,999	91,167
1983	344,334	256,214	268,425	344,334	251,845	92,489
1984	349,186	206,359	218,287	349,186	255,469	93,717
1985	346,389	258,089	269,358	346,389	253,296	93,093
1986	347,924	256,767	267,960	347,924	252,953	94,971
1987	351,761	262,958	273,542	351,761	258,750	93,011
1988	348,492	256,221	266,801	348,492	252,780	95,712
1989	346,697	254,763	264,995	346,697	252,230	94,468
1990	331,150	243,825	253,156	331,150	241,274	89,876
1991	306,756	224,812	233,348	306,756	222,823	83,933
1992	311,564	225,608	234,022	311,564	224,152	87,412
1993	299,197	214,987	223,293	299,197	213,476	85,721
1994	291,069	206,332	214,212	291,069	206,077	84,992
1995	283,012	198,603	206,143	283,012	198,208	84,804
1996	278,975	192,707	200,036	278,975	193,306	85,669
1997	272,536	188,457	195,438	272,536	188,268	84,268
1998	267,303	187,391	193,973	267,303	186,329	80,974
1999	263,515	185,328	191,544	263,515	184,266	79,249
2000	267,961	187,717	193,869	267,961	186,113	81,848
2001	249,227	177,506	183,107	249,227	175,721	73,506

주: 본 자료는 England와 Wales 지역 통계임.
자료: National Statistics, *Population Trends,* 2003.

주68) 영국의 요보호 아동의 35%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90%는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음(보건복지부, 1999).

〈표 6-7〉 연도별 영국의 성별 재혼율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1981	25.7	25.1	26.3
1982	26.0	25.4	26.6
1983	26.2	25.5	26.8
1984	26.1	25.4	26.8
1985	26.1	25.4	26.8
1986	26.7	26.2	27.2
1987	25.8	25.2	26.4
1988	26.9	26.4	27.4
1989	26.8	26.5	27.2
1990	26.7	26.3	27.1
1991	27.0	26.7	27.3
1992	27.8	27.5	28.0
1993	28.3	28.1	28.6
1994	29.1	29.1	29.1
1995	29.8	29.8	29.9
1996	30.8	30.9	30.7
1997	30.8	30.8	30.9
1998	30.0	29.8	30.2
1999	29.8	29.6	30.0
2000	30.2	29.9	30.5
2001	29.1	28.7	29.4

주: 본 자료는 England와 Wales 지역 통계임.

자료: National Statistics, *Population Trends,* 2003.

〈표 6-8〉 연도별 영국의 결혼시 혼인 형태[1)]

(단위: 명, %)

구분	1981	1991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2)]
초혼	227,713	192,238	160,680	156,539	155,027	156,140	148,642	150,160
초혼+재혼	67,048	63,159	64,653	60,642	59,540	61,550	55,943	57,540
초혼+재혼비율	19.0	20.6	23.2	22.7	22.6	23.0	22.4	22.6
재혼+재혼	57,212	51,359	53,642	50,122	48,948	50,271	44,642	46,700
재혼+재혼비율	16.3	16.7	19.2	18.8	18.6	18.8	17.9	18.4
전체	351,973	306,756	278,975	267,303	263,515	267,961	249,227	254,400

주: 1) 본 자료는 England와 Wales 지역 통계임.

2) 2002년 상반기 데이터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 아님.

자료: National Statistics, *Population Trends*, 2003.

1996년 현재 정부기관의 정식 수속과정을 거쳐 수양부모가 보호하는 아동은 3만 3천명으로 정식 수속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약 5만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국적취득을 신청한 수와 국적을 취득한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적취득 신청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국적취득 신청자중 결혼에 의한 경우는 1988년 13,000명으로 전체 국적취득 신청자의 20.1%를 차지하였고, 1997년에는 10,000명으로 전체의 27.0% 비율로 다소 증가하였다(표 6-9 참조). 이들의 주요 국적은 미국, 아시아계, 유럽인 등으로 나타났다.

〈표 6-9〉 연도별 영국의 국적취득 신청자수 및 비율

(단위: 천명)

구분	1988	1990	1995	1997
신청자수	64.6	57.3	40.5	37.0
국적취득 비율	3.5	3.2	2.0	1.9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영국의 재혼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을 보면, The Children Act(1989)가 통과됨에 따라 양육자녀와 함께 사는 계부모의 경우 자녀와 최소한 3년 동안 동거한 경우는 친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거주권한(residence order)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주69]. 이러한 거주권한은 계부모에게 자녀양육기능을 갖게 해주며, 학교기록을 열람할 권리, 의료시술에 대한 동의, 기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도록 허용한다. 또한, 거주권한은 유언 없이 계부모가 사망했을 때 계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 계부모가 계자녀에 대한 합법적인 부모의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입양 관련 법이 있다. The Children Act(1989)가 명시하고 있는 거주권도 입양의

주69) Ramsey(1994)는 계부모에게 거주권한을 주는 것이 친부모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인수를 증가시킨다는 관점으로 해석함.

한 모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친부모의 책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계부모의 욕구는 입양 후에도 불확실한 법적 지위, 친부모의 간섭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영국은 아동복지를 위해서 1927년 양자법을 공포하였는데, 원칙적 목적은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를 꺼리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 아동을 양육할 영구적이고 확실한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48년에 부모들이 돌볼 능력이 없거나 방치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법을 제정했다. 이후에 여러 차례의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75년에는 아동법이 제정되어 입양법안에 포함되었으며, 1989년에는 입양관계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어 공개입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주70].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영국의 지방정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 버려진 아동,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정은 지방정부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이양 받아 수양부모가정에 수용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연결 프로그램은 성장한 입양아와 친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영국의 입양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입양결정이 내려지면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양부모에게 귀속되고, 친부모의 권리 의무는 소멸되며 입양된 아동은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된다. 입양 아동은 18세 미만의 미혼이여야 하며 요보호아동으로 고아, 결손가정의 아동(부모의 동의 하)이여야 한다.

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 또는 독신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입양을 원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21세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단 독신남자가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입양신청자는 상기조건들을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양부모의 상한 연령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이 십대가 되었을 때 이미 중년을 넘어설 만큼의 연령인 사람들은 법원의 결

주70) 1989년 개정된 아동법의 입양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입양의 범위를 포함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정을 받기가 어렵다.

입양결정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입양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 의해 성립된다. 입양신청자는 입양대상아동을 13주 동안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위탁보호하며 입양기관의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관찰과 적응의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을 통해 입양아와 양부모가 서로 잘 맞는지를 판단할 기회를 준다.(김유미, 2001).

영국정부는 수양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수양부모수당을 아동의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아동 1인당 약 624파운드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는 국민보험, 공적부조 등의 사회보장, 국민보건서비스, 개인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보장받고 있으나 영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1981년 국적법을 기준으로 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영국 국민이거나 거주하는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국 국적을 갖게 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영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는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영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적취득 조건은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혼인 및 이혼율을 살펴보면 <표 6-10>과 같다. 일본의 혼인율은 1980년에 6.7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1995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이혼율은 1980년 1.22에서 2000년 2.10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2.30으로 나타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 혼인건수에 대한 재혼건수의 비율을 보면 1992년에는 남자의 재혼비율이 12.8%, 여자는 11.2%로 나타났다. 즉, 결혼한 10쌍 중 1쌍은 재혼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이혼이 증가하고 재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결혼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채홍식, 2002).

일본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 다른 자녀를 입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데다 남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할 일로 간주한다. 일본은 입양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남의 자녀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입양을 원할 경우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이주해 이웃 사람이 자녀의 입양사실을 모르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의 연간 입양아수는 600명에 불과하여 일본 인구인 1억 3천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입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ttp://newsmaker.kyunghyang.com/world/n332e06.htm).

〈표 6-10〉 연도별 일본의 혼인·이혼수 및 혼인·이혼율

(단위: 천명, 인구 천명당)

구분	혼인		이혼	
	혼인수	혼인률	이혼수	이혼률
1980	775	6.7	142	1.22
1985	736	6.1	167	1.39
1990	722	5.9	158	1.28
1995	792	6.4	199	1.60
2000	798	6.4	264	2.10
2001	800	6.4	286	2.27
2002	757	6.0	290	2.30

자료 : 일본노동성대신군방통계정보부인구동태·보건통계과, 『인구동태통계』, 2003.

일본은 점차 입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입양을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확산적인 가족관계가 강해서 필요가 발생하면 친족이 서로의 자녀를 돌보는 풍습 때문에 입양이 소극적으로 발생하며, 입양의 수요가 있어도 친척들이 아이를 보내려 하지 않아 입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입양의 주요 동기는 혈연과 금전 때문으로 입양되는 대상의 대부분이 성인 남자들이다. 성인들은 재산을 상속받는 대가로 연로한 부부의 성을 계승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이 집중하여 거주하는 14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3.7%로 상당수의 외국인이 거주하였으며(표 6-11 참조), 국적은 주로 브라질, 한국, 북한, 중국, 필리핀, 페루, 인도네시아 등으로 남미와 동아시아에 편중되었다. 14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79,557명 중 일본인 배우자 때문에 재류하는 경우는 21,871명으로 전체의 27.5%의 비율을 보여(표 6-12 참조), 일본의 국제결혼가족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11〉 일본의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명, %)

	총인구	외국인등록자수	외국인 비율
전체	2,782,385	102,033	3.7

주: 2002년 10월 1일 기준임.

자료: 장혜경·김혜경·오학수·이기영,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재구성.

〈표 6-12〉 일본의 외국인 주요재류자격별 등록자수

(단위: 명, %)

구분	계	정주자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특별영주자	흥행
	79,557	38,102	21,871	7,659	8,638	3,287

주: 2002년 3월말 기준임.

자료: 장혜경·김혜경·오학수·이기영,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재구성.

일본의 재혼가족을 위한 지원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호주제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재혼가족을 위한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양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양관련법은 호적에 두개의 성이 병기되어 있어서 입양사실을 노출하였으나, 1988년에 제정된 법은 호적에서 입양아가 갖고 있던 성을 삭제하고 대신 입양가족의 성만을 기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혈족 이외의 아이를 쉽게 입양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입양제도는 보통입양제도와 특별입양제도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통입양제도는 양친이 존속하지 않고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누구나 입양자가 될 수 있다. 양자가 될 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아닌 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입양하기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을 입양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입양하여야 한다. 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의 성씨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양자와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관계의 소멸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인장애, 부양의 권리 의무, 상속권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입양제도는 6세미만의 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8세 미만이면서 6세부터 양부모가 될 자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온 경우도 해당된다. 이때 아동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부모가 스스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나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 아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을 때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특별입양제도를 할 수 있는 양부모 자격은 우선 배우자가 있어야하며, 25세 이상이 되고, 양친이 될 부부의 한쪽이 2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세 이상이면 된다. 양친의 아동양육 능력과 입양아의 적응 상태를 보기위해서 양자될 아동을 6개월 이상 시험적으로 양육하며 입양은 이들 감호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에는 소득지원으로 생활보호서비스주71)가 제공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적취득을 한 경우는 그 자녀에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외국인의 시정참가촉진, 지역참가촉진, 인권존중, 학습기회 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국제결혼가족에게도 아동수당,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다.

주71) 생활보호에는 일상생활비용인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기계기구의 구입, 생업부조, 장례부조 등이 해당됨.

제 4 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1. 가족의 정서적 측면

우리나라에서 재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담론화된 것조차 최근의 일이며, 더구나 사회적 지원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결혼서비스가 근래에 발달하고 있으며, 재혼 전 부부상담서비스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로 정착되기에는 그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의 지원 예를 들면 재혼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안내책자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무한 실정이다.

입양가족은 재혼가족과 성격은 다르나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편입되면서 부모와 자녀간에, 부부간에, 형제자매간에, 또한 친부모와 양부모간에 갈등을 경험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양부모 예비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부부가 살아온 배경, 입양동기, 입양태도, 입양진행방법 등으로 이 과정에서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양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가져야 할 입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아동양육에 대한 예비지식 과정에 해당된다. 또한, 입양후 6개월 안에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입양아의 건강상태와 발육상태를 살피고 양부모의 질문과 고충에 대해 상담을 한다. 이와 같이 입양전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입양후의 사후적 상담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시횟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적 상담 및 적응프로그램 등은 거의 전무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 부모관계, 친족관계 등에서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족이나 이

웃 등과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며, 가족들과도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서 정서적 어려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 법적·제도적 측면

재혼가족과 입양가족은 혈연중심 및 가부장적 중심의 우리 사회에 호적과 성씨 등의 문제로 상속의 어려움 및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들 가족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양자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또한 7세 이하 아동은 재혼한 가족의 호적에 편입되나 그 외의 경우는 배제되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 가치관의 확산으로 호주제도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외에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으로는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 수당 및 의료비 제공 등이 있다. 국내 입양아동에서 장애아의 비율은 2002년 0.9%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장애아를 선호하는 선진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나 오해에서 살펴보아도 아동의 혈통이나 유전병 등을 염려하고 있어[주72], 입양시에 건강한 아동만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양육보조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과 관련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표 6-13>과 같다.

주72) 허남순(1986)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입양된 사실을 알면 가출할 것 같음. ② 아이의 형통이나 유전병을 알지 모르므로 겁이 남, 성장하면 생부모를 찾아갈 것임. ③ 입양아를 내 아이처럼 기를 자신이 없음. ④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잘 해줄 수 없어서 용기가 안 남.

〈표 6-13〉 장애아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항 목	내 용
자격기준	○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수당	입양아동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의료비	○ 연간 12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의료기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양육보조금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0만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
지급 절차	○ 신청 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 보건복지백서』, 2004.

양육보조수당은 월 50만으로 아동이 18세가 되는 때까지 지급하며, 단지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보험 지원으로는 입양된 장애아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립의료원이며, 제공 대상은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다. 양부모가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법상에 나타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2004년 개정된 의료 급여법 내

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시켰으며, 시행 시기는 2005년 1월 1일이다.

정부에서는 입양아동에게 보육시설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해주고 있다. 개정된 아동특례법 시책에 의하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또한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양부모가 입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적인 소득공제 및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입양가족의 사후 관리[주73]는 입양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로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사후 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보면 입양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관한 관찰은 대부분 1회 정도로 실시하며, 방법은 가정방문이나 편지나 사진, 서류 등을 받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 취업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거주인정부터 시작하여 출생한 자녀의 호적, 교육, 그리고 취업, 사회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주73) 입양특례법 제 2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양 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필요한 상담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제결혼가족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여건을 조성하여 결혼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 예절, 풍습, 식생활 등을 교육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미비, 자녀관계, 호적문제 등 국제결혼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의 부재, 그리고 취업과 관련하여 한국 노동시장에 적합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

3. 사회적 측면

재혼 및 입양가족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형성단계부터 가족형성 후 적응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재혼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새엄마와 새아빠에 대한 편견, 재혼가족에 대한 주의 인식 등이다.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의 적응단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온다. 사회적으로 재혼가족은 결손가족으로 동일시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입양가족 또한 입양자녀가 학교나 또래사이에서 부당한 처우나 따돌림을 당하는 데서 자녀와 부모는 상처를 받게 된다.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양성평등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불임 부부의 증가나 사랑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입양을 시도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는 신문, 방송, 언론 등 대중매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여성계의 움직임도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부계중심·혈연중심의 가족형태를 정상적 가족으로 수용하고 그 외의 가족형태를 결손가족으로 보려는 시각은 아직도 팽배하다.

또한 국제결혼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부정적이다. 농촌총각과 동남아시아의 처녀 맺어주기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들 자녀는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육아 및 교육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최근 들어 호주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은 그들의 생활터전인 이웃, 지역사회, 교육현장, 직장 등에서 아직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제 5 절 시사점

우리나라 가족의 전형적인 동질적 특성 예를 들면 동일 혈연, 동일 성씨, 동일 국적 등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구성된 가족유형에는 재혼이나 입양을 통하여 이루어진 재혼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이질적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부부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 등이 포함된다.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므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을 발생한다. 이외에도 전혼 배우자와 친척관계에서도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가족간의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재혼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예비 부부를 위한 상담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부부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재혼 부부들은 자신의 재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원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한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바람직한 적응과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서 재혼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주74)]

또한, 재혼가족의 경우 모가 전혼 자녀와 함께 살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호주제이다. 즉, 호입적에 대한 문제, 부자동성주의와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

주74) 연구결과, 재혼교육 프로그램은 초기 재혼자와 재혼예정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재혼 예정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혼 및 재혼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재혼 및 재혼 생활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현실적으로 바뀜에 따라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가능하기 때문임.

한 배척이 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겪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이는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호주제폐지는 재혼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다.

한편, 입양가족은 가족내 적응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경험하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러한 어려움은 입양 사실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며, 입양가족간의 자조모임을 결성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보조금을 확대하여 양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임은 물론,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이 입양에서 제외되거나 파양되는 사례를 줄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나, 현실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가족의 양육 수당 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입양가족의 적응을 위해서 사후 관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입양기관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상담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가족과 관련하여, 혈통주의가 팽배한 우리사회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경험하는 불편함과 법적, 제도적 차별은 심각하며 이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한 가정을 보호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섭외혼인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배타적인 법제도나 열악한 임금수준 및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꿈을 갖고 몰려오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현상을 감안할 때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내에 생활기반이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권리나 가정 또는 가족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혼인을 허용하며 이와 함께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의 등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장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가전제품 및 편의기구의 발달에 따른 가사노동량의 감소,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여성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자아실현 의식의 고취, 그리고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의 변화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을 정의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개념 중의 하나인 동거의 개념은 그 중요성이 쇠퇴되어가고 취업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비동거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문숙재, 윤소영, 2003).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맞벌이가족의 증가현상은 맞벌이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찾을 수 없을 때 과거에는 한 배우자가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부 각자가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비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와 자녀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부부 모두가 원하는 곳에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우 다른 비용을 치루더라도 개인의 직업적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교육수준 및 개인중심의 가치관 확대 등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맞벌이가족 및 맞벌이 주말부부 형성의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 1990년대부터 시작된 조기유학 열풍이 만들어 낸 부산물로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입시지옥 등과 같은 한국적 교육현실에 답답함을 느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한 쪽 배우자(주로 남편)는 국내에서 외국에 거주 중인 부인과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형태의 비동거가족이 발생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의 개념 및 특성, 현황 및 문제점, 이들 가족을 위한 국내·외 사회적 지원, 그리고 시사점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 1 절 개념 및 특성

1. 개념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증가, 노후대책 등의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맞벌이가족도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가족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확대가족 또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나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최규련, 1991; 이정숙, 2000).

맞벌이가족은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이소희 외, 1994) 여성이 직업을 선택한 동기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박충선(1991)은 여성의 취업동기에 따른 맞벌이 가족의 유형을 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 내조형 맞벌이가족, 자아실현형 맞벌이가족, 여가활용형 맞벌이 가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각 유형별 맞벌이 가족을 살펴보면,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족은 가족의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기혼여성이 비자발적으로 취업하는 형태이며, 내조형 맞벌이 가족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나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와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하여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로써 취업은 하였지만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며, 남편의 종속된 위치를 수용하는 형태이다. 자아실현형 맞벌이 가족은 중산층 이상 고학력의 여성들이 취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시키고, 현대적인 성역할 태도에 입각하여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려는 형태이다. 이 외 여가활용형 맞벌이가족은 주로 중산층 중심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경제적 이유, 내조 또는 자아실현 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맞벌이가족형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서 최근의 여성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측면을 들고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경제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등이 여성의 취업동기로 작용한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가구규모의 축소로 인한 자녀양육 기간 감소와 함께 가사노동량의 감소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의욕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던 기능의 사회화로 가정 내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이정숙, 2000).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맞벌이가구란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한 가구를 의미하며, 동거중인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만을 맞벌이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중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직업과 거주지를 두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결혼생활을 유지

하려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또한 그 가족형태가 가지는 특이성에 따라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 두 지역 가족(two-location family), 결혼한 독신(married single) 등으로 구분된다(Gross, 1980; 김은경, 1999 재인용).

한편 맞벌이 주말부부를 기준으로 “취업을 한 부부가 각자의 근무지에 별개의 주거를 두고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은 떨어져서 지내는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부부”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김은경, 1999).

맞벌이 주말부부를 정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다(Gerstel & Gross, 1984). 이 외에 분리 거주 기간도 맞벌이 주말부부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채옥희, 1998; 이기숙, 1999; 김은경, 1999), 연구자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한 2일에서 4일 떨어져 지내는 부부로 정의하고 있다(허경옥, 2003).

맞벌이 주말부부가족은 그 본래적인 특성상 경제적 목적보다는 아내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가족형태이며(이기숙, 1999; Gerstel & Gross, 1984 1983), 가정지향성과 직업지향성을 동시에 가진 부부가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별거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별거결혼가족이라고도 한다(채옥희, 1998). 이 외 통근가족, 비동거가족, 맞벌이주말가족(이기숙, 1999), 별거결혼가족(채옥희, 1998)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해석의 불일치로 주말부부가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최근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생각되지 않았던 가족 형태 중에 하나가 기러기가족이다. 기러기가족이란 신조어의 등장은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부모 중에 한사람과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다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 맹모 아빠는 가족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남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다(엄명용, 2002).

기러기가족은 자녀와 어머니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아버지가 국내에 홀로 남아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형태의 가족을 의미한다(연합뉴스, 2004). 자식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게 된 가족에게 기러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반어적이다. 사실 기러기는 나무기러기 조각, '목안(木雁)'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정한 형제처럼 줄지어 날아다닌다. 결국 기러기가족이란 그런 두터운 정에도 불구하고 헤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를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Economist, 2002). 조은 교수에 따르면 뉴 글로벌 패밀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어머니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는 해외에 살고, 아버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한국에 남아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별거가족이다(동아일보, 2004; 조선일보, 2004).

2. 특성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급증됨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허용하고 보다 평등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의 이행은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녀의 성별화된 역할을 지지하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제도 역시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더디게 변화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조혜정, 1992).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맞벌이 부인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벌이 부인은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도록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 많은 가정내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간 갈등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역할간 갈등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맞벌이 부인의 심리적 안녕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할 경우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부부간 불화 등 가정생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명신, 1996).

맞벌이 부부는 외면적인 부부간의 역할변화만이 아니고 부부 각자의 태도나 관계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부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이 전통적인 역할에 추가하여 경제활동까지 참여하는 역할확대 현상을

보이는데 비해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의 보충이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남으로써 남편과 부인의 현실적 상황과 기대 간에 지체현상을 보인다고 한다(Pleck, 1985; Spitze, 1988; 최규련 외, 1995 재인용)

맞벌이가족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확대가족 또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나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가족 비율이 전국 통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맞벌이가족은 홀벌이 가족보다 주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여 시댁이나 친정 또는 기타 친척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가족구조를 보여 친·인척들이 근거리에 거주하여 상호 부조가 손쉬운 수정핵가족 또는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박충선, 1995).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부인의 취업이유는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교육비 충당, 사회적 성취 및 자기발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다른 취업유형에 비해 사회적 성취 및 자기발전 비율이 높게 나타나 맞벌이가족에서 부인의 취업은 홀벌이와 비교할 때 자아실현의 동기로 취업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주말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기는 하나 부부가 떨어져 사는 생활양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이기숙 외, 2001). 맞벌이주말가족의 형태를 선택한 부부는 자기 일에 대한 몰입이 강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전문직종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맞벌이 주말가족이 형성되는 단계부터 부부가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남성위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기숙 외, 2001).

대체로 맞벌이 주말부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이 많으며, 이러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퍼스낼리티 특성은 자율과 절제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내면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주말부부가족은 친구관계와 다른 부부와의 관계는 쇠퇴하고, 친

족관계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친구와 다른 부부와의 관계가 쇠퇴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규범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서 사회적 관계와 친밀성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접촉도 부부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둘째, 맞벌이주말가족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경우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양식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측면보다는 개인적 직업적 성취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주말가족을 택하는 많은 부부들이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지내는 배우자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접촉을 가져오는 관계는 드물다(Gerstel & Gorss, 1984; 이기숙 외, 2001 재인용).

이에 비해 친족은 가까이 사는 경우, 방문이나 대화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와 자녀 돌봄 등의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써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어느 쪽 배우자의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며, 특히 조부모는 이러한 기능의 주요한 수행자이다. 오선주(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은 시가친척보다 친정친구에게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정서적 교류가 더욱 빈번하였으며, 더 나아가 친정친척은 정서적 교환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한 측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사회적 지지망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주말가족의 사회적 고립은 친구관계의 축소에서 오기도 한다. 아내의 취업으로 인해서 자녀 돌보기, 집안일 돕기 등의 도움은 친구보다는 친정친척이나 시가친척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생활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므로 이로 인해서 친구관계에 더욱 선택성을 가져오게 되며, 부부에게 주변부라고 생각되는 친구관계는 감소되기 때문이다(Fisher et al., 1989; 이기숙 외, 2001 재인용).

한국인 기러기가족 부부는 대부분 30~40대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배우자의 직업은 무역업, 고위직 공무원, 교수, 변호사, 의사, 컴퓨터 관련 사업가 등 한국의 중산층 이상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1년 평균 생활비와 학비로 1억원의 돈을 썼으

며 아버지는 국내에 남아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자녀는 한부모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동아일보, 2004).

제 2 절 현황 및 문제점

맞벌이 가구의 증가원인은 우리사회의 제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여성의 가정시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 자녀수의 감소 및 가사노동 대체품의 발달 등 제반 여건은 여성의 가정시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장노동에 대한 시간사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동과 이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고용형태의 다양성은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형태의 급속한 보급은 기혼여성에게 직장과 가정의 일의 병행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한편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발달 및 개방화의 진척은 가정으로 하여금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물질소비에 대한 요구는 소득증가를 위한 가계의 노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혼여성 취업 증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여성취업의 일반화를 촉진하였으며, 특히 고학력 중상위계층 여성에 있어 사회진출을 통한 자아실현의 가치가 크게 대두되었다(통계청, 1998).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 자동화, 대학교육의 보편화, 구조조정으로 상징되는 인력절감정책 등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한층 가열된 경쟁을 가져오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부부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Gerstel & Gross, 1984; 이기숙 외, 2001 재인용). 특히 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

하게 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실업과 전직이 보편적인 직업경력의 과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승진과 높은 임금 못지않게 고용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후대비, 자녀교육 등의 가족이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나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부부간의 별거도 감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맞벌이 주말가족은 출현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이기숙 외, 2001).

조기유학 열풍이 만들어 낸 부산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기러기가족이 있다. 이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부모 중에 한사람과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다른 부모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형태의 가족으로 입시제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현황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7-1〉 15~59세 기혼가구 응답자의 혼인상태별 부인, 남편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무배우				전체
	부인, 남편 비취업	부인 취업	남편 취업	맞벌이	부인 비취업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	남편 취업	
%	3.8	3.2	40.6	41.0	2.1	6.1	0.6	2.7	100.0
(수)	(426)	(362)	(4,546)	(4,598)	(234)	(679)	(65)	(298)	(11,207)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c.

가. 취업유형

유배우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맞벌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연

령별로는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었으며, 특히 40대의 연령층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40~44세: 55.6%, 45~49세: 54.6%).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낮아져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55.6%이었으나 대학이상인 경우에는 42.7%로 감소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남편만 취업하는 비율은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학력 부인들의 경우 대개 젊은 층으로서 자녀출산기 또는 양육기에 속한 경우가 많고, 남편의 교육수준도 높아 가구소득이 많아짐으로써 부인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적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가구특성별 맞벌이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졌으며, 세대별로는 3세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55.5%), 그 다음은 1세대(50.8%), 2세대(44.2%) 순으로 가구원 수가 많은 3세대 이상 가구와 양육할 자녀가 없는 1세대 가구에서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2〉 유배우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부인·남편 취업유형[1)]

(단위: %, 명)

구분	맞벌이	홑벌이		부인· 남편 비취업	계(수)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		
전체	46.3	3.6	45.8	4.3	100.0(9,932)
부인연령					
15~24세	28.6	1.6	67.5	2.4	100.0(126)
25~29세	38.9	1.1	57.8	2.3	100.0(838)
30~34세	38.9	1.9	57.3	1.9	100.0(1,711)
35~39세	45.2	2.6	51.1	1.1	100.0(1,966)
40~44세	55.6	2.7	40.5	1.2	100.0(1,976)
45~49세	54.6	5.0	37.2	3.2	100.0(1,427)
50세 이상	42.7	7.5	34.6	15.2	100.0(1,843)
부인교육수준					
초교 이하	55.6	8.7	25.9	9.8	100.0(1,380)
중학교	53.3	4.6	34.8	7.4	100.0(1,551)
고등학교	43.0	2.7	51.5	2.8	100.0(4,478)
대학 이상	42.7	1.9	53.3	2.0	100.0(2,468)

주: 1) 유배우 전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c.

〈표 7-3〉 유배우 가구의 특성별 맞벌이 비율

(단위: %)

특성	맞벌이 비율	특성	맞벌이 비율
전체	46.3	세대유형	
가구소득		1세대	50.8
99만원 이하	30.9	2세대	44.2
100~199만원	38.3	3세대이상	55.5
200~299만원	46.5	영유아 유무	
300~399만원	49.0	영유아 없음	51.1
400~499만원	61.3	영아 있음	28.1
500만원 이상	56.1	유아 있음	40.1
		영유아 있음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c.

이 외 영유아 유무별로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51.1%), 유아만 있는 경우(40.1%), 영아만 있는 경우(28.1%), 영유아가 모두 있는 경우(25.0%) 순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맞벌이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나. 맞벌이 부부의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맞벌이 부부의 직종을 살펴보면, 남편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율이 가장 높았고(21.5%), 그 다음은 농·임·어업직(15.0%), 기계장치조작원(13.5%), 사무직(11.9%)의 순이었으며, 부인은 서비스·판매직(36.9%), 농·임·어업직(13.4%), 단순노무직(13.4%), 사무직(10.6%) 등의 순으로 남편은 부인보다 고위공무원·관리직, 준전문직, 사무직, 농·임·어업직, 기능직, 기계장치조작원 등의 비율이 높고, 부인은 남편보다 전문직,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7-4〉 맞벌이 부부의 취업 직종별 분포[1)]

(단위: %)

구분	고위 공무원 관리직	전문직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임· 어업	기능직	기계 장치 조작원	단순 노무직	계
남편	2.7	6.1	8.3	11.9	21.5	15.0	11.9	13.5	9.1	100.0
부인	0.5	8.1	6.4	10.6	36.9	13.4	4.2	6.5	13.4	100.0

주: 1) 부인, 남편 모두 취업자인 경우(4,591명)만을 대상으로 함.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면, 남편은 상용고와 자영업자 비율이 각각 38.7%로 가장 높았고, 임시·일용고 12.9%, 고용주 8.8%, 무급가족종사자 0.8%인데 비해 부인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은 상용고 28.2%, 임시·일용고 24.6%, 자영업자 15.0%, 그리고 고용주 3.0%의 순이었다. 즉, 부인들의 경우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남편)들에 비해 저임금,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5〉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 지위[1)]

(단위: %)

구분	고용주	상용고	임시·일용고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남편	8.8	38.7	12.9	38.7	0.8	100.0
부인	3.0	28.2	24.6	15.0	29.3	100.0

주: 1) 부인, 남편 모두 취업자인 경우(4,584명)만을 대상으로 함.

다. 현 취업이유

현재 취업 중인 부인들의 취업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75.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자녀교육비 충당 10.6%, 사회적 성취 및 자기발전 10.1% 등의 순이었으며, 이외 노후대책 마련(2.2%), 시간활용상(1.4%), 기타(0.2%)의 순이었다.

〈표 7-6〉 취업부인의 현 취업이유[1)]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무배우 부인취업	전체
	부인만 취업	맞벌이		
생활비 보탬	88.9	71.9	92.5	75.4
자녀교육비 충당	2.8	12.2	3.6	10.6
노후대책 마련	2.2	2.3	1.5	2.2
시간이 많아	1.7	1.6	0.3	1.4
사회적 성취 및 자기발전	3.6	11.8	2.1	10.1
기타	0.8	0.2	-	0.2
계(수)	100.0(360)	100.0(4,556)	100.0(670)	100.0(5,586)

주: 1) 부인이 취업중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c.

배우상태별로도 모두 생계비 보탬이 주요 취업이유이었으며, 특히 무배우 취업부인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92.5%). 이 외의 이유로는 유배우이면서 부인만 취업한 경우는 사회적 성취 및 자기발전(3.6%)과 자녀교육비 충당(2.8%) 순으로 미미한 비율을 보였으며, 맞벌이 부인의 경우 다른 취업 부인보다 생활비 보탬을 위한 취업은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고(71.9%), 자녀교육비 충당(12.2%)과 사회적 성취 및 자기발전(11.8%)을 위한 취업은 높은 비율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주말부부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통계치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의 표본조사 결과 28% 정도가 비동거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가족의 기준을 일주일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원으로 정의하였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주말에만 함께 생활하는 부부를 주말부부에 포함시킬 경우 그 수치는 28%를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한다(옥경희, 1999; 김태현 · 박숙자, 1992).

박희선(1999)이 해외취업과 국내취업으로 인한 부부간 비동거가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내 취업자 가족의 75%가 소위 말하는 '주말부부'로 밝혀졌다. 비동거가족의 출현 배경은 취업이 55%, 취학은 17%로 나타나 취업으로 인한 비동거가족의 출현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1992년에에 74.0%이던 것이 2002년에는 7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제적 욕구, 사회 인식의 변화 등으로 주말부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가족형성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이기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주말가족의 부부는 실제로 높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를 보인다고 한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최고점이 50점이라고 할 때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는 40.73점이였으며 실제 응답자의 57.6%가 40점 이상의 점수로 응답하였다. 이는 매우 만족스럽다 혹은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한편 부모의 비동거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태현과 박숙자(1992)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비동거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90%에 이르며, 부인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 영역에 가장 불만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옥경희(1999)는 주말가족의 비동거 이후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지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허경옥(2003)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주말부부가 아닌 가족보다 높으며, 주말부부의 연령이 낮으며,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과 관련한 특성에서 주말부부는 주 말부부가 아닌 경우보다 직장 근무 연수가 길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주말부부가 아닌 가족이 주말부부가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계소득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건강이나 심리적 차원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낮았다. 한편 주말부부가족의 경우 주말부부가 아닌 가족보다 저축액이 많고, 생활비는 많이 지출하며, 부채 액수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소득, 저축, 자산 등의 측면에서 주말부부가족이 유리하였으나 가족경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주말부부가 아닌 가족보다 부정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러기가족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추정에 의하면, 기러기 아빠는 현재 2만명 선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 한해만도 7천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KBS 100인 토론, 2002). 직장에 따라서는 직원의 10% 이상이 기러기아빠인 곳도 있으며(경향신문, 2002; 한국일보, 2002), 벤처기업인 K사의 경우 직원 1백 30명 중 12명이, 중견 제조업체인 D사도 본사 직원 2백 20명 중 20명이 가족을 해외로 보냈다고 한다(중앙일보, 2002).

기러기가족이 형성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한 통계치를 보면 조기유학생의 수치도 갈수록 늘고 있다. 1998년 1,562명이던 초·중·고교생 조기 유학생은 1999년 1,839명, 2000년 4,397명, 2001년 7,944명으로 급증했고, 2002년에는 1만5,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캐나다·뉴질랜드는 물론 지구 반대편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유학생이 나가 있을 정도다(월간 중앙, 2003).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조기유학생은 7,944명이다. 이중 미국행을 택한 경우는 초등학교 800명, 중·고등학교 4,600명 등 약 5,400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최근 3년 간 매년 2~3배로 조

기 유학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2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만 명 중 친지 집에 체류하거나 가족 전체가 오는 경우, 그리고 형제가 같이 오는 사례 등을 제외하면 기러기가족의 규모는 약 6천 가족 정도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미국으로 단기성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기러기가족은 두 배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04).[주75)]

따라서 정확한 조사결과는 없지만 위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러기가족은 대략 2만 가족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가족의 가족 분거와 유학으로 인한 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기러기가족의 최소 경비는 비자관련 720만원, 아파트 임대료 월 144만원, 생활비 240만원 등 월 462만원으로 연간 5,5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는 유학생 비자를 갖고, 두 아이가 동반 비자로 따라가 둘 다 추가 학비 부담이 없는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를 분석한 경비이다. 그러나 신문에서는 유학 수속비, 항공료 등 초기비용을 감안하고, 또 주택 임대료가 비싸거나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연합뉴스, 2004).

또 다른 기사 자료를 보면 기러기아빠가 한 달에 가족에게 보내는 유학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시사여성주간지 미즈엔, 2002). 가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미국의 경우 평균 1년에 7천만 원, 캐나다의 경우 5천만~6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Economist, 2002). 지난 2002년에는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 유학·연수 송금액은 7억7천7백만 달러로 지난해 총 금액인 6억9천8백만 달러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여름방학 등을 이용한 단기 유학생이 증가하는 7월 의 송금액은 1억4천1백60만 달러를 넘어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Economist, 2002).

주75) 한편, 미국 현지에서의 조기유학생들을 살펴본 조은(동국대 사회학) 교수에 따르면 '어바인' 지역의 경우 한달 평균 200여명의 기러기가족이 생기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에는 기러기가족 아이들이 30~5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함(국민일보, 2004).

2.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문제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가족의 역할분담이 민주화된 가족의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수행,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 등 그에 따른 가족의 내부적이고 규범적인 변화도 병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혼자는 근로자, 부모,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시간이나 에너지, 몰입수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맞벌이부부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소희 외, 1998).

맞벌이가족에게서 야기되는 문제는 부부관계 문제, 부모-자녀관계 문제,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부부관계의 문제는 부인의 취업에 따른 부부 모두의 역할과중, 기대의 불일치, 역할의 비양립, 시간제약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부부관계의 질을 하락시키게 된다. 즉, 역할수행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여성들의 경우 가정과 직장의 이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할 긴장 또는 역할 갈등을 갖게 된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취업여성의 역할긴장을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등 가정 일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가사에 드는 시간과 노력만큼 직업에 대한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맞벌이 부부 중 취업부인에게 역할긴장으로 작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업적 역할 수행을 위한 시간의 소비로 가정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고, 이러한 역할을 대행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취업여성에게 긴장으로 작용한다.

가. 부모-자녀관계

자녀는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역할수행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는 공동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인간적으로 성숙된다고 지적한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기로의 역할전환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자녀는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특히 부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Glenn & Lanahn, 1982; 이기숙, 1994 재인용).

자녀양육을 여성의 취업유무별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가 전업주부 보다 자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의 대리양육의 문제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 취업모의 경우 시댁과 친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실제 육체적 부담은 크게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가족문제로 자녀양육을 지적하고 있으며(이숙현, 1990),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에는 중산층 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숙자, 1992).[주76]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부부는 다른 역할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높은 갈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취업부인들은 다른 역할에서보다 부모역할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며(허영숙, 1993) 특히 전문직 취업부인들의 경우 부모역할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자, 1992). 취업남성들도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한경혜, 1997),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고(김소영 외, 2000; 한경혜, 1998)하였고, 남편과 부인 모두 다른 역할갈등보다 자녀양육에서 역할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외, 1996).

다음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가 취업여성의 당면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자녀양육의 문제는

주76) 박숙자(1992)의 1세 이하 첫 자녀돌보기에 나타난 가족역할 분담실태에 따르면, 실제 자녀양육 부담률이 전업주부 보다 취업주부가 높게 나타나고, 취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보다 친정부모의 도움과 시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남편의 역할은 전업주부 남편보다 취업주부 남편이 낮게 나타남.

기혼여성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은 경제적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기숙(1999)은 맞벌이 주말부부의 장점은 남편과 아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내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개인의 자유시간을, 남편은 직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맞벌이 주말부부의 불편한 점은 부부 모두 자녀양육과 교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나. 가사노동 문제

맞벌이가족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가사노동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아직까지 대부분 여성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취업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여가시간을 줄여서 가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남성은 부인이 취업을 한다 해도 자신의 여가시간을 줄여서까지 가사활동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맞벌이가족에게 대두되게 된다(이정숙, 2000; 장상희, 1988).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부인의 경우 현재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맞벌이 부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7-7〉 맞벌이 부인의 현재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

(단위: %)

구분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간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혼여성에 대한 불평등 근로조건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기타	계
비율(%)	23.7	46.3	4.4	17.2	2.6	1.6	0.9	0.8	2.6	100.0

주: 1) 애로사항 없다는 경우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c.

주말부부의 남편에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따르는 가사노동 분배구조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편의 경우 대부분 가사노동을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위임하는 반면,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는 기간동안 혼자 사는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채옥희, 1998).

주말부부 남편의 경우 적어도 혼자서 생활하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3-4일 혹은 일주일에 1회 부인이 오거나 부인을 방문한다. 따라서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상 혼자서 혹은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므로 주말부부 즉,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을 한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생활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의미를 가진다(채옥희, 2002).

채옥희(1998)의 연구에 의하면 주말부부 남편들의 25%가 가사노동기술이 전혀 없어서 임지에서 하숙을 하거나 파출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부인의 부재시에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가사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인들과 함께 하는 주말에는 남편이나 자녀들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이나 된 듯한 느낌으로 전혀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시간활용에 대한 허경옥(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주중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1시간미만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에는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남편들의 참여시간도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맞벌이 부부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시간적인 제약과 부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주말동안 남편과 아내는 개인유지시간을 평일보다 연장하며,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좀 더 일찍부터 가사노동시간에 참여하고 꾸준히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생활하는 남편들은 이러한 혼자만의 생활이 자신들에게 불편과 편리함을 동시에 가져다준다고 한다. 불편한 점은 평소하지 않았던 가사 일을 모두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사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남편들은 “마누라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이동원 외, 2001)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한

다. 그만큼 가사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기러기가족의 남편에게 있어 편리한 점은 혼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가족이나 아내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강의, 학생지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원 외, 2001).

다. 역할기대,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나타난 맞벌이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만족 38.9%, 매우 만족 3.1%로 전체 42.0%이었다. 이는 남편만 취업한 경우(47.4%)보다는 낮은 편이었으나 유배우 중 부인만 취업한 경우나 부부 모두 비취업 중인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표 7-8〉 부부의 현 취업유형별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1)]

(단위: %, 명)

구분	취업유형				전체
	남편, 부인 비취업	부인만 취업	남편만 취업	맞벌이	
매우 불만족	1.2	2.3	0.6	1.1	0.9
불만족	15.1	17.1	7.3	9.1	8.8
보통	51.3	58.4	44.7	47.7	46.9
만족	31.0	20.8	44.0	38.9	40.3
매우 만족	1.4	1.4	3.4	3.1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23)	(351)	(4,522)	(4,562)	(9,858)

주 : 1) 유배우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2003c.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역할기대와 역할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와 역할갈등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 역할갈등도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기대수준에 있어 자신과 타인의 기대수준이 불일치할 때, 개인이 느끼고 있는 다중역할이 과중하고 복잡할 때, 급변하는 환경에서 역할변동이 필요할

때,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불일치가 심할 때 역할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김명자 1981; Keith & Schafer, 1985; Voydanoff, 1988), 배우자로부터 가사분담의 요구와 기대가 지나치게 높을수록 역할갈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정자, 1990; Mederer, 1993; Pina & Bengton 1993; 김경신 외, 1996 재인용).

역할기대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로부터 가사분담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있을 때, 역할기대가 높을 때, 그리고 부부가 역할을 다르게 인식할 때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부간의 역할기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며(김명자, 1981; 이정숙, 1990), 특히 남편의 경우 역할갈등이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부부 역할갈등이 결혼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규련, 1993). 전반적으로 볼 때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역할긴장이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김경신 외, 1996).

주말부부의 문제점으로는 역할긴장과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즉,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감 유지의 곤란, 부부간 대화와 공동여가의 부족, 동반적 활동의 부족, 반복되는 별거와 재결합으로 인한 긴장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문제발생과 결혼생활의 불만을 초래하기 쉽다. 또한 가족원 간의 결속의 부족,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생활에 불만을 갖기 쉽고 별도의 생활비 등이 추가되고 기혼 독신자로서 애매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이웃관계, 친구관계, 친척관계 등에 소홀하기 쉽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만족이 감소되기 쉽다. 주말부부는 특히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서 문제를 더 많이 느끼고 갈등과 불만이 많으며, 재결합빈도가 많을수록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의 문제가 적다(Bunker, Zubeck, Vanderslice & Rice, 1992; 최규련 외, 1995 재인용).

기러기 부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분거가족 남성들의 경우 기혼과 독신의 중간에 끼어 있는 어중간한 생활이 부부관계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이동원 외, 2001).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고방식의 차이나 각자의 생활고(生活苦)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돈버는 기계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아내는 자신만 낯선 땅에서 아이들 돌보는 데 희생된다고 불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기러기가족생활은 이혼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Economist, 2002).

맞벌이 주말부부는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난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이며 아내의 사회·경제적 참여로 인해 별거가족의 형태를 취한 매우 진보적인 가족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주말부부의 아내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구조의 영향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2001a; 채옥희, 1998).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수행 자체가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즉, 가족과 직장의 양립, 사회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말부부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말부부 대부분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이중역할 수행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경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므로 항상 갈등과 긴장의 연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김은경, 2001a; 채옥희, 1998). 이렇게 주말부부의 경우는 부부비동거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의 어려움과 보상이 있다. 곽인숙(2003)은 주말부부의 심리적 비용과 그에 따른 보상을 <표 7-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7-9〉 주말부부의 심리적 비용과 보상

주말부부가족의 심리적 비용(cost)	주말부부의 심리적 보상(reward)
• 자녀양육의 어려움	• 자아실현
•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	• 집안대소사 참여의무 일부 면제
• 행정적인 문제	• 직업에 충실
• 나를 위해 투자할 시간 부족	• 부부갈등의 정도가 낮고, 가족이 화목함.
• 시부모와 며느리, 친정부모와 사위간의 갈등 발생	• 자녀의 독립성 발달
• 남편에게 미안	• 시간활용이 잘됨.
• 피곤함으로 인한 다툼	
• 매식이 잦거나 저녁시간에 허전	

자료: 곽인숙,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2003.

주말부부는 자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주말부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자 할 때는 자녀의 의견과 감정(feeling)도 존중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살 때의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녀에게 그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 주말부부가족 형태로 결정내리는 것이 좀 더 쉬우며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의 가사일, 스트레스, 책임감 등이 과중하다고 하였다(Anderson, 1994).

주말가족은 부부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희생하는 면이 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질적·양적으로 증가시키고 부모 모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주기도 하며, 자녀에게 독립적인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위안감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주말가족의 자녀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생활과 학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방임되

었다고 느끼며, 실망하고 화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함께 살지 않은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동료들에게 설명할 때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양육, 분노의 감정, 함께 있는 시간의 제한성, 동료 성인들의 사회적 압력 등이 주말가족 부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등장하였다. 일반인들은 주말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족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부가 이혼의 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은 주말부부가 사회적인 접촉을 줄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자원과 지원체계 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그들 부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Groves & Horm-Wingerd, 1991).

또한, 기러기가족에 있어서도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이들 떨어져 사는 부부 사이를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시비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라고 한다. 즉, 불화 때문에 별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나타내거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부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놀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이동원 외, 2001).

엄명용(2002)의 기러기가족 남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7명 중 3명이 경제적 긴축 생활을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주77]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기러기 아빠'는 봉급만으로 두 집 살림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수입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부조와 서적 구입의 절제 등을 통해서 생활 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주78] 남편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초과 수당이나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77) 반면, 나머지 4명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데, 이는 전문직 남성들 가정에서는 분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임.

주78) 엄명용(2002)의 연구에서 남편 본인이 기러기가족을 주장했던 경우에, 분거 후 가족생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장점이 없다고 대답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가족 전체 구성원과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자신(남편)만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한 것임. 조기유학과 관련된 기러기 가족을 형성하기 전 가족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기러기가족의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느라 사실상 극빈자 수준의 외로운 삶을 사는 가장 기러기들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외 교수, 의사 등 사회지도층일수록 가족을 해외로 보낸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암묵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안광복, 2004).

엄명용(2002)에 의하면 기러기가족이 된 후의 남성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변화 상태를 보면 7명중 5명이 건강 악화, 기력 약화, 체중 감소 등 신체적인 면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는 7명 모두는 외로움, 허전함, 쓸쓸함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보고하였다. 이는 기러기 아빠들의 심신 상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기러기가족의 문제 중에 하나는 오랜 이산 생활로 인한 자녀와의 단절이다. 한국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외국 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가치관의 차이로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장기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모델링의 기회가 부족한 것 또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이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문화적 충격이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한국인 타운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같은 한국인 아이들하고만 어울려 현지 언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비행이나 탈선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뉴스위크, 2003)

제 3 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1. 스웨덴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76.2%이었으며,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9세 이하 39.7%에서 20~24세 64.9%, 25~34세 82.1%, 35~44세 87.8%까지 상승한 후 45세 이상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OECD, 2003).

스웨덴 여성들이 고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시작되

었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들의 고용이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스웨덴의 맞벌이 가족지원 정책의 근간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및 보편적 원칙에서의 공보육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현행 육아휴직관련법률로는『육아 등 휴직권리에 관한 법』과『부모보험법』이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남녀성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한 우선권은 없으며, 평등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규모 등 기업의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육아휴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이전 고용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과거 2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전일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전일휴직형은 하루를 완전히 쉬는 휴직형태로 자녀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간 2회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는 적어도 출산예정일 이전과 출산 이후 각각 6주간은 전일 휴직할 수 있다. 이 외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휴직은 통상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거나, 6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이다. 즉, 반일간의 육아휴직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이용가능 하다주79).

주79)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청구하거나 휴직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지 않으며, 만일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이의청구를 통해 그 해고예고 또는 해고는 무효로 할 수 있

나. 부모보험제도

스웨덴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 있어서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탄생된 '부모보험제도'이다(김승권 외, 2003a). 부모보험제도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부모현금급여(Parents' Cash Benefit due to Child-birth)와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 받는 일시적 부모현금급여(Temporary Parents' Cash Benefit)가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자녀양육의 역할을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도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나 탁아소 방문휴가도 포함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3a).

다. 보육서비스

맞벌이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특성 하에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제도는 1973년 「취학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발전된 현재의 제도로 정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특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종일제 보육이 제공되었으며, 취업여성의 자녀에게만 입소자격을 부여하였다.

보육시설의 형태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밖에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 있다. 공립보육시설에는 시간제 및 종일제 기관보육시설, 공립가정보육시설, 개방유아학교, 레저타임센터(놀이센터) 및 레저클럽, 시간제 유아집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공립

음. 또한 육아휴직의 청구 또는 이용 사유로 급여를 제한 받거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불이익 대우를 받지 않으며, 휴직 중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이전과 동일한 지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음(최강식 외, 1997).

보육시설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모·부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민간보육시설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주80)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육비용주81)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15%만을 지불하면 된다.

특히 비영리 기관이나 부모협동체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일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부터도 기금 지원 없이 순전히 사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은 거의 없다. 스웨덴에서는 가족이 보육료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 보육료를 일정기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 보육료 부담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김승권 외, 2003a).

2. 영국

OECD 통계(2003)에 의하면, 영국의 16~64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19세 이하에서는 58.5%이었으나 35~44세에 77.7%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45세 이후 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55~59세 58.6%, 60~64세 28.5%로 감소한다.

영국은 최근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의 소득에 대한 분석,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제화, 국가최저임금제 도

주80) 국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설명은 김승권 외 (2003a)를 참고할 것임.

주81) 기관보육을 이용할 경우 1년 보육료는 7,500~10,000불 정도이며, 이중 10% 정도는 부모부담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아동보육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충당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 당 소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표준액을 산정함.

입, 취업세대 세금공제, 국가적 차원의 육아전략 수립, 출산 후 적절한 휴가와 부모들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등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영란 외, 2001).

가. 법정출산수당

영국의 맞벌이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민보험체계에서 지급되는 법정출산수당이 있다. 수급자격은 연속취업규정과 소득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이 피용자이고 지난 20주간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기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년도 여성의 급여가 국민보험기여금의 최저한도를 넘어야 한다. 또한 법정질병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산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고, 11주 안에 출산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출산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정출산수당은 최소한의 법정금액으로써 약 18주간 지급되고 처음 6주는 주당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며 그 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통상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소득으로 취급되어 세금납부대상이 되며, 고용주가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경우 국민보험기여금의 최저한도를 초과하면 국민보험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출산휴가 및 부모휴직제도

다음은 출산휴가 및 부모휴직제도로 영국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18주 동안의 출산휴가(Maternal leave)를 부여하며 입양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였을 경우 본래의 18주에 추가로 11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직제도(parental leave)의 경우, 자녀가 5세 될 때까지 13주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18주 동안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직 시 처음 6주 동안은 급여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12주 사용했을 경우 고정액(flate rate)을 받게 되는

데 고용상태에 따라 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다. 보육서비스

한편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육서비스는 교육노동부 및 지방교육당국 관할 하에 5세부터 전원 무상교육의 프리스쿨(pre-school) 과정이 시작되며,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형태는 사회보장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서 실시되는 이원화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적은 수의 공립유아원에서 보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립기관은 주로 4세 아동들이 이용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은 극히 적은 수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취업 부부의 자녀보다 학대받은 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의 보육시설유형에는 시설보육(day nursery), 가정보육(child-minder), 유아원(nursery education)과 유아학급(nursery class),[주82] 놀이그룹(play group), 예비학교(reception class)[주83]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기관보육시설의 경우, 공립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공립인 경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일제로 운영하고, 0~4세 영유아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보호하고 있다. 보육비가 거의 들지 않아 수요가 많지만 맞벌이 부모의 아동, 편부모 아동, 부모가 병중인 아동, 학대받은 아동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이나 빈곤아동이 우선 입소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이 실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김승권 외, 2003a).

주82) 유치원 교사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보육시설임. 유아원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같은 개념의 시설이고, 유아학급은 초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보육학급을 말함. 근래에는 유아학급이 증가하는 추세임.

주83) 5세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를 위해 초등학교내 마련된 준비반임.

3. 프랑스

2000년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이며(통계청, 200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35~44세군이 8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45~54세 77.7%, 55~59세 53.3%, 60~64세 15.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OECD, 2003).

가. 육아휴직수당

프랑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중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나.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및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기타 자녀양육 관련 지원정책으로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 지급되는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AGED: 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과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AFEAMA: Aide à la famille pour I'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e Agréée)[주84] 은 출산장려주의적 정책방향을 담고 있으나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양립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외 1994년 7월 25일 가족관련법은 취업모의 아동보육에 필요한 휴가를 확대하여 사업장의 피고용인 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로 육아휴가권의 폭을 넓혔으며, 아픈 자녀를 위하여 1년에 3일 무급휴가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임시직 근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문유경 외, 2000).

다. 보육서비스

프랑스 보육의 기본방침은 특수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 보육이라기보다는

주84)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가정보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등록된 보육사가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길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해서 보육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임.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영유아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육유형은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기관보육과 가정보육 두 형태로 구분되며, 기관보육은 규모에 따라 집단보육[주85]과 소규모보육[주86]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가정보육은 1명의 탁아모가 자신의 집에서 2~3명의 아동을 돌보는 형태로 기존의 보육시설, 모자보건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1명의 원장이 30명 정도의 가정보육모들을 관리하도록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가정보육모에 대한 교육 및 가정보육모의 집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자료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부모협동 보육시설[주87], 시간제 보육시설[주88] 등의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일제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를 부정기적 시간제로 돌봐주지 않으며, 최근 들어 시간제 보육시설은 시간제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김승권 외, 2003a).

4. 미국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60.1%(통계청, 2003)로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전체 기혼 부부 중 남편은 취업, 부인은 가정에 있는 전통적인 형태는 1975년 4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 21%로 저하였으며, 반대로 부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형태는 같은 연도에 37%에서 59%로 증가하였다(Tom W. Smith, 1999).

주85) 부모 모두 취업중인 2개월~3세 미만의 아동 40~60명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형태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공립기관이 관리하는 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시설도 있음. 민간시설의 경우,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주86) 기관의 성격을 비교적 적게 띠는 형태로 15~2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임.

주87) 부모들에 의해 결성된 보육형태로 기존의 보육시설에 자리가 부족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함.

주88) 미취업모 부모들의 여가생활 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생후 2개월~4세까지의 아이를 1주일에 3회의 반나절동안 맡길 수 있음.

가. 육아휴직제도

맞벌이 가족을 위한 미국의 지원체계로는 모성보호관련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로 여성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이를 다른 일시적인 장애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경미한 업무로 직무를 조정하거나 대체근무를 허용(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하고 있다. 임신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가 인정한다면 12주간의 휴가를 취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04).

미국의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는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사기업체가 병가 혹은 가족복지 차원의 휴가를 12주 이상 제공할 것을 규정(대상 근로자는 전년도에 근로자로서 최소 1,250시간을 일한 자에 한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 외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장지연 외, 2004).

나. 보육서비스

미국의 유아 교육 및 보육에 관한 국가의 정책체계는 없으나 각 주에서 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헤드 스타트, 시장 중심의 서비스 매입제도, 취학전 아동 및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제도의 세가지를 통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로 헤드 스타트는 2000년 현재 4인 가족 연소득 17,050불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서비스 매입제도는 종일제 보육시설, 시간제 유아원 및 유아학교, 가정보육, 학교시작 전후 및 방학기간동안에 실시하는 학동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참여주체는 1990년 자료에 의하면, 10%만이 공공에 의한 것이고, 90%는 민간에 의한 것이며, 민간 중 2/3가 비영리로 운영된다. 셋째, 공립학교 부설은 교육당국의 지도·감독하에 주 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에 증가추세이다(서문희 외, 2001).

다. 기타 사회적 지원서비스

미국의 경우 주말부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 또한 주말부부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인 가사, 아동양육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동거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들인 세탁소, 인스턴트 음식, 보육 시설 등이 있다. 또한 사적인 서비스로서 떨어져 살던 부부, 가족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5. 일본

OECD 국가의 주요통계 지표에 의하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1년 49.2%에 이른다(통계청, 200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에 7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자녀출산 및 양육기로 보여지는 25~44세까지는 다소 낮아진다. 그 이후 45세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OECD, 2003).

가. 육아휴직제도

일본의 맞벌이 가족과 관련된 법규로는 육아휴직·가족간호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간호를 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육아·가족간호휴직법)이 있다. 이는 종래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에 가족간호휴직법이 추가, 개정되면서 199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동 법에 따라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근로자[주89]는 아이가 1세에 이를 때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 및 손자, 배우자의 부모 등 대상 가족이 부상이나 질병, 신체상 혹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2주간 이상의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 고용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간호휴직의 기간은 연속하여 3개월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이

주89) 육아·가족간호휴직법 제2조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 고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며, 대상 가족은 1인에 1회, 재차 신청은 1회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휴업 전 임금의 25% 상당액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불되며(고용보험법 제61조 4항, 5항), 건강보험법과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건강보험법 제76조, 후생연금보험법 제82조 2항). 이 외에도 출산 전 6주간(다태아 임신인 경우 10주), 출산후 8주간(산후 6주를 경과한 여성이 취업신청을 하고 의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업무에는 산후 6주간)의 산전산후 휴가가 제공된다(노동기준법 제65조).

나. 육아휴업제도

공공부문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다.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면 직종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업을 할 수 있으며, 전일육아휴업이 원칙이나 공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휴업주90)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도 5일간의 휴가를 주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원의 1일 잔업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다(조선일보, 2003. 8. 12).

다. 보육서비스

일본의 보육정책은 일본 여성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동정책과 어머니에 의한 아동양육을 강조하는 두가지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높은 비율의 국가부담에 의한 공공보육이 갖추어져 있다. 보육소는 2002년 현재 22,243개소로 이중 정부에 의해 설치된 공공시설이 12,587개소로 약 57%이며, 민간시설은 9,656개소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4).

주90) 부분휴업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가 교대로 부분휴업을 함으로서 가사책임을 분담할 수 있고,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음. 또한 부분휴업 중 소득이 보장되고, 소속관청도 직원의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이 전일 휴업할 경우 생기는 업무지장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한국노동연구원, 1997).

제 4 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1. 모성보호 정책

국내의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모성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제도를 구체화하였다.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으로 임산부의 모성보호 조치는 강화되었으나 일반여성에 대한 규정은 완화되었다. 또한 비현실적인 규정의 존재로 인해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해소되었고, 법의 적용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가. 산전·산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 72조 제1항 및 제113조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출산 후에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며, 동시에 유아를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전체 기간 중 산후에 45일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주91] 임신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산후 4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8개월 이후 조산·사산일 경우에는 정상 분만과 같이 90일간의 보호기간을 주고 있다(노동부, 2004).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총 90일 중 최초 60일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국

주91) 근로자가 산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당초 분만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함으로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산전·후 휴가의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90일을 초과하는 산전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은 아님(노동부, 2004).

가재정 및 사회보험(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수급자격은 해당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산전·후 휴가 개시일 기준)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35만원을,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주92] 또한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전·후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서 출산급여(현물)를 수급하는 여성이 약 5만명인 것을 생각하면 출산여성근로자 중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여성은 60%에 불과하며, 특히 비정규직여성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법이 정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장지연 외, 2004). 또한 여성부(2002)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가 없다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 규모 3.9%, 49인 미만은 36.2%로 기업규모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출산휴가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휴직 후 복직에 대한 우려 때문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출산 후 휴가제도 이용 후 근로조건이 불리해진 경우도 일부나마 나타나고 있어 복직 및 근로조건 변화금지 등의 조항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3a).

나. 육아휴직 제도

육아는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다음 세대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전

주92)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액(적용기간: 2004. 9. 1~2005. 8. 31)은 시간급은 2,840원, 일급(8시간 기준)은 22,720원임.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함(노동부, 2004).

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녀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의 안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그를 위한 기업의 배려는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동 제도는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휴직종료 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는 산전후 휴가 및 산재요양중인 자의 절대해고 금지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간의 휴직 중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한 발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진, 승급, 퇴직금 계산 등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반복 육아휴직 신청 시이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 9.4%, 49인 미만 38.4%로 기업규모별 차이를 보였으며(여성부, 2002), 육아휴직사용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근로자 98.3%, 남성근로자 1.7%로 육아휴직 사용자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성별 분업의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 육아 또는 자녀양육은 아직도 여성의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육아휴직자의 성별 직종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무직의 구성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의 구성비율이 높았다(장지연 외, 2004).[주93] 김승권 외(2003b)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은 73.5%이었으나 이용률은 12.2%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로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휴직 후 복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격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이며,[주94] 급여액은 월 40만원이다.

다. 가족간호휴직 제도

가족간호휴직제도는 1994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의 질병발생시 간호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고 공무원

주93)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근로자 중 2002년 2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녀근로자 6,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이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2,293명(37.7%), 육아휴직을 완료하고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 3,092명(50.9%), 그리고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694명(11.4%)이었음.

주94) 단,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됨(노동부, 2004).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간호휴직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가족간호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2.1%에 불과하였으며, 동 제도의 시행률은 33.0%이었고,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률은 6.6%에 불과하여 출산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김승권 외, 2003a).

라. 생리휴가 및 수유시간

생리기간 중의 무리한 근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켜 재해의 위험증가나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성보호 측면도 고려하여 생리기간 중 가장 힘든 날에 쉬도록 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연령·직종·근로형태·개근여부·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주95)]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여성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보장하여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장지연 외(2004)의 연구[주96)]에 의하면, 수유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고,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유실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17.6%에 불과하여 기업에서의 수유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95)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반드시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음(노동부, 2004).

주96) 고용보험 DB상에 나타난 산전후 휴가사용자를 모수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노동부, 2004).

2. 보육서비스

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층 저소득층 아동과 2층 및 3층 저소득층 아동 이다. 이들 중 1층 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4세 아동이 해당된다. 2층 및 3층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등이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7-10〉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 이하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2층	101만원 이하	127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3만원 이하
	3층	126만원 이하	159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03만원 이하

주: 7인 이상 은 2층 최저생계비의 120%, 3층 최저생계비의 150%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2004.

정부지원 단가는 2004년 기준으로 1층 법정저소득층은 2세 미만아 257,000원, 2세아 212,000원, 3세 이상은 131,000원이며, 2층은 2세 미만아 154,200원, 2세아 127,000원, 3세 이상은 78,600원이다. 또한 3층은 2세 미만아 102,800원, 2세아

84,800원, 3세 이상은 52,400원이다(보건복지부, 2004).

나. 만 5세아 무상보육

지난 1997년말 법적 근거를 마련, 1999년 하반기부터 취학 직전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아동에 한정하던 것을 2002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1층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3인까지는 소득인정액 208만원 이하, 4인은 223만원 이하, 5인은 238만원 이하, 6인은 253만원 이하이며, 그리고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15만원씩 증가한다. 정부지원 보육단가는 1층 저소득층은 131,000원이고,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은 131,000원, 국고보조시설은 94,000원, 민간보육시설은 110,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04).

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 2급 아동과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아동인 중증장애아동과 중증장애아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급 장애아동 및 장애등급 4~6급아동인 경증장애아동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세~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보육대상에 포함한다.

정부지원 단가는 중증장애아동은 월 257,000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212,000원이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는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라. 기타 보육료 지원

이 외 취학아동(장애아동 포함)의 방과후 보육,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취학유예 아동, 장애아 포함)의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은 연령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 방과후 보육료는 소득인정액 대상에게 3세 이상 보육료의 50%(65,500원, 장애아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기준)를 차등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1층 대상은 65,500원(100%), 2층 대상은 39,300원(60%), 그리고 3층 대상은 26,200원(40%)이다.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보육료의 기준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2,5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04).

마.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부는 1988년 4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 법 제21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및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시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손비 처리하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르는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완화하였으며, 노동부 일반회계(1996～1999)와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1994～1997),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직장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은 확대 설치는 미흡한 수준이고 보육수당 지급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3년 9월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15개소로 이 중 79개소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10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89개 사업장만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대상 사업장의 41.4%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116개소이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5개소로 총 121개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의무사업장 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03; 김유경 외, 2003 재인용).

이와 같이 직장보육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법적·제도적 규제, 대상 사업장, 근로자 및 집행공무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의 부적절성 및 강제성의 부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들 수 있다(서문희 외, 2002,; 이기숙 외, 2002; 김유경 외, 2003 재인용).

우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기준으로만 되어 있고 학교, 병원, 금융업 및 제조업 등 여성이 비교적 많은 사업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설치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강제성이 배제되므로 시설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비용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경 외, 2003).

3. 기타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에서 주말부부에 대한 공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는 거의 없으며, 또한 기러기가족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가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가 대부분이다.

가. 주말부부가족

주말부부의 가족유형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며 사적인 영역인 부모, 친지, 친구들에게서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받거나 시장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말부부가 개인적인 지지망을 통해 받고 있는 자원을 살펴본 김은경(2001a)과 허영숙(1993)의 연구에서는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개인적 자원인 친정이나 시댁 및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여교사가 느끼는 역할갈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사회적인 지원이 취업주부가 느끼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자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김은경, 2001a; 허영숙, 1993). 또한 맞벌이 주말부부 아내들의 경우 친정이나 친구들로부터 주말부부라는 가족유형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 역할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은경, 2001a; 김은경, 1999).

주말부부의 개인적인 지지망에 대한 김은경(2001a)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주말부부의 남편과 아내가 받는 사회적 지원은 지원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아내가 남편에 비해 친가로부터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남편은 처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유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정서적 지원, 일손의 지원, 물질적 지원, 사교적 지원 모두 친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 아내의 역할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가 이들의 역할갈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아내의 경우 친가나 친구로부터 일손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맞벌이 주말아내의 경우 친정으로부터의 지원과 시댁으로부터의 정서적, 물질적 지원도 이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경우 친가로부터의 지원보다는 처가로부터의 지원이 이들의 결혼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

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어 아내의 친정이 사회적 지원의 핵심적인 관계망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으로 기러기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지 않으므로 개인적 또는 가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나. 기러기가족

엄명용(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러기가족의 분거생활 대처전략 및 지원체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원체계로는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병원을 통한 보살핌이 있었다. 개인적 또는 가족 지원체계로 스스로 고독을 다스리는 방법(서예, 음악 감상 등), 가족모임에 종전보다 더 열심히 참여,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 직장 동료들과 정기적인 운동 및 산행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현재의 연구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남성들을 위한 사업이 이미 등장했다고 한다(경향신문, 2002).

이 연구에서는 분거생활에 필요한 도움체계를 함께 조사하였는데, 원하는 도움으로 이성친구, 기러기아빠를 위한 요리학원, 가사방법 교육기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하는 도움으로 이성 친구를 지적한 남성들의 경우 성 상대자로서의 이성보다는 대화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의 제공자로서의 이성을 찾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 면접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었다.

기러기 부부의 남편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나름대로의 지원체계를 형성한다. 한 예로, 혼자 생활하는 남편들은 자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나름대로의 지원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또는 자조하는 의미로 자신들을 '한총련(한시적 총각 연합회)'회원으로 부른다. 혼자 있는 남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저녁에 텅 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 자녀가 보고 싶어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한다(이동원 외, 2001).

강남에는 이미 "기러기아빠 방"이 성업 중에 있다고 한다. 이곳은 혼자 남은 가장들의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곳이다. 앞으로 기러기아빠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엄명용, 2002).

제 5 절 시사점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기혼여성의 취업률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가족은 구조적으로는 확대가족 또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나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맞벌이가족은 여성의 취업동기에 따라 생계유지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가족은 대부분 생계유지형에 속하나 자아실현형과 여가활용형의 중산층 맞벌이가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식변화, 생활수준 및 생활기대 수준의 향상, 고용기회의 증가 등으로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규범이 잔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맞벌이 가족이 안고 있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문제, 즉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사분담, 가족부양 문제 등은 여전히 취업여성의 몫으로 남게 되어 이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맞벌이가족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대안적인 가족형태로 주말부부가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조기유학 붐과 함께 나타난 가족으로 일명 기러기가족이 있다. 이 중 주말부부가족은 생활수준의 향상, 노후대비, 자녀양육비 부담 등의 문제해결과, 기혼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의 증대,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러기가족은 자녀의 유학을 위해 부부가 별거하면서 생활하는 가족으로 대개의 경우 부인은 자녀와 함께 해외에서 일시적인 한부모가족으로, 그리고 남편은 이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기 위해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새로운 형태의 별거가족이다. 이들의 경우에도 사교육비 부담이나 학벌사회가 유지되는 현실이 계속 되

는 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률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며, 기업의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도의 이용률에 있어서도 매우 저조하여 법 자체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 차원에서도 남녀의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이나 모성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가제도 실시 등에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내의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외 보육에 있어서도 보육료 지원의 확대, 특수보육의 활성화, 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가족의 문제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되지 않고 양성 평등적인 양육책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맞벌이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맞벌이가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말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직장과 집안일을 양립가능하게 하는 육아 및 가사노동, 부부 혹은 가족관계의 친밀도, 주말부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원이 주어진다면 주말가족의 원활하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즉,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질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남성의 가사노동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보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서적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가처럼 즐겁게 요리하도록 가사노동의 인지적 요소를 발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부

터 가사노동수행을 유도하는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부부친밀도를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구성원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며 방학 혹은 휴가,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통해 의사소통 향상과 문제해결방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러기가족의 남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이 가족으로서 기능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 형성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동원 외, 2001).

자신들을 'MBA(Married, But, Available)', 또는 '한총련(한시적 총각 연합회)' 회원들이라 자조적으로 칭하고 있는 기러기가족의 아빠들은 외로움과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떨어져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들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러기가족의 자녀들은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이방인으로 소외될 수 있다. 특히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을 모국에서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8 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생활·정서적 측면의 단위로서의 전통적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현대가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성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활단위까지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 근대적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원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권위적인 사회질서의 거부, 민주·양성평등적 관계를 지향하는 방식의 하나로 다양한 가족의 등장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가족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 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또는 서구 사회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유형을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가족 중 동거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주97] 또한 가치관 또는 견해에 따라서는 과연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따라 정해진 틀 속에서 사회의 기본단위를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개별 구성원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복지를 위해 복지국가의 지향성이기 때문이다.

주97) 탈 근대적 가치관과 맥락을 같이하여 등장한 이들 가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 1 절 개념 및 특성

1. 미혼독신가족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핵심에는 미혼독신가족이 있다. 여기서 미혼과 독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독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홀로 사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독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혼자 몸'이며, 이에는 형제·자매가 없는 몸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독신'이라 함은 후자를 의미한다.

영어로 독신자를 뜻하는 말은 'unmarried', 'never-married', 'singlehood', 'single' 혹은 'celibacy' 등이 있다. 그런데 'unmarried' 혹은 'never-married'라는 용어는 결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며, 'singlehood' 혹은 'single'이라는 말은 순수한 미혼이나 간헐적인 동거뿐만 아니라 이혼·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주98] 그리고 'celibacy'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어원은 독일어와 앵글로 색슨어로 '완전한', '건장한'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종교적으로 독신으로 살기로 서약한 사람'을 뜻한다(옥귀주, 1999; Anderson, Carol & Stewart, 1994).[주99]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혼을 했는지를 법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기준과 함께 사실적 혼인관계(사실혼)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독신자의 개념은 다르게 정의된다. 동거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동거가족은 일정부분 사실혼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결혼한 가족과의 차별성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98) 혼자 산다고 해서 자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주99) 불어로 독신에 해당하는 말은 '셀리바떼르(celibataire)'이며, 이것은 '우아한', '화려한', '능력 있는'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용어임. 그리고 이 용어는 미혼, 이혼, 별거나 사별에 따른 독신과 아이가 있는 독신, 자녀가 없는 독신, 동거자, 자유결혼, 계약결혼 등 모든 독신 유형들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 프랑스의 생활연감을 펴낸 '제라르 메르메'는 독신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기적 섹스파트너를 가지지 않은 18세 이상의 남녀"라고 정의함(조선일보, 1997).

법적근거에 의하여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학자나 인구통계학자들에 의하면 미혼독신자란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안병철(1997)과 김정옥(1996)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 당사자가 아무리 기혼자라고 느끼더라도 결혼 의식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는 독신자일 뿐이며, 기혼자 역시 스스로를 아무리 독신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별 등 법적 기준으로 그 결혼이 와해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기혼자라고 본다.주100)

또한 결혼하지 않은 모든 연령층의 독신남녀를 '미혼독신자'라고 칭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독신이라는 것은 사회의 관념이나 개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독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몇 세부터 독신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결혼적령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결혼적령기라는 용어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나주101) 통상적으로 평균 초혼연령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약 27~30세가 미혼독신자의 기준연령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제의한다.주102)

어쨌든 '미혼독신자'란 결혼적령기를 지났으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일컫는데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 같다. 즉, 자신의 의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하겠다.주103)

주100) 이와는 달리 Austrom과 Hanel(1985)은 미혼독신자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함. 이 정의에 다르면 동거나 자유결혼과 같은 개인의 낭만적인 결합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독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됨.

주101) 결혼적령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주102) 김애순(1994)은 그의 저서에서 독신의 분기점이 되는 나이를 편의상 35세로 보았으며, 미혼독신자의 생활 실태에 대한 고찰을 한 옥귀주(1999)의 연구에서는 미혼독신 남성은 32.91, 여성의 경우는 29.77세를 중심으로 하여 남성은 32.91~34.91세까지 여성은 29.77~31.77까지를 독신 초기로, 남성의 경우 34.91 이상, 여성은 31.77 이상을 독신 후기로 정의하였음. 또한 언론기관에서는 20~40세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신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결혼 적령기를 남성은 29.6세 여성은 26.5세라고 하며 남성은 32.5세 이상, 여성은 29.2세 이상을 노총각, 노처녀로 지칭하였음(조선일보, 1997).

주103) 한편 옥귀주(1999)는 미혼독신자를 결혼 적령기를 지나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와 이혼·사별로 혼자 사는 사람, 동거나 자유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음.

미혼독신자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독신자의 유형을 선행연구에 의하여 살펴보면,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한다. 첫째, 법적인 혼인상태의 원인에 따른 분류, 둘째, 사실적인 혼인상태에 따른 분류, 셋째로 성관계를 맺는 기준에 따른 분류, 그리고 넷째로 독신에 대한 자신의 의사반영 여부와 기간 등이다.

첫째, 법적 혼인상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미혼, 이혼, 사별로 나뉠 수 있다. 김정옥(1996)과 김애순(1994)은 독신자의 유형을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 이혼한 사람, 그리고 별거자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미혼독신자는 다양한 유인요인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독신을 선택한 경우이고, 이혼과 사별은 결혼 후 압력요인에 의해서 독신을 선택한 경우이다.

둘째, 사실적인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독신의 유형을 분류하면 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동거는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실험결혼의 성격을 띠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이 형태는 공동기거, 공동취사 등을 통한 경제적 협력 또는 성욕충족이라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에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정조의 의무에 대한 법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계약결혼은 동거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부부관계에서처럼 얽매이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화하여 언제라도 한사람이 원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관계이다. 동성애는 같은 동성끼리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는 연대감이 강해 친밀감, 자율성, 평등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결혼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성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는 자유·유동적 또는 커플 교환, 개방된 커플, 폐쇄적 커플, 유사 결혼, 순응자 등의 5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자유·유동적 또는 커플교환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파트너를 교환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개방적 독신자이다. 개방된 커플은 원칙적으로는 한사람과 성관계를 갖지만 다른 사람과도 자유롭게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유형을 말한다. 폐쇄적인 커플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독점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유사결혼은 우정의 관계로

살다가 결혼 여부를 선택하여 애매한 관계로 있지 않는 유형이며, 순응자는 우정을 제외한 이성간의 성적인 교제를 완전히 끊고 영원히 외롭게 사는 유형을 말한다.

넷째, 독신에 대한 자기의사의 반영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의사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확고한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 등의 결혼 이외의 선택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기인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자기의사와 독신기간에 의해서는 유동적 독신, 결혼을 원하는 독신, 영구적인 독신, 후회하는 독신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되기도 하며, 일시적, 장기적,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으로 나뉘기도 한다.

여기서 '일시적인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가 단기간일 경우인데, 자발적·일시적 독신과 비자발적·일시적 독신이 있다. 이 중 '자발적·일시적 독신'은 독신자 스스로가 결혼계획을 가지고 인생설계나 결혼준비를 위하여 단기간 독신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일시적 독신'은 결혼의사는 있지만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경우와 이혼·사별을 한 독신자가 재혼이나 재결합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독신은 독신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자발적·장기적 독신과 비자발적·장기적 독신이 있다. '자발적·장기적 독신'은 처음부터 독신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사람과 종교적인 서약을 한 독신자가 포함된다. '비자발적·장기적 독신'은 결혼하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졌거나, 별거·이혼·사별로 인해 독신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옥귀주, 1999).

본 연구에서는 미혼독신자에 대한 정의를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개념화 한다. 이는 영어로는 "never married"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별·이혼으로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2. 동거가족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결혼유형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제도상의 편입을 거부하는 동거가족이 등장하였다. 동거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하여 살고 있는 형태 중 사실혼과는 달리 혼인의사가 없거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결합에 기반을 둔 관계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동거가족은 흔히 저소득층의 사실혼 가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학문적인 접근 또한 저소득층의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연구에서도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도시 빈민층의 자녀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을 나와서 주거비와 식비 등의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상경한 농촌 출신의 젊은 남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동거가족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움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경제적, 현실적 이유로 인해 시작한 동거는 단지 법적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생활면에서는 법적 부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가부장적 성격이 강화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더 심한 경우가 많았다(조정문·장상희, 2001).

이와는 달리 최근 등장하고 있는 동거가족은 기존의 동거가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경제적인 필요에서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통해 결혼생활을 미리 경험하여 결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의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으로 발생되는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동거의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젊은층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동거를 하는 구체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를 공유하는 것을 통한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주거를 공유함으로 생기는 편리함 때문에 동거하는 경우이다. 둘째, 남여가 함께 있길 원하는 경우이다. 셋째, 결혼을 하기 전 '시험혼'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향후 결혼시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경험

후 결혼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넷째, 결혼을 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결혼의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단지 법적·종교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는 부모들도 인정하며 일상사는 일반적인 부부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이러한 형태를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동거의 동기와 생활 양태를 볼 때 사실상 일반적인 부부와 다를 것이 없으며,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의 동거 부부들과 새롭게 출현하는 생활방식의 선택으로서의 동거 부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경석 외, 2001).

과거 우리나라에서 동거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제도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졌으나, 최근 대중매체 등에서 자주 소개되어짐으로서 낮선 가족유형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관에 기초한 계약동거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성 개방 풍조, 여성의 교육향상 및 사회참여 증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공동체가족

공동체가족이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기존의 가족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개별가족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동시에 핵가족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개인 및 가족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가족은 혈연의 한계를 넘어 의식주 생활과 가사노동의 공유, 집합적인 놀이·여가문화의 창조 등 개인의 집단·사회에 대한 대등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함께' 사는 생활양식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박민선, 1995).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가족을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공통의 가치관이나 인간적 유대 및 이념적 동지로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뒤르껭(Emile Durkheim)의 사회학적 공동체 이론은 콜버그의 정의인 공동체 접근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뒤르껭은 합리주의적 교육 환경으로서 가장

적합한 환경은 학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학교는 미분화되고 감정적인 가정과는 달리 합리주의적이며 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래 사회적 개념인 도덕을 교육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덕 교육론』에서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학교상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도덕이 규율정신, 사회집단에의 애착, 자율 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두 번째 요소인 집단에의 애착형성은 집단생활을 즐길 기회를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공동체가족의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은 듀이의 도덕발달에 대한 일반적 철학이다. 이는 소위 우리가 '책임적 이타주의'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가족의 기원은 원시 공산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최근의 움직임은 1960년대를 기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당시의 공동체가족은 '대안문화'로 제시된 것으로서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집단주거제도(group residential arrangement)는 산발적이지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형태는 대부분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이상과 관련이 있었고, 공동체 시도의 현재 흐름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들의 일차적인 의도는 가족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들의 주된 과업으로 신비적 또는 종교적 탐험, 경제적 협동 또는 합리적 주거의 재조직화 등이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공동주거 시도는 쉽사리 정의되거나 한계를 정하기 어렵지만 일차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어떻게 조직되었든 간에 집단주거는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부부가족이라는 한계 밖으로 확장되었다.

공동체가족의 형성원인은 세대간 문제, 가족문제, 여성문제, 놀이와 일의 가치문제, 정체감 문제, 인간혁명 문제 등의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대간의 문제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사회를 동경하면서 현실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진지한 의견의 반영으로서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문제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자녀의 인격이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빙자해서 상대

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점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여성문제 측면에서는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공동단위가 되어야만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산업화 이후의 핵가족에서 가사노동이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놀이와 일의 가치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득자체에만 매달리게 되어 오락과 휴식 등 건전한 놀이가 없다는 것이다. 놀이가 일만큼 중요하므로 공동체 생활에서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정체감의 측면에서 보면 경쟁적이며, 전문화된 사회에서 부분적인 일을 하는 개인은 정체감이 뚜렷하지 못하기에 확고하고 뚜렷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정체감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해진 관료조직, 군사제도 등의 앞에서 창조적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혁명이 필요하며, 이것의 수단으로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다.

엘리엇(Elliot, 1986)에 의하면 공동체가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특징에 차이가 있다. 우선 집합적 가구(collective household)는 개별가족들이 공동주거를 하며 자원과 시설, 그리고 활동을 다른 가족과 함께 나누는 형태이다. 이는 구조면에서는 분절적이고 집단과의 협상이 공식적이며, 계약적인 경향을 띠고, 핵가족을 연대단위로 한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 가구(communal household)로서 개인이 연대의 기본단위이고 가족간이 아니라 개인간에 공유가 이루어진다. 자아실현의 추구가 강하며, 집단과의 협상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박민선, 1995).

4. 동성애가족

본 연구에서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는 동성애가족을 논의하기 앞서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이란 자신이 어떤 성에게 끌리는 지를 의미한다. 개인적인 성 지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는 주장이다. 둘째, 개인이 자라난 환경적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위의 두 요소가 결합된 형태인 상호작용설이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어떠한 경우든 성 지향성은 아주 어릴 때 자신도 인식하기 전에 확립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이성애 성향이던 동성애 성향이던 성 지향성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이란 자신이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정의내리고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성 지향성이란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한 성적 취향과는 구별된다.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첫째, 성 지향성은 본인의 의식이나 자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성향이며, 이와는 달리 성 정체성은 그러한 성지향성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자각하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느냐의 것이다. 즉, 성 정체성은 '나는 이성애자', '나는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의식하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성 지향성이 본인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 반면, 성 정체성은 본인의 인식이나 의지가 동원되는 선택적 행위이다.

동성애(homosexuality)란 성 지향성 (sexual orientation)이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다. 즉, 동성애는 동성을 향한 지속적인 감정적·정서적·성적·신체적 끌림을 수반하며, 단순히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다거나 동성과의 성행위 자체를 동성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란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에게 감정적·정서적·성적·신체적으로 끌리는 성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이며, 동성이나 이성과의 어떤 개인적인 성적 경험이 반드시 그를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주104] 성행위 자체가 개인의 성지향성을 결정하

주104)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성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이성애자임에도 동성과 성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함. 실제로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지향성을 바꾸려고 이성과의 성적인 경험을 갖기도 하며, 군대, 교도소, 기숙사 등 이성과 차단된 환경에서 이성애자들이 경험하는 동성과의 성 접촉도 많이 있음은 우리 사회에서도 알려져 있음.

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끌림과 동성과의 성적인 경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 지향성을 무시한 채 동성과의 성 행위 자체를 동성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동성애'와 '동성연애'의 개념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의 사람에게 끌리는 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이성애자'와 상반된 개념이다.

동성애 또는 동성애가족의 생활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애 부부의 지속기간은 일반 부부보다 짧고, 독점적·배타적 성격이 덜하다. 이성애가족과 마찬가지로 동성애가족 역시 전형적인 생활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관계유형이 나타난다.주105) 보통 동성애 부부는 자녀가 없지만, 이전 이성애 부부사이에서 난 자녀나 인공수정,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있다. 동성애가족의 부모역할은 이성애가족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아동 발달상의 어려운 점은 가족내적인 것보다 사회적 지지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2001b).

남성 동성애 부부와 여성 동성애 부부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보다 유대관계의 지속기간이 더 길고, 정서적 유대 및 의존성이 보다 강한 편이다. 또한 여성 동성애 부부에서는 남성 동성애를 비롯한 여느 부부들과 달리 경제적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부부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보다는 누가 일할 권리를 갖느냐에 이들 부부들은 더 관심을 두며, 남성 동성애 부부와 달리 성역할 구분이 명확치 않고 가사분담 등의 면에서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양성과 변화에 많은 장점을 지닌 이들 동성애 부부도 이성애 부부처럼 두 당사자간의 대립과 오해, 또 주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과 긴장 등을 경험한다. 또

주105) 남성 동성애자들의 관계는 이성애결혼의 남녀역할분업이 그대로 재현되는 동성애결혼, 두 사람이 자율성 또는 관계의 비밀성을 위해 따로 사는 남자친구 관계, 그리고 가사와 소득 등 모든 것을 공유하며 둘만의 새로운 생활유형을 갖고자 하는 동성 파트너 두 사람이 의존성의 면에서 성인-자녀관계를 맺는 융통적·양육적인 관계, 대등함과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협상적·평등적 관계형 세 가지로 구분됨.

한 이들 가족은 그 존재 자체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즉, 사회적인 인정의 부재는 동성애가족의 결속과 유지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의 결여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확신 및 관리를 저해하기 때문이다(Elliot, 1986; 김태현, 1992; 전귀연·구순주,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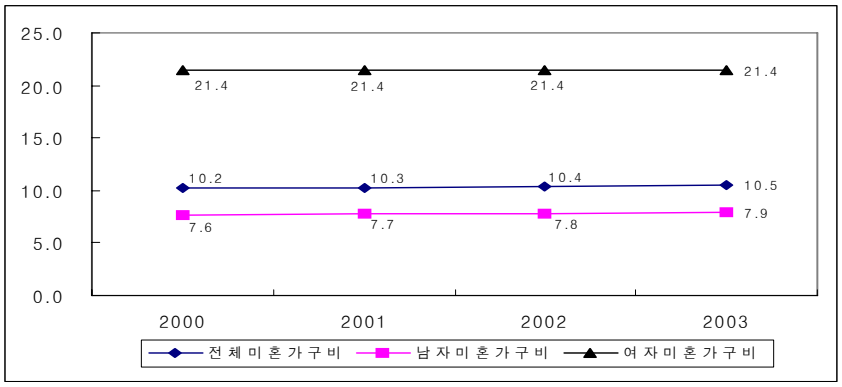
제 2 절 현황 및 문제점

1. 미혼독신가족

탈 근대적 가족은 대부분 정확한 통계수치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미혼독신가족의 경우도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독신가구수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의 구성 비율이 변화되면서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1995)의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독신가구는 전체가구 구성 비율에서 1965년 2.32%, 1975년 4.23%. 1980년 4.80%, 1985년에는 6.91%,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전체 가구에서의 독신가구 비율이 12.7%이였으며, 한 가지 특이할만한 사항은 미혼 여성의 비율이다. 전체 미혼가구의 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6%임에 비해 여성은 2002년, 2003년은 동일하게 21.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통계청, 1995).

［그림 8-1］ 미혼가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표 8-1〉 가주구의 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가구

(단위: 가구수)

	시점	계	유배우가구	미혼가구	미혼가구 비율(%)
계	2000	14,608,576	10,962,782	1,487,251	10.2
	2001	14,834,242	11,083,209	1,524,928	10.3
	2002	15,063,671	11,202,029	1,564,456	10.4
	2003	15,297,892	11,319,698	1,606,108	10.5
남자	2000	11,900,732	10,513,977	907,900	7.6
	2001	12,058,981	10,625,026	930,827	7.7
	2002	12,218,295	10,734,262	955,118	7.8
	2003	12,379,414	10,842,119	980,960	7.9
여자	2000	2,707,844	448,806	579,352	21.4
	2001	2,775,261	458.183	594,102	21.4
	2002	2,845,376	467,767	609,339	21.4
	2003	2,918,477	477,579	625,147	21.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미혼독신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의 경우가 비슷하다. 그리고 초기의 미혼독신자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서인 경우가, 후기의 미혼독신자는 자발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미혼독신자는 전체적으로 독신생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혼독신자에게 생활의 만족스런 부분은 '생활에서의 자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여가나 취미생활에의 투자, 융통성과 변화 있는 삶, 자율성, 일과 직업에의 전념, 의사결정의 선택권, 가정·자녀의 구속이나 책임탈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미혼독신자는 고졸이하 혹은 대퇴·독신자에 비해, 그리고 전문직의 미혼독신자는 일반직이나 무직의 미혼독신자에 비하여 일·직업에의 전념을 만족 요인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정이나 가족의 중압감 탈피 등으로 인한 만족 수준이 낮았다. 후기의 미혼독신자는 초기의 미혼독신자에 비해 생활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혹은 자신과 일에 대한 전념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았다(박충선, 2001).

미혼독신자의 경제생활은 절반 이상(58.7%)이 월평균 수입 100만원 정도이었으며, 남성 미혼독신자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았다. 미혼독신자 중의 13.9%는 거주주택이 본인의 소유이었고, 나머지는 월세, 전세 혹은 가족이나 친척의 소유였다. 또한, 남성 미혼독신자의 경우 독신후기의 미혼독신자, 수입이 많은 미혼독신자가 상대적으로 주거장소가 본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았다. 그 반대의 경우인 미혼초기의 경우, 수입이 적은 경우의 미혼독신자는 주거장소가 가족이나 친척의 소유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입이 많은 미혼독신자는 적은 미혼독신자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수입이 거의 없는 미혼독신자가 수입이 약간 있는 미혼독신자보다 오히려 재산이 많았다(심영, 2002).

한국사회에서 탈 근대적 가족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활동도 활발해지는 면이 보이나, 여전히 사회적 소수로 사회적 편견과 가족구성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독신자의 불만족은 다음과 같은 것이 보고되었다. 첫째, 미혼독신자는 전체적으로 생활에의 불만족스런 요인으로서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시선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이 부모님의 결혼하라는

압력, 고독감과 외로움, 미래 불안, 곤경에 처했을 때, 성적인 편견, 경제적인 곤란, 성욕 해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주위의 압력, 일상생활에의 곤란, 성적인 욕구의 해결 문제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미혼독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옥귀주, 1999).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독신생활의 어려운 점은 애착을 형성할 대상이 없다는 것과 결혼한 가정보다 평균 소득이 낮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결혼이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대부분위 사회생활이 이들 위주로 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독립성의 대가로서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김시업, 1999).

여가생활에 있어서 남성 미혼독신자는 고독할 때 술을 선호하며, 여성 미혼독신자는 고독할 때 친구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 미혼독신자의 친교 생활에 있어서는 후기의 미혼독신자가 혼자 사는 경향이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의 수가 많았고, 독신후기의 사람일수록 혹은 수입이 많을수록 이성 친구의 수가 더 많았다. 미혼독신자의 성생활은 대부분 성관계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1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일수록, 자발적 미혼독신자일수록 성관계 상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옥귀주, 1999).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미혼 독신 생활을 더 불만족스러워하며, 그리고 자발적인 미혼자가 비자발적 미혼자에 비하여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사회에서 독신자를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편견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나이가 넘은 미혼남성의 경우 가정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하고 능력이 축소되어 보인다.

또한 남성들은 독신을 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독신이 된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여성 미혼독신자들은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과거에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회적으로 남성의 지위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를 정의하기 때문이다(Schwartzberg, Berliner & Jacob, 1995). 제도적인 압박감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심했으나, 점차 여성의 인식이 달라지나 남성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미혼독신자들은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몸이 아플 때에 대한 대비라든지,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충선, 2002).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독신가구의 32.5%가 적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보험, 예금, 연금의 순으로 나타났다(심영, 2002). 2002년 신은식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독신 여성의 경우 거의 모두가(96%)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노후에 대한 설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 노후에 대한 대비로서 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현실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이나 일의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혼독신 여성의 경우는 심리·정서적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는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의 순으로 나타났다(신은식, 2002).

2. 공동체가족

우리나라에서 공동체가족 시도[주106]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1975년 시작된 의정부의 풀무원과 1977년 시작된 부천의 복음자리 마을 등이 그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들어서 공동체가족시도는 입시경쟁으로서의 과거교육을 반성하며 새로운 교육을 스스로 일으키고자 시작된 대안학교운동과 병행되고 있으며,[주107] 한편 IMF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귀농현상도

주106) 서구의 경우 공동체가족 시도의 전통은 오래됐는데, 1840년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가족을 실험한 미국의 존 험프리 노이즈(John Humphrey Noyes)가 창시한 오네이더(Oneida)공동체가 최초의 것임. 그 외 자녀의 공동양육과 여성의 전일적인 노동참여를 위주로 한 러시아 실험가족, 그리고 집단교육과 집단 생산, 소비를 내용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키브츠가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한국에도 소개된 영국의 다벨 브루더호프 공동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한겨레신문, 1999. 3. 8.).

주107) 서울 종로구의 '자율학교-물꼬'의 경우 대안교육을 꿈꾸는 대여섯 명의 개인들이 공동의

이러한 공동체운동, 공동체가족 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겨레신문, 1999). 공동체가족을 범주화하여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 공동체를 핵가족의 보완을 위한 가족모임, 한지붕 아래의 합동가족, 협동조합 공동체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최경석 외, 2001).

핵가족의 보완을 위한 가족모임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물질적인 풍요와는 달리 핵가족 단위의 고립과 소외와 단절을 피부로 느끼면서 좋은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모임으로서 결성된 것이다. 이 모임은 몇몇의 핵가족이 모여서 부모 자녀 간, 부부 간 등의 가정 내 화합과 이해를 구하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나의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 모임이 친목모임과 다른 점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이를 실천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모임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한 울타리 가족 모임', '한자녀 가족회',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을 들 수 있다.

한 지붕 아래의 합동가족은 생활의 일부만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개인적 성향이 다를 수 있는 의식주는 각자가 해결하고 그 외의 생활을 공동의 목표와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인 성향의 공동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생활과 주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나, 육아공동체, 농촌공동체 또는 생산자 공동체, 건강한 가족이 장애인 혹은 노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도 존재한다. 협동조합공동체는 특정한 관심사 특히나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가와 소비자들의 연결해주면서 등장하였다. 이는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여 생기는 이익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의 효과가 있다. '함께 가는 생협',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신촌 공동 육아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가족은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이 부부가 아닌 집단을 근거로 하기에 친밀감과 보살핌이 확대되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두터워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만들었고, 경기 화성군의 야마기시 마을, 전북 부안군의 한울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생태마을 등은 여러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일종의 '대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음(주간동아, 제221호, 2000. 2. 10.).

즉, 부부 관계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충족되며, 갈등이 집단에 의하여 중재된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많은데 우선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에 있어 내면화된 규범보다는 끊임없는 협상과 재협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적 통제력의 결여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다. 또 성인의 자유·자아실현이라는 목표와 안정된 애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요구사이에 긴장이 있으며, 남녀평등 내지 역할재규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집합적 가구의 경우 소득을 제외한 소비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단위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공동체적 가구의 경우엔 (공동체의 참여와 탈퇴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기에 편모, 노인,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등 잠재적 부양성원이 소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석 외, 2001). 이러한 경우 공동체 구성원간의 정서적·경제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가족의 시도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젊은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들이 무엇보다 가치의 다원화,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새로운 가족생활, 특히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의 수단이자 방식으로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최경석 외, 2001).

3. 동성애가족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주108]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논의와 활동은 아직 소수자에 대한 인권운동의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 동성애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강한 유교적 전통을 이유로 한 부정적 입

주108) 같은 해 최초의 동성애자 모임이 결성되고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의 동아리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활동이 활발해졌음. 최근엔 인터넷과 통신 등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자기 및 자기활동 공개, 즉, '탈음지'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임.

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성비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독특한 인구학적 특징은 세계적인 사회 문화적 변동의 압력과 함께 동성애가족의 증가를 가져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전귀연·구순주, 1998).

다음은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주109)

가. 1994년('친구사이'와 '끼리끼리'의 탄생)

1993년 12월에 결성된 최초의 동성애 그룹인 '초동회'가 해체되었다.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제 뿌리가 깊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활동 방식과 내용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로 낙원동과 같이 자체 커뮤니티가 있었던 게이들은 '친구사이'를 조직했지만, 레즈비언은 자체조직을 만들 역량과 인원이 부족했다. 초동회 창립 멤버인 전해성씨는 친구사이 소식지에 홍보를 하는 등 10개월을 기다려 5명의 레즈비언과 뜻을 합쳐 '끼리끼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나. 1995~1996년(성정치학과 동성애자 인권운동)

1995년 서울대와 연세대에 동성애자 모임이 발족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을 비롯한 성담론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미셸 푸코, 성 정치학등과 함께 동성애 담론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1995년 6월엔 4개 단체가 연대하여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1996년의 PC 통신상의 동성애 논쟁이나 커뮤니티 등장으로 게이바 혹은 인권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PC통신으로 다른 동성애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주109) 한채윤이 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두 번째 커밍아웃' 토론회에서 한채윤님이 발표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 10년 연도별 총평을 요약·정리한 것임.

다. 1997~1998년(거리로 나온 동성애자)

1997년에 1월 14일은 “한국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거리시위를 한 날”로 당시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통과되자 노동계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그 시위에 용기 있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깃발과 유인물을 들고 참여했다. 동성애자 모임은 PC통신모임, 153모임, 인권운동모임, 대학모임 등으로 나누어지고, 단체명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전국적으로 30개에 달했다. PC통신 모임들도 정식 동호회로 승격되었고, 전국의 동성애자 단체 23개가 모여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라. 1999~2000년(인터넷 천하 속 홍석천 커밍아웃)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으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활동하면서 ‘엑스존’, ‘강아지방’, ‘블루디스’, ‘tgnet’ 등이 대표적 동성애 사이트로 떠올랐다.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2000년에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동성애자 사이트는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2000년도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동성애자 활동가들은 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커밍아웃에 의한 불이익을 막아보고자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다.

마. 2001~2002년(하리수를 넘어)

2001년 트랜스젠더 TV CF모델로 성공을 거두면서 ‘하리수 신드롬’이 불어닥쳤고, 이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없애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국내여성 동성애자 10명 중 3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자해나 자살을 생각·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3%는 부정적인 인식 등을 이유로 ‘커밍아웃 계

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사회의 음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110] 또한 한국인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에서 동성애를 획득된 성질의 것이며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솜자리 피쿨텅, 2004), 동성애자들은 약 5%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은 전혀 받아 본적이 없었고, 또 정보를 접하더라도 TV에 국한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기 힘들 것이며 밝히기를 꺼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를 법적·제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소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더 수용적이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교육을 더 많이 받아 본 것은 아니나,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냈다(왕신수, 2004).

또한 동성애 부부 및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인권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2004)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레즈비언 50% 이상이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부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주111] 레즈비언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성교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중 50% 이상은 10대에 처음으로 동성교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6명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0%는 '어쩔 수 없이', '레즈비언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 이성교제를 했다고 답했다. 또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유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조직 내 불이익 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주110) 2004년 웹저널 '일다(www.ildaro.com)'에 기재된 내용임.
주111) 2004년 3월 웹저널 '일다(www.ildaro.com)'에 발표됨.

비율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인권운동연구소 관계자는 “조사 결과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 피해 등 인권침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04). 한편 동성애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은경, 2001b)에서는 동성애자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 및 친구의 동성애 수용정도와 대처 방식이 심리적 우울, 불안, 신체화 등과의 관련을 살펴보았다. 우울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관련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신체화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걱정,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에 대한 염려, 주위 사람들이 에이즈라고 간주되는 질병상태를 겪고 있을 때의 반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인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이성애자들에게 결혼, 부부관계의 갈등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관계는 사회 제도에서 맺어지지 않으며 언약의 관계로 동거와 같은 형태를 취하거나 독신으로 지내며 사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볼 수 있다. 동성애자의 연인관계 스트레스는 동성애자의 애인관계를 일탈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 동성애 드러내기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갈등에 가중되어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동성애에 대한 수용정도도 불안, 신체화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 변수로 나타났다.

동성애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회피적 방안이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음주, 흡연 등의 행동을 통해 긴장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대처방안은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적 안녕감 중에 자기 수용을 설명하는 변수는 회피적 대처, 사회적 지지, 이성애자 친구들의 동성애 수용정도로 나타났다(김은경, 2001b).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도움을 받기

에는 부족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재판부에서 20여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애 부부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주112) 이는 동성애자의 인권이 보호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레즈비언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어떤 피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고자 할 때, 유관법률과 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성소수자들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한다.

제 3 절 외국의 사회적 지원

1. 미혼독신가족

탈 근대적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외국의 경우도 거의 없다. 미혼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 독신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

미혼독신가족의 경우 미국의 전체 가족 형태 중 1인 독신가구의 비율은 1970년에는 19%, 1982년에는 27%로 증가한 반면, 기혼가족의 비율은 71%에서 59%로 줄었다. 1986년 미국의 18세 이상의 여성 중 15%, 남성 중 21%가 미혼 독신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사별로 독신이 된 사람은 미혼독신여성의 37%, 미혼독신남성의 30%를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한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의 수는 <표 8-2>와 같다(U.S. Census Bureau, 2000, 2003). 2002년 현재 미국의 미혼 독신 남성은 27.9%이며, 여성은 21.2%이다.

1인 독신 가구수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1960년대 20%에서 1980년에는 33%로 증가하였고, 프랑스는 1891년에

주112) 2004년 웹저널 '일다(www.ildaro.com)'에 기재된 내용임.

24%였다. 일본 후생성의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1인 독신가구의 수가 1955년에는 3.4% 1975년에는 13.7%로 증가하였다고 한다(김현주·변화순, 1990).

〈표 8-2〉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중의 미혼독신

연도	전체 성인(명)	미혼 성인(명)	미혼성인(%)	미혼남(%)	미혼여(%)
1980	159,500,000	32,300,000	34.4	23.8	17.1
1990	181,800,000	40,400,000	38.1	25.8	18.9
1995	191,600,000	43,900,000	39.1	26.8	19.4
2000	201,762,000	48,200,000	40.4	27.0	21.1
2002	209,300,000	51,100,000	24.4	27.9	21.2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Report*, 2000, 2003

미혼독신가족의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입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2002년 보고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남자의 경우 50%이상이 지난해에 최소 2만 달러를 벌었으며,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남성의 경우는 8명중 1명이 2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패턴은 35세에서 44세의 남자에게도 적용되어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 비해 더 수입이 높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릴 때 결혼한 여성이 결혼 안한 여성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1년 15세에서 24세의 연령 대에서 수입이 이만달러 이상인 여성은 결혼을 한 경우는 18%, 결혼하지 않은 여성 중에는 9%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5세에서 44세의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결혼한 여성에 비해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이에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수입 등으로 금전적인 압력을 덜 받아서 전업 직장인의 수가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U.S. Census Bureau, 2003).

미국의 경우 미혼독신자는 건강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위험이 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혼인 사람은 기혼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 보험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결혼한 사람들의 20.7%정도는 48개월 동안 최소

한 1개월은 건강 보험을 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6%, 결혼을 한 적인 없는 미혼은 4.6%였다(U.S. Census Bureau, 2000).

또한 미혼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인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을 노리거나,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2000년 미국에서 12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경우는 미혼이 43.3%, 기혼이 10.6%, 이혼이나 별거가 30.7%, 미망인이 7.1%이다. 전반적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미혼, 이혼, 별거 중인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2 참조).

또한 미혼의 경우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갖는다. 2000년 현재 미국에서는 미혼독신자가 입양을 한 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110,862명으로 전체의 4.8%이며, 여성의 경우는 21,785명으로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00). 그렇지만 갈수록 미혼독신가족이 증가하고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실상 지원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표 8-3〉 12세 이상의 성인의 범죄에 대한 노출 정도

혼인상태	인구(명)	전체 비율(%)	강간/성추행 (%)	강도(%)	성추행(%)		
					전체	정도 심함	단순
미혼	74,029,810	43.3	2.6	3.7	37.0	7.3	29.7
기혼	117,296,790	10.6	0.2	0.9	9.5	2.2	7.2
이혼/별거	24,768,200	30.7	1.1	4.0	25.6	5.9	19.2
미망인	13,699,370	7.1	0.3	.0	4.8	2.2	2.7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Report*, 2000.

2. 동거가족

동거가족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Bumpass, Sweet, and Cherlin, 1991)에 의하면 동거경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동거가족은 교

육수준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에서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거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여 1년 이하인 경우가 36%, 1~2년인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자의 40%가 자녀를 두고 있어서 이들의 동거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생활에 더 가까움을 보여준다. 동거자의 80% 정도가 현 동거자와 결혼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동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에 적합한 상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점, 생활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보다 자유롭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거 자체를 수용하는 층도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한 경우도 20%가 되며, 동거자의 20% 정도가 결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Bumpass, Sweet and Cherlin, 1991).

또한 동거자들은 전통적인 결혼생활자들과는 다른 태도나 가치관을 표방하기도 하기도 한다. Forste와 Tanfer의 연구(1996)에 의하면, 20~37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파트너가 아닌 남자와의 성관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데이트에서는 18%, 동거에서는 20%, 결혼에서는 4%로 나타났다. 그러나 Brown과 Booth(1996)는 동거자들을 결혼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결혼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결혼한 부부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어 사실혼관계의 동거가족과 선택적 동거가족이 혼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거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동거관계가 정서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거관계의 불안정성은 동거당사자들의 우울증 증세를 유발하기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혼인관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 동거관계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혼인관계에서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알콜 중독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행동과 연루될 가능성 또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거관계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부모를 가진 아동들은 교우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집중력 장애 등 정서발달 및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학업성취정도 또한 한부모 또는 생식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에 비하여 동거부모의 자녀가 낮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동거가족내의 아동은 비동거가족의 아동과 달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

기 빈곤 경험율이 비동거가족의 아동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사회에는 동거에 대하여 매우 수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인의 동거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6%가 동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동거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동거가족의 지속적 증가를 짐작케 하였다(최경석 외, 2001).

이러한 동거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혼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가족단위로 인정하여, 일반적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3. 공동체가족

공동체가족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많은 공동체가 설립되었으며, 그 변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흐름은 종교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던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16세기의 재세례주의자, 17세기의 급진적 청교도, 18세기의 복음주의 운동가와 경건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급진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사회적 종교적 구원은 기독교적 공동체의 재건에 있다고 믿었다. 개인적인 특권이나, 부, 권위 등은 인정하지 않고, 허레 허식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착취 등을 죄악으로 여겼으므로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사랑을 확신시키는 생활을 하였다.

두 번째 흐름은 1820년부터 1930년까지 이르는데, 특히 1840년대에 활발했던 정치·경제적인 성격을 띤 공동체들이다. 이들은 산업혁명에 뒤이어 나타난 기계화, 인구과밀, 빈곤현상과 더불어 출현하였으며,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공장체제의 해악을 피할 수 있는 소규모 사회주의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세번째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현하여 1960년대에 특히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소외와 고독, 즉 사회적 고립과 인간의 내적 분열을 중점적 비판하면서, 현대사회가 사람들을 타인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

본적 본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위사회가 강요하는 고립과 소외를 거부하고 개개인이 동료들과 가까이 접촉함으로써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미국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정순, 1986).

미국 최초의 도시공동체는 히피적인 자유분방한 학생이 사는 구역에서 시작되어 교외나 준교외로 확대되었다. 공동체의 생활양식은 공개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남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의 개인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도시공동체는 이방인이 모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도시 안에 한 가족을 창조하고 서로의 사적인 생활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특수한 결합체였다(R. M. Kanter, 1979; 유영주, 1997 재인용).

도시공동체는 젊은 전문직업인, 편부모, 일부 중산층 가족으로 구성된 8~10명 정도의 소규모 협동적 가구로 이루어졌다. 집단적 세대, 공유된 가정, 확대된 가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친교이외에는 어떤 특별활동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공동체는 친밀성 외에 어떠한 특수한 가치관도 부재상태이며, 저녁 주말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공유하지 않고, 구성원은 다른 직장인과 동일하게 도시 일터로 출근을 하고 있다. 핵가족의 위기는 공동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문제는 도시공동체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결과적으로 전통적 가족이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다(R. M. Kanter, 1979; 유영주, 1997 재인용).

농촌에 정착한 전형적인 공동체의 예로 Twin oaks commune이 있다. 이는 평등과 정의를 가족공동체의 이념으로 삼고 1966년 8명의 20대 청년들로 시작되어 점차 컴퓨터 과학자를 위시하여 더 많은 직업인들이 참여함과 동시에 농장을 구입하여 1971년에는 36명의 구성원을 수용하는 대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공동체 구성원은 1~2명의 자녀를 둔 부부들의 가족, 모자가족 및 독신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농촌 공동체는 여러 핵가족이 모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여 온정적인 관계를 누리며 핵가족 속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였다(김윤, 1983; 이효재, 1993).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족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이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농장으로서 생산·소비·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 소유·평등 등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다기능 공동체이다(Blasi et al, 1984; 이효재, 1988 재인용). 1910년 창설된 첫 키부츠 Deggnia Aleph은 단순히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시작하여 근 10년에 걸친 구조변동을 통해 1919년 소비·생산·육아를 모두 공유하는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키부츠 공동체는 1990년 현재 265개로 인구는 126,000가량이며, 신설 키부츠의 경우 한 키부츠당 성인은 40명부터 약 천명에 이르는 키부츠가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키부츠는 성인이 300~400명, 전체 인구가 500~65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이러한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유형의 협동적 농촌부락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공동생활의 범위나 집단적 소유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키부츠(kibbutz)는 공동체로 극소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이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작업은 협동적으로 조직화되어, 어린이 양육을 포함함 생활서비스조차도 상당정도 협동적으로 짜여져 있는 농촌부락으로 '종합적인 협동'의 표본이다(정해은, 1993).

이스라엘 키부츠의 생산 활동은 공동체 산하의 자율적인 지부에서 조직된다. 지부는 대부분 농업지부이지만, 60년대부터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지금은 공동체가 대부분 1개 이상의 산업지부를 가지고 있다. 1987년에는 355개 공장이 있었으며, 그중 249개가 5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종업원 규모는 공장의 70%가 50명 미만이고 21개만이 100명을 넘었다.

키부츠의 공동체는 공동소유와 사회적 소유를 혼합한 독특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동소유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기본원리 아래 생산수단과 소비·교육·문화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구성원은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일을 통하여 소유권을 갖고, 한편 소유권은 사회적 소유의 원리로 제한 받아서 공동체는 사용권만 갖고 처분권은 공동체연맹이 보유한다. 이에 따라 구성원이 소유하지만 처분하거나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원 다수가 키부츠의 해체를 결정하면 순 자산은 노동자총동맹(Histadrut)에 가맹한 지주회사 Hevrat Ovdim에 귀속된다. 따라서 주식도 없고, 조합비 또는 가입비도

없으며, 성원들의 권리는 협동 조합적 이상을 가진 노동자에게 개방된다. 이러한 소유규조는 공장에도 적용되어 모든 소득은 공동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두 가지 특성의 소유구조가 참여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노동조직의 소외적 성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동체 민주주의모형은 경제민주주의로 확장되었다.

공동체가족의 경우 그 목적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특별히 언급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경우 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국가의 공동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공적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체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해체가 쉽다는 문제가 있다.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문제해결의 방법이나 현실의 대안으로서 생각하기에 환상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기존 가족에 대한 기대를 공동체에 걸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나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4. 동성애가족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는 성인의 4%정도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하는 등 동성결혼이 갖는 '탈가정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Kinsey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성인 남성의 37%와 여성의 20%가 동성과의 성애적인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전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경우 7%, 남성의 경우 13%라고 한다(Kinsey, Pomeroy, and Martin, 1948; Kinsey, Pomeroy, and Martin, and Gebhard, 1953; 최경석 외, 2000 재인용).주113)

주113) 킨제이 보고서가 1938년과 1948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률 표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인구가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1970년과 1980년의 자료에는 성인인구의 3% 내지 6% 정도가 동성애인구로 드러났음(Allen and Demo, 1995; 최경석 외, 2000 재인용).

동성혼인에 대해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1989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덴마크가 '동성커플 등록에 관한 법률(Law on Registered Partnership; Act 372 of 1989)'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였다. 이 법은 부부관계, 친자관계, 상속, 사회복지, 세금, 연금 등의 영역에서 동성커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으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다.

덴마크의 이러한 입법에 영향으로 유럽 5개국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에는 노르웨이, 1995년에는 스웨덴, 1996년에는 아이슬란드, 1998년에는 네덜란드, 1999년 프랑스 등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노르웨이의 동성커플 등록에 관한 법 제 4조는 등록한 동성커플은 혼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입양, 의학기술을 빌린 인공수정, 교회에서의 결혼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1996년에 '동성커플등록에 관한 법(Registered Partnership)'을 제정하여 동성커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성커플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며 생부모가 사망한 후 계부모는 그 자녀를 단독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입양과 인공수정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동성커플 권리 인정의 폭을 좁게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프랑스에서도 1999년 10월 많은 반대와 논란 끝에 동성커플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이른바 시민연대협약(Pact of Civil Solidarity: POCS)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이성 혹은 동성간의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을 받으며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년 11월 하원에서 동성커플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동성커플 등록에 관한 법(life partnership)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동성 커플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어 현재 사실상 부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커플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등록된 동성커플에게 부부와 똑같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동성커플도 의료보험, 연금 등에서 정상적인 부부들과 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동성커플 간에도 성(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에서는 동성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 관계를 인정하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의 대법원은 1999년 10월 '동성애자는 사망한 커플 명의의 국가보조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동성커플간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원래 국가보조인대 아파트는 배우자나 가족구성원들만이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동성커플에게도 이성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EU의 회원국이 결손가정이나 미혼 부부, 동성 커플에게 제도적 금전상의 권리, 사회적 권리 등에서 전통적인 이성부부나 가정이 누리는 것과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은 유럽 및 미국에까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동성커플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개의 미국인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Andrew & Dionne(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50%정도는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38%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48%가 부정적, 39%가 호의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연령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젊은 연령층이 좀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가장 호의적인 연령층은 25~34세로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45%가 부정적, 39%가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37%가 부정적, 48%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45세 이상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62%가 부정적, 27%가 호의적이며,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61%가 부정적, 26%가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2%가 '그들의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는 '태어났을 때부터의 요인', 14%는 '자라온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 지향성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

문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다' 42%, '바뀔 수 없다' 42%로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가 16%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56%는 남성 동성애자들과 여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가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10명중에 4명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위배된다고 대답하였다.

동성애가족의 경우 기본적인 인권 문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있으며,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 등이 있다. 동성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제 4 절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에서 미혼독신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동거가족은 사실혼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가족과 같은 지원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에서 동등한 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약하며, 이들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제 5 절 시사점

정책적으로 요보호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원은 일반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동거가족을 제외한 미혼독신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의 경우는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단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의 부정

적 편견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독신가족 중 여성독신자의 경우 제도적 불이익이 많으며, 남성독신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독신자의 정서적 측면과 발달적인 욕구와의 부합을 위해 입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미혼독신자의 경우 애착의 대상이 없음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혼독신자에게도 입양의 기회를 주고 있기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서 입양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미혼독신자에게 걸림돌 중의 하나는 호주제이다. 호주제로 인해서 여성독신자들은 호주로 없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지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미혼독신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즉, 노년의 자신의 생활이다. 연금이나 저축을 통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줄고 우울한 노년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여성독신자의 경우 평균 수명이 길고 미비한 연금이나 기타 복지지원을 받으며, 남성중심의 복지정책 하에서 여성과 독신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충선, 2002).

법적인 측면에서 '신고혼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동거가족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윤리관에 대한 도전이며 혼인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남녀관계가 의외로 많고 동거당사자들과 그들 간에 출생한 자녀의 삶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동거가족의 실체를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동체가족의 경우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자발적·자율적 성향이 짙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동성애가족의 경우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들은 일반인

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며 정서적 고립과 직장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동성애 부부의 경우 경제·정서적 공동 단위로서 사실혼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부부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부부로서의 최소한의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9 장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사고의 중심이 개인이 아닌 가족이었다. 가족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되더라도 참아야 했으며 가족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족은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능을 강조해왔으며 이는 양육과 부양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구의 소규모화, 구조의 다양화, 기능의 변화 등이 보이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소자녀 핵가족을, 여성주의 성공은 세대간의 관계를 부계중심에서 양계중심으로(옥선화, 1990), 그리고 소자녀 핵가족의 확산은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가족의 전통을 바꾸어놓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라고 우려하는 비관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양옥경, 2000; 임인숙, 1999; 정광조, 1996). 이와 같이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변화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변화에 대처하면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므로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요소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건 조성에도 저해요소가 된다는 입장에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의 개입은 가족정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며,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우선 국가가 가족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틀로 마련한 가

족법이다. 그러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가족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견해이다(전광석, 1996). 반면에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 그 내용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유희일 외, 1999).

가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유지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족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정부가 가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코 정부가 가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가족에 대한 정책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 셋째, 국가의 정책은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넷째, 정부가 개입하게 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정광조, 1996) 등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정도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즉, 가족의 모습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진 후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어떻게 가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중히 여기고, 어떤 기능을 후원하며, 어떤 기능에 개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해 어떤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의 지원체계이외에 어떤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충되어야 하는지 그 지원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사회적 지원체계

1. 가족구조

한국가족의 구조상 변화를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표 1>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대별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도에 가장 보편적이던 2세대 가구의 비율은 거의 70%에 이르렀으나 부부가족, 1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2000년도 2세대 가구의 비율은 60%대로 감소하였다. 물론 아직도 부모 중 최소 1인과 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이 56%를 차지하여 가족구조의 형태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51.7%에서 48.2%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감소 역시 눈에 띄는데, 재혼의 보편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줄어든다고 해석하려고 하니 부부와 자녀의 비율도 함께 줄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 이혼과 함께 양육아동을 포기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같은 변화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부부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족의 사회적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자칫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의 사회적 요구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부부가족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0년 6.3%에 비해 20년 만인 2000년에는 2배인 12.3%로 증가하였다. 이보다 더 급속한 증가추세를 부이는 것이 1인 단독가구이다. 1980년 4.8%에서 2000년에는 3배인 15.5%로 증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혈연 가구의 증가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증가하는가하면 감소하더니 2000년 현재는 1980년에 비해 감소한 상태이다.

이 부분의 증가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들을 가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한다. 부부가

족, 1인가구, 비혈연가구 등은 가족인가, 가구인가를 비롯하여 이들을 가족의 단위로 지원해야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개인으로 지원해야하는가의 논의에 봉착하게 한다.

〈표 9-1〉 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가족구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세대	부부가족		4.8	6.3	7.1	8.3	10.8	12.3
	기타		1.9	2.3	2.5	2.4	1.8	1.9
2세대	부부+자녀		51.7	53.0	52.8	51.9	50.4	48.2
	한부모 가구	한부가구	11.2	9.3	8.9	7.8	1.3	1.5
		모자가구					6.1	6.3
	부부+양친		0.1	0.2	0.2	0.2	0.2	0.2
	부부+한부모		0.4	0.4	0.5	0.6	0.7	0.8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1	2.3	2.3	1.7	1.0	0.6
	기타	조부모+손자녀	3.4	3.2	2.3	4.0	0.3	0.3
		기타					3.3	2.8
3세대	부부+자녀+양친		1.9	1.9	1.9	1.7	1.3	1.1
	부부+자녀+한부모		8.5	7.9	7.2	6.7	5.5	4.5
	기타		8.8	6.7	5.3	3.8	3.0	2.6
4세대이상			0.9	0.5	0.4	0.3	0.2	0.2
1인 가구			4.2	4.8	6.9	9.0	12.7	15.5
비혈연 가구			-	1.5	1.7	1.5	1.4	1.1
비정형가족 비율[1]			14.6	12.5	11.1	12.0	7.7	8.1
비정형가족 비율[2]			18.8	18.8	19.7	22.5	21.4	24.7

주: 1) 비정형가족 비율a= 한부모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2) 비정형가족 비율b= 한부모가구+조부모와 손자녀가구+1인가구+비혈연가구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를 재구성함.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이라고 믿어왔던 3세대, 4세대 가족은 자녀양육은 물론 부모부양을 기본 전제로 하는 가족이다. 이 가족은 꾸준히 줄고 있어 1980년 20.1%에서 20년 뒤인 2000년에는 8.4%였다. 여기에 2세대이면서도 부부가 자녀가 아닌 그들이 보호해야하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구성하는 2세대까지 합한다

면 그 수는 1980년 20.6%에서 2000년 9.4%가 된다. 20년 동안 2배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도 가족 내 부모부양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부와 한부모로 구성된 2세대가족의 증가는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아주 미약한 숫자이나 20년 사이에 0.4%에서 0.8%로 2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를 통해 보여지는 현대 우리나라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즉, 지금까지는 문제중심의 지원제공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부모자녀의 2세대 핵가족이 아닌 다른 유형의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지원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해결에서 벗어나 기능강화로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한다.

지원체계의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자녀의 2세대 핵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이 가족구조는 구조상의 변화는 없으나 기능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가족으로서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주말부부가족 등을 들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계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가족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부여되어왔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재혼가족이나 주말부부가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재혼가족에게서는 특히 새로운 구성원간의 부모자녀관계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정서적 갈등이 가족간에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2세대 핵가족 중 한부모가족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부부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족, 또는 미혼모나 미혼부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혼자 담당하게 되는 가족으로서 역시 기능상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가족이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물리적, 시간적 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서적인 고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

려한 정서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1세대 가족인 부부가족에는 성년이면서 자녀가 없는 가족과 노인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들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가족의 경우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려해볼 때 이들에게 사회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육아와 직장의 병행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부부로만 이루어진 노인부부가족에 대해서는 이들이 2세대 확대가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독자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제, 물리, 정서적인 사회지원이 주어져야한다.

3세대가족 및 4세대가족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부와 한부모로 구성된 2세대 확대가족의 증가는 '가족 내 부모부양'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일찍 떠나는 반면, 부모는 수명이 길어져 오래 살게 되면서 보여지는 새로운 추세로써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지원의 절대적인 필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혈연가족은 동거가족이나 공동체가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오랜 기간 동거한 부부를 "사실혼에 의한 부부"로 인정해주는 관례에 따라 비혈연가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채택해야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가족의 빈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주로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빈곤한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문제로 별도로 다루고, 가족이 경험하는 기능상의 문제와 정서상의 문제는 빈곤여하를 떠나 전체 가족에게 보편성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상관없어서 포함되지 못했던 가족유형 중에 위탁가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소년소녀가장가족, 새싹가정 등 가정이나 가족을 이룰 수 없는 구성원으로 가족을 이루어 존재시키면서 아동의 유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왔었다. 그러나 정부가 위탁가정제도를 채택하여 이들을 위탁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탁가정은 그 구조의 영구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하나의 가족지원서비스로 분류된다. 위탁가족 역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기

능하는 것이므로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일반가족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 특히 위탁가족이 해당아동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탁가족에게 다양한 사회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이슈는 빈곤, 양육, 부양,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편견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으로부터 기대되는 가족기능에는 경제적 보호기능, 양육과 교육기능, 부양과 보호의 기능, 그리고 정서적 기능이 있다.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는 이 기능들에 있어서도 일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데 그 변화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지원체계도 달리 설정되어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과 비정형의 가족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편견적 사고는 사회지원체계의 계발과 운영,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다음의 사회적 지원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슈들을 (1)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 (2) 정책적 지원체계, 그리고 (3) 정서적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란 체계설립의 목적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주고 가족 내 개개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사회적 제도'로 정의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성원의 양육과 부양의 기능을 주된 가족의 역할로 규정해왔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에 속하는 한국의 복지모형(신동면, 2001)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낮은 책임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분의 높은 역할을 특징으로 하며, 유교의 가족주의적 전통이 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복지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막고 가족중심의 복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정책을 통한 사회지원체계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 내 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이 그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선가족·후국가 책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가족지원체계는 부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주의적 가치관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이미숙, 1997; 최정혜, 1997; 한남제, 1994 등), 현재는 가족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양옥경, 2002).

가.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의 근거는 가족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 호적법이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으며, 2004년 새로이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민법과 호적법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혈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양자, 처의 직계 비속을 입적함으로써 가족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가족을 이루는 첫 단계인 혼인에 관한 효력 조항에서는 첫 번째 부부간의 의무를(제826조) 동거와 상호부양과 협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제827조), 재산에 관한 책임(제829조), 생활비용에 관한 의무(제833조) 등이 있다. 반면 부부 상호간에 이러한 혼인효력이 소멸하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몇몇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중심축인 부부관계와 부부간 상호 의무 역할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민법 조항은 '친생자'(제844조~제865조)와 '입양의 요건'(제866조~제908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에서의 부모와 자녀와

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관계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부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호 역할과 의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다만, 보호자로서 부모의 기능이 법적으로 원활하지 않거나 부재한 경우 후견인이나 친족이 대신 법적 책임자 혹은 조력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민법에서의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제767조)을 의미하고 있어 자녀와 금치산자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책임범위가 친인척 단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민법내 호적법은 법적으로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기 쉽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등에 대해서는 자칫 구체적 근거없이 사회적 낙인과 여러 복지 제도로부터 제외시키는 오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녕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2)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4년 2월 9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건가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가정문제라 일컬어지는 가족 내 문제를 가족의 내부적 차원에만 책임을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하여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건가법에서 가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제도적 지원 사항(제21조 제2항)은 ①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②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 안정, ③ 안정된 주거생활, ④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⑤ 직장과 가정의 양립, ⑥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⑦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⑧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

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으로 이를 통해 가족의 유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족체계 내외의 여건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제21조 제3항, 제4항). 이러한 지원사항으로는 자녀양육지원, 사회보장제도 운용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마련, 가족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 증진, 이혼예방 등(제22조~32조)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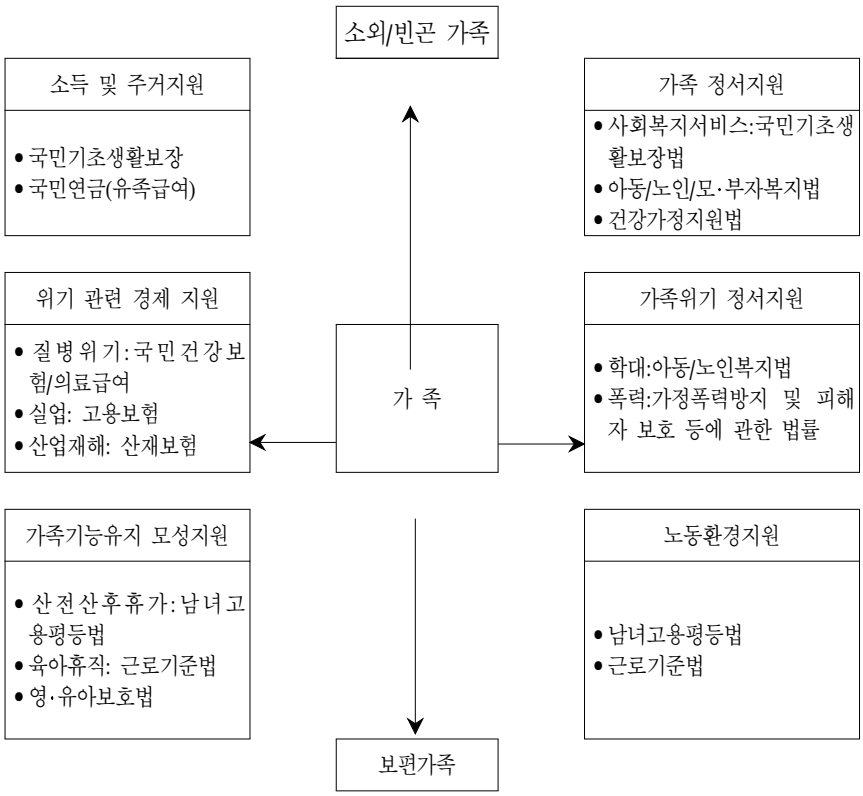
가족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2004년 현재 전국 3곳(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면서 다양한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에서의 주요 사업내용은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개입(위기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가정해체·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 등), 2) 건강가정의 형성 및 유지 지원(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가정생활문화 운동의 전개를 위한 서비스(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활동, 건전가정의례 등 생활문화 개발·보급프로그램 등)이다.

나. 정책적 지원체계

가족보호라는 이념 하에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는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 그 내용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유희일 외, 1999; 양옥경 외, 2002 재인용). 이에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경우에 대해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적 가족지원체계를 〔그림 9-1〕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9-1〕 가족지원제도체계도



1) 사회보험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기타 공적연금 포함),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초한 법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대상자격이 종료되는 사유는 주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가입자격 상실로써 이 경우 자격 종료 시 연금가입기간이나 주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형태로 연금이 지급된다.

이중 피보험자인 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유족급여를 지불하는데, 이런 유족 급여는 주된 부양의무자를 대신해서 남은 가족을 부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가족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대표적인 사회보장법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전광석, 1996: 양옥경 외, 2002 재인용). 따라서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어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부부였던 경우, 미망인의 현재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큰 손실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고, 부양할 자녀가 없을 때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족급여의 지급수준이 급여의 6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원들의 경제적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안전망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현상은 조기퇴직 및 실직 현상을 만연시켰고, 이로 인해 사업장 가입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사람들이 지역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40.1%가 보험료미납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원종욱 외, 2003).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온 국민연금 주가입자는 물론 그 가족이 빈곤 위기를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보호기능을 일부 제공한다 할지라도 연금 가입자 개인의 자격기준에 따라 가족

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개인종속적인, 혹은 가족부가적인 지급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대상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갹출의 특성상 부과단위 뿐 아니라 납부 의무에 있어서도 가구단위로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보다는 가구가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질병, 사고 등이 가족에게 초래할 수 있는 건강과 경제적 위기로부터 일정의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며, 65세 이상인 가입자와 이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양의무를 완화시켜주는, 국가적 차원의 효사상을 반영하기도 한다(양옥경 외, 2001).

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는 그 혜택의 범주가 1차진료 위주의 의료행위항목을 위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심리, 간병 노동 등 환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에 대한 환경적 체계로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4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만성·중증 질환자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부양자의 부담과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6개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수혜대상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고 질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가족문제예방 기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동안 가족들에게만 집중되어왔던 노인인구의 의료비부담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노인들에게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노인요양 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그 동안 보험의 기여자로만 기능하고 수혜자에서는 제외되었던 가족이라는 체계를 의료제도 상의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보험에의 기여와 수혜 대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사료된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보험대상을 개인 단위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은 동거가족의 수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을 존중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다(양옥경 외, 2001). 이 제도에서 수급자가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을 부양하는 경우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보호해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의 간병을 위해 퇴직했던 사람을 재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수급권의 선정과 급여가 세대단위로 이루어지고, 가족 내 부양의무자의 가족원 부양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을 기본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양옥경 외,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누구나 최저생계 우선보장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독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급여의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이루어져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의 방법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산급여는 조산이나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이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품, 기능습득, 취업알선, 공공근로기회, 장비대여, 자활조성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과거 의료보호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시켜 급여의 형태로 바꾼 것으로 근거는 의료급여법에 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그 수급대상 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세대를 단위로 의료보장을 실시하는데 그 적용범위는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예방, 치료, 재활은 물론 요양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한 급여로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개인은 물론 가족단위의 건강관리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또한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여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에서도 2004년 7월 1일자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본인부담보상제 지급기준에 입원뿐 아니라 외래환자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3) 출산과 육아 정책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간으로 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들이 있다. 2001년 모성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면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한 것의 일환이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있는 산전·후 휴가제도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제도도 여성의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에 가족의 일차적 생산 및 돌봄 기능의 주된 역할을 도맡아왔던 여성들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 등 가족의 일차적 기능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전통적인 모성기능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가족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시도가 제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회복을 위한 출산후 휴양, 그리고 출산아의 보살핌을 위한 최소시간의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음)하게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이 산전·후 휴가제도의 실시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유급휴직(고용보험가입지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해 육아휴직 30일이상 받은 경우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 지급함)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가족 기능유지와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라 하겠다.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방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이 목적이며 남녀모두가 대상이라는 점이 바람직한 점이다. 그러나 이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은 단지 12.2%에 그치고 있으며(김승권 외, 2003a), 영아를 입양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4) 영·유아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정책은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의미하며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위임되었던 아동보육의 책임을 국가가 사회 및 가족과 그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보호체계 안에서 영유아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안전망의 기능은 교육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육시설 우선입소와 교육비용 지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교육의 불형평성을 극복하고 근로자 자녀들에게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키는 조항을 둠으로써 보호자가 영유아의 양육으로 인해 제한받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사업장의 사업주는 수유와 탁아 등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5) 경로우대제도

노인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경로연금제도, 노령수당제도, 경로우대제도, 노부모봉양수당, 그리고 주택자금할증지원제도 등이다.

경로연금제도는 노령으로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노인에게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보완적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띈 것으로 해당노인에게 월 3-5만원 정도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노령수당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의 65세 노인이 대상이다. 이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각종 무료, 할인의 혜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교통수당이 월 12,000원 통장으로 직접입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노인무임승차권이 전철승차를 위해 지급되고, 철도승차에 대한 할인과 국공립공원 및 박물관 등의 입장료 면제가 제공된다.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에게는 노인복지카드의 발급을 통해 이상의 혜택에 더하여, 식당과 이·미용 및 목욕 등의 시설이용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부모봉양수당은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다. 월 1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주택자금할증지원제도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의 할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미약하여 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6) 재가보호지원제도

재가보호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에게 가족이 직접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시설입소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가족간호휴직제도, 가정봉사원파견제도, 주간보호, 그리고 단기보호 등이 있다.

가족간호휴직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해 제공된다.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경우 무임금 휴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직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1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말벗, 취사, 세탁 등이 주된 서비스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낮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신체적 기능훈련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낮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지도, 심신기능회복, 취미, 오락 및 여가서비스 등이 주요 서비스이다. 이동안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게 되는 지원을 받는다. 또한 단기보호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7) 시설보호지원제도

시설보호는 가족내에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 때 가족을 지원하여 그 대상자

를 가족의 대리서비스제도로 보내는 것이다. 아동의 보육시설서비스, 노인의 양로시설서비스, 미혼모의 미혼모시설 등이 있다.

다. 정서적 지원체계

가족의 정서적 이슈는 가족 구조와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역할 부담 및 갈등, 가족공유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등 가족과정에서의 문제가 기본 이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함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 외로움, 상실감 등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보편적으로 정서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다양한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초래될 수 있는 정서적 문제(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탈근대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와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노력이 있어 왔는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관련법으로 12개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는 7개의 관련법[주114]과 2004년 2월 9일 제정, 공포된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체로 가족내에서 대처하기 어렵거나 충족될 수 없는 정서적 욕구 혹은 위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서적 지원 제도를 크게 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나는 다양한 가족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혹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정서지원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 폭력 등 위기상황에서의 가족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적 정서지원체계이다.

주114) 본 논문에서 정서적 제도로 적용한 7개의 정서적 지원 관련법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모·부자복지법,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⑦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

1) 가족관계 및 기능 지원을 위한 보편적 정서지원체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위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제33조의 5)에 있어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결정뿐 아니라 전문가가 보호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원 중심의 지원에서부터 좀 더 포괄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를 포함할 수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03년 제3장의 2. 재가복지 부분에 가정봉사원을 통한 보호대상자의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을 신설(제41조의 2)하였으며,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41조의 3)으로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 제공을 경제적 지원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직접적인 정서적 지원 이외에도 보호대상자와 보호자의 필요와 편의를 위한 가정봉사원 양성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위한 간접지원체계 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타난 정서지원제도는 자활과 관련한 제15조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6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주요 기능으로써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서지원이라 보긴 어렵지만 자활사업이 대체로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여성가장들에게 전문기술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족의 복지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가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간접적인 정서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15조 자활급여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항목을 근거로 하여 자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한부모 및 여성가장세대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 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할(제7조)로써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조치 기능(제10조)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과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서도 보호양육을 위한 조치로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 특히 가족체계를 정서지원의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개입, 특히 정서적 지원을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가족단위의 정서지원 규정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동상담소의 경우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를 목적(제16조)으로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아동가정지원사업'과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등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는 조항을 통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우선적인 책임을 가족에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문제를 개별 가족이 아닌 확대된 차원, 즉 국가가 효 사상을 근거로 하여 노인보호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령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나타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가족들의 노인부양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시설보호, 재가보호, 그리고 각종 지원 서비스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라 볼 수 있다. 제28조에 명시된 상담·입소 등의 조치 조항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

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노인과 가족보호를 위해 가족과 국가가 함께 역할분담을 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지원기능이 파생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자치구를 뜻함)를 단위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제7조)을 두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시·도 단위로 모·부자 복지 상담소 설치(제7조)와 모·부자 복지상담원(제8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제17조)을 두고 모·부자 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모·부자 가정의 생계보호와 심신 건강 회복 등 가족기능 유지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모·부자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등) 설치에 대한 조항을 두고 필요한 보호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담서비스는 83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37개소의 간이여성복지 상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미혼모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임시보호수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21조), 제31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전 상담을 비롯하여(제1항) 가족의 지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 준비에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제공(제2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기본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가족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적 정서지원체계

가족의 연령 및 성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가족관계상의 문제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여건에의 적응과 대처는 현대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다른 집단과 달리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해타산이나 경쟁없이 가족원을 수용하므로 폭력이나 살해, 동반자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부부싸움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체벌은 가족내부의 고유한 문제로 간주하고 그 해결을 가족원 당사자의 몫으로 여겨왔다(양옥경, 2004).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특히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 가족내 보호대상자가 가족체계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의 대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원 간의 폭력 뿐 아니라 가족원 개개인의 정신건강의 문제 역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실업으로 인한 중년층 가장의 생계형 자살 및 이들의 가족과의 동반자살, 그리고 주부우울증 등은 가족 내의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위기는 가족체계 내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정서적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위기가정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학대, 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같은 위기가정에 대해 정부는 '상시신고 및 구호요청체계 구축',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건강한 가정형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위기유형별 예방과 조기개입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정에 대한 제도적 정서지원을 <표 9-2>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9-2〉 위기 가정에 대한 응급적 정서지원 제도

법구분	정서적 지원관련 조항 내용
아동복지법	긴급전화 설치(제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제24조) 의무업무(제25조) - 학대아동 발견, 보호, 치료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 그 외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등
노인복지법	긴급전화 설치(제39조의 4, 본조신설 2004.1.29)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의무업무 - 학대노인 발견, 상담, 보호, 치료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 그 외 학대받은 노인보호 위한 필요사항 등 (제39조의 5. 본조신설 2004.1.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지원시설(제5조)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지원시설 업무(제7조)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위한 의료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피해상담소와(제23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25조)설치 의무 업무(제24조) - 성폭력 피해 상담 -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 어려울때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등(제24조 상담실 업무)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돕는 일 등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담소(제5조)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7조)설치 의무 업무 -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 정상적인 생활 어려울때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의 의뢰 (제6조)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제8조)

그러나 아직 제도적 차원에서 정서를 수용하는 데에는 몇몇 제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정서적 지원이 '드러난 사건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원대상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위기를 함께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 2 절 사회적 지원방안

1. 개선방향

가족은 더 이상 사적단위의 독립적인 체계가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사회적 단위이다. 이미 199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폐쇄적 틀속에서 비판하기 보다는 젠더나 인종, 민족, 그리고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봐야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하면서(박민자, 2003; 문소정, 2004) 가족경험의 다양성과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실증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끌어왔다. 이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역시 사회질서 유지나 문제해결 중심적인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다양해지는 가족유형과 이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본연의 기능과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체계와 현대사회의 다양해지는 가족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의 사회 지원방안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인식과 접근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과거 구조주의 인식으로부터의 선가정· 후국가 이념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화 되어지는 가족이슈들에 대하여 사회가 민감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시

각에 근거하여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욕구를 담아내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가족해체라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고 결손가정이라는 개인 결정론적 시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가족해체로 인한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을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전환적 시각(윤홍식, 2003)과 상황적 맥락속에서 가족을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즉, 가족의 구조, 가족구성원의 특성,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양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족의 유형과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의 지향이다.

가족 내에 가부장과 권위, 위계를 통한 질서와 기능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사회의 지원방안은 남자와 여자의 양분된 성에 의해 이미 결정된 성역할 중심이 아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여권신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라는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체계내의 다양한 잠재력과 관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원활하고 적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 속도와 그 양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그 어떤 사회영역에서보다 앞질러왔으나 불행히도 가족관계에서의 역할과 인식은 전근대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가족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방임을 수용하면서 가족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족의 의식지체현상은 가족의 경쟁력, 적응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해지는 가족유형에 대해 배타적이고 낙인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가족 내의 성평등, 세대간 평등을 전제로 하여 보육, 돌봄 기능, 가사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신가족주의적 사회지원망의 구축이다.

신가족주의는 개인의 발전과 가족간 정서적 관계가 공존하는 정서적 합리주의와 같은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이다. 여기서 미래의 가족은 사회의 하나의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을 가족구성원간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상호신뢰와 상호지지를 바탕으로 열린 대화와 애정의 교환을 통해 안정된 환경을 보장해주는 유기체(양옥경, 2000)로 본다. 가족은 애정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공동체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족 본연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 한국가족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불균형 상태로 공존하며 부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조미숙 외, 1999) 다양해지는 가족유형만큼이나 그 관계와 역할, 기능에 있어 혼란과 혼돈을 낳고 있다.

이제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은밀한 사적체계인 가족에게만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도 함께 지원하면서 동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족동반자살이나 다른 가족원을 위해 선택하는 희생적 자살 등은 위기상황에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얼마나 장애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불황과 이혼증가 등 개인의 힘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가족이 대처해야하고 적응해야 할 과업들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어떤 가족유형이든지 그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정서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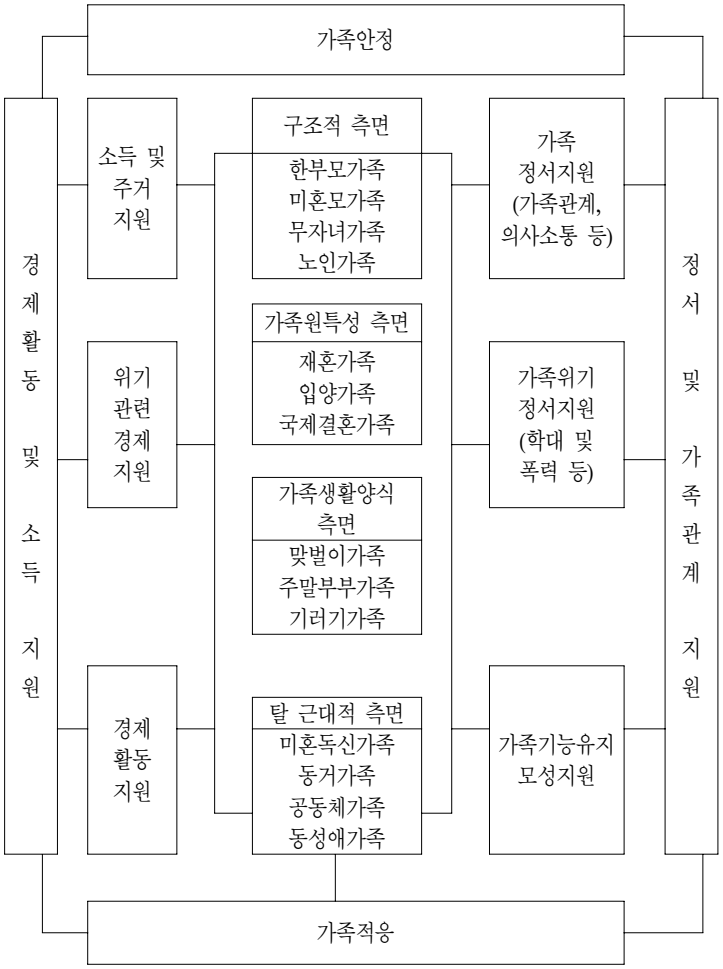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가족에 대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제도적 미흡성을 극복하고 사회가 적극적인 제도적 가족 안전의 책임주체로서 가족의 내부적 역량을 끌어내고 이러한 가족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체계구축 방안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원방안을 하나의 체계도로 그려보면 〔그림 9-2〕와 같다. 가족구조, 가족원 특성, 가족생활양식, 그리고 탈 근대적 측면에서 살펴본 가족을 중앙에 위치하고 각 가족유형에 따라 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회적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가를 제시한 것으로 가족안정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지원체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및 주거지원과 정서적 측

면에서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변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활동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여성과 가족구성원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정서기능차원에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모성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세부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9-2〕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체계도



가. 관련법안 개정

1) 민법 개정 및 호적법 폐지

민법 제4편과 제5편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며, 호적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요구된다. 민법의 '부가입적 원칙'은 부계만을 존중하고 모계를 무시하는 남녀 차별의식의 결과로서 현대의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가족에서의 부계중심 관계형성이 양계중심으로 그 구도를 바꾸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는 호주승계제도, 호주중심의 추상적인 가(家)제도, 호주권의 3개 제도로 설명된다. 이중 호주권은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상당부분 이미 축소되어 있는 것이고, 호주승계제도는 가족 내에서의 양육 및 부양의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성(性)으로 남성을 숭배하며, 추상적 가(家)제도는 현실에서의 생활공동체와 상관없이 호적상의 부(父)의 가(家)에만 속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가족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된 사회현실, 의식과 괴리된 낡은 가족제도의 강요로 인해 초래되는 가족위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이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되는 민주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가족을 반영하는 제도적 변화인 것이다(김상용, 2001; 조민경, 2002).

한국사회에 팽배해있는 부성에 대한 고수와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부자동성주의 및 호주제는 이 원칙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심리·정서적 고통을 야기시키고 사회에서의 배척을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사회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이에 호주제의 폐지는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나타나는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의 고통과 불필요한 갈등 및 위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임과 동시에 미혼모가정이 편견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입양자를 들이는 입양가족에게도 간소화된 절차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호적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많은 국제결혼가족에게도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2003년 5월 민관합동의 '호주제 폐지특별기획단'을 구성하여 호주제 폐지를 홍보하였으며, 2003년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에 관한 규정(제778조),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등(제780조, 제782조-제296조), 호주 승계규정(제4편 제8장) 등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그 대안으로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한 호적으로 편제하는 방식인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과 개인 신분기록방식인 1인1적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곽배희, 2001). 두 방식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호주에 종속된 가족 대상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이 구별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족제도가 모색되어야하며(조민경, 2002), 자녀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곽배희, 2001)는 지적이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및 새로운 가족복지 관련 법제정 논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가족복지법 또는 가족지원법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 문제를 가진 개인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기본적인 복지지원법들은 있으나 정작 가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없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기본법인 관계로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별가족원의 복지관련법도 함께 개편할 것이 요구된다.

나. 가족정책의 제도화

1) 보편적·통합적·종합적 접근

하나의 가족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다차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가족단위의 시각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선가정·후국가의 이념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시각의 형성은 통합서비스의 제공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념적 사고의 전환은 선별주의원칙에 의거하여 누락되는 사각지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표현될 것이다. 보편주의의 적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가족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자원의 수준에 대한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위기와 사고에 처한 가족의 유지를 위해 보완적 장치와 긴급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한다. 위기가족의 한시적 의료비 감면이나, 육아, 교육비 감면 등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조치들이 사전에 규정되어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되어 실직으로 인해 가정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원정책 개발

실질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려면 정책의 정체성과 컨텐츠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가족전통과 사회의 변화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 추진원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가족공동체원리와 사회적 책임영역을 동시에 강조하고 확대해야 한다.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을 수용함과 동시에 '선 가족책임 - 후 국가개입'이라는 전통적 정책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유지와 가족구성원의 보호기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의 보육서비스와 노인부양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원주체와 지원형태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한다. 현금지원이나 시설지원 등의 단순보호형태에서 가족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화되고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의 강화 및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치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축할 수 있도록 사전적 서비스의 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 각종 수당 도입

가족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양부담의 경감 및 부양에 대한 장기적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노인수당, 보호자수당 등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특별수당들은 장애인가족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이 있으며, 노인가족을 위해 노령수당이 있다. 그러나 이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대상이므로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자녀를 둔 가정의 빈곤을 예방하고 이를 통한 생활안정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아동입양수당을,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만성질환 등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보호제공자를 위한 간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의 부양기능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 등을 부양하는 가정이 빈곤 등의 이유로 부양을 포기하여 가족원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방지하고, 가정 내에서 부양이 가능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규정들이 단지 가족의 일차적 부양의무만을 강조하고 정작 부양책임자나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가졌다.

나) 휴가 및 휴직제도 정착

빈곤 등 요보호 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육아 및 가족부양 등과 관련된 휴가 및 휴직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너무 낮아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어야 하며, 기업에서는 기업내 분위기 확산을 일으켜야하고 대상자가 제도를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남성들의 이용률도 높여야 하며, 입양가족에게도 영아를 입양했을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족간호휴직제도의 경우 이용율이 겨우 6.6%라는 문제를 갖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는 전 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홈메이커 제도 도입

이 제도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봉사원파견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준전문가의 투입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노인 부부가 해내지 못하는 가정내의 잡일까지도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맞벌이부부가족이나 한부모가족에서도 홈메이커제도는 아동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라) 보육서비스 확대

영아와 유아에 대한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에게 보육시설에서의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하여야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소년소녀가장가족을 정리하면서 위탁가정에 이들을 보호·양육하는 업무를 부과하였는데, 이 가정에도 보육서비스의 지원의 폭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취학직전 만5세아 무상교육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만6세 초등학교 1학년 직전인 유치원학년을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무상교육의 확대는 시급하다 하겠다.

마) 경로우대제도 확대

경로연금과 노령수당의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보장에 더하는 것으로써 노년기 부부단독가족의 경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빈곤층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서 시설에 의존할 필요 없는 독자적이고 기능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로우대정책인 교통수당지급 및 노인무임승차권 등 일반노인을 위한 경로우대증 발급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카드 발급은 현행과 같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노인가족 뿐 아니라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족에게도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지원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경로우대를 국공립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에서 인식하고 제공하는 차원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사립공원이나 시설 등에도 경로우대는 적용되며, 여행자인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사회적 인식변화를 꾀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정서적 지원 강화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그쳤던 가족지원을 정서적인 지원까지 강화하는 차원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질병의 차원이라기보다 건강의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의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강화, 그리고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단위의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인 행정부서의 아동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에 대한 상담기술 교육을 해야 함은 필수요건일 것이며, 가정종합상담서비스를 전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에서의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강화사업 및 가족복지서비스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조정을 위해 '사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이혼과 재혼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족간에 건강하게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스트레스 역시 상담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 역시 이 지원체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무자녀부부가족이나 비혼동거부부가족의 경우 주변의 몰이해,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외로움이나 허탈함 등의 감정 등 다양한 가족에게서 보여지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은 굳이 위기가 아니어도 상담을 통해 완화되고 생활의 활력소를 갖게 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양한 유형이나 형태와는 별도로 어느 가정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이나 학대, 알콜중독, 자살, 사고 및 장애발생 등의 위기적인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같은 위기개입에 있어서는 가족상담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긴급하게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위기상황에서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유발 상황에 대해 장기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박영희, 2004).

다. 사회적 편견 타파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적 신화를 깨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존재해 왔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자녀 핵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틀 지우는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혼으로 인한 모·부자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무자녀부부가족, 노인부부가족, 비혼동거부부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바라보던 시각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강점 관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가장 편견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족이 아마 미혼모가족일 것이다. 이

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편견을 나름대로 낮아지고 있는 편이나, 아직까지도 비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은 윤락 가출과 같은 편견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요보호가족이다. 뿌리가 없거나 다르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양아에 대한 편견, 순수 혈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혼혈아에 대한 배타심, 그리고 계모나 계부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 등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입양가족과 재혼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에 대해서도 비정상성에 근거한 편견어린 시각이 매우 심하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사회교육, 사회홍보, 사회옹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관과 의식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라. 가족에 대한 사회지원 지출 규모 확대

가족복지 관련 지출규모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확충하여야 한다. 1993년 기준 OECD국가의 GDP대비 가족현금 급여는 캐나다 0.9%, 프랑스 2.12%, 스웨덴 2.78%, 미국 0.35%, 일본 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0.003%에 불과했다. 또한 가족복지서비스 지출에 있어서도 덴마크 2.05%, 프랑스 0.41%, 일본 0.22%, 영국 0.51%, 미국 0.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05%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관련 지출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가족수당 지급과 다양한 가족유형을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 등은 지출을 1차적으로 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세부방안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가족구조(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노인가족 등), 가족원 특성(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가족생활양식(맞벌이가족, 주말가족, 기러기가족 등), 그리고 탈근대(미혼독신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 등)라는 네가지 측면의 각기 다른 가족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원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족의 포스트모던한 다양한 특성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체계 내부의 역량과 사회환경 체계의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또한 다소 사회가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판단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족유형을 객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원방안의 대안 요소들은 앞 장(제6장~제8장)에서 가족의 문제점 논의 틀로 제시한 '가족자원에서의 문제', '가족과정에서의 문제', '삶의 질 관련 문제' 각각에 적용된 문제내용들을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그리고 '위기지원'은 대부분의 가족유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범주에 적용하였으며, 이 외에 가족의 다양성 측면에 따라 각각 '소득지원', '법적·제도적 지원', '사회적 지원', '가족관계 및 기능유지 지원' 등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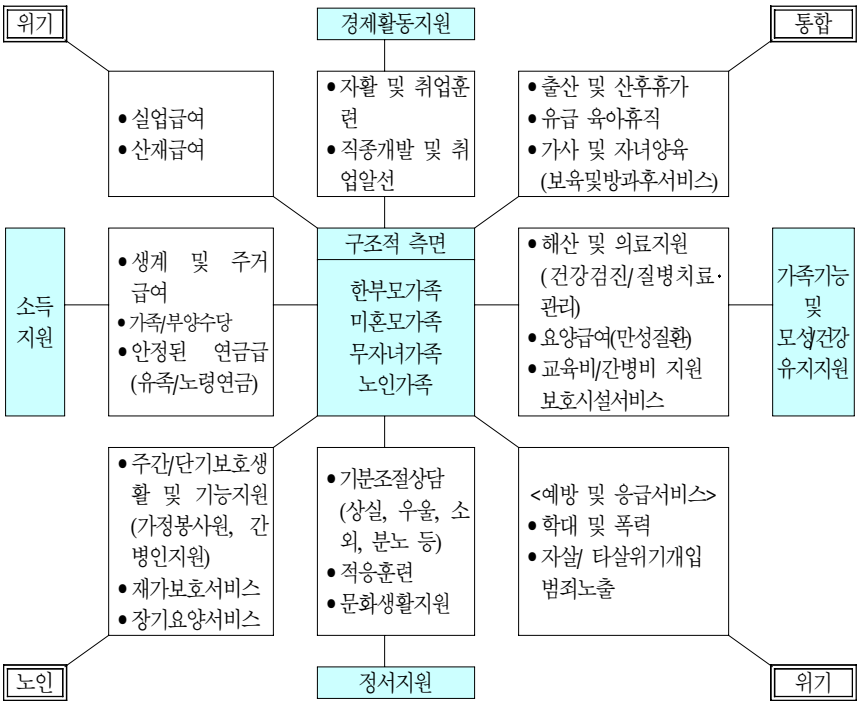
가. 구조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족유형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곤한 가족으로 전락하기 쉬운, 경제적 상태와 가족 내 보호기능이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 지원망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가족 내부적으로는 관계와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 적응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적 지원과 자활, 취업을 지원하는 경제활동지원, 그리고 가족기능 유지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9-3〕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이중 가족과정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정서적 지원은 아직 선진국에서조차 제도화된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비제도적 서비스를 통해 가족단위의 정서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차원과 비제도적 차원 모두에게서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내용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가족동반 자살이나 생

계형 범죄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제도적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가족들의 잠재적인 위기를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 및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9-3〕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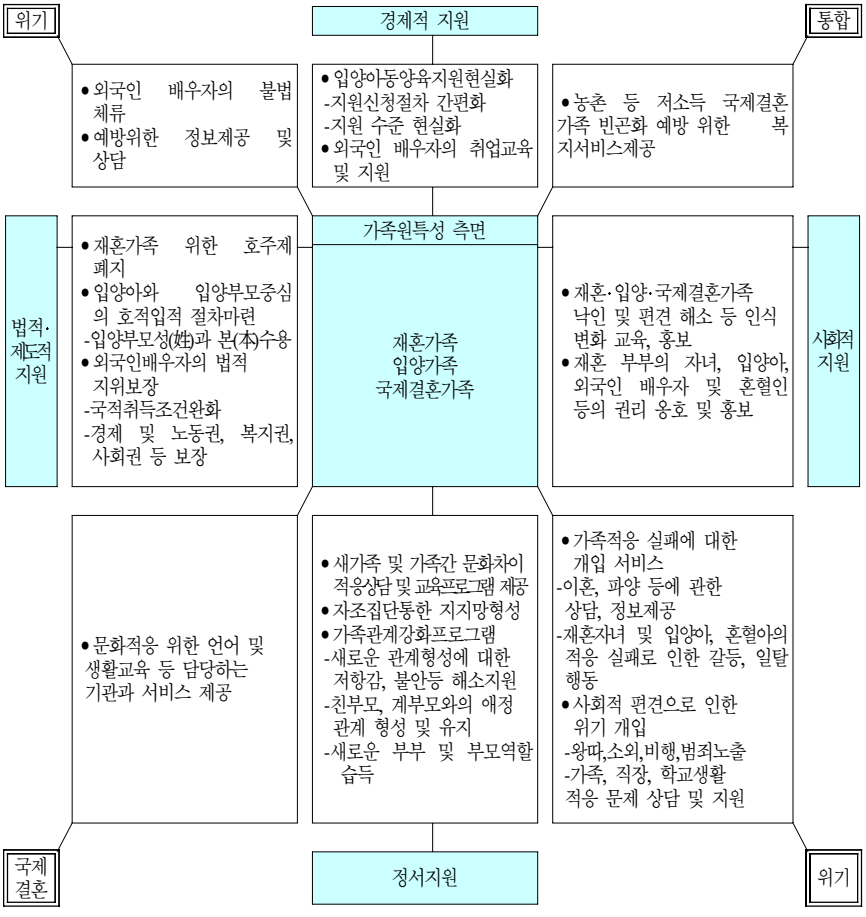


나. 가족원 특성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가족원 특성에 의한 다양한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원의 구성이 재혼, 입양, 국제결혼 등을 통해 재구성된 경우로,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받는 가족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법의 제약을 받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사회적 지원방안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

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가족 밖 환경체계에서의 지원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가족 내부적으로 새로운 가족간 애정관계 형성과제나 적응의 문제에 대한 정서지원을 통해 가족의 권리와 기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그림 9-4 참조).

〔그림 9-4〕 가족원 특성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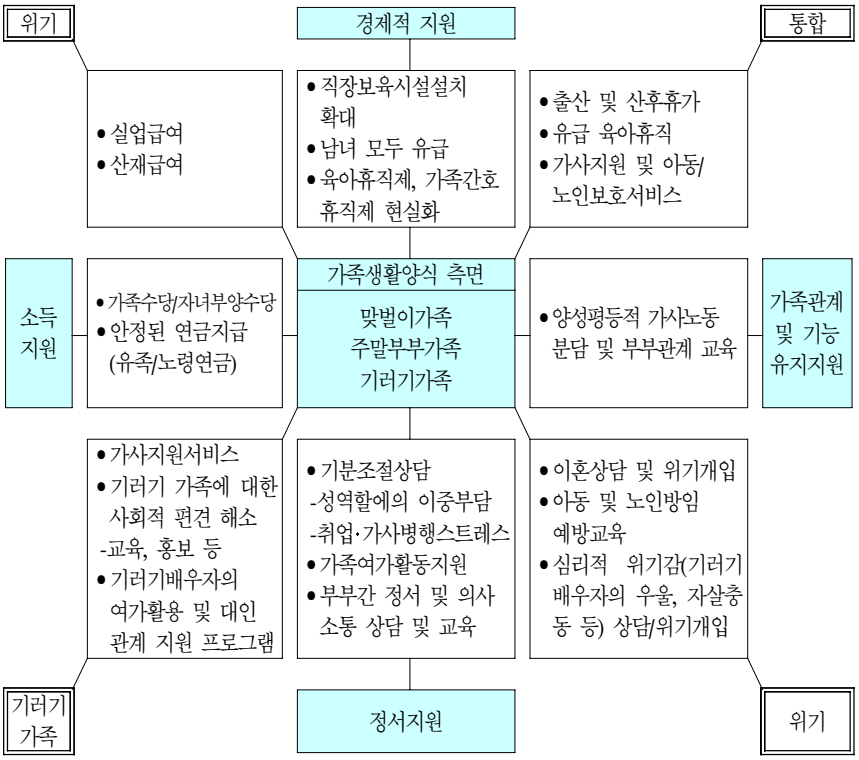


다. 가족생활양식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유형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해 발생된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그리고 조기유학 등으로 인해 발생된 기러기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족들의 경우 가족형태와 구성이 기존의 가족유형과 동일하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여성취업으로 인한 모성역할의 이중부담이 두드러진 가족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양성평등적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족 내 인식변화,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모성역할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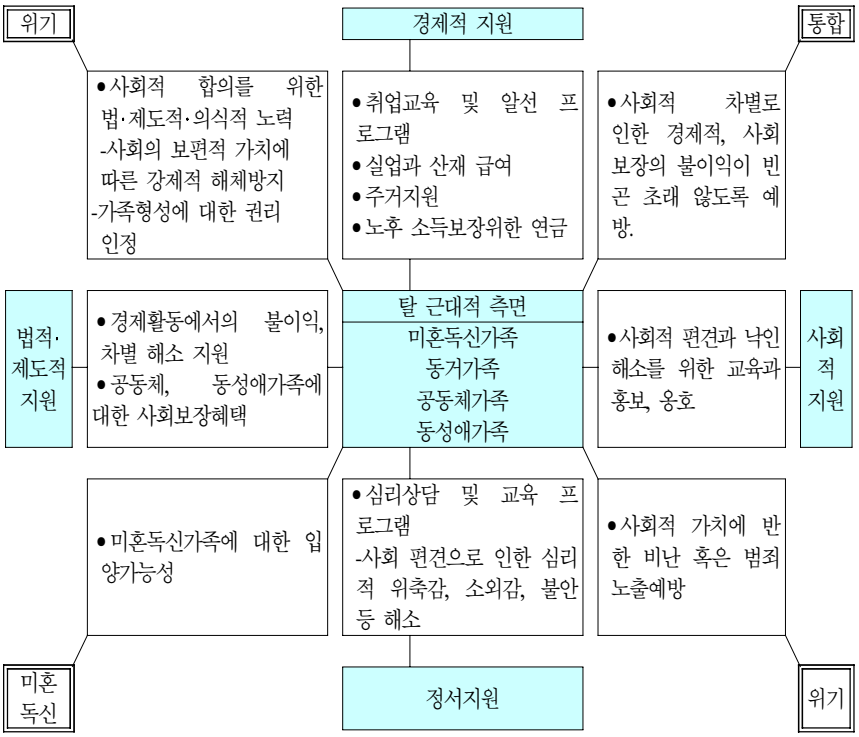
〔그림 9-5〕 가족생활양식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



라.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탈 근대적 가족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자발적, 선택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충분한 인식적 합의를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직은 법적 가족을 단위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탈 근대적 가족유형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하는 가에 대한 가치적 논의에 앞서 탈 근대적 가족유형을 가족의 변화유형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사회가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원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9-6］ 탈 근대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망



제 10 장 종합논의 및 결론

제 1 절 종합논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변동과 함께 가치관의 분화 및 다원화는 일반화되어 왔다. 그 결과 서구 국가에서는 가족의 생활양식과 형태의 다양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범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은 종전의 보편적인 가족과는 현저하게 상이한 유형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가족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지혜를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개인적인 삶으로 인식되기도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족은 '소수'와 '약자'에 대한 억압의 해체 및 자발적 선택이라는 권리구현의 측면에서 자유의 신장 또는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지속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함께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는 다양하고 독특한 유형의 가족유형을 출현시키고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으로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가치관적, 사회적, 인구학적, 그리고 개인적 및 가족 요인 등을 살펴보면,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 또는 탈현대사회로 지칭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들이 유형을 달리하면서 출현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거나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까지의 서구문화 유입속도를 감안한다면 결코 다른 사회의 일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가족은 형태, 생활, 관계 등의 측면에서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정보사회가 사회 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또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가치판단을 떠나 정보화가 가족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가족형태로서 독신이나 동거, 무자녀가족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노출을 꺼리는 동성애자들이나 특정한 취미, 문제, 목적, 이해관심 등을 공유하는 동호자들간의 소통과 결속을 지지함으로써 동성애가족 및 공동체가족의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정문 외, 2001).[주115] 또한 그것은 일터와 가정의 통합,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일상적 대화양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이미 구성된 가족의 전형적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선주, 2000).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 및 가족의 특성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강조하지 않고 폭넓은 가족형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가치판단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동거가족, 미혼독신가족, 젊은 부부만의 가족, 무자녀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들 다양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내용들은 현재 한국사회

주115) 정보사회에서의 이런 가족은 열린 가족, 개방가족, 느슨한 가족,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를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차가운(cool)가족 등으로 불림. 특히, 가장이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응집된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연결망으로서 기능 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가족'이란 명칭이 자주 제시되고 있음(조정문 외, 200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혈연과 결혼 등을 넘어 개인들 간의 새로운 연합체로서 가족이 통신, 인터넷상에서 많이 결성되어 '사이버가족'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겠음.

에 나타나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문제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의 변화 그 자체와 다양한 가족의 출현 그 자체에 대한 개개인의 수용수준이 상이할 경우에 나타나는 다각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즉, 향후 더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과 가족변화 또는 다양한 가족의 발생에 부적응하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 하겠다.

제 2 절 결론

UNGA(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가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한 지 벌써 10년이 경과했다. 한국가족은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라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쇠퇴, 미혼율의 증대, 이혼율의 증가, 재혼의 증가, 출산율 감소,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자살의 증가, 가정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조기유학에 의한 기러기가족의 증대와 부모의 일탈, 그리고 사이버문화의 영향 등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격동의 세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승권 외, 2003b; 2000a).

다양한 가족은 그 유형의 특성에 따라 많고 적음이 있을 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다양한 가족을 전통적이고 보수적 측면에서 가족으로 다루지 않음은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학문적 발전과 현실적응력 있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대부분의 다양한 가족을 '문제가족'으로 치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이다.[주116]

주116) 사실 미혼모가족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편견임. 그렇지만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유형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함을 양해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족유형과는 현저하게 상이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회 및 가족의 위기를 나타내는 한 징표로 받아들여져 왔음이 사실이다. 즉, 관점에 따라서 이들 가족은 한국 사회의 미래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가치관 혼돈과 사회 무질서에 의하여 방황·일탈하는 한국가족의 어두운 현재를 더욱 확신시켜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로서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현실 및 가족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현실적 인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며, 인식전환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김승권 외, 2000a).

특히, 국제화 사회, 정보사회 또는 탈현대사회로 예상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주목은 사회적 및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것의 긍정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관점과 관념을 보다 개방하고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자체와 그 현실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특정한 형태와 정해진 틀 속의 사고(思考)를 탈피하고 다른 식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에 대한 보다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관점이 누군가에게 불이익, 고통, 억울함을 줄 수 있음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통합적 차원의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즉, '개인-가족-사회 및 국가'가 상호 지원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만이 개인발전, 가족안정,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의 사회현실과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한국적' 가족모형[주117]에 적합한 가족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다(김승권 외, 2003b).

결론적으로 가족이 법이나 종교,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발전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종류의 헌신과 역할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건강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들이 '가족'으로서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규범·재화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전귀연·구순주, 1998). 이러한 점이 바로 다양한 가족을 진정 '가족들'(the families)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사회적 기본 요건이며,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서 읽어내야 할 사회적 의미라 할 것이다.

주117) 아직까지는 많은 한국인들이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족이 복지체계 속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복지서비스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을 더욱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만이 가족안정과 복지국가 건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족을 위한 복지'를 중심으로, '가족을 통한 복지'의 요소가 보완되는 가족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한국적 복지모형'을 조성하고 '한국형 가족복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강기정·이무영·김영희,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02.

강달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학전문, 2001.

강숙경 외, 「가정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1996.

강영실, 『미혼양육모의 현황: 시설입소 미혼양육모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중심으로』, 2002.

강이수, 「논평-문화공동체로서의 가족과 계급의 연관에 대한 탐색」, 『경제와 사회』, 제31호(가을호), 1996.

경향신문, 2002-11-11.

고선주, 「정보 사회와 가족: 정보 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144, 2000.

공보처,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996.

공세권·조애저·허미영, 『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구인회,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제4회 한국노동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3.

구자순,「한국 가족의 변화와 전망」,『여성연구』, 가을호, 1994.

국민일보, 2004-06-08.

국회통일시대 평등사회정책 연구회, 『국제결혼현황과 국적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2002.

곽배희,「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곽배희,「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가족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분과 학회 발표자료, 2001.

곽배희,「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곽인숙,「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2003.

권복순,「소외청소년을 위한 학교 재적응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권영 외, 『미혼모발생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87.

김경신,「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02년 학술대회 자료집』, 2002.

김경신·김오남,「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재」,『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96.

김경은·정옥분,「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1998.

김규원,「가족 개념의 인식과 가치관」,『가족학 논집』, 한국가족학회, 1995.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김만지, 「미혼모의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1998.

김명자,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 내 역할 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3호, 대한가정학회, 1981.

김미경 외,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2.

김미숙 외,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2.

김미숙 외,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보경,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입주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지역개발대학원, 2001.

김부자,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김상용,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분과학회 발표자료』, 2001.

김소영·옥선화,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2000.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김승권 외,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b.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3c.

김승권 외,『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승권 외,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김승권 외,『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김시업, 『결혼과 가정』, 학지사, 1999.

김양희,「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정책」,『현대사회와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1991.

김양희 외,「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대한가정학회지』, 30(3), 대한가정학회, 1992.

김영서, 『재가노인의 재가시설활용 및 복지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숙,「미혼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영희,「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충북대학생생활연구』, 제23권, 1998.

김애순,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 고려미디어, 1994.

김영화,「영아기 입양아의 입양 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997.

김유경·서문희·임유경,『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유미,「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

사논문, 2001.

김윤경, 『Economist』, 통권 656호, 2002-10-07.

김은경,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1호, 1999.

김은경,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2001a.

김은경,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2001b.

김은숙, 「농촌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망 이용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 나남선서, 2000.

김애순, 『독신, 그 무한한 자유』, 고려미디어, 1994.

김장호,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정옥 외, 『결혼과 가족』, 서울: 학지사, 1996.

김정자,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90.

김정자,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4.

김창엽,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를 위한 빈곤층 건강대책」, 『새로운 시대 빈곤층 건강대책』, 건강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2000.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1999.

김태현,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999.

김태현, '다양한 가족생활유형',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하우, 1993.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김태현·박숙자, 「한국의 비동거가족 연구」, 『가족학논집』, 제4권, 1992.

김한곤, 『한국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김현숙, 「편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현주, 「부부의 경제 및 가사역할의 수행과 인식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과 문화』, 제15집 제1호, 2003.

김현주 · 변화순 역,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앙드레미셸 저, 1990.

김현진, 「미혼모 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대구 카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혜경,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특성 및 관계,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어머니의 권력 인식에 따른 상호작용 특성」, 이화여대 대학원, 2001.

김혜수,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혜신·김경신,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2003.

김후모, 「입양 후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1

나임순, 「노인의 재혼 욕구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네이버 뉴스, 2004.

노동부,『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북』, 2004.

노상학,「미혼모와 혼외자를 위한 사회복지대책연구」,『강남대 논문집』, 제27집, 강남대학교, 1996.

노명숙·김순옥,「1990년 개정가족법 이후의 판례에 나타난 이혼효과」,『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제1호, 2000.

뉴스위크, 2003.09.18.

대한매일, 2002-07-13.

동아일보, 2004.06.10.

류경희 · 김순옥,「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관계의 변화」,『대한가정학회지』, 39(11), 2001.

맹희재,「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문소정·이효재,「가족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여성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발전」,『가족과 문화』, 16(2), 2004.

문숙재·윤소영,「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2003.

문영소,「노인의 가치관과 가정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원광대대학원 석사논문, 1984.

문유경 외,「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여성연구』, 통권 제59호, 2000.

문현숙,「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2000.

미(美)동포 교육전문지, '기러기가족' 폐해 분석.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일본경제의 선택, 채홍식 옮김, 나남출판사, 2002.

바바라 홉슨, "독신모, 복지체제 그리고 젠더의 논리', 『복지국가와 여성 정책』, 테레사 쿨라빅 외 지음,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옮김, 새물결, 2000.

박경숙, 「노인인구의 변화」, 한국의 인구 및 주택심포지엄 발표문, 2002.

박경일, 「한국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박미령,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성역할태도, 주관적 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박미향, 「국내입양 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1.

박민선, 「다양한 가족생활」,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경문사, 1995.

박민자, 「현대의 가족사회학 이론적 관점과 쟁점」, 『사회와 이론』, 제2집, 2003.

박부진, 「가족구성의 변화와 전망」,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박숙자, 「첫자녀 출산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1992.

박숙희, 「미혼모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 미혼모 보호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1.

박영희,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심리치료』, 양서원, 2004.

박영두,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강

동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7.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박영란·황정임·정재훈,『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박은주,「재혼프로그램의 개발」, 전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박충선,「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002.

박충선,「맞벌이 가족의 형성과정과 접근방법」,『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하우, 1995.

박충선,「맞벌이가족의 출현배경 및 형성과정」,『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연구회 세미나, 1991.

박홍주 외,「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연구논집』, 제25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박희선,「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죄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배경진,「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불임여성의 인공 임신중절과 불임에 대한 느낌 및 반응』, 이화여대 대학원, 1992.

백옥현,「노후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백창현,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대한노인회중앙회, 1990.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04.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4.

법제처, 『아동복지법』, 2004.

법제처, 『노인복지법』, 2004.

법제처, 『모부자복지법』, 2002.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04.

법제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2004.

법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2003.

법제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법제처, 『의료급여법』, 2004.

법제처, 『근로기준법』, 2003.

법제처, 『남녀고용평등법』, 2001.

법제처, 『호적법』, 2001.

법제처, 『민법』, 2001.

법제처, 『국민연금법』, 2000.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

법제처, 『고용보험법』, 2003.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2004.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변화순 외,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변화순 외,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다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4.

보건복지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보건복지부,『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2004.

보건복지부, 『2004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입소』, 2004.

보건복지부,『보육통계』, 2003.

보건복지부, 『입양기관의 현황』, 2004.

보건복지부,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및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 2004.

보건복지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4.

보건복지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04.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참고자료』, 2000.

보건복지부, 『2003년 보건복지통계 연보』, 200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2004.

서문희, 「일본의 편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8호, 1999.

서문희 외,『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미발간).

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서문희·이상헌·임유경,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서병숙 외, 『인간과 가정』, 동명사, 1986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환기 한국 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조사연구』, 1996.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www. sookmyung.ac.kr/~facenter), 2004.

서정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서주태, 「남성의 불임의 진단과 치료」, 『대한한의사 협회지』, 제 46권 제 9호 통권 524호, 2003.

석드보라·이기영,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 저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999.

성경륭, 「실업과 사회해체: 총체적 위험사회의 등장」, 『사상』, 가을호, 사회과학원, 1998.

성명옥, 「노인의 집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5호 '99 가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9.

손홍숙, 「가족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1995.

송대현 · 박한기,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1992.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1.

송성자,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 갈등: 미 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온 미 8

군인 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5.

송영미,「노년기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송점호,「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송추진・윤가현,「재가서비스 수혜자인 독거노인의 경제생활실태 연구」,『한국노년학연구』, 4(47), 1995.

시사여성주간지 미즈엔, 9-35, 2002.

신동면,『한국의 복지혼합: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대 BK 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2001.

신은식,「독신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오후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거주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신은주,『사별여성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

신화용・조병은,「편부모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한국가족관계학』,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심영,「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정관리학회지』, 2002.

솜자리 피쿨텅,『한국동성애 및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2002.

안광복,「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그 원인적 치료를 위하여」,『철학과 현실』, 통권 제60호, 2004.

안병철,『사회변동과 가족』,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타 출판부, 1997.

안순덕,「미혼모실태에 관한 연구: 발생요인규명과 복지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5.

안현정,「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양명숙,「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대전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2호, 1996.

양옥경,「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가족복지학』, 제6호, 2000.

양옥경·김소희,「사회보장법에 나타난 가족주의 연구」,『사회과학연구논총』, 제6호, 2001.

양옥경·김희성,「사회보장법에 나타난 가족의 구조와 기능 분석-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이화사회복지연구』, 제1권, 2002.

양옥경,「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가족문제와 사회안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심포지엄(조선일보 공동주최) 기획주제발표, 2004.

양옥경,「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51,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엄명용,「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 10(2), 한국가족치료학회, 2002.

여성부 편,『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제의 실시현황과 효과분석』, 2002.

여성신문, 2004-06-07.

연합뉴스, 2004-07-08.

오복희,「자녀별거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1996.

오상진,「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정법원사건의 제 문제』, 서울가정법원, 2003.

오선주,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제30호, 대한가정학회, 1992.

옥경희,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999.

옥귀주, 「미혼독신자의 생활 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1999.

옥선화,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

옥선화 외 2인,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2000.

월간중앙, 2003년 10월호.

왕신수, 「한국 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2004.

유가효 외,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Ⅱ」,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제1호, 1992.

유계숙 외,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02년 학술대회 자료집, 2002.

유계숙 외 편역, 『가족학이론』, 문음사, 1999.

유동주 외,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7.

유영주 외, 『가족관계학』, 교문사, 2000.

유유박, 「한국의 미혼모문제와 그 대책」,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80.

유희일·이충일·소경무, 『사회복지법론』, 홍익제, 1999.

윤명희, 「홀로된 노인의 생활실태가 재혼 욕구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윤미현,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0.

윤인진, 『월간중앙』, 30권 4호 통권341호, 2004.

윤주애,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윤춘일,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윤현선,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윤현섭, 「국내입양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 자신감, 가족 적응력간의 관계: 자조모임 참가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2.

윤현숙 · 김득성,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2002.

윤홍식,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2003.

원종욱·백화종·김태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노동시장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3.

이가옥 외, 「노년기 삶의 질: 개념 및 지표구성」, 『노년기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2000.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금룡, 「한국사회의 노인여가 문화」, 『전통과 현대』, 제16집, 전통과 현대사,

2001.

이금주,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4.

이기숙,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1호, 1999.

이기숙, 「맞벌이 가족의 여성, 부부 그리고 자녀」,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제5집, 1994.

이기숙 외,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노동부, 2002.

이기숙·손태홍, 「맞벌이주말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비동거 효과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2집 2호, 한국가족학회, 2000.

이기숙·김은경·손태홍,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 분석-맞벌이 주말가족을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논문집』, 제50집,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편, 2001.

이기정,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1999.

이동원 외,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2001.

이동원·함인희, 「가족사회학과 노년학 연구 50년의 성과와 반성」, 『광복 50년의 한국사회와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995.

이명신, 『맞벌이 부인의 스트레스 결정요인: 전문직 부인과 생산직 부인의 비교』, 1996.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과천연구실 세미나 제12호, 공감, 1999.

이미숙,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요인 연구: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7(1), 1997.

이봉재, 「동성애에 대한 사회사업가들의 태도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1995.

이삼식,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

이선욱,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향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이성형,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0.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성원, 1998.

이소희·이경희·방은령,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1994.

이연호, 「불임 부부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생활간호』, 제10호, 1995.

이원순,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상록, 「유족여성 가구의 가구소득 결정요인-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성원, 1998.

이숙현,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제2호, 한국가족학회, 1990.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의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민법을 중심으로」, 『여성정책포럼』, 제3권, 가을호, 2003.

이시백 외,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보건복지부, 2002.

이여봉, 「부부간 평등 및 형평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1(1), 1999.

이연호, 「불임 부부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생활간호』, 제10호, 1995.

이은경,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

학원 석사논문, 2001.

이재경,「사회계층과 가족」,『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 편, 1994.

이재현,「소년소녀가정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정숙,『가족문제』, 교문사, 2000.

이정숙,『기혼 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90.

이정우,「노후소득 담보장치로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16(1), 2000.

이종한・이윤희,「이혼제도와 실태」,『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5권, 1994.

이주홍,「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이지연,「미혼모 시설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1998.

이철우,「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이효재,『가족과 사회』, 민조사, 1968.

이효재,『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도서출판 까치, 1988.

이현송 외,『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현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보건복지포럼』, 제37호, 1999.

이혜원,『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8.

이화숙,「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경원대 법학논총』, 제2호, 1999.

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4.

임인숙, 「미국학계의 가족변화 논쟁」, 『가족과 문화』, 11(1), 1999.

장상희, 「도시 중년 부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2권, 1988.

장인협 · 이혜경 · 오정수,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장정순, 『생활공동체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1986.

장지연 · 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 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제65호, 2003년 2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장지연 · 정혜선 · 류임량 외,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노동부, 2004.

장혜경 외, 「실질적인 여성가장가족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세미나 자료집, 2001a.

장혜경 외,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b.

장혜경 외,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2003.

전광석, 「가족의 사회보장기능과 사회보장법의 가족보호기능」, 『사회보장연구』, 제12권, 1996.

전성남,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전수현,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 대학원 석

사논문, 2003.

전귀연·구순주, 「동성애 가족에 대한 연구 고찰」, 『가족과 문화』, 제 10집 제2호, 1998.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전옥실,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전재일 외,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2(2), 1996.

정광조,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7권, 1996.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정영숙 외, 『가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1997.

정창수 외, 『산업화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미국가족과의 비교 분석』, 집문당, 1997.

정해은,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 Kibbutz와 미국의 Commune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19, 1993.

정혜정 외,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0권 2호 통권 33호, 한국노년학회, 2000.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조미숙 외,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999.

조민경,「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 상주대 산업대학원, 2002.

조선일보, 2004-6-7.

조선일보, 1997-11-11.

조성연,「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한국가정관리학회지』, 통권 제22호 제1호, 2004.

조성은·문숙재,「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36(10), 1998.

조성훈,「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조소연,「부모와 미혼 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은,「지역정보산업과 여성 노동」,『한국여성학』, 제 11집, 한국여성학회, 1995.

조은,「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0.

조정문,『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 2001.

조정문·장상희,『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대우 학술총서, 2001.

조추용,『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조혜정,『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2.

조희선,『편부모 가정복지의 실제와 향상방안,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조흥식,『가족복지학』, 학지사, 1998.

주간동아, 제 221호, 2000.

주성수・윤숙례,「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간의 일반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노년학』, 13(1), 1993.

중앙일보, 2002-09-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해당연도.

채옥희,「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998.

채옥희,「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02.

최강식·정진화,『여성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최경석 외, 『한국가족복지의 이해』,『인간과 복지』, 제 2판 2003.

최규련,「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최규련,「맞벌이가족의 부부문제」,『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연구회 세미나, 1991.

최규련,「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최규련·서동인,「맞벌이 가족 연구의 현황」,『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하우, 1995.

최연실·조은숙·성미애 역,『가족이란 무엇인가』, 하우출판사, 1997.

최영아,「노인의 성의식과 재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6), 1996.

최인석, 한국의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8.

최일선,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최정혜,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02.

최정혜,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1997.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 해당연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해당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연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해당연도.

통계청,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 요인』, 1998.

한남제,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다산출판사, 1994.

한경미,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장,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1995.

한경혜, 「아버지상의 변화」,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7.

한경혜, 「중년기 남성의 역할 중요도와 일/가족갈등」, 『가족과 문화』, 10(2), 1998.

한경혜, 「한국 이혼 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1993.

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학 이론』, 교문사, 2002.

한국노인문제연구소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한국방송공사·연세대학교, 『1996 한·중·일 3국 국민의식조사』, 1996.

한국여성개발원,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2003.

한국여성개발원,『여성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1996.

한국여성개발원,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1996.

한국여성개발원,『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7.

한국일보, 2002-09-24.

한남제,『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1997.

한영주,「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98.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해당연도.

허경옥,「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경제구조분석 및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03.

허남순,「국내 및 국외 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허남순,「국내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 양자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4.

허영숙,「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황나미 외,『우리나라 불임 및 불일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황미영,「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01.

황석규, 「동성애자와 결혼의 자유에 관한 법리적 고찰」, 호서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2003.

황준식,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을지서적, 1993.

황진수, 「남성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노인복지정책연구』 제13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KBS, 100인 토론, 11월 10일 밤 방영.

UN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 해당연도.

UNDP 보고서, 2001.

Abrahamson, M., *Functionalism,* Englewood Ciffs, N. J., 1978.

Adams, D.L., "Correlates of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1(4, Part 2), 1971.

Ade-Ridder & Brubaker, T. H., "The Quality of Long-term Marriages", *In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pp. 21~30, Edited by T. H. Brubaker, Beverly Hills, C. A.: Sage Publications, 1983.

Anderson, Carol M. & Stewart, Susan, *Flying Solo:Woman in Midlife*, N.Y.: W.W. Norton Company, 1994.

Andrew Kohut abd E.J. Dionne, "Religious Beliefs Underpin opposition to Homosexuality",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 The Press, 2004.

Atchley, R. C, *Social Forces in Later Life,* 2n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80.

Austrum, D. & Hanel, K., "Psychological issues of single life in Canada: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8, 1994.

Barrett, Michelle and McIntosh, Mary, "The 'Family Wage': Some Problems for Socialists and Feminists", *Capital and Class,* Vol.11. No.1. 1980.

Bongaarts, J., "Does Malnutrition Fecundability? A Summary of Evidence", *Science,* 208, 1980.

Booth, A. and Hess, E, "Cross-sex Frien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 1974.

Boss et al.,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 London: Plenum Press, 1993

Brewster, Karin and R. R. Rindfuss,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000.

Brown, Susna L. and Alan Booth,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8(Aug), 1996.

Bromberg, E. M.,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Later Life: Negating the Myths", *Aging,* fall 1983.

Bumpass, Larry L., James A. Sweet, and Andrew Cherlin, "The Role of Cohabitation in Declining Rate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ies,* Vol. 53(4), 1991.

Bumpass, L. L., "Is Low Fertility Here to Stay?",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5, 1973.

Bunker, Barbara et al.,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4, No.2, 1992.

Burkhauser & Duncan, "Economic Risks of Gender Roles: Income Loss and Life Events over the Life Course", *Social Science Quaterly*, Vol. 70(1), 1989.

Callan, Victor,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Mothers and of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Childless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Nov. 1987.

Chung, Young Sook and Kim Choe, Minja, "Sources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on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000.

Clingempeel, Brand & Segal, *A multilevel-multivariable developmental perspective for future research on stepfamilies,* In Pasley, K.&Ihinger-allman, M(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1987.

Cramer, James C.,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980.

Daly, Mary, "Comparing Welfare States: Towards a Gender Friendly Approach", in Diane Sinsbury (ed.)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1997.

Davis, K., "The Myth of Functinal Analysis as a Special Method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4, 1959.

Dieringer Research Group, Single Mother Needs Assessment Study, S & R Pieper Family Foundation, http://216.247.170.64/pf/, 2001.

E. B. Palmore et al., "Widows with children under Social Security," in the 1963 *National Survey of Widows with Children under OASDHI,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Report No. 16,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6; R. C. Nuckols, "Widow's Study," in Abstracted in the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3(9), 1973.

Elliot, Faith R., *The Family: Change or Continuity?*, Macmillan Education, 1986.

Flango, V. and Flango, C., *The flow of adoption information from the from the states*. Williamsburg,VA: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1994.

Frisch, R. E., "Demographic Implication of the Biological Determinants of Female Fecundity", *Social Biology,* Vol. 22, 1975.

Gauthier, Anne Hélène,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z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Gerald Caplan,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1974.

Gerstel, N. & Gross, H. E., *Commuter Marriages: A review, Alternatives to traditional family living,* The Haworth press, 1982.

Gerstel, N. & Gross, H. E., *Commuter Marriages: A Study of Work and Famil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84.

Gerstel, N. & Gross, H. E., "Commuter Marriages: Couples who live apart., in E. D. Macklin and R. H. Rubin(Eds.), Contemporary Families and Alternative Styl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4.

Giordano, J. A. & Bedeham, K., "The Aged within a Family Context: Relationships, Roles, and Events", In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Edited by L., L'Abate, Homewood, I11: The Dorsey Press, 1985.

Glenn, N. D. & McLanahan, S.,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3(2), 1981.

Gross, H. E.,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Two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1980.

Groves, Melissa M. and Diane M., Horm-Wingerd, "Commuter Marriage: Personnel Family & Career Issue", *Sociology & Social Research,* Vol. 4, 1991.

Gubrium, Jaber F. & James A. Holstein, *What is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0.

Hartmann, Heidi I.,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The Example of Housework," Sign: *Journal of Woman in Culture and Society*, Vol.6, No.3, 1981.

Hook, N., & Paolucci, B., 「The family as an ecosystem」,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0.

Houseknecht, Sharon K., "Voluntary Childlessness", pp.369～396 in M. S. Sussman and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 Y., Plenum Press, 1987.

Ihinger-allman & Pasley, K. M(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1987.

Kanter, R. M., "Communes in Cities" in John Case & Rosemary Taylor, Co-ops Communes and Collectives,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Karen Christopher, "Single Motherhood, Employment, or Social Assistance: Why Are U.S. Women Poorer Than Women in Other Affluent Nations?", Journal of Poverty vol. 6(2), The Haworth Pre Inc., 2002.

Kathryn Edin and Laura Lein, Work, Welfare, and Single Mothers' Econmic Survival Strategies",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61, issue 2, 1996.

Keith, P. M. &Schafer, R. B., "Role Behavior,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One and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Vol.34 No. 2, 1985.

Kercher, K. Kosloski, K. D. & Normoyle, J. B., "Reconsideration of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43(6), 1988.

Kessler, R. C., & J. A. McRae, The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982.

Kim, Song-chul, "Weekend couples among Korean professionals: An Ethnography of living apart on weekdays", *Korea Journal,* 41(4), 2001.

Klein, David M. & James M. White, Family Theories, Sage Publications, 1996.

Larson, R.,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978.

Lee, G. "Age at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a multivariate analysis implication for marital satisfaction", *JMF* Vol. 39, No. 3, 1977.

Lesthaeghe, Ron,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 1983.

Leridon, Henri, "Sterilite, Hypofertilite et Infecondite en France(Infertility in France)", *Population,* 37 No. 4～5, 1982.

Levy-Strauss,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 1969.

Lopata, H. Z., *Widowhood in an American City,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1973; Women and Widows: Support Systems, New York: Elsevier, 1979; Widow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7.

Macklin, Eleanor D., ″Nontraditional Family Forms″, in M. B. Sussman and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Press, 1987.

Marison H. Wijnberg and Susan Weinger, ″When Dreams Wither and Resources Fail: The Soceal-Support Systems of Poor Sing Mother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 Services vol. 79, issue 2, Families International Inc., 1998.

Maza, P.L., *Adoption trends: 1944-1975,* Child Welfare Research Notes #9, 1984.

Mcfalls, J. A. Jr., ″Frustrated Fertility: a Population Paradox″, *Population Bulletin,* Vol.34, 1979.

Mclanahan, S., ″The Family Structure and Dependency: Early Transition to Female Household Headship,″ *Demography,* Vol.25(1), 1988.

Mclanahan, S., ″The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0, 1985.

Mclanahan, S., and Bumpass, L. L., ″International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1988.

Menken, Jane, James Trussell and Susan Watkins, ″The Nutrition Fertility Link: An Evaluation of the Evidenc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1, 1981.

Mirowsky, J.,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985.

Moore, W., “Functionalism” in Tom Bottomore ad Robert Nisbet (eds.), *A History*

of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Basic Books, 1978.

Morgan, S. P. & Hirosima, K., "The Persistence of Extended family Residence in Japan: A Anachronism or Alternative Strate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1983.

Murdock, Geroge P.,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1949.

National Statistics, Population Trends, 2003.

Nye, F. I.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Free Press, 1979.

Nye, F. I. "Is Choice and Exchange Theory the K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1978.

Nye, F. I. "Family Mini-Theories as Special Instances of Choice and Exchange The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1980.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2~2002*, 2003.

Osberg, J. S., McGinnis, G. E., Dejong, G. & Seward, M. L.,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isables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2(2), 1987.

Pasely, Kay and Ihinger-allman, Marilyn, "How Partners Adjust?", in *Remarriage*, Sage Publication, 1987.

Pauline Stoltz, "Single Mothers and the Dillemmas of Universa Social Politics", *Journal of Social polic* Vol. 26, issue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ecora, P. J., J. K. Whittaker & A. N. Maluccio, (1992),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2001.

Perkinson, Laura B., "Patterns of Marital Childlessness in the States and

Metropolitan Areas of the United States: A Descriptive abd Analytic Study", University of Texas-Austin, unpublished thesis, 1983.

Pieme Lefebvre and Merrigan, P., The Impact of Welfare Benefits of the Conjugal Status of Single Mothers in Canada: Estimate from a Hazard Model",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3, issue: 3, 1998.

Pleck, J. H., *Working Wives/Working Husband*, Sage Publications, 1985.

Poston, Dudley L., Jr. & Katherine Trent, "International Variability in Childlessness: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December)*, 1982.

Price, S. J., and P. C. McKenny, *Divorce, Thousands Oaks,* Sage Publications, 1998.

Quinn, W. H.,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983.

Retherford, Robert D. & Kim Choe, Minja, *Statistical Models for Casual Analysis*, New York: John Wily, 1993.

Riley, M. W. & Forner, A., *Aging Society,* Vol. 1: Inventory of Research Finding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Romainiuk, Anatole, "Increase in Natural Fertility During the Early Stages of Modernization: Evidence from an African Study, Zaire", *Population Studies,* Vol. 34, 1980.

Schwartzberg, N., Berliner, K & Jacob, D., *Single in a Married World,* Hadden Craftsmen, 1995.

Shanas, E., "Social Myths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1), 1979.

Shelley E. Taylor et al., "Social Support, Support Groups, and the Cancer Patient,"

i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4, No.5, 1986.

Smith-Lovin, Lynn and Ann, R. Tickamyer, "Models of Fertility and Women's Work: Comments on Cramer, ASR, April 198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980.

Spitze, G.,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Aug. 1988.

Stacey, J. *Brave, New Families,* New York: Basic Books, 1990.

Statistics on Adoption: Numbers and Trends

Stolley, K. S., *The Future of Children: Adoption*, 3(1), 1993.

Tom W. Smith, The Emerging 21st Century American Family~,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1999(General Social Survey(GSS) Social Change Report No. 42.

Trent, K., "A Cross-National Examination of the Prevalence and Determination of Childlessness among Ever-married Women", M.A. thesis, University of Texas-Austin, 1982.

Tsuya, Noriko O. and Minja Kim Choe, "Investments in Children's Education, Desired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N. O. Tsuya, L. L. Bumpass(ed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003.

Ulbrich, P. M.,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Feb., 1988.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pecial tabulation, 2000.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Report, 2003, 2000.

Van de Kaa, D. J.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987.

Veevers, J. E.,"Voluntary Childless Wives: an Exploratory Stud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57, 1973.

Visher, Emily B. & Visher, John S., "Treating Families with Problems Associated with Remarriage and Step Relationships", in Chilman, Catherine S & nunnally, Elam W & Cox, fred M(eds), *Varient Family Forms Families in Trouble Series 5*: Sage Publication

Voydanoff, P., Economic 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Nov., 1990.

Voydanoff, P.,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1988.

Walsh, F.,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The Guilford Press, 1993.

Weitzman, L. J., *The Divorce Revolu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Wolowyna, J. E., "Income and Childlessness in Canada: A Further Examination", *Social Biology,* Vol. 24, 1977.

Yu, M., "Divorce and culturally different older women: Issues of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 21, 1993.

http://newsmaker.kyunghyang.com/world/n332e06.htm

http://resolve.org/main/national/advocacy/insurance/facts/history.html

http://statistics.adoption.com/adoption_numbers_and_trends.php

http://www.abs.gov.au/Ausstatshttp://kin.naver.com

http://www.duoinfo.co.kr/marri-data/data-view.asp?no=18

http://www.ildaro.com

http://www.mhlw.go.jp/english/wp/wp-hw/index.html

□ 저자 약력 □

• 김 승 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저)
『사이버 시대의 가족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공저)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공저)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공저)

• 양 옥 경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복지학 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 애 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유 경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 세 경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인간발달학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미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3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A Study on the Family Diversity and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발행일 2004년 12월 일 값 11,000원
저 자 김 승 권 외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ISBN 89-8187-327-5 93330